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정경희 · 이윤경 · 최현수 · 김태완 · 이현주 · 이소정 · 손창균 · 강성호 · 권혁진 · 이은진 · 윤지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머리말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해소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국고 약 1조 5,910억, 지방비 6,52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대상자가 노인의 70%로 늘어나는 2009년에는 국고 2조 4,659억과 지방비 1조 72억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예산 규모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과연 제도의 목적인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비노인계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OECD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 전의 노인 중 국민연금 등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며 경로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은 10~15%의 수준을 보이는 등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공적제도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빈곤 해소, 그에 따른 생활 제측면에서의 변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뿐 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도 관심사이다.

한편, 현 노령층의 연금소득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제도의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제도 적용의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속성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에 관한 청사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기초노령 연금은 기초연금과 범주적 공공부조의 중간적 성격으로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모호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그 방안으로 노인의 100%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화 방안과 일정규모의 저소득 노인에게 적용하는 공공부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노인 생활양태의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사회적인 영향을 분석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김태완 부연구위원, 손창균 부연구위원, 이소정 부연구위원, 이현주 부연구위원, 최현수 부연구위원, 이윤경 주임 연구원, 이은진 연구원, 윤지은 연구원과 원외의 강성호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권혁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 본 보고서를 검독 해주신 본 원의 윤석명 사회보험연구실장과 강혜규 연구위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본 원 보건사회통계실의 송태민 실장과 조사관리팀의 이연희 팀장, 장충남 관리원, 기초노령연금DB를 제공해주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여러분, 노인일자리 DB를 제공해주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9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I. 서 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선행연구 검토	13
3. 자료원 검토	26
4.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9
II.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노인소득 증대 및 노인빈곤감소 효과	49
1. 소득수준 및 구성과 변화실태	49
2. 빈곤감소효과	64
III.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경제활동 및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127
1. 기초노령연금과 경제활동	127
2.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	150
IV.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노인의 일상생활	165
1. 노인의 자산 운영 및 지출실태	165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실태	174
3. 노인의 노후부양에 대한 가치관	177
4. 노인의 삶의 만족도	184
V.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및 제도에 대한 의견	189
1.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189
2.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태도 및 필요성	196

3. 기초노령연금 제도설계 기준에 대한 의견	202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시 느낌 및 평가	213
VI.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적 영향	231
1.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231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실태	260
VII. 결 론	285
1. 연구결과 요약	285
2. 시사점	288
참고문헌	294
부 록	301

표 목차

〈표 1- 1〉 전국단위 소득자료 포함 자료원별 제특성 비교	27
〈표 1- 2〉 분석에 활용한 자료원별 제특성 비교	28
〈표 1-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정리	30
〈표 1- 4〉 분석대상 노인 가구(한국복지패널)	32
〈표 1- 5〉 기초노령연금DB의 개요	33
〈표 1- 6〉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구성비(동부, 읍면부)	35
〈표 1- 7〉 동부, 읍면부 구성비	36
〈표 1- 8〉 표본 동읍면수 및 성별 표본수	36
〈표 1- 9〉 표본 동읍면의 지역별 분포	37
〈표 1-10〉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42
〈표 1-11〉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43
〈표 1-12〉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노인의 일반특성	45
〈표 2- 1〉 소득원별 노인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실태	51
〈표 2- 2〉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실태	53
〈표 2- 3〉 노인의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55
〈표 2- 4〉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구성(2008년도)	57
〈표 2- 5〉 노인의 개인소득 구성실태	58
〈표 2- 6〉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2008년)	58
〈표 2- 7〉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의 변화실태	61
〈표 2- 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의 변화실태	62
〈표 2- 9〉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의 부채	64
〈표 2-10〉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절대빈곤율 변화	70
〈표 2-11〉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절대빈곤율 변화	72
〈표 2-12〉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빈곤갭비율 변화	74
〈표 2-13〉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	75

〈표 2-14〉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소득충족률 변화	76
〈표 2-15〉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소득충족률 변화	77
〈표 2-16〉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변화	81
〈표 2-17〉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절대빈곤율 변화	83
〈표 2-18〉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절대빈곤율 변화	85
〈표 2-19〉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절대빈곤율 변화	86
〈표 2-20〉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갭비율 변화	89
〈표 2-21〉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빈곤갭비율 변화	91
〈표 2-22〉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	93
〈표 2-23〉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빈곤갭비율 변화	95
〈표 2-24〉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충족률 변화	97
〈표 2-25〉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소득충족률 변화	99
〈표 2-26〉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소득충족률 변화	101
〈표 2-27〉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소득충족률 변화	104
〈표 2-28〉 분석대상 노인 가구 경상소득 수준(월평균)	107
〈표 2-29〉 빈곤지수(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109
〈표 2-30〉 빈곤지수(중위 소득 50% 기준)	110
〈표 2-31〉 노인이 있는 가구주 성별 빈곤지수(빈곤율, 빈곤갭 비율)	111
〈표 2-32〉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지수(빈곤율, 빈곤갭 비율)	112
〈표 2-33〉 소득충족율	114
〈표 2-34〉 소득충족율(가구주 성·노인가구 유형별)	114
〈표 2-35〉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16
〈표 2-36〉 노인이 있는 가구주 성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17
〈표 2-37〉 노인가구 유형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18
〈표 2-38〉 빈곤수준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19
〈표 2-39〉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효과(소득충족율)	120

〈표 2-40〉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효과(소득충족율, 가구주 성·노인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기준)	121
〈표 2-4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효과(국민연금 A값 5%적용시: 최저생계비기준)	122
〈표 2-4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효과(국민연금 A값 10%적용시: 최저생계비기준)	123
〈표 3- 1〉 노인의 경제활동 경험율(2007-2008년) 및 현 경제활동율	128
〈표 3- 2〉 근로노인의 종사기간	130
〈표 3- 3〉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근로희망 여부	131
〈표 3- 4〉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구직의사의 변화	133
〈표 3- 5〉 기초노령연금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프로빗 분석	147
〈표 3- 6〉 기초노령연금이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 Tobit(양측절단)	148
〈표 3- 7〉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이전 수혜율	151
〈표 3- 8〉 제특성별 현금지원액	152
〈표 3- 9〉 제특성별 현물지원내용	153
〈표 3-10〉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	158
〈표 3-11〉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소득계층별 효과비교	160
〈표 3-12〉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사적이전 분위별 효과 비교	161
〈표 4- 1〉 노인의 제특성별 정기적금·예금 거래 실태	166
〈표 4- 2〉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 월평균 생활비	167
〈표 4- 3〉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 월평균 용돈	168
〈표 4- 4〉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 (1순위)	169
〈표 4- 5〉 노인의 결혼상태·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 (1순위)	170
〈표 4- 6〉 노인의 제특성별 재산상속 실태	171
〈표 4- 7〉 노인의 제특성별 상속예정 시점	172
〈표 4- 8〉 노인의 제특성별 주관적 가구 생활 수준	173
〈표 4- 9〉 노인의 제특성별 미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대정도	174

〈표 4-10〉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단체별 참여빈도 및 평균 참여기간	175
〈표 4-11〉 노인의 제특성별 사회참여단체 참여율	177
〈표 4-12〉 노인의 제특성별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가치관	178
〈표 4-13〉 노인의 제특성별 국가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180
〈표 4-14〉 노인의 제특성별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181
〈표 4-15〉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	183
〈표 4-16〉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184
〈표 4-17〉 생활만족도 평균점수(5점만점)	185
〈표 4-18〉 노인의 제특성별 삶의 만족도	186
〈표 5- 1〉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수준	191
〈표 5- 2〉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193
〈표 5- 3〉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비신청 이유	195
〈표 5- 4〉 노인의 제특성별 경로연금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의견	197
〈표 5- 5〉 노인의 제특성별 교통수당 폐지 의견	199
〈표 5- 6〉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필요성	201
〈표 5- 7〉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적정액에 대한 의견	203
〈표 5- 8〉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06
〈표 5- 9〉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09
〈표 5-10〉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차등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10
〈표 5-11〉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발전방향 의견	212
〈표 5-12〉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대한 느낌	214
〈표 5-13〉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대한 느낌	215
〈표 5-14〉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의 도움 정도	217
〈표 5-15〉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19
〈표 5-16〉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20

〈표 5-17〉 노인의 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20
〈표 5-18〉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21
〈표 5-19〉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22
〈표 5-20〉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22
〈표 5-21〉 노인의 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23
〈표 5-22〉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23
〈표 5-23〉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225
〈표 5-24〉 노인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226
〈표 5-25〉 노인의 교육수준·경제활동·주거형태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 (1순위)	227
〈표 5-26〉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228
〈표 6- 1〉 노인 및 비노인 가구의 경제현황 및 인적 특성	234
〈표 6-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2008.10월말 기준)	235
〈표 6- 3〉 노인단독가구과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기준 연금액 수준	236
〈표 6- 4〉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기준 연금액 수준	236
〈표 6- 5〉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분석가정	237
〈표 6- 6〉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의 소득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243
〈표 6- 7〉 노인가구 중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245
〈표 6- 8〉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각 요인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A값의 5% 지원)	247
〈표 6- 9〉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A값의 10% 지원)	249
〈표 6-10〉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노인가구 소득유형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254
〈표 6-11〉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노인가구 수급여부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255
〈표 6-12〉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단독 및 부부 노인 수급유형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257

〈표 6-13〉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 연금비용 비율(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기준	260
〈표 6-14〉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별 분포	261
〈표 6-15〉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고-광역-기초의 부담비율 실태	262
〈표 6-16〉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명	264
〈표 6-17〉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별 분포	265
〈표 6-18〉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예산액 현황	267
〈표 6-19〉 기초자치단체의 총 예산 및 사업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269
〈표 6-20〉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중 자체예산액수 및 비중	271
〈표 6-21〉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가현황(2007~2008년)	272
〈표 6-22〉 노후소득보장예산 중 기초부담의 변화	274
〈표 6-23〉 노후소득보장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부담액의 변화율(2007-2008년)	275
〈표 6-24〉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예산 증감율(2007~2008)	277
〈표 6-25〉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자체예산) 증감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노후소득보장 제외)의 증감실태(2007~2008)	278
〈표 6-26〉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자체예산) 증감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노인복지예산 증감(2007~2008)	279
〈표 6-27〉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수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예산에서의 기초자치단체 부담의 증감 현황	280

그림 목차

[그림 3-1]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예산제약선의 변화	135
[그림 3-2] DID 방법의 도해	143
[그림 6-1]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구성	238
[그림 6-2] 지니계수 요인 분해 모형	242
[그림 6-3] 기초노령연금 적용 및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별 지니계수 개선을 추이	252

[그림 7-1] 월별 근로활동비율: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392
[그림 7-2] 월별 평균임금: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393
[그림 7-3] 1차 사업 대상의 근로활동비율: 70세 이상: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394
[그림 7-4] 2차 사업 대상의 근로활동비율: 65~69세: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395
[그림 7-5] 1차 사업 대상의 평균임금: 70세 이상: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395
[그림 7-6] 2차 사업 대상의 평균임금: 65~69세: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396
[그림 7-7] 사용자료의 임금분포	396

부표 목차

〈부표 1-1- 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303
〈부표 1-1- 2〉 노인단독가구의 감액 구간과 연금액 (2008년)	304
〈부표 4-1- 1〉 노인가구형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323
〈부표 4-1- 2〉 경제활동상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324
〈부표 4-1- 3〉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25
〈부표 4-1- 4〉 성별 및 연령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26
〈부표 4-1- 5〉 가구형태별 및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27
〈부표 4-1- 6〉 결혼상태별 및 교육수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28
〈부표 4-1- 7〉 노인의 일반특성별 교통수당 수급경험	329
〈부표 4-1- 8〉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연금 수급경험	330
〈부표 4-1- 9〉 노인의 일반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이용경험	331
〈부표 4-1-10〉 노인의 일반특성별 의료급여 수급경험	332
〈부표 4-2- 1〉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실태	333
〈부표 4-2- 2〉 노인의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334
〈부표 4-2- 3〉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구성(2008년도)	335
〈부표 4-2- 4〉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실태변화(소득액)	336

〈부표 4-2- 5〉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실태변화(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 337	337
〈부표 4-2- 6〉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2008년)338	338
〈부표 4-2- 7〉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변화액)339	339
〈부표 4-2- 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340	340
〈부표 4-2- 9〉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의 부채341	341
〈부표 4-3- 1〉 노인의 2년간 경제활동 경험율 및 현재 경제활동율342	342
〈부표 4-3- 2〉 경제활동노인의 종사직종343	343
〈부표 4-3- 3〉 경제활동노인의 종사기간344	344
〈부표 4-3- 4〉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근로희망 여부345	345
〈부표 4-3- 5〉 노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향후 근로희망 이유345	345
〈부표 4-3- 6〉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금액증가와 구직의사346	346
〈부표 4-3- 7〉 기초노령연금의 근로활동 수준에 미치는 효과347	347
〈부표 4-3- 8〉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액수에 따른 구직의사348	348
〈부표 4-3- 9〉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이전 수혜율349	349
〈부표 4-3-10〉 현금 및 현물지원자 현황350	350
〈부표 4-3-11〉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 현금지원액 규모351	351
〈부표 4-3-12〉 노인의 제특성별 현물지원수혜 내용353	353
〈부표 4-4- 1〉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연령별 정기적금 및 예금 거래 실태 355	355
〈부표 4-4- 2〉 노인의 교육수준·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정기적금 및 예금 거래 실태356	356
〈부표 4-4- 3〉 노인의 정기적금 및 예금 지출 거래 시기357	357
〈부표 4-4- 4〉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연령별 보험, 펀드, 부동산 거래 실태 358	358
〈부표 4-4- 5〉 노인의 교육수준·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보험, 펀드, 부동산 거래 실태359	359
〈부표 4-4- 6〉 노인의 보험, 펀드, 부동산 지출 실태360	360
〈부표 4-4- 7〉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 월평균 생활비361	361
〈부표 4-4- 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 월평균 용돈362	362

〈부표 4-4- 9〉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363
〈부표 4-4-10〉 노인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363
〈부표 4-4-11〉 노인의 교육수준·경제활동·주거형태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 (1순위)	364
〈부표 4-4-12〉 노인의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2순위)	365
〈부표 4-4-13〉 노인의 제특성별 재산상속 실태	366
〈부표 4-4-14〉 재산상속 내용	367
〈부표 4-4-15〉 노인의 제특성별 상속예정 시점	368
〈부표 4-4-16〉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369
〈부표 4-4-17〉 노인의 지역 및 성별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370
〈부표 4-4-18〉 노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370
〈부표 4-4-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단체 참여율	371
〈부표 4-4-20〉 노인의 일반특성·단체종류별 단체 참여기간	372
〈부표 4-4-21〉 노인의 제특성별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가치관	376
〈부표 4-4-22〉 노인의 제특성별 국가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377
〈부표 4-4-23〉 노인의 제특성별 자녀의 생활비·용돈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378
〈부표 4-4-24〉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	379
〈부표 4-4-25〉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380
〈부표 4-4-26〉 노인의 제특성별 삶의 만족도	381
〈부표 4-5- 1〉 기초노령연금 수급시기	382
〈부표 4-5- 2〉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383
〈부표 4-5- 3〉 노인의 제특성별 경로연금 수급여부	384
〈부표 4-5- 4〉 노인의 제특성별 교통수당 수급여부	385
〈부표 4-5- 5〉 지역별 교통수당 수급지속여부	386
〈부표 4-5- 6〉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2순위)	386
〈부표 5-1〉 노인 및 비노인 가구의 경제현황 및 인적 특성	387
〈부표 6-1〉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	388

〈부표 6-2〉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소득계층별 효과비교	389
〈부표 6-3〉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사적이전 분위별 효과 비교	390
〈부표 7-1〉 결합자료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391
〈부표 7-2〉 분석모형의 종속변수와 처리 내용	397
〈부표 7-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일자리참여에 미치는 효과	398
〈부표 7-4〉 기초노령연금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준에 미치는 효과	400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grey cloud-like shape with several smaller, lighter grey shapes floating around it.

Abstract

Socio-economic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n 2008,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Although a limited amount of data is available and it's been just about one year since its introduction, which might make it difficult to find out changes in the behavior of the recipients, it is urgent to assess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since great amount of budget has already been spent on it.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s the multifaceted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by analyzing the data set of the total older persons provid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enter and the data of the 3r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ffairs. Also, the survey of "Living Profiles and Changes of Older Person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living profiles of older person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300 older persons from January 9, 2009 to January 21, 2009.

This study consists of six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provides profiles of the respondents of each data set. The second part analyzes changes in income and poverty rate among older persons. At the third part,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s assessed

particularly on the labor participation behavior of older persons and private transfer to older persons, which are the main income sources of older persons in Korea. The fourth part takes a close look 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sic Old-Age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in terms of savings and spendings, social participation,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securing income for later life, and quality of life. The fifth part reviews the profile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recipients and points of view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Basic Old-Age Pension. Lastly, the social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is evaluated in terms of the inter- and intra-income redistribution and changes in welfare policy at the municipal level.

요약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노인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다각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임.
-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원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확정하였음.
 - 기존자료 중에는 기초노령연금DB와 한국복지패널 자료, 관련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일상생활 실태, 가치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1,300명의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2. 주요 연구 내용

- 노인전체의 가구소득은 2007년에 비하여 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개인소득은 3만5천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시장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5만5천원)과 사적이전소득(2만6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급노인의 경우 32.0%로 비수급노인의 18.2%보다 월등히 높음.
 - 반면 개인 재산·금융·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급노인의 1.5%로 비수급노인의 15.5%에 비하여 10%p가 낮음.

-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9%이며, 개인소득 중 38.0%가 사적이전소득임.
 - 수급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개인소득의 31.4%를 차지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에 비하여 빈곤완화 효과가 크며, 가구소득기준으로 볼 때 빈곤율 감소폭과 소득충족율의 증가에 있어 사회보험 다음 수준임.
 - 빈곤갭 비율 완화효과는 사회보험보다 큼.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 측면에서 수급노인의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지만,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기 보다는 빈곤갭을 줄이거나 소득충족률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효과를 가져왔음.
- 이중차분 방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한 분석결과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활동참여 포기나 근로기간을 축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격심사 시 상당수준의 근로소득을 공제함으로써 근로활동여부가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혹은 인적자본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수급액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꿀 유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적은 규모임.
- 과반수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액수의 변동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고 있으며, 액수가 변화하면 구직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그 액수가 15만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임.
 -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경제적 활동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일상생활의 보조적인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노인에게 있어 사적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상관없이 사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소득원임.
 - 기초노령연금수급은 노인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등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소득에 있어 대체적인 소득원이 아닌 보완적인 소득원으로 작동하고 있음.
 - 사적이전소득액에 대한 다변량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인한 사적이전의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증빙되지 않았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일상생활에 있어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음.
- 노인의 금융거래는 정기적금·예금을 제외하고는 가입율이 매우 낮고 부동산 거래도 매우 드문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노인의 사회단체참여율도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상태로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따른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활동참여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단체활동 참여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이해됨.
 -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음.
 - － 노년기 노동가치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에 관해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있어서의 국가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즉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
 -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음.
 - －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낮은데, 이는 그들의 소득수준이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낮은 등의 이유로 이해됨.
 -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 급여액도 삶의 양식을 바꿀 정도의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기존에 경로연금을 수급하지 않았던 소득층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개선되었음.
- 그러나 교통수당폐지와 관련해서는 약 30%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층에서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하여 노인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경우 10~15만원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 현재와 같은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노인과 노인의 배우자의 자산만으로 선정하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차등지급의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부분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약 80%정도가 가난한 노인에게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 약 20%가 모든 노인에게 지금 수준의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다수가 공공부조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실제적으로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액수가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음.
-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보건의료비, 식비, 주거관련비용 등 생활필수 지출항목에 지출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은 수급범위가 확대될수록 지니계수의 감소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세대간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재분배 수준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음.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향상을 가져와 사회전체의 분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재분배는 개선되지만 80~90%를 전후로 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의 순기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전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서 크게 나타나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재분배에 다소 효과적일 수 있으나 빈곤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 또는 강한 재분배성을 갖기에는 지급액 수준이 낮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100% 수급권 보장은 재분배 관점에서는 다소 역진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도 보여주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도의 노후소득관련 예산 총액이 2007년 대비 2.6배로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의 변화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큼.
- 기초자치단체의 약 절반은 감소를 경험한 반면, 40% 이상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도 약 1/5의 규모에 달하는 등의 크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감과 사회복지와 기타 노인복지예산의 변화에 있어서는 일관된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나 노인복지관련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사회복지나 기타노인복지 예산의 변화의 폭과 양상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 이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은 예산적 요인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의지에 의해 영향받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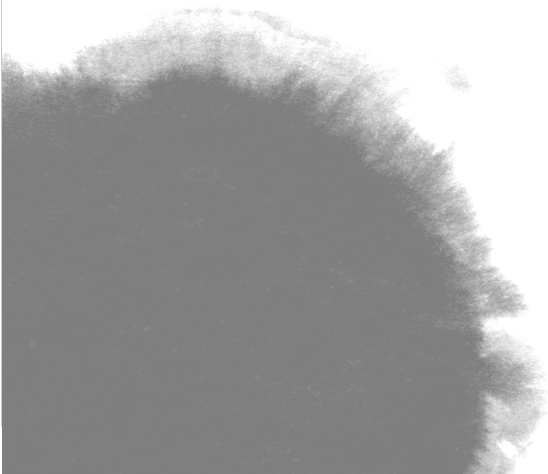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증대를 통한 노인빈곤 해소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사회적으로도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음.
- 또한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나 근로의지의 약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그러나 노인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8만 4천원이라는 급여액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그 액수가 적다는 한계 또한 분명함.
- 도입 1년 밖에 되지 않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 성격의 명확화, 관리체계의 효율화 등 많은 정책과제를 갖고 있음.
 - 제도도입의 목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완화의 관점에서의 제도개선방향을 점검하였으며
 - 불평등 완화라는 새로운 목표의 설정과 노인의 지출감소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 소요예산 분담방안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가 도입된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파악된 것이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해석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01

서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 해소를 목표로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로 2008년에 국고 약 1조 5,910억, 지방비 6,52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대상자가 노인의 70%로 늘어나는 2009년에는 국고 2조 4,659억과 지방비 1조 72억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또한 이러한 예산 규모는 계속 증대하여 2010년에는 약 3조 6천억(보건복지부, 2007), 2020년에는 9조 6천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분야의 의무적 자격급여 예산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인화, 2008).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과연 제도의 목적인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 만 아니라 OECD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김태완 외, 2008). 노인의 소득수준은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인 가운데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낮고 균형있는 식사, 목욕설비, 경제적 지원의 제공, 종교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등 각종 단체활동 등도 활발하지 못한 등 노인의 삶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희, 2007).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전의 경우 노인 중 국민연금 등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며(정경희 외, 2007), 경로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이 10~15%의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의 공적제도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의해 노인의 노

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와 빈곤 해소, 그에 따른 생활 제측면에서의 변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도 제기되고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의 40~9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도 관심사이다.

더불어 현 노령층의 연금소득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제도의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제도 적용의 기초연금(Universal Coverage, Basic pension)과 달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속성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에 관한 청사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범주적 공공부조의 중간적 성격으로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모호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그 방안으로 노인의 100%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화 방안과 일정규모의 저소득 노인에게 적용하는 공공부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의 노인의 생활양태의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사회적인 영향을 분석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지 1년 남짓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제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이 8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즉각적인 변화를 발견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확정하기에 앞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영향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용한 자료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선행연구 검토의 초점

기초노령연금의 사회 경제적 영향은 매우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향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평가할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평가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이나 분석내용을 구성하고자 할 때도 역시 한계가 있다. 이유는 유사한 제도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관성을 갖는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야만 한다. 이 경우 연구결과의 비교는 의미가 약하고 주로 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의 제도 운영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분석대상이 된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다르므로 이 역시 그 분석 결과인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외국의 연구들에서 유사제도의 효과분석 방법이나 사용한 지표, 자료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제도를 찾기 어렵고, 또한 본 제도의 역사가 짧으므로 관련 연구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가장 근접한, 또는 관계가 깊은 연구는 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국민연금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대상이 노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목적 역시 노인집단의 빈곤완화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로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효과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 역시 그 역사가 짧아서 충분하게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기존 연구의 검토에서 초점은 관련 제도의 영향 평가의 방식과 내용이다. 영향평가는 매우 포괄적인 측면을 다루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관련제도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에서 빈곤완화 분석이나 또는 불평등 완화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물론 기타의 측면에서 나타난 영향 분석도 배제하지는 않고 일부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유는 빈곤이나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이 빈곤이나 불평등이라는 개념의 일부 측면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빈곤은 기초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성원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삶을 일컫는 개념이지만 객관적 확인을 위하여 소득이나 지출과 같은 수량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는 조작적 정의는 빈곤양태를 표현하는 대리변수(proxy)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빈곤완화효과는 단순히 빈곤선이하의 비율이나 빈곤의 심도 등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되 본 연구에서 시도할 분석들은 일정한 수준에서 축소 정리할 것이다.

분석들의 도출방식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분석방법이나 지표 등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현실을 감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행연구는 국내의 경우 연금제도, 외국의 경우 비기여연금이나 조세기반연금 등과 같이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들을 소재로 한 연구로 한정하였다. 물론 노령기 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함의를 찾을 수 있으나 관련 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수가 너무 커서 검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의 상이성으로 이러한 검토가 일부 제한적인 함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이나 지표 등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보되, 자료의 제한이나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수준의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나. 국내연구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면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없다.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제도도 없다.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일정 소득 및 자산이하의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제도를 찾을 수 없다. 단지 연금제도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연금제도조차 그 역사가 짧아서 성과평가 또는 영향평가가 일부 연구로 국한되어있으며 평가의 방법도 제한적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0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은 19.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수급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08년 이전에는 감액연금이 수령되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국민연금의 효과를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도 그 결과를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의 표적은 같지만 실제 대상 선정이 다르고 급여의 수준 등도 다르며 아직 국민연금이 완숙한 상태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제도설계를 위한 내용분석이나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소개 및 비교,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안 비교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일부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 제도가 미성숙하였으므로 외국의 연금제도 효과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홍경준, 2005). 국내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국민연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개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의 빈곤해소 또는 완화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최현수(2002), 권문일(2004), 김수완·조유미(2006), 김대철·권혁진(2007), 김경아(2008)의 연구가 있다. 최현수(2002)는 2001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후 연금급여액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빈곤을 측정한 바 있다. 권문일(2004)은 국민연금의 빈곤완화 기대효과를 분석하면서 설문조사자료와 국민연금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빈곤율을 중심으로 하였다. 김수완·조유미(2006)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금을 포함한 전 후 노인가구 빈곤율을 비교 분석하여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빈곤율은 상대적 기준을 활용,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하였다. 김대철·권혁진(2007)은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생애소득을 추정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빈곤해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연금사각지대 유무에 따른 효과 비교와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 시 효과 등이 초점이었다. 빈곤관련 지수 중 빈곤율과 빈곤갭, 빈곤갭제곱을 구할 수 있는 FGT를 활용하였다.

김경아(2008)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2006년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소득보장의 실태와 연금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빈곤율 비교를 시도하였고 분석대상을 노인가구주 가구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는 1996년 대비 2006년에 빈곤 감소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국민연금의 효과 중 빈곤을 감소에 주목하였다. 최근 두 개의 연구, 김수완·조유미(2006)와 김경아(2008)의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달리 국민연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지 않고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하여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모두 연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중간 시점의 연구로 국민연금의 효과를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김경아의 연구에는 2006년에 빈곤감소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연금제도의 성숙이 주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연금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연구의 방식만으로 보면 제도의 성숙 이전에는 주로 시뮬레이션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빈곤율을 중심으로 빈곤 감소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강성호·김준영(2007)의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지니계수의 요인분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국민연금실제가입자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소득재분배를 초점으로 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하고 행정자료의 사용도 기존 조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설계는 당연 그 효과분석을 연금가입자 범위로 축소하여 이해하게 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나라 전 인구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비율이 작지 않으므로 이러한 분석으로 얻는 재분배 효과는 일부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강성호·김준영(2007: 91)은 그의 연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연구의 분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적절하게 예시한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분석자료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실제자료(real data)인가 조사자료(survey data)인가 혹은 패널자료(panel data)인가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분석기간 측면에서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느냐 생애기간 전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분석대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넷째, 분석방법 측면에서는 실증분석이나 아니면 가상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분석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세분적 분석들이 소득대체율 혹은

수익비 방법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지수형태로 표현하는 불평등도 지수로 분석하느냐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국내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의 빈곤을 완화 효과를 주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룬다. 자료는 조사자료가 더 자주 활용되었지만 행정자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재분배효과 분석에서 소득대체율 혹은 수익비 방법을 활용한 사례가 많으며, 석재은·김용하(2002), 김상호(2004), 이상은(2006) 등이 그러한 예가 된다. 국민연금의 효과 분석도 연금의 성숙과 더불어 다양한 기초자료의 분석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 한계를 지적한다면 빈곤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연금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연금수급자의 규모가 작다는 것 외에도 연금급여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추정 가능케 한다. 연금급여액이 낮은 경우 연금이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상승을 초래하기 보다는 빈곤갭을 줄이는 정도로 영향이 한정될 가능성을 갖는다. 즉, 빈곤율보다 어찌면 빈곤갭을 분석하는 것이 미성숙한 연금의 효과를 가늠하는데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기초노령연금의 분석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 해외연구

해외연구는 연금제도 보다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제도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역시 연구결과보다는 연구방법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국가마다 해당 제도의 내용이 다르고 그 제도를 둘러싼 타 제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대개 남미의 비기여연금의 효과를 분석한 것과 미국의 SSI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것들로 그 개요를 보면 아래와 같다.

로드리그(Rodrigue, 2001)는 포르투갈(Portugal)의 GMI(Guaranteed Minimum Income)의 반빈곤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빈곤율과 빈곤갭, 그리고 불평등을 표현하는 Gini 지수 등을 활용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그는 빈곤의 심도에 제도의 영향이 더 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르트라노(Bortranou, 2002)는 아르헨티나(Argentina)의 비기여연금프로그램(non-contributory pension programme)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면서 가구 소득을 담

은 EDS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율을 이전소득 사전, 사후로 비교하였는데 단순 비교에서 더 나아가 비기여연금급여 수혜자가 있는 가구와 65세 이상의 수혜자가 있는 가구, 전체가구를 비교하여 각 집단에 대한 동 제도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로 빈곤의 심도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극빈층으로 한정한 빈곤을 변화와 전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율 변화를 동시 분석하였다. 결과에서 보면 극빈층에서 제도의 영향이 더 크게, 그리고 비기여연금수혜자가 있는 가구에서 제도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연금수혜자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빈곤율의 30.8%가 감소하였다.

슈바르저(Schwarzer, 2002)는 브라질(Brazil) 비기여연금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구조사자료인 1999년 PNAD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 - 사회 부조성격의 연금과 도시지역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한 연구이지만 비기여연금의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내구재 소비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의 질과 주거환경, 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 농기구, 종자 등 농업 기반의 취득실태, 이농,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비롯하여 지역의 소득재분배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의 영향에 대한 본격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며 극빈층(indigents) - 각 지역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초식품을 구매할 수 없는 수준의 집단으로 이를 재정의 - 을 기준으로 빈곤율 감소를 비교하였다. 전 연령과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 밖에도 성별, 가구규모별, 인종별, 근로시간별, 학력별 영향의 크기를 비교분석하였다. 슈바르저의 분석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분석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으며 개인과 가구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차원으로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바리엔토스(Barrientos, 2003)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의 비기여연금의 빈곤예방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바리엔토스의 연구도 다양한 측면에서 비기여연금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요한 분석의 측면들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 비기여연금이 가구 내에서 어느 정도로 공유되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례들은 가구에서 이 연금급여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가구빈곤율 기준

으로 연금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개인단위 분석보다 더 적절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각 국의 연금급여수준을 빈곤선으로 하고 연금급여수준의 1/2를 극빈곤선(indigence line)으로 설정하여 빈곤율과 빈곤갭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비기여연금 이 가구의 취약성을 어느 수준으로 감소시켰는지도 분석의 한 측면이 되었는데 구체 적 지표는 가구의 재정적 상태를 질문하는 방식이었다. 즉 수혜자 및 비수혜자들이 스스로 응답한 가구의 경제상태를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으로 이어지는 5점 척도의 질문으로 묻고 이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와 비교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변화를 ‘나빠졌다’, ‘같다’, ‘좋아졌다’로 응답하게 하여 그 수준도 집단 및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한편 비기여연금이 노인의 기능을 향상시켰는지도 분석의 한 측면이 되었는데 구 체적 질문사항은 교육과 건강, 사회참여 등을 포괄하는 박탈지표의 비교 분석이었다. 이 연구는 슈바르저(2002)의 연구와 함께 비기여연금의 효과분석의 측면이 매우 다 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리엔토스(Barrientos, 2004)는 남미의 노령연금급여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들을 비교하면서 주로 이 급여가 빈곤율과 빈곤갭에 미치는 영향을 초점화하였다. 분석결 과의 골자는 대개 이 급여들이 낮은 수준의 급여로서 극빈층에게 그 영향이 더 크 고 따라서 빈곤율보다는 빈곤갭의 변화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맥게리(McGarry, 2000)는 빈곤노인의 복리(well being)에 대한 미국 SSI의 영 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SSI프로그램의 급여수준 변화, 대상적격성 기준 변화를 전제 로 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미국 SSI는 빈곤노인을 주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유사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공 제의 상한선 조정, 재산조사의 제거,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등을 전제로 각 모델의 비용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Asset and Health Dynamic Study(AHEAD)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적은 급여상향조정보다는 대 상자의 기준을 변화시켜 대상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비용도 크지만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빈곤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빈곤율과 빈곤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역시 다른 연구들의 결론과 유사하게 빈곤율보다는 빈곤갭에서 더 큰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급여의 제거 시와 포함한 경우를 비교하여 해

당 제도의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데이비스(Davies, 2004)도 역시 미국의 SSI의 제도변화에 따른 잠재적 노인 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SSI의 행정자료에 의하여 보충된 SIPP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정 수준으로 설정된 비용의 수준에서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나 수급자 범위의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효과를 미시추정모델(microsimulat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수급자 범위의 변화를 주는 것이 동 수준의 비용에서는 좀 더 빈곤 감소효과가 크다는 것이었다. 추정결과, 예산 증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자산조사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을 비롯한 일반소득 공제의 수준을 변경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빈곤감소효과를 비교하는데 있어 빈곤갭을 활용하였으며 소요되는 비용과 빈곤감소율을 대비하는 교차 그래프를 작성하여 정책적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해외연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특징과 유사한 제도 효과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분석의 다양한 측면, 분석의 적정 단위, 그리고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의 선정에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라. 함의

1) 국내외 선행연구의 함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 또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비기여연금제도의 의의와 중점 분석 사안, 분석의 내용 구성, 분석지표의 선택, 분석의 단위와 모집단 구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가) 비기여연금제도의 의의와 중점 분석 사안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기여연금은 유독 남미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비기여연금은 결국 노동시장이라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종래 고용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의 전형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비기여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안정성의 약화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남미나 우리나라와 같이 비공식부분의 종사자 규모가 큰 경우 이와 같은 비기여연금의 소득보장 효과가 더 크고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남미를 연구하였던 브로트라노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의 앞부분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Bortranou et al, 2004). 그는 기여연금의 대상범위가 약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미노동시장의 급격한 쇠락이라고 보았다(Bortranou et al, 2004).

연금의 수급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ILO가 2003년부터 주도한 “모든 이를 위한 사회보장수급에 대한 전세계 캠페인(Global Campaign on social security and Coverage for All)”에 의하여 고무되었는데 브로트라노와 그의 동료는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에 기반한 사회적 급여들은 단지 급여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빈곤을 경감시키는 사회보장의 영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표적화된 수급자들은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거나 또는 장애와 무능력으로 고용으로 적절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논하면서 비기여연금의 의미를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기여연금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누구에게 가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시점으로 한정한다면 빈곤의 수준별 영향이나 연령별 영향과 같은 수급자의 특성별 집단을 구분하고 그 영향을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분석 가능 시간을 조금 넓혀본다면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른 이 제도의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분석의 내용 구성

기초노령연금의 효과 또는 영향은 가장 대표적으로 빈곤과 소득분배 상태의 개선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빈곤완화효과는 빈곤이라는 생활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탈의 수준이나 건강, 사회참여, 주관적 재정상태 등 빈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수들을 담은 자료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표들은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사후비교가

가능한 몇 시기의 설문조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변수들이 포함된 자료의 조사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여 향후 이러한 측면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세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효과수준은 결국 수급자의 수와 급여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분석이 다양한 모델을 전제로 추정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모델의 대상규모와 급여수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정책 모델의 효과 추정은 향후 제도의 수정 보완과정에서 계속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산조사에 필요한 변수 및 여타의 소득이 포함된 자료의 확보도 중요하다. 한 가지 더 고려하자면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면 수급자의 규모변화가 급여변화보다 효과의 차이를 크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급자의 규모변화를 변수로 하는 효과비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이 될 것이다.

기타 빈곤완화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 영향 평가를 하자면 역시 근로동기에 대한 영향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근로 시간이나 근로 소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는 더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 밖에도 사적이전의 변화 내지 사회적 재통합(Bortranou et al, 2004)에 대한 기여 등도 중요한 영향의 측면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서의 변화,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영향평가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폭 넓은 평가를 담아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지역사회단위의 기초 정보와 미시자료, 미시자료도 상당한 변수를 포괄하는 자료를 필요로 한다. 안타깝게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선 조사가 없어서 기존의 각종 설문조사 중 평가의 내용이 될만한 변수를 포괄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쉽지는 않은 것이 기존의 연속성을 갖는 조사는 새로운 변수의 추가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존조사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는 노력이라도 필요할 것이다.

다) 분석지표의 선택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표는 빈곤갭과 빈곤율이다. 수량화된 가장 대표적인 빈곤지표이자 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도 그나마 조금 용이하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두 지표 중 빈곤의 심도를 표현하는 빈곤갭이 빈곤율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영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는데 국민연금제도의 빈곤완화효과 검토에서 빈곤율과 함께 빈곤갭을 비교하면서 빈곤갭의 경우 더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김대철·권혁진, 2007).

데이비스(2004)는 SSI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활용한 분석방법을 기술하면서 빈곤율보다 빈곤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빈곤율은 빈곤갭보다 덜 민감하다는 점이 선행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빈곤율은 빈곤선 근처의 집단의 다소 자의적인 선을 넘어 설 정도의 소득증가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반영할 뿐 많은 빈곤층이 포진하고 있는 빈곤선 아래 집단의 소득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아직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급여는 빈곤선을 넘어서는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빈곤선 아래의 집단의 얼마나 소득을 향상시키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쉽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평가에서도 빈곤율보다는 빈곤갭이 더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분석의 단위와 모집단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빈곤율 또는 빈곤갭의 변화를 이용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빈곤이라는 개념은 대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은 가구 내 개인이다. 이 경우 무엇을 분석의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답은 가구를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빈곤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가구소득이며, 또한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비기여연금의 급여가 가구에서 확산 소비되기 때문이다. 가구

내 급여의 공유가 일반적이라면 가구 단위로 빈곤완화를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노인 뿐 아니라 전 인구의 빈곤율 변화 내지 빈곤갭 변화를 파악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전 인구, 전 가구, 노인 가구 별 효과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성별 영향을 비교하는 방식은 수혜집단의 성격과 정책성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시도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틀의 개요

위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할 분석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본이 큰 조사 자료의 사후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분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분석내용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박탈을 비롯한 일상 생활상의 변화 및 주관적 인식의 변화이다. 이 변수들은 이후 여타의 조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력이 포함된다면 가능하여질 것이다. 아마 2008년 제도의 시작시점에서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가능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도 분석이 가능하자면 분석에 활용할 조사자료의 생산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여부가 변수로 추가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분석에 앞서 추정된 잠정적 수혜자집단의 성격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수혜자 집단의 구성 특성은 행정 자료의 분석으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혜자의 성격은 수혜자의 건강, 성, 연령, 지역, 가족구조 등이 될 수 있다.

현재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빈곤율과 빈곤갭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갭의 비교분석이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갭이나 빈곤율의 비교분석에서 기준선을 여러 개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극빈층과 그 위의 빈곤선 등으로 다차원의 기준을 둔다면 이러한 제도의

영향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완화 외에도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기여도를 확인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분석을 분석의 대상 집단을 달리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 구분을 하거나 또는 성을 기준으로 집단 구분을 한 상태에서 어느 집단에서 그 영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인구, 전 가구와 노인, 노인 가구를 비교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노인 중 빈곤 감소효과보다 전 인구 중 빈곤 감소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과 정합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소득분위별, 가구규모별, 가족 형태별, 근로시간별, 학력별 영향의 정도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로활동과 근로소득 변화, 그리고 사적이전의 변화 등은 참고의 수준에서 탐색적 분석을 일정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나 본격적인 분석은 큰 표본의 조사가 급여 지급 후 시행되고서야 가능할 것이다. 기존 조사 중 근로활동에 대한 내용을 조사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사의 경우 이러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서 시도하여 볼 수 있는 가능한 또 하나는 다른 급여를 포함, 제거하면서 빈곤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제 급여들 간의 영향을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내구재 소비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의 질과 주거환경, 건강수준, 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회참여 및 사회적 역할의 변화, 지역단위 소득재분배 및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도 영향 평가의 제 측면으로 분석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으로 확장된 영역평가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평가보다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으로 국한된 평가는 그 영향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게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전과 비교하는 사후분석이 불가능한 시점이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이 된다 하여도 제도의 효과는 대개 일정 기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파악할 수 있는 가구 소득의 변화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득의 변화로 초래되는 행태 및 인식의 변화는 일정한 시간

을 소요하여야 한다. 제도 평가는 장단기적인 준비를 거쳐야 좀 더 정확히여질 것이다. 제도 평가가 설계되고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일정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같이 그 예산의 규모가 크고 제도의 일부 수정 보완으로 초래되는 영향이 큰 제도의 경우 정확한 제도 평가는 더 없이 중요하다.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한 변수를 담고 있는 전국표본의 조사들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여부 및 급여액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급여 개시 전 기초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들도 있지만 기존 조사에서 포함된 변수로 한정하여 분석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장 많은 관련 변수가 포함된 조사들에는 이 제도 관련 내용이 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 볼 준비사항은 분석모델의 개발이다. 과거 20년간 공적연금이 노인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 오시오(Oshio, 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시기별 빈곤선의 변화 등 기준변화 등을 고려한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정칙한 효과분석 모델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은 국내외 유사한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분석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도록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3. 자료원 검토

연구방법을 확정하기에 앞서 기초노령연금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밝혀보기 위해 활용가능한 기존 조사자료를 검토하였다(〈표 1-1〉 참조). 그러나 기존의 관련 조사자료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파악되거나 조사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각종 기초통계자료는 대개 2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생산·공급되기 때문이다. 즉 2008년에 시행된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적절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당연 시행 전 자료를 기초로 시행 후를 가정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각 자료원들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 조사내용이 상이하며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소득과 관련하여 분류체계와 분류항목에 있어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원 중 가장 본 연구목적에 근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¹⁾.

〈표 1-1〉 전국단위 소득자료 포함 자료원별 제특성 비교

구 분	노동 패널조사	가계 조사	한국 복지패널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노후소득보장 패널연구
주 관	노동부 (노동연구원)	통계청	보사연, 서울대	노동부 (노동연구원)	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주기 (개시년도)	년 (‘98~)	월 (‘63~)	년 (‘06~)	격년 (‘06~)	격년 (‘05~)
최근자료	2006년	2008.3월	2008년 조사	2006년	2007년
지역특징	전국 (농어가 제외)	전국 (농어가 제외)	전국	전국 (제주 제외)	전국
조사대상	15세 이상	제한 없음	15세 이상	45세 이상 중고령자가구	50세 이상 가구원 가구
조사항목	소득·소비 ·저축 등	가구, 주거, 수입 등	가구, 건강, 소득, 자산 등	가구, 건강, 소득, 자산 등	소득·지출 ·자산 등
비고	사회보험간 구분 불가(연금, 보험 혼재)	국민연금만 구분 가능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구분 가능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구분 가능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구분 가능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자료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조사된 자료라는 점에서 시뮬레이션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노인의 생활상의 변화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자료 외의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첫째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에 기초가 되는 공부상의 자산항목이 모두 파악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DB』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²⁾.

1) 통계청의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조사」가 유일하게 2008년도의 소득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분기자료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되지 않아 차선택으로 2008년 실시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게 되었음.

2) 본 『기초노령연금 DB』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일자리유형, 일자리 소득액, 참여기간 등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 관한 각종 정보(일자리 사업관련 DB)를 포함하고 있는 일자리DB를 합병하여 『합병DB』를 구축하였음. 이는 최종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된 소득은 공제되었지만 제도설계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들의

그러나 이 자료는 자산항목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소비활동 등 행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하여 제공받은 DB에는 모든 노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을 위하여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분석의 범위와 의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두번째로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파악할 수 없는 노인의 제 생활실태와 가치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후의 소득의 변화 및 각종 생활현황,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DB』에 기초하여 표본설계를 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DB』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1-2〉 분석에 활용한 자료원별 제특성 비교

자료원	대상	배경 변수	소득관련 변수			지출관련 변수	가치관 관련	사회참여 활동 등
			공부상의 노인개인 (배우자) 소득	실 노인 개인소득	가구 소득			
복지패널	전연령 가구	○	×	◎	○	◎	×	×
기초노령 연금DB (통합DB)	65세 이상 노인전수	○	○	×	×	×	×	×
실태조사	65세 이상 표본조사	◎	×	◎	○	○	◎	◎

주: ◎상세한 관련 내용 포함, ○ 관련 내용 포함, × 관련 내용 없음

이렇게 본 연구는 동일한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아니라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구주제에 관한 상호보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자리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관심으로 인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전후의 노인일자리참여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합병DB의 분석결과를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4.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가. 연구내용

선행연구와 자료원에 대한 검토 및 결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소득실태의 변화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비롯한 노년기의 빈곤해소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적 정책의 빈곤 해소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효과, 노인소득 증대 및 소득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DB』, 『한국복지패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서 밝힌 것처럼 각 자료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세 가지 자료에 대한 분석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소득에 가져온 변화를 밝히는데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이 근로활동, 사적이전소득과 같은 관련 소득창출행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후의 근로행태의 변화 및 사적이전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등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근로소득이 타 국가에 비하여 중요한 노후소득원이 되고 있고 현세대 노인들에게 있어 사적이전소득이 중요 소득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정경희 외, 2005). 이러한 내용의 분석을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후의 근로행태의 변화 및 사적이전실태 파악을 위한 분석전략으로는 특정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treatment group)과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control group)을 구분하고,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에 각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중차분 방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하였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노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실태조사』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비교를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넷째, 기초노령연금 수급현황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노인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향후 제도개선 및 방향성 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대내·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와 지방재정 및 지방의 복지사업에 미친 영향이다. 세대내·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지방재정 및 지방의 복지사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7년과 2008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 및 그에 따른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정리

연구내용		자료원	연구방법
노인소득실태의 변화	소득구성 소득액 빈곤율 및 빈곤갭 소득총족률	기초노령DB 한국복지패널 실태조사	기술분석 simulation
관련 소득창출행위에 미친 영향	경제활동 사적이전소득	합병DB 실태조사	기술분석 이중차분 방법
노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저축 및 지출행동 사회참여활동 가치관 삶의 만족도	실태조사	기술분석
기초노령연금 수급현황	수급실태 제도에 대한 의견	실태조사	기술분석
사회적 영향	세대내·세대간 소득재 분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실태조사 행정자료	지니계수분해 기술분석

나. 활용자료원 개요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개요 및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한 기존자료의 경우는 본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정보만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과 기초노령연금DB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하여 별도로 실시된 실태조사의 경우는 ‘다. 실태조사의 개요’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본설계, 조사표 개요, 조사결과 나타난 대상 노인의 일반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1) 한국복지패널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세가지 기존 패널조사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패널조사로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조사되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 빈곤패널』, 『자활패널』과 서울대의 『인구복지패널』을 통합한 패널조사 자료이다. 동 패널조사의 경우 통계청 승인(33109호) 조사로 전국에 대한 대표성과 많은 표본(1차년도 7,072가구, 2차년도 6,511가구, 3차년도 6,314가구)을 통해 조사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일반사항, 소득 및 지출, 사회보험, 근로, 주거 및 재산과 기타 욕구대상자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 조사대상 가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314가구 중 일반가구는 3,695가구, 저소득층가구는 2,619가주로 구분된다.

3차 패널을 통해 이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3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노인단독가구는 8.1%, 노인부부가구는 7.3%, 기타노인가구는 15.2%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노인의 연령으로 세분하여 보면, 전체 노인가구중 65~70세 미만 가구는 31.1%,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67.8%임을 볼 수 있다.

〈표 1-4〉 분석대상 노인 가구(한국복지패널)

(단위: %)

구분		65세 이상		
			65~70세미만	70세 이상
노인가구	노인단독	8.1	21.4	28.7
	노인부부	7.3	13.5	28.6
	기타노인가구	15.2	65.1	42.7
	소 계	30.6	32.1	67.8
일반가구		69.4	-	-
전체가구		100.0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한국복지패널 3차조사』, 원자료.

2) 기초노령연금DB

기초노령연금DB는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에서 생성된 것으로 2008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65세 이상 5,040,889(기초노령연금수급자 2,975,824명과 비수급 2,065,065명)명에 대한 소득 및 재산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DB에 포함된 변수는 〈표 1-5〉와 같다.

기초노령연금DB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분석 외에도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DB에 포함된 노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태조사 대상이 될 표본을 추출하여 1,300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둘째, 기초노령DB중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실태조사결과와 기초노령연금DB상의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셋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하여 정보가 확보된 234,611명에 대하여 합병DB를 구축하였다.

〈표 1-5〉 기초노령연금DB의 개요

특성	내용	특성	내용
본인의 기본정보	ID	본인의 재산액	일반재산액_토지
	성별		일반재산액_건축물
	행정동코드		일반재산액_주택
	세대주관계코드		일반재산액_임차보증금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일반재산액_선박
	기초노령최초수급연월		일반재산액_항공기
	기초노령연금월수금액(개인)		금융재산액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배우자합산)		자동차재산액
	소득월합계액(배우자합산)		골프장회원권액
	재산합계액(배우자합산)		부동산권리_조합원입주권액
	재산소득환산합계액(배우자합산)		부동산권리_분양권액
배우자의 소득월액	배우자근로소득월액	본인의 부채	중여재산액
	배우자사업소득월액		부채_임대보증금
	배우자재산소득월액_이자	본인의 소득환산액	부채_금융기관융자금
	배우자재산소득월액_임대		일반재산소득환산액_토지
	배우자기타소득월액_국민연금		일반재산소득환산액_건축물
	배우자기타소득월액_공무원연금		일반재산소득환산액_주택
	배우자기타소득월액_군인연금		일반재산소득환산액_임차보증금
	배우자기타소득월액_사학연금		일반재산소득환산액_선박
	배우자기타소득월액_보훈연금		일반재산소득환산액_항공기
	배우자기타소득월액_별정우체국		금융재산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산재보험		자동차재산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개인퇴직연금		골프장회원권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농업직불금		부동산권리_조합원입주권소득환산액
			부동산권리_분양권소득환산액
			중여재산소득환산액
			부채_임대보증금소득환산액
			부채_금융기관융자금소득환산액

〈표 1-5〉 계속

특성	내용	특성	내용
배우자의 기본정보	배우자ID	배우자의 부채	배우자부채_임대보증금
	배우자성별		배우자부채_금융기관융자금
	배우자생년월		배우자일반재산소득환산액_토지
	배우자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배우자일반재산소득환산액_건축물
	배우자기초노령최초수급연월		배우자일반재산소득환산액_주택
	배우자기초노령연금월수금액		배우자일반재산소득환산액_임차보증금
배우자의 소득월액	배우자근로소득월액	배우자의 소득환산액	배우자일반재산소득환산액_선박
	배우자기타소득월액_공무원연금		배우자일반재산소득환산액_항공기
	배우자기타소득월액_군인연금		배우자금융재산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사학연금		배우자자동차재산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보훈연금		배우자골프장회원권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별정우체국		배우자부동산권리_조합원입주권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산재보험		배우자부동산권리_분양권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개인퇴직연금		배우자부채_임대보증금소득환산액
	배우자기타소득월액_농업직불금		배우자부채_금융기관융자금소득환산액
배우자의 재산액	배우자일반재산액_토지		
	배우자일반재산액_건축물		
	배우자일반재산액_주택		
	배우자일반재산액_임차보증금		
	배우자일반재산액_선박		
	배우자일반재산액_항공기		
	배우자금융재산액		
	배우자자동차재산액		
	배우자골프장회원권액		
	배우자부동산권리_조합원입주권액		

다. 실태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의 일반특성

기존의 조사로 파악될 수 없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변화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2009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52명의 조사원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조사설계

가)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08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이며, 추출틀은 2008년 8월 31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이다. 모집단을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고, 모집단 층으로 부터 1차 추출단위는 전국의 3,573개 읍면동 리스트이며, 2차 추출단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개인들로 결정하였다.

〈표 1-6〉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구성비(동부, 읍면부)

65세 이상	계		남성		여성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전국	5,039,464	100.0	2,025,485	40.2	3,013,979	59.8
동부	3,326,871	66.0	1,349,323	40.6	1,977,548	59.4
읍면부	1,712,593	34.0	676,162	39.5	1,036,431	60.5

나) 표본규모

2개의 층으로 층화된 모집단으로 부터 1차 추출단위인 동부와 읍면부를 허용오차 한계 5.7% 이내가 되도록 하는 총 100개의 표본 동읍면을 추출하고, 이를 각 층별로 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KOSIS)를 이용하여 층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각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66.0%이며, 읍면부는 34.0%로 파악되었고,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0.6%와 59.4%이고, 읍면부는 39.5%와 60.5%로 두 층간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층별 분포에 따라 전체적으로 100개의 표본 동읍면을 계통추출하였다(부록2참조).

다) 표본배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동부와 읍면부인 2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인구 구성비에 따른 동부와 읍면부의 표본 배분방법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더불어 남녀 구성비를 동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1-7〉 동부, 읍면부 구성비

동부/읍면부	빈도	구성비(%)
계	3,573	100.00
동부	2,163	60.54
읍면부	1,410	39.46

따라서 동부와 읍면부 노인인구 구성비에 따른 표본동과 표본읍면수는 각각 63개와 37개로 배분되었고, 이때 성별에 따른 동부와 읍면부 표본노인인구수는 〈표 1-8〉과 같이 배분되었다.

〈표 1-8〉 표본 동읍면수 및 성별 표본수

동부/읍면부	표본동읍면수	계	남자	여자
계	100	1,500	585	915
동부	63	945	375	570
읍면부	37	555	210	345

이와 같이 층별로 배분된 표본 동부와 읍면부에서 예산 및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동·읍면을 인구규모별로 정렬한 후 동부와 읍면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에 따라 50개의 표본 동·읍면을 배분하고, 각 표본 동·읍면으로부터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단순임의 추출하였다. 표본설계안으로부터 지역별 동읍면이 하나의 집락이며, 각 집락에서 예비조사대상을 감안하여 20명의 노인들을 연령별로 단순임의 추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총 2,000명의 노인(예비 표본 5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본대상들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 1단계 : 기초노령연금DB로부터 〈표 1-9〉의 표본 동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거한다.
- 2단계 : 표본 동읍면에 속한 개인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총수를 각 표본 동읍면 별로 계산한다.
- 3단계 : 100개의 표본동읍면부 각각에서 남녀 인구 비율과 연령에 따라 정렬한 후 각 표본동읍면부별로 20명씩을 표본으로 추출한다.
- 4단계 : 추출된 총 노인인구가 동부와 읍면부의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전체 표본노인인구의 남녀 성비를 계산한다.
- 5단계 :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들의 주소, 성별, 연령 등을 파일에 저장한다.

전국을 동부와 읍면부인 2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100개의 표본 동읍면을 추출하여 지역별 동수와 읍면수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 표본 동읍면의 지역별 분포

	동부	읍면부
계	63	37
서울특별시	16	0
부산광역시	4	0
대구광역시	8	0
인천광역시	4	0
광주광역시	4	0
대전광역시	0	0
울산광역시	3	0
경기도	9	4
강원도	2	1
충청북도	2	2
충청남도	2	3
전라북도	4	4
전라남도	1	9
경상북도	1	10
경상남도	3	4

라) 추정

(1) 기호

표본설계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여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결과를 추정하고자 한다면, 층별 추정과 전국 추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식에 적용될 기호를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h = 1, 2$: 층을 나타내는 첨자

y_i : i 번째 노인의 관찰값

$n = \sum_h n_h$: 표본동읍면수

$m = \sum_h m_h$: 표본노인수

$N = \sum_h N_h$: 모집단 동읍면수

$M = \sum_h M_h$: 모집단 노인 인구수

$W_{hi}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h 층의 i 번째 노인에 대한 가중치

(2) 추정식

(가) 전국 추정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연구변수의 모평균 값을 \bar{Y} 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추정식을 적용 할 수 있다.

$$\hat{\bar{Y}} = \frac{\sum_h \sum_i W_{hi} y_{hi}}{\sum_h \sum_i W_{hi}}$$

여기서 y_{hi} 는 h 층의 i 번째 노인의 관찰값이다.

또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다.

$$\hat{V}(\hat{Y}) = \sum_h \frac{n_h(1-f_h)}{n_h-1} \sum_i (e_{hi} - \bar{e}_{h.})^2$$

여기서 $e_{hi} = \sum_i W_{hi}(y_{hi} - \hat{Y})/W_{..}$, $\bar{e}_{h.} = \sum_i e_{hi}/n_h$ 이다.

끝으로 추정치의 상대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V(\hat{Y}) = \frac{\sqrt{\hat{V}(\hat{Y})}}{\hat{Y}} \times 100$$

(나) 층별 추정

두개의 층별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연구변수의 모평균 값을 \bar{Y}_h 라 할때 다음과 같이 추정식을 적용 할 수 있다.

$$\hat{Y}_h = \frac{\sum_i W_{hi} y_{hi}}{\sum_i W_{hi}}$$

여기서 y_{hi} 는 h 층의 i 번째 노인의 관찰값이다.

또한 층별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다.

$$\hat{V}(\hat{Y}_h) = \frac{n_h(1-f_h)}{n_h-1} \sum_i (e_{hi} - \bar{e}_{h.})^2$$

여기서 $e_{hi} = \sum_i W_{hi}(y_{hi} - \hat{Y}_h)/W_{..}$, $\bar{e}_{h.} = \sum_i e_{hi}/n_h$ 이다.

층별 추정치의 상대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V(\hat{Y}_h) = \frac{\sqrt{\hat{V}(\hat{Y}_h)}}{\hat{Y}_h} \times 100$$

2) 조사의 주요 내용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설문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설문지 구성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후 사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가구형태, 소득 및 재산실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가치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태도 및 만족도이다(부록3 참조). 이러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가구형태, 소득 및 재산실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등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후의 각종 소득 및 재산, 경제활동참여, 저축 및 지출행위, 사회참여활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실태조사 대상자의 제특성

가) 일반 특성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 노인의 거주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부가 68.9%로 읍·면부의 31.1%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 분포는 남자노인이 36.9%, 여자노인이 63.1%로 여자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여자노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노인보다 길다고 보고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노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57.5%로 나타났고 무배우는 42.5%로 나타났다. 무배우의 경우 사별(39.7%)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혼(1.2%), 별거(1.1%), 미혼(0.5%)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65~69세 연령군 노인의 비율이 33.0%, 70~74세 연령군 노인의 비율이 32.1%, 75세 이상 연령군 노인의 비율이 35.0% 순으로 나타나, 노인 집단 내 각 연령별 구성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노인 집단 내 연령비율에서 후기노인(old-old, 75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집단 내에서 후기노인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학도 33.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11.4%), 고등학교(10.5%), 대학 이상(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3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동거가 31.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밖의 노인 가구형태로는 노인독신(21.9%)과 기타(7.7%)가 제시되었고, 노인의 평균자녀 수는 3.83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3.9%, 15.7%로,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6%에 그친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5%, 약간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는 각각 38.8%, 17.1%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나쁜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25.6%, 비참여 노인이 74.4%로, 노인 집단의 약 1/4 가량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자가(62.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무상(12.9%), 월세(12.4%), 전세(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63.7%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6.3%가 비수급자라고 응답하였다. 비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16.4%), 신청하였는데 탈락한 경우(14.2%), 현재 신청 중인 경우(5.5%), 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중 취업 등의 사유로 탈락하게 된 경우(0.2%)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명)	특성	%(명)
지역		가구형태	
동부	68.9(896)	노인독신	21.9(284)
읍·면부	31.1(404)	노인부부	38.6(501)
성		자녀동거	31.8(414)
남자	36.9(480)	기타 ¹⁾	7.7(100)
여자	63.1(820)	평균자녀수(명)	3.83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²⁾	
65~69세	33.0(429)	매우 좋다	3.9(50)
70~74세	32.1(417)	약간 좋다	15.7(202)
75세 이상	35.0(454)	보통이다	24.5(315)
결혼상태		약간 나쁘다	38.8(500)
유배우	57.5(747)	매우 나쁘다	17.1(220)
무배우	42.5(553)	경제활동	
교육수준		취업중	25.6(332)
무학	33.5(436)	미취업	74.4(968)
초등학교	40.4(525)	거주형태	
중학교	11.4(148)	자가	62.7(815)
고등학교	10.5(136)	전세	12.1(157)
대학이상	4.2(54)	월세	12.4(161)
평균가구소득액	145만 1천원	무상	12.9(167)
평균개인소득액	49만3천원	기초노령연금 ²⁾	
		비수급	36.3(467)
		수급	63.7(820)
계	100.0(1,300)	계	100.0(1,300)

주: 1)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서비스 정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받고 있거나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교통수당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구 의료보험)가 11.9%, 기초보장제도(구 생활보호) 10.9%, 경로연금(구 노령연금)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2.9%), 장수수당(2.8%), 공공근로 및 자활사업(3.9%), 노인 일자리 사업(3.2%), 기타(0.7%)의 경우 수급(참여)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복지서비스 평균 수급(참여)기간은 교통수당이 약 9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초보장제도(구 생활보호)가 약 84개월, 의료급여(구 의료보험) 약 79개월, 경로연금 약 68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1 참조).

〈표 1-11〉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¹⁾

(단위: %, 개월)

서비스정책	수급(참여) 여부			평균 수급(참여)기간 (개월)
	현재 받고 있음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음	전혀 받은 적이 없음	
교통수당	34.6	60.0	5.4	96.0
장애수당	2.8	0.1	97.2	61.5
장수수당	2.7	0.1	97.2	30.6
경로연금(구 노령연금)	-	10.2	89.8	68.2
기초보장제도(구 생활보호)	10.0	0.9	89.0	83.5
의료급여(구 의료보호)	11.1	0.8	88.1	79.4
공공근로 및 자활사업	0.3	3.6	96.1	23.6
노인 일자리 사업	0.2	3.0	96.8	14.5
기타	0.1	0.6	99.3	9.4

주: 1)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나)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의 제특성

노인의 제특성을 본 연구의 초점인 기초노령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표 1-12〉와 같다³⁾. 수급노인 중 읍면부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급노인에 비하여 높지만 소득인정액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급노인 중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의 비중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수급노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약 70%로 비수급노인의 51.2%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하위 20%이하 집단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81.4%로 여성노인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수급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의 비중이 42.4%로 비수급노인의 20.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비수급노인에 비하여 수급노인의 경우 노인독신의 비율이 높아 약 30%수준이며 이 비율은 소득인정액 40~60%이하 집단에서는 13.7%로 낮은 대신 노인부부의 비중이 61.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자녀수는 수급노인이 4.0명으로 비수급노인의 3.6명에 비하여 약간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수급노인 중 45.3%가 무학으로 비수급노인의 12.5%에 비하여

3) 노인의 가구형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일반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부표 4-1-1〉과 〈부표 4-1-2〉에 제시되어 있음.

월등히 높으며 이러한 무학노인의 비중은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수급노인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높아 나쁜다는 응답이 61.0%로 비수급노인의 46.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수급노인이 78.0%이며 이는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들 노인들은 소득이 적지만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을 유추하게 하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수급노인의 경우 52.3%로 비수급노인의 81.1%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자가소유율이 급감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과 배우자의 공부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산정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원이 모두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노인개인소득과는 다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들의 수입이 크거나, 사적이전 소득이 높을 경우 노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소득은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급여부 및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규모별로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수급노인은 117만7천으로 비수급노인의 평균가구소득인 193만4천원의 약 60%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수급노인이 33만 8천원으로 비수급노인의 77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즉 수급노인은 가구소득이나 개인소득의 측면에서 모두 비수급 노인의 약 절반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구소득 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수급자의 경우 노인개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비수급자의 47.7%에 비하여 5.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경우 타가구원의 소득기여가 비수급자에 비하여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1-12〉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노인의 일반특성¹⁾

(단위: %, 명, 천원)

특성	전체	비수급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³⁾		
				20%미만	20~40%미만	40%이상
전체	100.0(1,288)	100.0(467)	100.0(820)	100.0(249)	100.0(250)	100.0(250)
지역						
동부	68.9	77.5	64.0	73.9	61.6	57.2
읍·면부	31.1	22.5	36.0	26.1	38.4	42.8
성						
남자	37.1	48.8	30.4	19.3	22.4	48.0
여자	62.9	51.2	69.6	80.7	77.6	52.0
연령						
65~69세	33.1	48.8	24.2	14.9	22.9	36.0
70~74세	32.3	30.4	33.3	30.1	33.7	34.4
75세 이상	34.6	20.8	42.5	55.0	43.4	29.6
결혼상태						
유배우	57.6	78.8	45.5	18.5	37.2	78.8
무배우	42.4	21.2	54.5	81.5	62.8	21.2
가구형태						
노인독신	22.1	9.4	29.3	36.9	39.2	13.7
노인부부	38.6	48.6	32.8	12.0	25.2	61.0
자녀동거	31.9	34.0	30.8	37.3	32.8	22.9
기타 ²⁾	7.3	7.9	7.1	13.7	2.8	2.4
평균자녀수(명)	3.82	3.55	3.98	3.11	3.59	4.14
교육수준						
무학	33.4	12.6	45.4	60.2	50.0	29.6
초등학교	40.4	44.2	38.3	26.1	36.1	51.6
중학교	11.4	15.6	8.9	6.0	7.9	12.4
고등학교	10.6	18.2	6.2	6.0	4.8	5.6
대학이상	4.2	9.4	1.2	1.6	1.2	0.8
주관적건강상태						
매우 좋다	3.9	7.5	2.0	16.0	20.9	19.5
약간 좋다	15.7	16.7	15.0	46.4	45.8	35.5
보통이다	24.5	28.9	22.1	23.6	19.3	23.1
약간 나쁘다	38.8	33.4	41.8	11.6	12.4	19.9
매우 나쁘다	17.1	13.5	19.1	2.4	1.6	2.0
경제활동						
취업중	25.8	32.3	22.1	8.8	20.8	34.7
미취업	74.2	67.7	77.9	91.2	79.2	65.3
거주형태						
자가	62.8	81.2	52.3	30.9	54.6	70.8
전세	12.2	11.1	12.8	16.1	13.9	6.4
월세	12.1	3.9	16.8	29.7	12.0	9.6
무상	12.9	3.9	18.0	23.3	19.5	13.2
평균가구소득액	1,450.7	1,933.7	1,176.5	1,330.7	1,094.2	1,048.0
평균개인소득액	493.1	769.9	338.3	336.5	304.8	359.3
가구소득중 개인소득의 비중	51.2	47.7	53.5	53.1	56.4	50.5

특성	전체	비수급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³⁾		
				20%미만	20~40%미만	40%이상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좋다	0.3	0.9	0.0	0.0	0.0	0.0
약간 좋다	4.6	10.0	1.6	1.2	2.4	1.6
보통이다	34.3	48.5	26.7	24.9	24.4	28.7
약간 나쁘다	33.8	31.6	35.5	32.9	31.2	40.6
매우 나쁘다	26.0	9.0	36.1	41.0	42.0	29.1

주: 1)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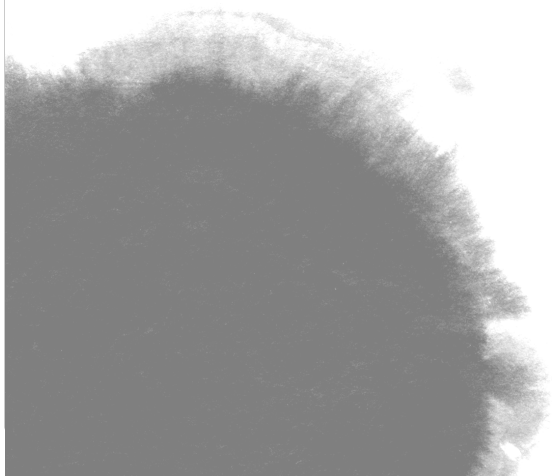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실태조사와 소득인정액이 모두 파악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749명에 대한 분석결과임.

더불어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규모별로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하위 20% 미만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이 다른 수급자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급자중 가장 타가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40%미만 집단의 경우는 개인소득이 다른 수급자에 비하여 적으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60%에 속하는 집단은 개인소득은 타 수급자에 비하여 높지만 가구소득은 수급노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가구형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02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노인소득 증대
및 노인빈곤 감소 효과



II.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노인소득 증대 및 노인빈곤 감소 효과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소득수준을 증대시키고 빈곤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자료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소득 증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소득 증대 효과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실태조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DB,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활용될 것이다.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들 세가지 자료는 노인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빈곤완화 효과는 빈곤율, 빈곤갭, 소득충족율이라는 3개의 기본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DB는 기초노령을 수급한 노인의 행정자료상의 소득이 분석 대상으로 분석단위가 개인이며, 실태조사는 전체 노인의 사적이전 소득 등의 전 소득항목을 포함한 노인개인소득이 분석대상으로 제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부부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해서는 가구단위의 소득을 대상으로한 가구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소득수준 및 구성과 변화실태

가. 노인의 소득수준과 변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을 위해 설정된 소득인정액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총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인정액에는

법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노인과 노인의 배우자의 소득만이 소득인정액 산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노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과 2008년의 비교를 통하여 노인 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노인의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45만 1천원이며 기초노령연금수급노인의 경우는 117만7천원으로 비수급노인의 193만4천원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수급이 노인의 하위 60%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개인소득의 경우 또한 기초노령수급자의 경우는 33만 5천원으로 비수급 노인의 77만 2천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모두 수급노인의 소득수준이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가구소득을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의 경우 비수급 노인의 경우 11만8천원으로 수급노인의 75만원에 비하여 매우 높고 개인재산·금융연금 소득의 경우 27만4천원으로 수급노인의 1만천원의 20배 수준에 달하는 등 모든 소득원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 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 수준이 낮을수록 액수가 큰 반면, 사적이적소득은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을수록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소득원에서 비수급 노인이 수급노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수급노인 사이에서는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액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소득원별 노인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실태

(단위: 천원)

가구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부 업소득	개인재산 · 금융·연 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월 총 가구소득		
2008년도	878.1	107.2	233.2	229.1	3.1	1,450.7		
비수급	1,107.9	274.4	284.2	260.8	6.3	1,933.7		
수급	749.6	11.3	204.3	210.1	1.3	1,176.5		
(소득인정액 기준 ¹⁾)								
20%미만	(900.2)	(8.12)	(256.7)	(164.4)	(1.4)	(1,330.7)		
20~40%미만	(725.2)	(6.3)	(181.0)	(181.3)	(0.4)	(1,094.2)		
40%이상	(576.7)	(18.0)	(175.8)	(275.3)	(2.2)	(1,048.0)		
2007년도	909.4	107.8	177.8	203.3	0.7	1,399.0		
개인소득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 연금 (경로연 금)	친인척으 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 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월 총 개인소득
2008년도	39.8	98.6	66.4	41.0	136.9	20.1	25.3	491.2
비수급	69.7	210.6	155.5	0.1	147.5	2.8	0.4	772.0
수급	23.5	36.5	15.5	64.1	131.1	30.3	39.9	335.2
(소득인정액 기준 ¹⁾)								
20%미만	(11.6)	(15.8)	(3.5)	(74.2)	(117.9)	(7.3)	(87.2)	(336.5)
20~40%미만	(14.7)	(28.0)	(5.9)	(69.1)	(129.7)	(88.7)	(37.6)	(304.8)
40%이상	(33.7)	(67.3)	(36.2)	(51.8)	(145.5)	(2.4)	(0.4)	(359.3)
2007년도	50.9	103.6	63.3	4.3	124.7	3.8	23.9	455.8

주: 1) 소득인정액 자료가 있는 노인 724명에 대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동부 노인이 소득수준이 높아 가구소득이 각각 156만9천원과 118만8천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의 경우는 읍면부 노인이 56만 9천원으로 동부노인의 45만6천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군별로도 가구소득에 큰 차이가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75세 이상의 경우 127만2천원으로 제일 낮다. 한편, 개인소득은 가구소득에 비하여 연령군별 차이가 75세 이상을 중심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즉, 65~69세 군은 53만5천원, 70~74세 군은 55만8천원으로 55만원 전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39만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153만5천원, 여자노인이 140만1천원으로 여자노인의 가구 소득 수준이 낮는데, 개인소득의 경우는 남녀노인의 차이가 더 커 남자노인의 개인 소득이 65만9천원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39만3천원으로 약 절반 수준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인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153만6천원으로 무배우 노인의 133만6천원에 비하여 2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소득의 경우는 가구소득에 비하여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적은 편이다(표 2-2 참조). 이러한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은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며 자가소유주일수록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에 비하여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정비례 관계가 두드러진다. 가구형태별로는 개인소득은 노인독신의 경우 월등히 높지만 가구소득은 자녀동거의 경우가 월등히 높은 등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양상의 차이가 크다(부표 4-2-1 참조).

이러한 소득수준의 변화실태를 2007년과 2008년 소득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의 경우 2007년 비하여 5만2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개인소득의 경우 3만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가구소득의 증가액 중 노인개인 소득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노인개인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소득증가실태를 노인중 2007년 대비 2008년 소득액이 증가한 노인의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의 경우 그 비율이 72.5%이고 개인소득의 경우는 74.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수급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평균 8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비수급 노인의 경우는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가구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각각 81.0%와 57.4%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경우 월등히 그 비율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소득의 경우도 유사하여 수급노인은 평균 5만5천원이 증가한데 비하여 비수급노인은 6천원이 증가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노인중 소득이 증가한 노인의 비율이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에 있어 모두 80%대인데 비하여 비수급노인의 경우는 50%대에 머물고 있다.

노인의 체특성별로는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가 가구소득증가액이 9만 1천원으로 동부의 3만4천원에 비하여 높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한 노인 비율 또한 81.0%로 동부의 68.8%에 비하여 높다. 한편,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증가액은 높지만

가구소득액이 증가한 노인의 비율은 오히려 여자노인의 경우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자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많지만 그 규모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혼상태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유배우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한 노인의 비율은 낮지만 증가한 소득액의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구소득이 증가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증가액수로는 65~69세 연령군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수준별로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의 증가액과 소득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4-2-1 참조).

〈표 2-2〉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실태

(단위: 천원, %)

	2008년도 평균 가구소득	2007년도 평균 가구소득	2007년~ 2008년도 가구소득 변화액	가구소득 증가자 비중	2008년도 평균 개인소득	2007년도 평균 개인소득	2007년~ 2008년도 개인소득 변화액	개인소득 증가자 비중
전체	1,450.7	1,399.0	51.7	72.5	491.2	455.8	35.4	74.7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933.7	1,938.4	-4.7	57.4	772.0	766.0	6.0	51.0
수급	1,176.5	1,093.5	83.1	81.0	335.2	283.0	55.2	88.2
지역								
동부	1,569.4	1,535.4	34.0	68.8	456.0	430.1	25.9	72.0
읍·면부	1,187.7	1,096.7	90.9	81.0	569.2	512.9	56.4	80.7
성								
남자	1,535.3	1,468.1	67.2	71.9	659.0	632.6	26.4	71.5
여자	1,401.1	1,358.5	42.6	72.9	392.9	352.3	40.7	76.5
연령								
65~69세	1,623.2	1,603.2	19.9	70.2	534.6	523.7	10.9	66.4
70~74세	1,468.6	1,399.8	68.8	70.0	558.4	527.0	31.4	75.3
75세 이상	1,271.6	1,205.6	65.9	77.1	388.6	326.5	62.2	81.9
결혼상태								
유배우	1,535.6	1,477.3	58.3	71.0	508.3	486.3	22.0	68.4
무배우	1,335.9	1,293.2	42.7	74.7	468.1	414.5	53.6	83.0

나. 노인의 소득구성

노인의 소득구성은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구성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8년도의 경우 가구소득 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9%로 2007년의 50.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3.1%로 2007년의 52.2%에 비하여 0.9%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수급노인의 경우 47.5%에서 47.7%로 0.2%포인트의 증가만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서는 높은 수치이지만 전체적으로 노인개인의 소득은 가구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최대 8만4천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액으로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가구에서 노인개인의 영향력을 높혀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 노인의 경우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군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고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인개인소득의 비중이 높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낮아 20%수준이어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이들의 경제활동이 노인가구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3과 부표 4-2-2 참조). 이러한 제특성별 노인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2008년도와 2007년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표 2-3〉 노인의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명)

	2008년도	2007년도
전체	50.9	50.3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47.7	47.5
수급	53.1	52.2
지역		
동부	47.0	46.3
읍·면부	59.5	59.1
성		
남자	56.4	56.4
여자	47.6	46.7
연령		
65~69세	44.5	45.0
70~74세	53.4	52.8
75세 이상	54.6	53.0
결혼상태		
유배우	42.6	42.6
무배우	62.0	60.6

한편, 가구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9.1%로 제일 높고 다음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각각 27.0%와 26.9%이며,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은 6.6%, 기타소득 0.3%이다. 이러한 소득원별 구성은 개인소득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표 2-4와 표 2-5참조). 즉 노인개인소득의 경우는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 38.0%이며 다음이 기초노령연금으로 20.3%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6.0%로 공적부조가 노인개인소득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업 및 부업소득은 8.4%, 공적연금 8.1%, 근로소득이 5.5%로 개인의 근로활동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22%로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5.1%이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사적이전이 노인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이 공적부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특성별로 가구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로 수급노인의 37.3%보다 약5%포인트 높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초노령연금수급노인이

32.0%로 비수급 노인의 18.2%보다 월등히 높고, 사적이전소득의 경우도 수급노인이 29.0%로 비수급노인이 2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이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급노인의 1.5%로 비수급노인의 15.5%에 비하여 무려 10%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비수급노인의 노후소득이 상대적으로 가구구성원의 근로 및 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읍면부 거주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에 있어 공적이전이나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동부노인에 비하여 높은 반면 동부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의 비중이 높아 소득원의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의 경우 동부노인이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에 있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여성노인의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개인소득에 있어 더욱 크게 나타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중이 소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근로소득의 비중과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소득에 있어서도 여성노인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중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높고 개인소득에 있어서도 사업 및 부업소득이나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등 소득원의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에서 개인 재산·금융·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개인소득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독립적인 소득의 비중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구소득이나 개인소득 모두에 있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4-2-3과 4-2-6 참조).

한편 개인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수급노인의 개인소득중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이 31.4%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적연금은 4.0%에 불과하다. 반면 비수급노인의 경우는 공적연금이 15.0%, 사업 및 부업소득이 11.4%, 근로소득이 7.2%로 수급노인의 4.0%, 6.8%, 4.6%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수급노인이 40.5%로 수급노인의 36.6%보다 조금 높다.

〈표 2-4〉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구성(2008년도)

(단위: % 명)

제특성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 득의 비율	개인재산·금 융·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소득 전체
전체	39.1	6.6	26.9	27.0	0.3	100.0(1,300)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42.5	15.5	18.2	23.4	0.4	100.0(467)
수급	37.3	1.5	32.0	29.0	0.2	100.0(820)
지역						
동부	40.3	7.5	25.6	26.3	0.3	100.0(896)
읍·면부	36.6	4.6	29.8	28.7	0.3	100.0(404)
성						
남자	42.1	8.4	24.9	24.4	0.3	100.0(480)
여자	37.4	5.6	28.1	28.6	0.3	100.0(820)
연령						
65~69세	46.3	8.5	23.7	21.3	0.2	100.0(429)
70~74세	40.1	6.7	25.6	27.5	0.1	100.0(417)
75세 이상	31.5	4.8	31.2	32.0	0.5	100.0(454)
결혼상태						
유배우	39.4	9.3	24.8	26.2	0.3	100.0(747)
무배우	38.8	2.9	29.8	28.1	0.3	100.0(553)

〈표 2-5〉 노인의 개인소득 구성실태

(단위: % 명)

	2008년	2007년
전체	100.0(1,299)	100.0(1,296)
근로소득	5.5	6.7
사업 및 부업소득	8.4	9.5
재산소득	3.6	3.5
금융소득	2.1	2.2
개인연금	0.0	0.1
공적 연금	8.1	8.5
기타 사회보험 급여	0.0	0.0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20.3	1.3
교통수당	4.0	12.5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38.0	45.4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5.1	1.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6.0	6.3
보전직접지불금	1.2	1.3
기타	0.6	0.6

〈표 2-6〉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2008년)¹⁾

(단위: % 명)

	근로 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 연금 (경로연금)	친인척 으로부터 의 보조금	사회단체 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개인소득 전체
전체	5.5	8.4	8.1	20.3	38.0	5.1	6.0	100.0 (1,299)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7.2	11.4	15.0	0.0	40.5	0.5	0.2 ²⁾	100.0(466)
수급	4.6	6.8	4.0	31.4	36.6	7.8	9.4	100.0(820)
지역								
동부	6.8	4.7	8.1	19.9	38.7	0.9	6.9	100.0(895)
읍·면부	2.8	16.6	8.2	21.2	36.4	14.3	4.1	100.0(404)
성								
남자	8.9	16.3	13.9	13.2	26.0	12.0	2.9	100.0(480)
여자	3.5	3.8	4.7	24.5	45.0	1.0	7.8	100.0(819)
연령								
65~69세	8.2	10.5	12.4	11.5	37.9	13.5	3.7	100.0(428)
70~74세	6.3	10.9	7.2	22.1	36.2	0.5	5.7	100.0(417)
75세 이상	2.3	4.1	4.9	26.9	39.7	1.4	8.5	100.0(454)
결혼상태								
유배우	6.3	10.9	10.0	14.3	38.6	7.8	2.3	100.0(746)
무배우	4.4	5.0	5.5	28.4	37.2	1.4	11.0	100.0(553)

주: 1) 소득중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에 대한 결과임. 2)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시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임

다. 소득변화

노인의 2007년과 2008년 사이의 가구소득의 변화실태를 살펴보면 평균 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개인소득은 3만7천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72.5%이며 개인소득의 경우는 동 비율이 74.6%이다.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은 3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액은 약간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증가하였다. 수급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8만3천원 증가하였지만 비수급노인의 경우는 5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은 7만8천원이 사적이전소득은 2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비수급노인의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이 1만6천원, 사적이전소득은 2만6천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적이전소득에 있어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액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수급 여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부분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다(표 2-7 참조).

동일한 현상을 개인소득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노령수급노인은 근로소득이나 사업 및 부업소득은 감소한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연평균 5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나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생활급여액도 증가하였고 그 액수 또한 비수급노인에 비하여 높다(표 2-8 참조). 즉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개인소득의 증가가 가구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중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이나 개인소득중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액, 친인척이나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에 있어 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에서도 발견된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노인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소득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⁴⁾.

노인의 제특성별로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의 변화실태를 비교해보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근로·사업·부업소득액이 많이

4) 제3장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감소하였고, 읍면부 거주노인은 동부거주 노인에 비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액이 커 6만5천원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이 4만3천원 증가한 것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가구소득의 증가가 커 6만7천원이다. 소득원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있어 증가가 가구소득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에 있어서는 남자노인이 2만6천원이 여자노인은 4만1천원이 증가하여 가구소득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자노인의 개인소득증가는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여자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4만2천원,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이 1만원 증가하였다. 반면 근로소득은 7천원, 사업 및 부업소득이 3천원 감소하였다. 남자노인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증가액은 2만8천원인 반면 친인척이나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은 4만5천원 증가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은 1만8천원, 사업 및 부업소득은 8천원이 감소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단위에서의 공적이전소득액의 증가가 크고, 개인소득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액의 증가액이 크다. 유배우인 노인의 가구소득 증가액이 5만4천원으로 무배우 노인의 2만2천원과 차이가 있으며 유배우 노인의 경우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증가가 가구소득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반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은 5만7천원 증가하여 유배우 노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사적이전소득의 증가는 만원 정도로 유배우노인의 3만8천원에 비하여 매우 적다.

〈표 2-7〉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의 변화실태

(단위: 천원, %)

소득변화액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 소득액	개인 재산·금융·연 금소득액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소득 전체
전체	-31.3	-0.6	55.4	25.8	2.4	51.7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49.6	-2.0	15.8	25.9	5.2	-4.7
수급	-22.1	0.2	77.5	26.6	0.9	83.1
지역						
동부	-43.0	-4.3	51.2	27.9	2.3	34.0
읍·면부	-5.3	7.5	64.8	21.2	2.8	90.9
성						
남자	-23.0	-1.6	53.8	35.1	2.9	67.2
여자	-36.2	-0.1	56.4	20.3	2.1	42.6
연령						
65~69세	-53.0	1.1	42.8	26.4	2.6	19.9
70~74세	-16.5	-7.3	57.0	35.3	0.3	68.8
75세 이상	-24.5	3.9	65.8	16.6	4.2	65.9
결혼상태						
유배우	-35.8	-2.4	56.5	37.6	2.4	58.3
무배우	-25.3	1.7	54.0	9.9	2.4	42.7
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 소득액	개인 재산·금융·연 금소득액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소득 전체
전체	19.6	4.2	82.2	42.4	1.4	72.5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21.0	8.1	52.9	34.3	1.5	57.4
수급	18.8	2.1	98.7	46.9	1.5	81.0
지역						
동부	17.7	4.1	78.8	40.1	1.6	68.8
읍·면부	23.7	4.5	89.6	47.5	1.2	80.9
성						
남자	23.8	5.2	80.4	41.5	1.3	71.9
여자	17.1	3.7	83.2	42.9	1.6	72.9
연령						
65~69세	24.9	5.1	80.6	36.6	0.9	70.2
70~74세	19.2	3.1	79.4	45.3	1.4	70.0
75세 이상	14.8	4.4	86.4	45.2	2.0	77.1
결혼상태						
유배우	22.4	5.5	79.1	42.0	1.1	71.0
무배우	15.7	2.5	86.4	42.9	2.0	74.7

〈표 2-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의 변화실태

(단위: 천원, %)

소득변화액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친인척으 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 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개인소득 전체
전체	-11.0	-5.0	3.1	36.6	12.2	16.3	1.4	35.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8.8	-8.3	7.4	0.0	10.7	0.4	0.0	6.0
수급	-12.5	-3.2	0.7	57.2	13.4	25.6	2.2	52.2
지역								
동부	-15.5	-6.2	3.6	33.5	11.8	-0.4	1.6	25.9
읍·면부	-1.0	-2.4	2.1	43.5	13.0	53.3	1.1	56.7
성								
남자	-18.2	-8.3	5.5	28.0	15.3	44.8	1.3	26.4
여자	-6.8	-3.1	1.7	41.7	10.4	-0.4	1.5	40.7
연령								
65~69세	-21.6	-1.1	4.7	18.0	5.6	50.3	1.1	10.9
70~74세	-10.2	-10.2	3.6	39.4	13.6	0.6	2.0	31.4
75세 이상	-1.8	-3.9	1.2	51.7	17.1	-1.4	1.1	62.2
결혼상태								
유배우	-15.6	-5.6	3.7	25.1	15.2	28.9	1.2	22.0
무배우	-4.8	-4.2	2.3	52.2	8.1	-0.8	1.7	53.6
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경로 연금)	친인척으 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 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개인소득 전체
전체	3.3	4.6	16.7	63.9	37.3	6.4	5.3	74.6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9	5.4	27.4	0.6	32.4	2.1	0.2	51.0
수급	3.0	4.3	10.9	99.9	40.2	8.9	8.3	88.2
지역								
동부	3.2	1.8	13.8	59.5	35.9	6.3	5.8	72.0
읍·면부	3.5	10.6	23.0	73.8	40.3	6.7	4.2	80.7
성								
남자	5.4	8.5	29.6	52.7	37.3	4.2	3.8	71.5
여자	2.1	2.3	9.3	70.5	37.3	7.7	6.2	76.5
연령								
65~69세	4.4	6.5	28.7	46.9	31.7	3.7	2.3	66.4
70~74세	3.6	4.6	14.4	66.2	41.5	5.0	4.6	75.3
75세 이상	1.8	2.6	7.7	78.0	38.8	10.1	8.8	81.9
결혼상태								
유배우	3.9	5.8	20.5	50.5	36.6	3.7	2.3	68.4
무배우	2.5	3.1	11.6	82.1	38.2	10.0	9.4	83.0

한편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의 측면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액이 적고 사적이전소득액의 증가액은 많은 경향을 보인다. 개인소득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증가액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가구나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증가액수가 많으며, 개인소득의 경우는 노인독신의 경우 개인소득의 증가액이 6만8천으로 가장 많다. 소득항목별로 비교해보면, 노인독신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의 증가액이 많다. 미취업노인은 취업노인에 비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증가액이 많다. 또한 개인소득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액의 증가액수는 취업노인이 미취업노인에 비하여 많은 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개인소득증가액은 취업노인에 비하여 미취업노인에게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비율이나 개인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비율에 있어서도 유사하다(표 2-7, 표 2-8, 부표 4-2-4와 4-2-5, 부표 4-2-7와 4-2-8 참조).

라. 부채

노인중 38.2%는 부채를 갖고 평균 부채액은 2천92만원 수준으로 수급노인에 비하여 비수급 노인의 경우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조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부채 또한 많은 경향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평균 부채액 또한 비수급 노인의 경우 수급노인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아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과 부채액도 많은 것으로 소득수준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채는 동부노인의 경우 읍·면부거주 노인에 비하여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과 부채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과 부채액이 많다(표 2-9와 부표 4-2-9 참조).

〈표 2-9〉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의 부채

(단위: %, 명, 천원)

	부채								계(명)	평균부채 (천원)
	0원	1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만원	10000만원~ 50000만원	50000만원~ 1억	1억~ 5억	5억 이상~		
전체 ¹⁾	61.8	2.2	4.1	3.2	16.5	7.3	4.6	0.4	100.0(1300)	20,915.2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53.4	1.5	3.0	2.8	20.0	.4	9.0	0.9	100.0(466)	35,248.5
수급	66.9	2.6	4.8	3.4	14.2	6.0	2.2	0.0	100.0(819)	10,330.6
지역										
동부	57.7	2.2	3.3	3.1	18.4	8.5	6.0	0.6	100.0(896)	26,658.6
읍·면부	70.8	2.0	5.7	3.5	12.4	4.5	1.2	0.0	100.0(404)	7,931.9
성										
남자	59.3	2.3	3.1	3.5	18.1	7.7	5.4	0.6	100.0(481)	27,094.2
여자	63.0	2.2	4.6	3.0	15.6	7.1	4.1	0.3	100.0(822)	17,170.3
연령										
65~69세	52.6	2.3	4.7	4.7	22.2	7.5	5.1	1.0	100.0(428)	32,234.2
70~74세	60.3	2.6	4.3	4.3	12.7	10.3	5.3	0.2	100.0(418)	20,154.7
75세 이상	71.9	1.8	3.1	0.9	14.7	4.2	3.5	0.0	100.0(455)	10,709.4
결혼상태										
유배우	60.6	1.7	3.6	3.1	15.9	8.3	5.9	0.8	100.0(747)	28,076.7
무배우	63.3	2.9	4.7	3.4	17.2	5.8	2.7	0.0	100.0(553)	11,054.0

주: 1) 본인응답자와 대리응답자 포함한 1300명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빈곤감소효과

가. 분석 지표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빈곤 감소효과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빈곤 규모와 심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가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의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빈곤갭비율, 소득충족률 지표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DB,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빈곤지표의 개념 및 측정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먼저, 양적

5) 빈곤지수 중 많이 활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FGT지수임(Foster 외, 1984). FGT지수는 파라미터 α 의 값에

측면에서 빈곤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빈곤율은 절대빈곤 또는 상대빈곤의 개념으로 도출된 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또는 인구의 규모가 전체 가구 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PR은 가구규모별 빈곤선이 π 일 경우의 빈곤율을, q 는 개별가구의 가구규모에 따른 빈곤선, 즉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규모를, n 은 전체 분석대상 가구의 규모를 의미한다.

빈곤율 (Poverty Rate)
$PR = \frac{q}{n} \quad (q: \text{빈곤가구}, n: \text{전체가구}, \pi: \text{가구규모별 빈곤선})$

다음으로, 빈곤의 질적 측면에서 빈곤의 심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빈곤갭비율을 사용하였다. 빈곤갭비율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의 총합을 전체 가구 최저생계비의 총합(소득이 0일 경우 전체 가구의 빈곤갭 총합)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여기서 분자의 빈곤갭의 총합은 빈곤선 아래에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빈곤갭비율 (Poverty Gap Ratio)
$PGR = \frac{\sum_{i=1}^q (\pi - y_i)}{n\pi} \quad (q: \text{빈곤가구}, n: \text{전체가구}, \pi: \text{가구규모별 빈곤선}, y: \text{가구소득})$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데 파라미터 α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임.

$$FGT_{\alpha} = \frac{1}{n} \sum_{i=1}^q \left[\frac{\pi - x_i}{\pi} \right]^{\alpha}$$

여기서 FGT_{α} 는 파라미터 α 인 FGT지수, n 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수, q 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수, π 는 빈곤선, x_i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 i 의 소득, α 는 빈곤혐오감(poverty-aversion)을 나타내는 파라미터($\alpha \geq 0$)임. $\alpha = 0$ 인 경우, 빈곤율과 동일하며 $\alpha=1$ 인 경우 빈곤갭 비율을 나타냄.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은 FGT지수의 α 값을 “0”과 “1”로 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앞서 각종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지표 가운데 빈곤율의 민감도가 빈곤갭비율보다 낮다는 측면과 빈곤율의 변화가 빈곤선 근처에 위치한 집단이 단순히 빈곤선을 넘을 수 있는 정도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반영할 뿐 많은 빈곤층이 위치하고 있는 빈곤선 아래의 집단이 경험하는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급여수준이 낮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이 노인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을 증가시켜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도록 하는가의 여부보다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가구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빈곤선과의 차이인 빈곤갭을 얼마나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보다 민감하게 보여주는 빈곤갭비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분석에 활용하는 지표가 바로 소득충족률이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 분석지표로 활용한 소득충족률(Income-Need ratio)은 빈곤갭비율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측면에서 빈곤의 심도 변화를 나타낸다. 이것은 개별가구의 소득수준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최소한의 욕구, 즉 최저생계비를 통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소득충족률 (Income-to-Need Ratio)

$$INRatio = \frac{y}{\pi} \quad (y: \text{가구소득}, \pi: \text{가구규모별 빈곤선})$$

빈곤갭비율이 탈 빈곤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향후 채워야 할 부족분이 얼마인가를 나타낸다면, 소득충족률은 특정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정책대상 집단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최소한의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가구의 있어서 빈곤갭비율은 빈곤선을 상회하여 빈곤가구가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지만, 소득충족률은 빈곤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가 고유의 값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나. 기초노령연금 DB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1) 분석 개요

기초노령연금 DB는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의 선정과 급여지급에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의미한다.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소득 및 재산 항목별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1차 구축되며 선정과정에서 수급신청 노인의 증빙자료를 통해 일부 수정되는데, 기초노령연금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산출된 소득인정액 정보와 그에 따라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DB의 전체 노인('08. 8월 기준 노인 5,040,889명)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2,975,824명)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과 양적·질적 측면에서 빈곤 규모와 심도를 나타내는 빈곤 지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DB가 노인 개인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본 연구에 제공된 기초노령연금 DB는 전체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기초노령연금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기준 시점인 2008년 8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신청한 기록이 있는 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등의 정보가 제공된 반면, 일부 비수급 노인 및 배우자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노인빈곤 분석 시 적용하는 가구 단위의 분석 대신 노인 개인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제공된 기초노령연금 DB의 제약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앞서 제시한 3가지 빈곤지표 즉, 절대빈곤율, 빈곤갭비율, 소득충족률을 활용하여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빈곤의 개념(절대빈곤/상대빈곤), 빈곤의 분석 단위

(개인/가구),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는 기준(소득/재산/지출) 등이다 (Barr, 1998). 따라서, 빈곤 연구는 동일한 연구주제일지라도 빈곤 및 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 분석대상 및 단위, 소득 개념 및 범위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곤 및 소득 개념, 분석 단위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DB를 기초로 한 노인빈곤 감소효과 분석에 있어 빈곤개념은 절대빈곤의 관점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2008년, 1인가구 기준 463,047원)를 빈곤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인 빈곤선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개인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남성노인/여성노인)과 연령(65~69세/70세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여 빈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득을 사용하였다. 특히, 소득 개념과 이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의 범위는 빈곤지표 변화에 따른 빈곤완화효과 분석에서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포함한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	5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타 공적보조금 보훈연금 산재급여 농업직불금	=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선정 시 소득평가월액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선정 시 소득평가월액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활용되는 소득평가액은 행정자료 상 노인 개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시장소득과 공적연금, 기타 공적보조금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에 해당한다. 노인의 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적이전소득은 이러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소득평가액에 노인 개인의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합산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을 산출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공적연금 및 기타 공적보조금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소득 + 공적연금’, ‘시장소득 + 기타 공적보조금’,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가)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율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제공된 기초노령연금 DB의 제약(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정보 누락)으로 인해 여기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개인(2,975,824명) 단위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소득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한 절대빈곤율은 99%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절대빈곤선을 활용된 2008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463,047원이었던 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5%로 매우 낮다고 할지라도 2008년 선정기준이 노인단독의 경우 소득인정액 40만원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절대빈곤율 수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빈곤 연구에서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소득’의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재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난 절대빈곤율 수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자신의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거나 보유한 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매우 작고, 여전히 연금이나 기타 정부보조금 역시 미흡하다. 요컨대, 이후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상의 노인 개인 및 부부 단위의 절대빈곤율이나 복지패널조사에 의한 가구 단위의 노인빈곤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들은 자신보다는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나

자녀 등 다른 가구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절대빈곤율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절대빈곤율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수급노인 대상의 제한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절대빈곤율 규모보다는 오히려 기초노령연금과 각종 공적이전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가 얼마나 나타나며, 특히 기존 공적이전과 비교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성별, 연령별 집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차이와 그 경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표 2-10〉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절대빈곤율 변화

(단위: %)

구 분	수급노인 개인단위 분석
시장소득	99.89
시장소득 + 5대 공적연금	99.85
시장소득 + 기타 공적보조금	99.88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99.86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99.84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	99.73

수급노인 개인 단위로 절대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 및 기타 공적보조금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절대빈곤율 감소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개인 단위의 근로 및 사업소득, 이자 및 임대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99.8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를 살펴보면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존의 공적이전과 비교해보면, 공적연금보다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보훈연금 등 기타 공적보조금은 예상대로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시장소득에 공적연금과 기타 공적보조금 등 기존 공적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선정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절대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99.84%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존 공적이전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0.05%p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노령연

금 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절대빈곤율은 99.73%로 나타나,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실질적인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0.11%p로 나타났다. 이처럼 절대빈곤율 감소폭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증가한 것은, 공적연금 등 기존의 공적이전 소득이 시장소득에 더해져, 여전히 빈곤한 상태는 동일하지만 빈곤갭이 감소하여 보다 빈곤선에 가까운 소득을 보유한 노인들이 증가한 상태에서 최대 8만4천원(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8.3%)의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빈곤선 이상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 감소효과는 기존 공적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빈곤율 감소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사적이전소득 등이 제외된 행정자료 상 시장소득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 자신들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의 규모가 기존 경로연금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근로활동 및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이 극단적으로 낮은 노인의 소득수준을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상승시켜 절대빈곤율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급여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 개인의 성별에 따라 절대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행정자료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의 절대빈곤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해 약 0.07%p,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0.06%p의 빈곤율 감소가 나타난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각각 0.01%p 감소하는데 그쳐 기초노령연금이 공적연금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후의 소득평가액을 기초로 한 절대빈곤율 역시 남성 노인은 0.25%p 감소한 반면, 여성 노인의 절대빈곤율 감소는 0.03%p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여성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고려하기 전 여성의 소득수준(시장소득 또는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기 때문이다. 남성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남성 노인의 경상소득은 여성보다는 높아

급여수준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영향이 실질적인 절대빈곤을 감소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살펴볼 빈곤갭비율 또는 소득충족률 분석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절대빈곤율 변화

(단위: %)

구 분	성별		연령		전 체
	남	여	65~69세	70세 이상	
시장소득	99.75	99.95	99.75	99.95	99.89
시장소득 + 5대 공적연금	99.68	99.94	99.64	99.94	99.85
시장소득 + 기타 공적보조금	99.73	99.95	99.72	99.94	99.88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99.69	99.94	99.68	99.93	99.86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99.64	99.93	99.60	99.94	99.84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	99.39	99.90	99.31	99.92	99.73

이러한 결과는 노인 개인의 연령에 따른 절대빈곤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65~69세 노인의 절대빈곤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노인의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가 0.07%p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 노인은 0.02%p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65~69세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폭이 공적연금(0.11%p)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후의 소득평가액을 기초로 분석한 절대빈곤율 변화 폭은 더욱 큰 차이를 나타냈다. 65~69세 노인의 경우 0.29%p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 노인은 0.02%p 감소하여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의 양적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료 상에서 노인 개인을 기준으로 측정된 시장소득, 공적연금 등 기존 공적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살펴볼 소득충족률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이전의 소득수준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노인 규모는 국민연금이나 기존 경로연금과 달리 준 보편적 제도 수준으로 확대되었을지라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이 노인의 소득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상승시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빈곤율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이 대상자의 규모나 빈곤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공적연금 등 기존 공적이전에 비해 빈곤완화효과가 큰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노인의 빈곤갭을 줄이거나 소득충족률을 개선시키는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빈곤율 보다는 이어서 살펴볼 노인의 빈곤갭비율이나 소득충족률 지표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변화

앞서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사적이전을 제외한 행정자료 상 시장소득 기준 노인 개인 단위의 빈곤갭비율은 각각 99.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인이 자신의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거나 보유한 자산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고, 여전히 연금이나 기타 정부보조금 역시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적이전소득이나 일용근로 형태의 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을 포함한다면 상황은 다소 개선되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시장소득 기준 빈곤갭비율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급노인 개인 대상의 제한적인 분석일지라도 기초노령연금과 각종 공적이전에 의해 절대 빈곤의 관점에서 분석한 빈곤갭비율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특히 기존의 공적이전과 비교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연령별, 성별 집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차이와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표 2-12〉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빈곤갭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수급노인 개인단위 분석
시장소득	99.49
시장소득 + 5대 공적연금	96.27
시장소득 + 기타 공적보조금	98.61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86.46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95.39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	82.37

수급노인 개인 단위로 분석한 빈곤갭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만을 고려한 경우 13.03%p의 빈곤갭비율이 감소하여, 공적연금(3.22%p)과 기타 공적보조금(0.88%p)에 비해 그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 등 기존의 공적이전을 포함한 수급 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앞서 분석결과를 살펴본 절대빈곤율에서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노인의 빈곤갭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노인의 소득수준을 크게 상승시켜 절대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기존의 경로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수급대상의 규모가 전체 노인의 60%(2008), 70%(2009)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급노인 개인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 빈곤갭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절대빈곤율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절대빈곤율 변화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과 65~69세 노인의 경우에 감소폭이 크게 확인된 반면, 빈곤갭비율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못할지라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효과가 포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성별		연령		전 체
	남	여	65~69세	70세 이상	
시장소득	99.19	99.66	99.11	99.66	99.49
시장소득 + 5대 공적연금	94.41	97.32	92.37	98.02	96.27
시장소득 + 기타 공적보조금	97.33	99.33	98.23	98.78	98.61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88.12	85.53	86.67	86.37	86.46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92.55	96.99	91.50	97.14	95.39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	81.50	82.87	79.10	83.84	82.37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폭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1.07%p 감소한 반면 여성 노인은 14.13%p 감소하였으며,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3.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65~69세 노인(12.44%p)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4.12%p와 13.30%p만큼 빈곤갭비율이 감소하여 역시 남성 노인(11.05%p)과 65~69세 노인(12.40%)보다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의해 빈곤의 심도가 질적으로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 노인과 65~69세 노인의 경우에 역시 여성 노인이나 70세 이상 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기초노령연금에 비해서 약 1/2 수준으로 나타나,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공적연금에 비해 보편적인 제도로 대부분의 노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빈곤갭비율 분석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노령 연금의 수급대상 노인의 규모는 큰 반면,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절대빈곤율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빈곤갭비율 즉, 질적인 차원에서 빈곤의 심도를 다른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크게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마지막 지표인 소득충족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충족률 변화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수급노인의 소득충족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4〉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소득충족률 변화

구 분	수급노인 개인단위 분석
시장소득	0.0054
시장소득 + 5대 공적연금	0.0399
시장소득 + 기타 공적보조금	0.0139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0.1482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0.0484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	0.1912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0.0054에서 0.1482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약 0.143 정도 상승하였다. 이것은 1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약 14.3% 정도의 소득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등 기존 공적이전소득을 함께 고려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소득충족률은 0.0484에서 0.1912로 약 4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들은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시장소득에 공적연금이나 기타 공적보조금(기초생활보장급여 제외)을 포함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의 약 5%에 불과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노인 자신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약 20%까지 충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충족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최대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행정자료 상으로 수급노인 자신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원 가운데 약 80%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15〉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소득충족률 변화

구 분	성별		연령		전 체
	남	여	65~69세	70세 이상	
시장소득	0.0095	0.0034	0.0102	0.0033	0.0054
시장소득 + 5대 공적연금	0.0637	0.0285	0.0865	0.0196	0.0399
시장소득 + 기타 공적보조금	0.0280	0.0071	0.0198	0.0113	0.0139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	0.1321	0.1559	0.1472	0.1486	0.1482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경상소득	0.0822	0.0322	0.0961	0.0277	0.0484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경상소득	0.2048	0.1847	0.2331	0.1730	0.1912

다음으로, 노인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집단별로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빈곤갭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시장소득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의 소득충족률을 더욱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의해 약 0.153만큼 소득충족률이 높아졌으며 남성 노인(약 0.123)보다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65~69세 노인보다 상승폭이 높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공적연금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상승효과를 위와 같이 시장소득과 기초노령연금만 고려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후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시 여성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에게 각각 약 0.153과 0.145 정도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난다. 그런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남성 노인과 65~69세 노인의 약 1/3 수준에 불과했던 여성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의 소득충족률은 기초노령연금만 고려할 경우 오히려 역전되어 여성 노인이 0.1559로 남성 노인보다 약 0.024 정도 높아졌으며, 두 집단의 소득충족률이 거의 유사하지만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도 0.0014만큼 65~69세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적연금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소득평가액에 여성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충족률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기초노령연금을 고려할지라도

행정자료 상 최종적인 소득평가액은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약 0.02, 65~69세 노인이 70세 이상 노인보다 약 0.06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노인과 65~69세 노인의 경우에 수급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연금의 경우, 수급대상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급여수준이 기초노령연금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소득원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된 소득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실태조사에 기초한 노인빈곤 감소 효과

1) 분석 개요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원자료(노인 1,300명, 노인부부 단위 928가구)를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노인 개인 및 노인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의 빈곤지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초노령연금 DB는 실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의 선정과 급여지급에 활용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법령 및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항목별 행정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소득인정액 정보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급여정보로 구성된 반면,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대상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축된 항목별 소득자료와 함께 연구목적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DB에서 제공되지 않는 각종 공적이전소득 항목과 노인의 소득원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적이전소득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과 2008년을 기준으로 동일한 소득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각종 공적이전 소득 항목과 사적이전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각 시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전의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DB와 다르게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는 노인을 포함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도 소득 항목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노인 개인 별로 조사한 각종 공적이전소득 항목과 상이하므로 가구단위 빈곤완화효과 분석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DB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여기서는 앞서 기초노령연금 DB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선정 및 급여지급 시 적용되는 보장단위인 노인 개인 및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빈곤지표로는 앞서 제시한 3가지 빈곤지표(절대빈곤율, 빈곤갭비율, 소득충족률)를 활용하여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와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분석 방법

먼저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한 빈곤완화효과 분석에 있어서 절대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공표한 2007년, 2008년 최저생계비를 빈곤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준인 빈곤선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단위의 경우 노인 개인 및 부부를 단위로 하고 있으나,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노인 개인 및 부부의 성별(남성 노인단독/여성 노인단독/노인부부) 및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확대 시행 기준인 연령별(65~69세/70세 이상) 구성에 따라 하위 집단별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DB 분석결과와 달리 가구 유형별 분석에서는 ‘(1)노인단독 가구, (2)노인과 비노인 배우자로 구성된 노인부부, (3)노인부부’ 유형과 함께 ‘(4)기타 가구원 동거가구’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 개인 또는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여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역시 소득을 사용하였다. 특히, 소득 개념과 이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의 범위는 빈곤지표 변화에 따른 빈곤완화효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실태 조사에 포함된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소득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장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	친인척 민간단체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07년) 경로연금 공적연금 교통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 경상소득

3) 분석 결과

가)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율 변화

먼저,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노인 개인 및 부부단위의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86.66%와 88.10%로 나타나,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약 1.5%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각각 66.33%와 63.99%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폭은 2008년에 약 24%p로 2007년(약 20%p)보다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DB 상 분석결과(99%)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약 11~13%p,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약 33~35%p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행정자료와 실태조사 원자료의 차이, 즉 시장소득을 구성하는 일부 소득 항목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반영되지 않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차이와 함께 동일 소득 항목에 대한 행정자료 상의 소득과액 수준과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선으로 활용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할 때, 이처럼 80%를 넘어서는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스스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거나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더라도 60%를 상회하는 경상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2-16〉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체 노인가구	전체 노인가구
시장소득		86.66	88.10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76.72	77.58
	시장소득 + 민간단체	86.43	88.0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76.29	77.48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81.02	82.70
	시장소득 + 교통수당	86.40	87.94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86.46	86.08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86.46	86.08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86.26	87.77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86.40	88.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79.63	79.78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66.33	63.99

기초노령연금과 경로연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각종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살펴보면,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노인 개인 및 부부단위 절대빈곤율 감소는 약 2%p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7년 당시 경로연금에 의한 빈곤율 감소 0.2%p에 비해 약 10배 정도 확대된 것이다. 경로연금은 여타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빈곤율 감소효과가 가장 낮았으나,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5.4%p) 다음으로 빈곤율 감소폭이 높았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축소된 교통수당에 의한 빈곤율 감소폭은 2007년 0.24%p에서 2008년에 0.16%p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폭이 경로연금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약 2.0%p 감소시키는데 그쳐 공적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절대빈곤 감소효과는 기존 공적이전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 측면에서 수급노인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노인의 소득수준을 절대빈곤 이상으로 끌어올려 절대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급여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급여수준의 한계로 인해 절대빈곤율의 변화를 통한 빈곤완화에는

민감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친인척에 의한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은 여전히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빈곤완화효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그 차이는 다소 줄어들었다. 요컨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노인빈곤 감소 측면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 개인의 성별에 따른 절대빈곤을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DB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빈곤율 지표 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은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의 절대빈곤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약 95%에 이를 정도로 남성 노인(약 75%)에 비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높았으며, 경로연금 당시 0.4%p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다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p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남성 노인의 경우에 경로연금에 의한 빈곤율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의해 오히려 약 2.7%p의 빈곤율이 감소하였다. 물론, 남성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적연금으로 2007년에 약 4.8%p에서 2008년에는 약 5.4%p의 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부부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약 2.4%p의 절대빈곤율이 감소하여 여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2-17〉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절대빈곤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남성 노인단독	여성 노인단독	부부	전체
시장소득		72.34	94.04	82.77	86.66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67.02	84.23	69.93	76.72
	시장소득 + 민간단체	71.81	93.67	82.77	86.43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66.49	83.88	69.26	76.29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67.55	90.60	72.64	81.02
	시장소득 + 교통수당	72.34	94.04	82.09	86.40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72.34	93.67	82.77	86.4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71.81	94.04	81.76	86.26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72.34	93.67	82.43	86.4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66.49	89.81	70.27	79.63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58.51	76.15	54.05	66.33
구 분		2008년			
		남성 노인단독	여성 노인단독	부부	전체
시장소득		75.40	95.96	82.43	88.10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65.96	85.38	71.19	77.58
	시장소득 + 민간단체	74.87	95.96	82.43	88.0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65.43	85.38	71.19	77.48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70.05	92.88	72.97	82.70
	시장소득 + 교통수당	75.40	95.59	82.43	87.94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72.73	94.24	80.07	86.08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74.33	95.96	82.09	87.77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75.40	95.96	82.43	88.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66.49	90.00	70.27	79.78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53.72	74.04	52.70	63.99

이처럼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절대빈곤율 지표를 기준으로 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여성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여성 노인의 시장소득 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수준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절대빈곤율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이후 살펴볼

빈곤갭비율 또는 소득충족률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의 연령 구성에 따른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경로연금에 의해서는 70세 이상 노인 1인가구 등 일부 집단에서만 1%p 미만의 미미한 빈곤율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제외하면 나머지 집단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로는 빈곤율 감소폭이 각 집단에서 2%p 내외로 상승하였지만 연령 구성에 따른 집단별 빈곤율 감소폭의 상대적 크기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보다는 65~69세 노인의 절대빈곤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65~69세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경우 약 5.4%의 빈곤율 감소가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 노인 1인의 경우 2%p, 70세 이상 노인 2인의 경우 약 1.4%p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모든 집단에서 낮았으며 특히, 65~69세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 공적연금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를 비교할 경우, 65~69세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경우 사적이전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폭이 약 7.2%p 크게 나타날 정도로 65~69세 노인이 구성된 가구에서는 2007년과 달리 오히려 역전되어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가 사적이전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적이전소득보다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절대빈곤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65-69 1인	65-69 2인	65-69 1인 70+ 1인	70+ 1인	70+ 2인	전체
시장소득		80.29	64.52	84.04	91.60	90.65	86.66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73.68	52.38	72.63	82.00	75.54	76.72
	시장소득 + 민간단체	78.95	64.52	84.04	91.60	90.65	86.43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72.73	52.38	72.63	82.00	74.10	76.29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73.68	46.77	73.40	89.00	84.06	81.02
	시장소득 + 교통수당	80.29	64.52	82.11	91.60	89.93	86.40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80.29	64.52	83.16	91.38	90.65	86.4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79.90	64.52	80.85	91.60	89.93	86.26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80.29	62.90	84.04	91.38	90.65	86.4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73.21	41.94	71.28	87.80	82.01	79.63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64.90	30.65	55.79	74.35	63.31	66.33
구 분		2008년					
		65-69 1인	65-69 2인	65-69 1인 70+ 1인	70+ 1인	70+ 2인	전체
시장소득		80.86	65.08	82.11	94.40	90.58	88.10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75.12	53.23	71.28	82.57	79.14	77.58
	시장소득 + 민간단체	80.38	65.08	82.11	94.40	90.58	88.0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74.64	53.23	71.28	82.57	79.14	77.48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75.12	51.61	71.28	91.60	83.45	82.70
	시장소득 + 교통수당	80.29	65.08	82.11	94.40	90.58	87.94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79.43	59.68	80.85	92.40	89.21	86.08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80.86	65.08	81.91	94.00	89.93	87.77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80.86	65.08	82.11	94.40	90.58	88.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71.77	46.03	69.47	88.80	81.29	79.78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64.11	31.75	52.13	70.60	63.04	63.99

마지막으로, 2007년과 2008년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항목별 노인 부부단위 가구 유형에 따른 절대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9〉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절대빈곤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노인 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 부부	기타 가구원 동거	전체
시장소득		95.07	59.57	84.38	85.37	86.66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77.82	57.45	71.09	81.77	76.72
	시장소득 + 민간단체	95.07	57.45	84.38	85.10	86.43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77.82	55.32	70.31	81.49	76.29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91.93	51.06	75.00	80.58	81.02
	시장소득 + 교통수당	95.07	59.57	83.92	85.13	86.40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94.39	59.57	83.98	85.37	86.4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95.07	57.45	83.59	85.13	86.26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94.39	59.57	84.38	85.13	86.4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90.49	51.06	72.16	80.10	79.63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66.90	44.68	53.91	76.02	66.33
구 분		2008년				
		노인 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 부부	기타 가구원 동거	전체
시장소득		96.13	63.83	85.16	87.26	88.10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78.52	59.57	72.27	82.21	77.58
	시장소득 + 민간단체	96.13	61.70	85.16	87.26	88.0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78.52	57.45	72.27	82.21	77.48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92.61	55.32	76.17	82.97	82.70
	시장소득 + 교통수당	95.44	63.83	85.16	87.26	87.94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93.31	61.70	82.35	86.33	86.08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96.13	63.83	83.98	87.26	87.77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96.13	63.83	85.16	87.26	88.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88.77	55.32	72.94	80.77	79.78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60.21	45.83	52.73	75.54	63.99

시장소득 기준으로 노인단독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비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 가구와 비교하면 2007년에 약 35.5%p, 2008년에 약 3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에 의해 시장소득에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각각 약 66.9%와 60.2% 수준으로 각각 낮아졌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인 2008년도에 시장소득 기준 96.13%에서 약 35.9%p 감소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2007년의 경우 경로연금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노인단독과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만 약 0.4%p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집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에는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2.1~2.8%p의 빈곤율 감소가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타 정부보조금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수급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급여수준이 높은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율 감소폭 3.5~9.0%p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를 비교해보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특히,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강화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노인 배우자 부부가가구와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율 감소폭은 5%p 미만에 불과하여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특성 상 친인척 등 외부에서 이전된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13~17%p에 이를 정도로 큰 반면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의 경우 두 집단에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폭의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에 의한 전체 빈곤완화효과는 노인단독과 노인부부 가구에서 2007년에 각각 약 28%p와 약 30%p에서 2008년에는 약 36%p와 32%p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노인 개인 및 부부단위로 분석한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율 수준은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에서 약 75% 내외로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가구 단위로 선정과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 사회안전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으며, 가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적이전소득 역시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적이전 등 다양한 소득항목이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장소득 및 경상소득 기준의 절대빈곤율이 기초노령연금 DB 상 분석결과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노인 자신 및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단위로 측정된 빈곤율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 및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분석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규모는 국민연금이나 기존의 경로연금과 달리 준 보편적 제도 수준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이 노인 개인이나 부부의 소득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상승시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빈곤율에 민감한 영향을 미쳐 큰 폭의 감소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기초노령연금이 대상자의 규모나 빈곤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공적연금 등 기존 공적이전이나 사적이전과 비교할 때 빈곤완화효과가 큰 제도라는 것이다.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노인의 빈곤갭을 줄이거나 소득충족률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다음의 빈곤갭비율과 소득충족률 지표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빈곤갭 비율 변화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질적 측면에서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빈곤지표인 빈곤갭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20〉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갭 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체 노인가구	전체 노인가구
시장소득		71.98	74.0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48.24	49.59
	시장소득 + 민간단체	71.15	73.26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47.44	48.87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64.58	66.36
	시장소득 + 교통수당	69.63	73.15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70.86	63.26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70.71	72.68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66.22	68.16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54.46	48.0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32.29	27.71

먼저, 노인 개인 및 부부단위(1인 또는 2인가구)로 분석한 빈곤갭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약 72%와 74%로 나타나 매우 높았으며, 2008년에 2%p 가량 질적 측면에서 빈곤의 심도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에 경로연금을,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반영한 결과, 각각 약 1.1%p와 10.8%p의 빈곤갭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의해 빈곤갭비율 감소폭이 경로연금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7년의 경우 공적연금(약 7.4%p)과 기초생활보장(약 5.8%p) 순서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경로연금은 공적이전 항목 중 가장 작은 효과를 나타냈던 반면,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폭이 공적연금(약 7.7%p)과 기초생활보장(약 5.9%p)의 효과를 넘어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8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갭비율은 전년도 보다 다소 나빠졌지만, 기초노령연금을 고려한 빈곤갭비율은 약 63.3%로 2007년보다 약 7.6%p 더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전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

비율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2007년에 약 7%p 가량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폭이 약 0.9%p 더욱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갭비율은 2008년에 다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에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모두 고려한 경상소득 기준 2008년 빈곤갭비율은 2007년보다 약 4.6%p 개선된 27.71%로 나타났다.

요컨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절대빈곤을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이상과 같이 노인의 빈곤갭비율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이 노인의 소득수준을 크게 상승시켜 절대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높지는 않지만, 기존의 경로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규모가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서, 2009년에 다시 70%로 확대될 만큼 광범위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 부부단위 성별 구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빈곤갭비율 감소 영향을 살펴보면, 절대빈곤율 분석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절대빈곤율 변화의 경우, 남성 노인단독의 경우와 노인부부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빈곤갭비율 감소폭은 ‘여성 노인단독 > 노인부부 > 남성 노인단독’ 순서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당시 경로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모두 2%p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성 노인단독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가장 큰 효과(약 9.5%p)를 가져왔고 남성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에서는 오히려 공적연금의 효과가 가장 높았다. 반면, 2008년에는 여성 노인단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약 13.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집단에서도 약 8.0~8.7%p 감소하여 그 효과가 경로연금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 노인단독의 경우 2007년과 상황이 역전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의 효과가 가장 큰 남성 노인단독의 경우와 달리 여성 노인단독에서는 기초노령연금보다 약 9.5%p 낮은 수준이었다.

〈표 2-21〉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빈곤갭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남성 노인단독	여성 노인단독	부부	전체
시장소득		62.15	87.09	59.91	71.98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46.50	59.36	37.29	48.24
	시장소득 + 민간단체	60.98	85.85	59.63	71.15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45.41	58.17	37.01	47.44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52.84	82.83	49.96	64.58
	시장소득 + 교통수당	60.41	84.70	57.36	69.63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61.41	85.38	59.26	70.8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60.47	86.86	57.71	70.71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58.52	77.56	57.29	66.22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45.50	69.14	42.51	54.46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30.63	41.82	22.97	32.29
구 분		2008년			
		남성 노인단독	여성 노인단독	부부	전체
시장소득		63.31	88.34	63.15	74.0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47.01	60.33	39.39	49.59
	시장소득 + 민간단체	62.05	87.34	62.83	73.26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45.82	59.39	39.07	48.87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53.64	84.10	52.69	66.36
	시장소득 + 교통수당	62.38	87.72	62.05	73.15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55.29	74.60	54.45	63.2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61.49	88.10	60.84	72.68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59.61	78.78	60.32	68.16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40.04	60.08	38.42	48.0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26.87	35.30	20.14	27.71

이어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2007년에 남성 노인단독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두 집단에서 각각 약 11.0%p와 5.5%p 만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남성 노인단독의 경우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폭이 사적이전소득보다 5.8%p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여전히 낮았지만 사적이전소득의 효과와의 차이가 1%p 이내로 줄어들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시장소득과 여기에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고려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빈곤갭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시장소득 기준 빈곤갭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위의 결과처럼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확대됨으로 인해 2008년 경상소득 기준 빈곤갭비율은 남성 노인단독, 여성 노인단독, 노인부부 각 집단에서 2007년보다 약 3.7%p, 6.5%p, 2.8%p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부부 단위로 노인의 연령 구성별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시장소득 기준 빈곤갭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70세 이상 노인 1인으로 구성된 가구(86.41%)의 빈곤갭비율이 가장 높았고 65~69세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빈곤갭비율은 42.41%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갭비율의 감소폭을 연령집단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7년 경로연금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 1인 및 2인 가구에서만 각각 약 1.9%p와 0.8%p의 빈곤갭비율 감소가 나타났고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서는 모두 0.5%p 내외로 효과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폭은 70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2인 가구에서 각각 약 13.7%p와 10.9%p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적이전소득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연금 수급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65~69세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남성 노인단독과 여성 노인단독의 경우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22〉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65-69 1인	65-69 2인	65-69 1인 70+ 1인	70+ 1인	70+ 2인	전체
시장소득		70.00	38.67	61.06	84.87	68.71	71.98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51.44	22.67	40.49	57.84	41.71	48.24
	시장소득 + 민간단체	69.16	38.46	60.89	83.49	68.34	71.15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50.64	22.48	40.32	56.52	41.33	47.44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59.92	26.09	49.62	81.14	60.98	64.58
	시장소득 + 교통수당	68.43	37.05	58.79	82.38	65.57	69.63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69.55	38.16	60.57	82.99	67.91	70.8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69.46	37.91	59.46	84.22	65.46	70.71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66.56	35.86	58.65	75.01	66.05	66.22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54.24	21.53	43.25	66.49	51.49	54.46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37.22	9.92	25.83	39.54	26.92	32.29
구 분		2008년					
		65-69 1인	65-69 2인	65-69 1인 70+ 1인	70+ 1인	70+ 2인	전체
시장소득		70.46	42.41	63.44	86.41	72.33	74.0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52.83	24.83	41.75	58.46	44.37	49.59
	시장소득 + 민간단체	69.38	42.21	63.18	85.35	71.91	73.26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51.78	24.63	41.49	57.47	43.95	48.87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60.24	29.30	50.97	82.64	64.42	66.36
	시장소득 + 교통수당	69.38	41.17	62.16	85.87	71.40	73.15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61.80	37.48	55.50	72.69	61.41	63.2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69.87	41.74	61.66	85.73	68.90	72.68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66.74	39.49	60.67	76.61	69.50	68.16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46.78	20.72	37.77	58.11	46.87	48.0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33.89	10.17	22.09	32.73	23.31	27.71

연령 집단별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2007년의 경우 65~69세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만 공적이전소득

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약간 높았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모두 사적이전소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폭이 공적이전소득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에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가 약 3.7~5.0%p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2인 가구의 경우에도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효과가 여전히 크기는 했지만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와의 차이가 각각 약 0.7%p와 2.9%p 정도로 줄어들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갭비율은 각 연령 집단에서 2008년에 더 높아졌지만,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 기준 빈곤갭비율은 65~69세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약 2~7%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갭비율 지표를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노인단독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에서 경로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약 0.5~0.6%p로 다른 공적이전소득 항목에 비해 가장 미미한 수준이었다.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한 빈곤갭비율이 약 16%p로 가장 높았고 경로연금의 경우 공적연금보다 다소 낮은 2.8%p 수준이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이후에는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폭이 집단별로 6.2~14.6%p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노인단독 가구에서는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영향이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비노인 배우자 부부와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가 더 큰 폭을 나타냈다.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효과가 약 10.5%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23〉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빈곤갭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7년				
		노인 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 부부	기타 가구원 동거	전체
시장소득		84.08	49.33	61.88	75.28	71.98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45.51	38.92	34.67	61.75	48.24
	시장소득 + 민간단체	81.96	46.93	61.57	74.95	71.15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43.48	36.65	34.36	61.42	47.44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80.04	38.77	51.53	68.62	64.58
	시장소득 + 교통수당	81.58	48.12	59.32	73.07	69.63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81.28	48.84	61.31	74.64	70.8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83.62	47.68	59.42	74.53	70.71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68.09	48.00	59.41	72.45	66.22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58.55	34.53	44.07	62.43	54.46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20.60	23.90	20.61	49.44	32.29
구 분		2008년				
		노인 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 부부	기타 가구원 동거	전체
시장소득		84.96	51.32	65.07	77.11	74.0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46.28	39.15	36.72	63.00	49.59
	시장소득 + 민간단체	83.36	48.68	64.67	76.74	73.26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44.76	36.64	36.33	62.65	48.87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80.96	39.77	54.28	70.22	66.36
	시장소득 + 교통수당	84.47	50.39	63.99	76.19	73.15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70.37	45.11	56.21	66.59	63.26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84.49	49.69	62.48	76.29	72.68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68.85	50.18	62.41	74.19	68.16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49.46	31.08	39.93	55.36	48.0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4.89	20.37	17.90	43.93	27.71

한편, 기초노령연금 도입 전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전인 2007년의 경우 비노인 배우자 부부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은 가구 외부의 사적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약 15.1%p 정도 공적이전소득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 역시 9.7%p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증가하여 비노인 배우자 가구와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여전히 높은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효과와의 차이가 각각 약 4.7%p와 3.6%p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고려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는 가구유형별로 전체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경향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갭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공사적이전소득에 의해 약 80%p 정도의 빈곤갭비율이 감소하여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약 14.9%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이것은 네 집단의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와는 반대로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의 경우, 가구 외부로부터 사적이전소득 대신 가구 내 가구원 소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가구단위로 운영되는 공적이전(복지프로그램)의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 결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갭비율은 약 43.9%로 나머지 집단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충족률 변화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 개인 및 부부단위 소득충족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앞서 빈곤갭비율 지표와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을 활용한 분석결과에 서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의한 노인 개인 및 부부의 소득수준 증가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4〉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충족률 변화

구 분		전체 노인가구	
		2007년	2008년
시장소득		0.5099	0.446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0.8192	0.7623
	시장소득 + 민간단체	0.5207	0.456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0.8300	0.7721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0.6607	0.5947
	시장소득 + 교통수당	0.5364	0.4570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0.5221	0.5627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0.5269	0.4633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0.5755	0.51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0.7820	0.804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1015	1.1122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0.5099에서 2008년에 0.446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적이전소득을 모두 반영한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8년의 소득충족률 평균이 1.1122로 오히려 2007년에 비해 조금 높게(0.0107) 나타났는데, 공·사적이전소득 규모 및 기능 변화에 따라 소득충족률 증가효과 또는 개선효과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른 공적이전소득 유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7년 경로연금의 경우, 소득충족률을 약 0.012을 증가시키는데 그쳐 오히려 교통수당이나 기타 정부보조금 보다 효과가 낮았다. 한편, 공적이전소득 가운데에는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순서로 소득충족률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2008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충족률은 0.5627로서 증가폭은 약 0.11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약 11.6% 만큼의 소득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는 경로연금보다 그 효과가 약 10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공적연금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 0.148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

항목보다 높은 소득충족률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선 빈곤갭비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달리,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충족률 개선효과가 공적연금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소득충족률 지표가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충족률 지표는 빈곤선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도 고유값을 가지게 되는 반면, 빈곤갭비율은 빈곤선 이하에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게 되는 빈곤갭을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에 비해 대상 규모는 광범위하지만 급여수준이 낮은 기초노령연금의 영향보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 소득충족률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고 있는 공사적이전소득의 역할과 비중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2007년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효과가 공적이전소득보다 약 0.0048 높았으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에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가 0.032만큼 사적이전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부부의 성별 구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를 비교 분석하면, 앞서 살펴본 빈곤갭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전인 2007년의 경로연금이 각 집단의 소득충족률 증가에 미친 영향은 여성 노인단독 0.0172, 남성 노인단독 0.0074, 노인부부 0.0055에 불과할 정도로 교통수당 또는 기타 정부보조금 등 다른 공적이전소득과 비교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여성 노인단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남성 노인이 포함된 나머지 두 집단은 공적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여성 노인단독인 경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인 0.140 정도의 소득충족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수준의 비율을 약 시장소득 기준 31%에서 45% 수준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집단과 달리 기초노령연금 도입 전후에 모두 공적연금보다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 노인들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여전히 1차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보다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남성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경우는 각각 약 0.088과 약 0.093

정도의 소득충족률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특히 남성 노인단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에도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소득충족률 변화

구 분		2007년			
		남성 노인단독	여성 노인단독	부부	전체
시장소득		0.7984	0.3432	0.6211	0.5099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1.0029	0.6943	0.9224	0.8192
	시장소득 + 민간단체	0.8172	0.3558	0.6229	0.5207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1.0217	0.7068	0.9252	0.8300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1.0860	0.4264	0.8032	0.6607
	시장소득 + 교통수당	0.8222	0.3686	0.6502	0.5364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0.8058	0.3604	0.6266	0.5221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0.8315	0.3469	0.6503	0.5269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0.8347	0.4414	0.6469	0.5755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1.1864	0.5709	0.8969	0.782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4082	0.9340	1.2015	1.1015
구 분		2008년			
		남성 노인단독	여성 노인단독	부부	전체
시장소득		0.6928	0.3098	0.5297	0.446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0.9075	0.6586	0.8527	0.7623
	시장소득 + 민간단체	0.7122	0.3197	0.5333	0.456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0.9270	0.6685	0.8562	0.7721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0.9730	0.3928	0.7098	0.5947
	시장소득 + 교통수당	0.7073	0.3169	0.5449	0.4570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0.7811	0.4498	0.6227	0.5627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0.7256	0.3135	0.5605	0.4633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0.7298	0.4054	0.5581	0.51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1.1456	0.6394	0.8771	0.804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3572	0.9820	1.1860	1.1122

이어서,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전체와 친인척으로부터의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충족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도입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노인단독의 경우, 2007년에 이미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가 사적이전보다 약 0.166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0.219로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되어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수준 증가와 빈곤갭 감소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성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의 수급 가능성이 높고 연금급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타 제도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2007년에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가 0.028 정도 높았으나, 2008년 전후로 역할 비중의 전환이 일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폭이 사적이전소득보다 약 0.021만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 노인단독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충족률에 미치는 증가폭의 차이는 2007년에 0.136 수준에서 2008년에는 약 0.029로 크게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여성 노인에 대한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도 공적이전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아진다면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을 충분히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사적이전소득간 역할 비중의 변화에 따라 전체 이전소득을 고려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의 소득충족률 변화를 분석할 경우, 남성 노인단독의 소득충족률은 약 1.357까지 증가하였으며, 여성 노인단독의 경우에는 시장소득 기준 최저생계비의 약 31% 수준에서 약 3배 이상 증가하여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대비 약 98.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7년 경상소득 기준 소득충족률 0.934에 비하여 최저생계비 대비 약 5%p의 소득수준이 더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의 연령 구성에 따라 집단별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의한 소득충족률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역시 앞서 제시한 연령 집단별 빈곤갭비율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소득총족률 변화

구 분		2007년					
		65-69 1인	65-69 2인	65-69 1인 70+ 1인	70+ 1인	70+ 2인	전체
시장소득		0.5965	1.0926	0.5782	0.4084	0.4351	0.5099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0.8917	1.3575	0.8367	0.7277	0.7840	0.8192
	시장소득 + 민간단체	0.6116	1.0948	0.5799	0.4222	0.4389	0.5207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0.9068	1.3597	0.8384	0.7415	0.7878	0.8300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0.8419	1.3993	0.7741	0.5005	0.5538	0.6607
	시장소득 + 교통수당	0.6163	1.1165	0.6057	0.4355	0.4698	0.5364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0.6010	1.0977	0.5833	0.4272	0.4432	0.5221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0.6083	1.1189	0.6014	0.4197	0.4719	0.5269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0.6330	1.1237	0.6023	0.5091	0.4618	0.5755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0.9147	1.4856	0.8542	0.6584	0.6599	0.782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2239	1.7526	1.1141	0.9910	1.0119	1.1015
구 분		2008년					
		65-69 1인	65-69 2인	65-69 1인 70+ 1인	70+ 1인	70+ 2인	전체
시장소득		0.5267	0.9303	0.5096	0.3630	0.3625	0.446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0.7870	1.2230	0.8074	0.6984	0.7161	0.7623
	시장소득 + 민간단체	0.5432	0.9324	0.5129	0.3738	0.3667	0.456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0.8035	1.2252	0.8107	0.7092	0.7204	0.7721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0.7721	1.2255	0.7067	0.4522	0.4788	0.5947
	시장소득 + 교통수당	0.5414	0.9509	0.5257	0.3697	0.3745	0.4570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0.6176	0.9882	0.5995	0.5042	0.4734	0.5627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0.5385	0.9541	0.5328	0.3743	0.4016	0.4633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0.5639	0.9595	0.5372	0.4610	0.3909	0.51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0.9269	1.3572	0.8636	0.7094	0.6693	0.804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1657	1.6259	1.1449	1.0462	1.0152	1.1122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8년의 소득충족률 수준을 비교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약 10%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경우 소득충족률은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2007년 당시 경로연금의 경우 65~69세 노인이 포함된 부부에서 0.005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70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각각 약 0.019와 0.008의 낮은 증가를 가져와 기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교통수당에 비해서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의 영향은 크게 확대되었는데, 70세 이상 노인 1인인 경우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약 0.14, 즉 최저생계비 대비 약 14%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켰다. 다음으로 70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경우가 약 0.111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65~69세 노인 2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대해서 약 0.058 정도로 가장 작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효과를 다른 공적이전소득과 비교해보면, 65~69세 노인이 1인이라도 포함된 세 집단의 경우 공적연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수급 가능성이 높고 연금급여액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70세 이상 노인 1인으로 구성된 경우 경로연금 당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증가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0세 이상 노인 2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가 가장 컸으나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충족률 개선효과의 확대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의 방향으로 공사적이전소득 간의 역할분담 변화를 가져왔다. 2007년의 경우, 65~69세 노인이 포함된 집단의 경우 공적연금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충족률 증가효과가 친인척 중심의 사적이전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2인의 경우 각각 약 0.083과 0.128 정도의 차이만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2008년에는 70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

났는데, 70세 이상 노인이 1인인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충족률 개선 정도가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70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이 컸지만 그 차이는 2007년의 약 40% 수준인 0.051로 감소하여 향후 공적연금의 성숙과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집단에서 사적이전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충족률 개선 효과 확대에 의해 2007년에 비해 시장소득 기준 소득충족률 수준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 기준 소득충족률은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소득충족률의 약 3배 증가하여 각각 1.0462와 1.0152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및 연령 집단별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나타난 소득충족률 개선효과를 요약하면, 남성 또는 65~69세 노인에 비해 공적연금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자신이 직접 획득할 수 있는 소득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보편적이고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부부를 단위로 구분한 노인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가구, 노인 부부,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의 유형별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충족률 변화를 살펴보면 역시 빈곤갭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시장소득 기준의 소득충족률 수준으로 살펴보면 앞서 모든 결과와 마찬가지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 2008년을 기준 소득충족률을 살펴보면, 비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이미 최저생계비 수준을 상회하는 1.1261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인단독 가구 및 노인부부 가구는 각각 0.4780과 0.4857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의 경우 소득충족률 수준이 가장 낮은 0.3229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개인 및 부부단위 분석이라는 점과 동시에 이러한 가구유형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에 비해 피부양자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 자녀 등 기타 가구원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2-27〉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소득총족률 변화

구 분		2007년				
		노인 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 부부	기타 가구원 동거	전체
시장소득		0.5143	1.3038	0.5593	0.3863	0.5099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0.9759	1.4818	0.9013	0.5864	0.8192
	시장소득 + 민간단체	0.5355	1.3550	0.5625	0.3901	0.5207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0.9971	1.5329	0.9046	0.5902	0.8300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0.5868	1.8272	0.7547	0.5209	0.6607
	시장소득 + 교통수당	0.5405	1.3250	0.5881	0.4121	0.5364
	시장소득 + 경로연금(07)	0.5423	1.3088	0.5651	0.3924	0.5221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0.5210	1.3458	0.5897	0.3993	0.5269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0.6779	1.3173	0.5837	0.4161	0.5755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0.8113	1.9088	0.8442	0.5956	0.782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2931	2.1360	1.1891	0.7992	1.1015
구 분		2008년				
		노인 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 부부	기타 가구원 동거	전체
시장소득		0.4780	1.1261	0.4857	0.3229	0.4462
노인 사적이전	시장소득 + 친인척	0.9391	1.3286	0.8479	0.5246	0.7623
	시장소득 + 민간단체	0.4941	1.1771	0.4904	0.3270	0.4560
	시장소득 + 사적이전 전체	0.9552	1.3796	0.8526	0.5286	0.7721
노인 공적이전	시장소득 + 공적연금	0.5334	1.6381	0.6786	0.4526	0.5947
	시장소득 + 교통수당	0.4837	1.1429	0.4998	0.3346	0.4570
	시장소득 + 기초노령연금(08)	0.6280	1.1951	0.5782	0.4367	0.5627
	시장소득 + 기타 정부보조금	0.4848	1.1665	0.5167	0.3359	0.4633
	시장소득 + 기초생활보장	0.6392	1.1376	0.5114	0.3521	0.5110
	시장소득 + 공적이전 전체	0.8772	1.7758	0.8421	0.6202	0.8040
경상소득 (시장소득 + 사적이전 + 공적이전)		1.3416	2.0062	1.1906	0.8059	1.1122

다음으로, 경로연금 및 다른 공적이전소득과의 비교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총족률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2007년 당시 경로연금의 경우 가장 영향이 컸던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에도 약 0.02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집단의 경우 0.005~0.006에 불과할 정도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적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

여 심지어는 교통수당에 비해서도 소득충족률 증가정도 크지 않았다. 노인단독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에서는 공적연금에 의한 개선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단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한 소득충족률 개선효과가 약 0.184(최저생계비 대비 약 18.4% 소득을 제도에 의해 충족)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공적연금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의 경우 노인단독 가구에 대한 소득충족률 개선효과는 약 0.15 수준으로 경로연금에 비해 약 5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집단에서도 공적연금의 효과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각 집단별로 약 0.069~0.114 정도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충족률 개선효과 확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비노인 배우자 부부의 경우 이미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수준 향상과 빈곤갭 감소가 사적이전에 비해 약 0.376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약 0.396으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기타 가구원 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영향의 차이 약 0.005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충족률 개선이 오히려 0.092 높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이 높은 노인부부 및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공적이전에 의해 소득충족률은 각각 0.8421(1인 최저생계비의 약 84.2%)과 0.8772(2인 최저생계비의 약 87.7%)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경우 여전히 공적이전보다 사적이전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노인부부의 경우 약 0.06에서 0.01로, 노인단독의 경우 0.186에서 0.078로 크게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사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충족률 증가효과는 가구유형별 시장소득 기준 소득충족률 수준을 크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시장소득 기준 소득충족률이 집단별로 약 0.036~0.178 정도까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 확대로 경상소득 기준 소득충족률 수준은 비노인 배우자 부부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에서 오히려 2007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한국복지패널 자료 시뮬레이션

1) 분석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노인빈곤완화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8년에 조사된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3차년도의 소득의 기준시점은 200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으로 노인가구의 설정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단독, 노인부부가구이외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3차패널을 통해 이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3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노인단독가구는 8.1%, 노인부부가구는 7.3%, 기타노인가구는 15.2%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노인들의 연령으로 세분하여 보면, 전체 노인가구 중 65~70세 미만 가구는 32.1%,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67.8%임을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들의 소득수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노인가구들의 평균 소득은 1,915천원으로 일반가구의 3,645천원의 52.5%수준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641천원인 반면에 노인부부와 기타노인가구는 각각 1,367천원과 2,854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각각 2.1배, 4.4배 높은 수준이다.

〈표 2-28〉 분석대상 노인 가구 경상소득 수준(월평균)

(단위: 천원)

구분		65세 이상		
			65~70세미만	70세 이상
노인가구	노인단독	641	737	609
	노인부부	1,367	1,884	1,251
	기타노인가구	2,854	2,606	3,037
	소 계	1,915	2,108	1,830
일반가구		3,645	-	-
전체가구		3,115	-	-

빈곤선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50%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최저생계비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50%는 상대빈곤과 빈곤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빈곤선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⁶⁾.

2) 기초분석결과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빈곤율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계층에서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가구는 약 25.95%로 나타났다⁷⁾. 반면에 시장소득에 공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경상소득의 경우에는 9.40%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을 합한 경우 빈곤율이 19.26%로 빈곤율 감소효과가 약 6.69% 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을 합한 빈곤율은 17.24%로 공적이전에 비해 다소 높은 빈곤완화효과를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계층의 경우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59.38%로 전체 빈곤율에 비해 약 2.3배 높게 나타나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매우 높

- 빈곤지수 측정 방법에는 절대적·상대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측정방법은 한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득(혹은 육체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의미하기도 함)을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여 전체 국민(혹은 가구)대비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사람(혹은 가구)들과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소득비교를 통해 측정되어진 빈곤지수로 측정방법은 전체 국민(혹은 가구)들의 소득 중 중위소득(혹은 평균소득)을 추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40%, 50%, 60% 수준을 계산한 후 이를 빈곤선으로 삼아 빈곤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 빈곤분석의 경우 기본단위를 가구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 빈곤지수를 추정시에는 개인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노인단독, 노인부부(감액지급)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어 개인으로 분석시 기초노령연금 효과를 과대지급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가구단위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는 점을 볼 수 있다. 65세 이상의 연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70세 미만과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5~70세 미만의 경우 49.10%인 반면에 70세 이상은 64.25%로 70세 이상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5세 이상에서는 정부보조금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보다는 사회보험을 통한 빈곤완화효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8년이후 도입된 국민연금의 지급대상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빈곤완화효과는 65~70세 미만의 연령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빈곤갭비율의 경우에도 전체가구들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빈곤갭비율이 10.80%인 반면에 65세 이상의 경우는 28.66%로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시 70세 이상의 경우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전체가구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가구들의 빈곤갭비율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두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이미 많이 연구된 것과 같이 일반가구들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29〉 빈곤지수(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¹⁾

(단위: %)

빈곤율		전체	65세 이상	
			65~70세 미만	70세 이상
시장소득 ²⁾		25.95	59.38	64.25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22.40	51.56	56.39
	기타정부보조	25.00	57.63	62.15
	기초보장	25.28	58.70	63.47
	공적이전 전체	19.26	46.87	51.47
시장소득+사적이전		17.24	38.38	42.36
경상소득		9.40	22.75	26.14
빈곤갭비율				
시장소득 ²⁾		13.34	35.32	38.83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10.80	28.66	32.33
	기타정부보조	11.60	31.33	34.36
	기초보장	11.12	31.07	34.29
	공적이전 전체	7.36	21.19	24.13
시장소득+사적이전		6.38	14.96	16.42
경상소득		1.98	4.85	5.84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빈곤선을 좀 더 높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들의 격차는 소득과 관계없이 역시 최저생계비기준과 비슷한 약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소득과 관계없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빈곤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빈곤갭 비율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0〉 빈곤지수(중위 소득 50% 기준)¹⁾

(단위: %)

빈곤율		전체	65세 이상		
			65~70세미만	70세 이상	
시장소득 ²⁾		29.33	64.60	56.90	68.20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26.84	57.37	48.95	61.37
	기타정부보조	28.57	63.14	55.78	66.64
	기초보장	28.98	64.33	56.72	67.94
	공적이전 전체	25.28	55.73	47.48	59.65
시장소득+사적이전		24.42	53.53	45.73	57.23
경상소득		20.11	44.81	36.60	48.71
빈곤갭비율					
시장소득 ²⁾		20.52	48.86	38.72	53.67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17.83	42.27	32.14	47.07
	기타정부보조	18.85	45.25	35.99	49.64
	기초보장	18.14	44.64	35.02	49.21
	공적이전 전체	14.21	35.26	26.39	39.47
시장소득+사적이전		11.99	26.98	21.58	29.55
경상소득		6.95	16.52	12.05	18.63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노인가구들의 빈곤수준을 좀 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의 노령계층중 어느 계층에서 더 빈곤의 심각성이 높은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인이 있는 가구의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⁸⁾, 남성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의 빈곤심각성이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남성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은 49.51%, 28.59%인 반면에 여성가구의 경우에는 82.20%, 60.22%로 남성에 비해 각각 32.69% 포인트, 31.63%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공적이전 소득이 포함됨에 따라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소득의 포함여부에 따라 남녀간의 빈곤차이는 빈곤율은 35.83% 포인트, 빈곤갭비율은 32.02%포인트로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초보장급여를 통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차이는 각각 31.52%포인트, 23.28%포인트로 남녀가구주간에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경우 청장년기의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 등 사회보험의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여

8) 가구주 성별의 구분은 복지패널조사에 나타나 있는 가구주 성(남성, 여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소득의 단위가 가구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에 비해 남성들의 근로활동이 높고 활동력이 크다는 점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초보장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사회보험으로 인한 차이보다는 격차가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남녀가구주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녀가구주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8가구정도가 중위소득 50% 미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여성가구주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한 경우 빈곤율은 남녀가구주간에 약 35.17%포인트, 빈곤갭비율은 약 36.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노인이 있는 가구주 성별 빈곤지수(빈곤율, 빈곤갭 비율)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남성		여성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시장소득 ²⁾		49.51	28.59	82.20	60.22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40.75	21.85	76.58	53.87
	기타정부보조	47.73	25.24	80.53	53.90
	기초보장	49.19	26.12	80.71	49.40
	공적이전 전체	37.24	16.70	69.12	37.81
시장소득+사적이전		33.04	12.72	50.72	23.26
경상소득		19.24	4.35	30.87	6.71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시장소득 ²⁾		54.99	38.28	86.81	73.34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46.75	31.16	81.92	67.96
	기타정부보조	53.23	35.11	86.07	68.69
	기초보장	54.94	35.93	86.03	64.78
	공적이전 전체	45.11	26.33	80.31	55.92
시장소득+사적이전		44.87	21.64	73.54	39.35
경상소득		35.31	12.53	66.78	25.74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다음은 노인가구 유형별로 빈곤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인가구의 유형으로는 노인단독, 노인부부 및 2인 이상의 노인가구(자녀 동거 포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주요한 대상가구(지원금액의 차이)라는 점에서 다음 분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형태라 할 수 있다. 먼저 세가지 유형중에서 빈곤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구유형은 노인단독 가구로 시장소득기준으로 빈곤율은 89.74%, 빈곤갭비율은 79.05%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노인부부가구로 빈곤율은 78.20%, 빈곤갭비율은 59.98%로 분석되었다. 빈곤지수가 가장 낮은 가구유형은 노인 2인 이상 가구로 동 가구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들이 함께 포함됨에 따라 빈곤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기준으로 각각 34.40%, 17.60%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2〉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지수(빈곤율, 빈곤갭 비율)¹⁾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 2인 이상 가구 ⁴⁾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시장소득 ²⁾		89.74	79.05	78.20	59.98	34.40	17.60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84.42	71.97	63.46	44.98	28.57	13.80
	기타정부보조	89.53	72.04	77.04	53.58	31.57	15.07
	기초보장	88.60	65.93	78.20	56.60	33.65	15.00
	공적이전 전체	77.81	52.68	66.07	36.40	24.26	9.28
시장소득+사적이전		56.19	28.96	52.85	24.20	22.08	8.85
경상소득		35.78	9.04	30.39	8.14	12.24	2.85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시장소득 ²⁾		94.44	83.51	84.11	64.31	39.56	23.23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89.80	77.90	71.62	51.17	33.49	19.23
	기타정부보조	94.33	78.87	82.94	59.18	37.26	20.88
	기초보장	94.32	74.63	84.11	61.65	39.09	20.73
	공적이전 전체	89.67	65.50	70.50	44.51	30.80	14.91
시장소득+사적이전		82.06	45.19	67.03	34.03	32.04	14.02
경상소득		77.51	30.94	53.55	19.18	23.41	7.64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4) 노인으로만 구성되거나, 자녀동거 노인가구를 포함함.

공적이전을 통한 분석에서도 대부분이 사회보험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중에서는 노인단독가구는 기초보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에 노인부부와 노인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타 정부보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노인부부와 자녀 동거 가구들에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생활이 열악함에 따라 기초보장제도에의 의존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0가구 중 9가구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0가구중 약 7~8가구로 노인단독가구와 더불어 생활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중에서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소득충족율을 이용하여 빈곤선과 가구소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평균적으로 빈곤선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충족율만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들은 평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시 소득충족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인가구들의 경우 빈곤지수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가구들에 비해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소득충족율을 연령과 성별, 노인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이면서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충족율이 1 이하로 나타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노인가구들의 경우 사적이전이나 정부의 공적인 지원이 없다면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기본적인 생활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70세 미만, 남성이면서 2인 이상의 가구이며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청장년층에 비해 못하지만 앞의 사례에 비해서는 생활여건이 좀 더 좋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2-33〉 소득총족율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전체	65세 이상	
			65~70세 미만	70세 이상
시장소득 ²⁾		2.74	1.22	1.07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2.89	1.51	1.34
	기타정부보조	2.78	1.29	1.15
	기초보장	2.77	1.28	1.14
	공적이전 전체	2.97	1.65	1.48
시장소득+사적이전		3.01	1.72	1.59
경상소득		3.24	2.14	1.99
중위소득 50% 기준		전체	65세 이상	
			65~70세 미만	70세 이상
시장소득 ²⁾		2.03	0.91	0.82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2.13	1.12	1.00
	기타정부보조	2.06	0.96	0.87
	기초보장	2.05	0.95	0.86
	공적이전 전체	2.19	1.20	1.09
시장소득+사적이전		2.21	1.24	1.15
경상소득		2.37	1.53	1.43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표 2-34〉 소득총족율(가구주 성·노인가구 유형별)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성		가구유형		
		남성	여성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 2인 이상 가구 ⁴⁾
시장소득 ²⁾		1.52	0.53	0.31	0.67	1.97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1.86	0.73	0.51	1.09	2.24
	기타정부보조	1.59	0.61	0.38	0.75	2.03
	기초보장	1.55	0.65	0.44	0.71	2.00
	공적이전 전체	1.96	0.93	0.72	1.20	2.34
시장소득+사적이전		1.94	1.20	1.06	1.33	2.25
경상소득		2.37	1.60	1.47	1.86	2.62
중위소득 50% 기준		성		가구유형		
		65세 이상(남성)	65세 이상(여성)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 2인 이상 가구 ⁴⁾
시장소득 ²⁾		1.15	0.36	0.18	0.46	1.52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1.39	0.49	0.30	0.75	1.72
	기타정부보조	1.20	0.41	0.22	0.52	1.57
	기초보장	1.17	0.44	0.25	0.48	1.55
	공적이전 전체	1.46	0.61	0.42	0.83	1.80
시장소득+사적이전		1.44	0.77	0.61	0.91	1.73
경상소득		1.75	1.01	0.85	1.27	2.00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4) 노인으로만 구성되어나, 자녀동거 노인가구를 포함함.

3) 기초노령연금 효과 분석(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전후 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장소득과 사회보험소득에 대한 분석은 앞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첫째, 기타 정부보조금에서는 2007년까지 지급되었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제외하고 빈곤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기초노령연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중 소득인정액기준 순위 60%까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노인 1인당 81,000원(월), 노인부부는 130,000원(월)이 포함된 소득으로 빈곤지수를 측정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기준보다 (84천원, 134천원) 낮은 이유는 사용자료가 2007년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역시 2007년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2007년으로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분석자료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국민연금 A값의 5%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조정한 후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소득에는 사회보험 및 정부보조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빈곤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 65세 이상 노인가구주들의 기초노령연금 효과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에 비해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이 주어지기전의 기타정부보조금을 통한 빈곤율이 57.85%였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경우 빈곤율이 54.69%로 3.16%포인트 더 낮아지고 있다. 빈곤갭비율의 경우에도 35.32%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26.36%로 8.96% 포인트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사회보험을 통한 빈곤지수의 감소효과는 70세 이상 노인가구들에 비해 65~70세 미만의 노인가구들이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효과는 65~70세 미만 노인가구들에 비해 70세 이상 노인가구들에서 빈곤완화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타정부보조 또는 기초보장을 통한 지원보다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다른 정부보조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정부보조금이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의 60%에게 지급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생활이 열악한 사람들의 경우는 물론 낮은 소득수준의 노인가구들에게 작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의 경우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빈곤지수의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5~70세 미만중 빈곤율의 감소폭이 70세 이상의 노령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35〉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65세 이상		65~70세 미만		70세 이상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시장소득 ²⁾		59.38	35.32	49.10	27.86	64.25	38.83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51.56	28.66	41.41	20.85	56.38	32.33
	기타정부보조	57.85	33.15	48.36	26.13	62.35	36.46
	기초보장	58.70	31.07	48.66	24.23	63.47	34.29
	기초노령연금	54.69	26.36	42.98	19.60	60.25	29.54
	공적이전전체	41.20	15.67	29.54	9.94	46.73	18.37
시장소득+사적이전		38.38	14.96	29.98	11.85	42.36	16.43
경상소득		15.40	2.48	8.15	1.17	18.85	3.10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시장소득 ²⁾		64.60	48.86	56.99	38.72	68.21	53.67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57.37	42.27	48.95	32.14	61.37	47.07
	기타정부보조	63.37	47.12	55.96	37.32	66.88	51.77
	기초보장	64.33	44.64	56.72	35.02	67.94	49.21
	기초노령연금	60.35	40.05	50.56	30.30	65.00	44.68
	공적이전전체	52.79	29.71	43.27	20.91	57.30	33.88
시장소득+사적이전		53.53	26.98	45.73	21.58	57.23	29.55
경상소득		40.31	12.63	32.03	8.41	44.24	14.63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주의 성별로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사회보험 다음으로 낮은 수준(40.75%, 44.79%)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여성가구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77.61%)이 다소 사회보험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지급으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이 44.79%, 21.04%로 시장소득에 비해 4.72% 포인트, 7.55% 포인트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가구주 가구는 82.20%, 60.22%에서 77.61%, 46.07%로 각각 4.59% 포인트, 14.15% 포인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효과가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노인이 있는 가구주 성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65세 이상(남성)		65세 이상(여성)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시장소득 ²⁾		49.51	28.59	82.20	60.22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40.75	21.85	76.58	53.87
	기타정부보조	47.96	26.63	80.73	57.30
	기초보장	49.19	26.12	80.71	49.40
	기초노령연금	44.79	21.04	77.61	46.07
	공적이전전체	31.86	12.04	62.79	29.10
시장소득+사적이전		33.04	12.72	50.72	23.26
경상소득		12.99	2.20	21.00	3.52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빈곤갭비율	빈곤율	빈곤갭비율
시장소득 ²⁾		54.99	38.28	86.81	73.34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46.75	31.16	81.92	67.96
	기타정부보조	53.53	36.56	86.12	71.56
	기초보장	54.94	35.93	86.03	64.78
	기초노령연금	49.95	30.53	84.41	62.07
	공적이전전체	41.72	21.37	78.37	48.99
시장소득+사적이전		44.87	21.64	73.54	39.35
경상소득		31.00	9.08	61.84	20.85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노인가구 유형별로 기초노령연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노인단독, 노인부부 및 노인 2인 이상 가구중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본 가구유형은 노인단독가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의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이 89.74%, 79.05%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으로써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이 88.14%, 63.60%로 각각 1.6% 포인트, 15.45% 포인트로 빈곤지수 감소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3.57% 포인트, 12.26% 포인트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7〉 노인가구 유형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 2인 이상 가구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시장소득 ²⁾		89.74	79.05	78.20	59.98	34.40	17.60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84.42	71.97	63.46	44.98	28.57	13.80
	기타정부보조	89.63	77.07	77.14	56.83	31.90	15.72
	기초보장	88.60	65.93	78.20	56.60	33.65	15.00
	기초노령연금	88.14	63.60	74.63	47.72	27.56	11.15
	공적이전전체	73.97	43.34	56.41	29.23	16.67	5.14
시장소득+사적이전		56.19	28.96	52.85	24.20	22.08	8.85
경상소득		26.16	5.45	23.40	4.91	5.92	1.03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시장소득 ²⁾		94.44	83.51	84.11	64.31	39.56	23.23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89.80	77.90	71.62	51.17	33.49	19.23
	기타정부보조	94.45	82.27	83.20	61.84	37.53	21.58
	기초보장	94.32	74.63	84.11	61.65	39.09	20.73
	기초노령연금	93.32	72.94	81.36	54.24	32.97	15.95
	공적이전전체	89.21	59.42	68.89	38.66	25.90	9.78
시장소득+사적이전		82.06	45.19	67.03	34.03	32.04	14.02
경상소득		74.19	26.49	49.65	15.23	17.99	4.08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반면에 노인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두 노인가구 유형에 비교해 빈곤을 감소는 큰 반면에 빈곤갭비율의 감소효과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인단독가구들의 경우 대부분이 낮은 소득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가 될 개연성이 높아 빈곤규모의 감소보다는 가구소득에 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증대를 파악할 수 있는 빈곤갭비율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들의 빈곤수준별로 기초노령연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 150% 미만, 최저생계비 200% 미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최저생계비가 증가할수록 기초노령연금의 빈곤 감소효과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는 시장소득 대비 기초노령연금 포함 소득의 빈곤율 감소율이 4.69% 포인트인 반면에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에서는 3.41%,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서는 1.9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빈곤갭비율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가구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반면에 소득이 다소 높은 노인계층에게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2-38〉 빈곤수준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¹⁾

(단위: %)

구분		최저생계비 미만		최저생계비×1.5 미만		최저생계비×2 미만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시장소득 ²⁾		59.38	35.32	69.90	41.97	77.81	48.06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51.56	28.66	62.02	34.96	70.96	40.94
	기타정부보조	57.85	33.15	68.91	40.01	77.12	46.28
	기초보장	58.70	31.07	69.71	39.02	77.81	45.81
	기초노령연금	54.69	26.36	66.49	34.42	75.85	41.46
	공적이전전체	41.20	15.67	56.22	23.64	66.73	31.00
시장소득+사적이전		38.38	14.96	57.63	23.86	70.52	32.28
경상소득		15.40	2.48	40.08	9.14	56.88	17.30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소득충족율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효과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이전중 사회보험 다음으로 노인가구들의 소득증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중 시장소득 대비 사회보험의 소득증대효과가 약 2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13.9%로 사회보험 다음으로 소득 증대효과가 있어 기초노령연금이 노인가구들의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노인에 비해 65~70세 미만 노인가구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9〉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효과(소득충족율)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65세 이상		
			65~70세 미만	70세 이상
시장소득 ²⁾		1.22	1.53	1.07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1.51	1.88	1.34
	기타정부보조	1.26	1.57	1.11
	기초보장	1.28	1.59	1.14
	기초노령연금	1.39	1.71	1.24
	공적이전 전체	1.78	2.15	1.61
시장소득+사적이전		1.72	1.99	1.59
경상소득		2.27	2.60	2.12
중위소득 50% 기준		65세 이상		
			65~70세 미만	70세 이상
시장소득 ²⁾		0.91	1.12	0.82
공적이전	사회보험 ³⁾	1.12	1.36	1.00
	기타정부보조	0.94	1.14	0.85
	기초보장	0.95	1.15	0.86
	기초노령연금	1.03	1.24	0.93
	공적이전 전체	1.30	1.54	1.18
시장소득+사적이전		1.24	1.42	1.15
경상소득		1.62	1.84	1.52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표 2-40〉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효과(소득총족율, 가구주 성·노인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기준)¹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성		가구유형		
		남성	여성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 2인 이상 가구 ⁴
공적이전	시장소득 ²	1.52	0.53	0.31	0.67	1.97
	사회보험 ³	1.86	0.73	0.52	1.09	2.25
	기타정부보조	1.56	0.56	0.33	0.72	2.01
	기초보장	1.55	0.65	0.44	0.71	2.00
	기초노령연금	1.68	0.72	0.48	0.82	2.14
	공적이전 전체	2.09	1.07	0.84	1.31	2.50
시장소득+사적이전		1.94	1.20	1.06	1.33	2.25
경상소득		2.50	1.74	1.59	1.97	2.78
중위소득 50% 기준		성		가구유형		
		남성	여성	노인단독	노인부부	노인 2인 이상 가구 ⁴
공적이전	시장소득 ²	1.15	0.36	0.18	0.46	1.52
	사회보험 ³	1.39	0.49	0.30	0.75	1.73
	기타정부보조	1.18	0.39	0.19	0.49	1.56
	기초보장	1.17	0.44	0.25	0.48	1.54
	기초노령연금	1.27	0.48	0.27	0.56	1.65
	공적이전 전체	1.55	0.70	0.48	0.90	1.91
시장소득+사적이전		1.44	0.77	0.61	0.91	1.73
경상소득		1.84	1.10	0.91	1.35	2.12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4) 노인으로만 구성되거나, 자녀동거 노인가구를 포함함.

여기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보다 지원범위와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빈곤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발전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A급의 5%를 유지하며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때의 빈곤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빈곤율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60%인 경우 빈곤율이 54.69%에서 노인의 80%인 경우 54.40% 약 0.29% 감소에 그치고 있었다. 노인의 90% 이상을 확대시 빈곤율이 54.40%에서 48.83%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빈곤갭비율의 변화 역시 노인의 9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노인 60%의 26.36%에서 17.67%로 8.69%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의 감소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효과(국민연금 A값 5%적용시: 최저생계비기준)¹⁾

(단위: %)

구분	노인 60%			노인 70%			노인 80%			노인 90%			전체노인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총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총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총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총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총족율
시장소득 ²⁾	59.38	35.32	1.22	59.38	35.32	1.22	59.38	35.32	1.22	59.38	35.32	1.22	59.38	35.32	1.22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51.56	28.66	1.51	51.56	28.66	1.51	51.56	28.66	1.51	51.56	28.66	1.51	51.56	28.66
	기타정부보조	57.85	33.15	1.26	57.85	33.15	1.26	57.85	33.15	1.26	57.85	33.15	1.26	57.85	33.15
	기초보장	58.70	31.07	1.28	58.70	31.07	1.28	58.70	31.07	1.28	58.70	31.07	1.28	58.70	31.07
	기초노령연금	54.69	26.36	1.39	54.54	26.07	1.40	54.40	25.86	1.41	48.83	17.67	1.42	48.83	17.67
	공적이전전체	41.20	15.67	1.78	41.18	15.57	1.79	41.14	15.47	1.80	33.21	9.90	1.82	33.21	9.90
시장소득+사적이전	38.38	14.96	1.72	38.38	14.96	1.72	38.38	14.96	1.72	38.38	14.96	1.72	38.38	14.96	1.72
경상소득	15.40	2.48	2.27	15.35	2.44	2.29	15.31	2.43	2.30	6.95	0.87	2.31	6.95	0.87	2.32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한국복지패널 3차조사』, 원자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10%까지 인상할 경우 빈곤율은 54.69%에서 49.68%로 5.0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갭비율의 경우도 26.36%에서 18.58%로 약 7.78% 포인트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빈곤율에 비해 빈곤갭 비율의 지수감소폭이 더 크다는 점이다. 즉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가구의 생활수준이 다소 향상되고 이에 따라 빈곤갭 비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급여수준과 더불어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빈곤지수의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빈곤율의 경우 노인 60%가 대상일 경우 49.68%에서 노인전체로 확대시 48.83%로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갭 비율의 감소폭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노인가구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효과(국민연금 A값 10%적용시: 최저생계비기준)¹⁾

(단위: %)

구분	노인 60%			노인 70%			노인 80%			노인 90%			전체노인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충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충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충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충족율	빈곤율	빈곤갭 비율	소득충족율
시장소득 ²⁾	59.38	35.32	1.22	59.38	35.32	1.22	59.38	35.32	1.22	59.38	35.32	1.22	59.38	35.32	1.22
공적 이전	사회보험 ³⁾	51.56	28.66	1.51	51.56	28.66	1.51	51.56	28.66	1.51	51.56	28.66	1.51	51.56	28.66
	기타정부보조	57.85	33.15	1.26	57.85	33.15	1.26	57.85	33.15	1.26	57.85	33.15	1.26	57.85	33.15
	기초보장	58.70	31.07	1.28	58.70	31.07	1.28	58.70	31.07	1.28	58.70	31.07	1.28	58.70	31.07
	기초노령연금	49.68	18.58	1.56	49.12	18.07	1.58	48.83	17.67	1.60	48.83	17.67	1.63	48.83	17.67
	공적이전전체	33.48	10.27	1.95	33.38	10.08	1.97	33.21	9.90	2.00	33.21	9.90	2.02	33.21	9.90
시장소득+사적이전	38.38	14.96	1.72	38.38	14.96	1.72	38.38	14.96	1.72	38.38	14.96	1.72	38.38	14.96	1.72
경상소득	7.16	0.92	2.44	6.99	0.87	2.47	6.95	0.86	2.49	6.95	0.86	2.51	6.95	0.86	2.54

주: 1) 2007년 가구기준 분석임.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계임.

3)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금을 합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한국복지패널 3차조사』, 원자료.

마. 소결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 3차조사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들에게 미치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빈곤수준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빈곤의 심각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 빈곤율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2배 이상, 빈곤갭 비율의 경우에는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개인에게 노후 생활을 책임지울 수 밖에 없었던 현 노령세대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인가구중에서는 연령이 높고, 여성이면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빈곤의 심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른 소득원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여성이면서 노인 단독가구에 경우에는 84,000천원(2008년기준)이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보험소득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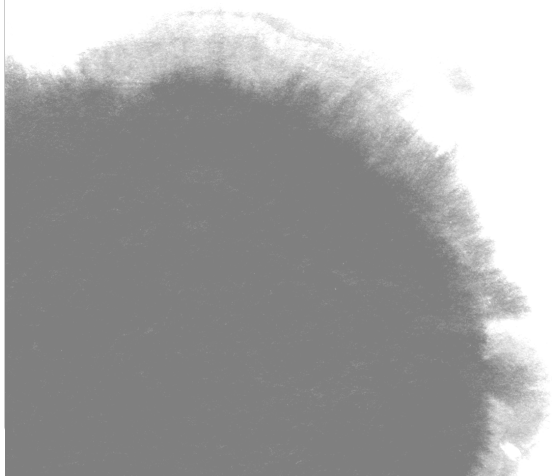
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이 단순 용돈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급여수준을 조금이지만 상향조정하는 것이 노인가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분석은 조사 자료에 직접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을 추가한 분석으로 다소 간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높게 평가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될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등 직접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소득항목으로 분리되어 포함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3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경제활동 및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III.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경제활동 및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현 노인세대는 아직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여 근로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적 이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다각적인 근로활동 참여 실태 및 욕구, 사적이전 실태를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의 근로활동 및 사적이전의 관련성에 관한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노인의 소득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노인의 근로활동⁹⁾ 또는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기초노령연금과 경제활동

가. 경제활동 참여 및 구직 욕구 실태

노년기 경제활동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인구감소와 부양인구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국가의 경우 노인 스스로 또는 가족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수급대상층이 적거

9)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참여의 관련성은 기초노령연금DB와 노인일자리 참여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부록5에 제시되어 있음.

나 수급수준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으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수준은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잘 이루어진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이 보충된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측이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도입을 전후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분석결과 지난 2년간 경제활동 경험에 있는 노인은 33.0%로 나타나며, 2008년 12월말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25.9%로 나타났다. 즉, 지난 2년간 퇴직을 한 노인은 약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노인의 경제활동 경험율(2007-2008년) 및 현 경제활동율

(단위: %, 명)

특성	경제활동경험율 (07-08년)	현 경제활동율	2년간 퇴직률	(명)
전체	33.0	25.9	7.1	(1,287) ¹⁾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6.6	32.3	4.3	(467)
수급	31.0	22.2	8.8	(820)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16.1)	(8.8)	(7.3)	(249)
20~40%미만	(28.8)	(20.8)	(8.0)	(250)
40%이상	(46.8)	(35.2)	(11.6)	(250)
지역				
동부	23.8	16.3	7.5	(887)
읍·면부	53.5	47.3	6.2	(400)
성				
남자	46.6	37.7	8.9	(476)
여자	24.9	19.0	5.9	(810)
연령				
65~69세	39.7	32.4	7.3	(426)
70~74세	37.5	29.9	7.6	(416)
75세 이상	22.5	16.0	6.5	(445)
결혼상태				
유배우	40.8	33.5	7.3	(741)
무배우	22.4	15.6	6.8	(54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50.0	44.0	4.0	(50)
약간 좋다	37.8	31.2	6.6	(201)
보통이다	37.1	29.8	7.3	(315)
약간 나쁘다	29.7	24.8	4.9	(499)
매우 나쁘다	26.0	14.2	11.8	(219)

주: 1) 대리응답자를 제외함. 2) 소득인정액 자료가 있는 노인 724명에 대한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지난 2년간의 퇴직율은 비수급노인의 경우 4.3%이지만 수급노인은 8.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경향을 살펴보면 수급노인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40%이상 집단 노인의 2년간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읍면부 노인에 비해 동부의 노인들의 퇴직한 비율이 약간 높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퇴직한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75세 이상 노인의 퇴직율이 75세 미만의 노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2년간 퇴직비율은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11.8%의 높은 퇴직율을 보이고 있어 건강상태는 노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현재 직종 종사기간은 5년 미만이 20.5%, 5년 이상~10년 미만이 10.9%, 10~15년미만이 5.6%, 15~20년미만이 6.2%, 20년이상이 56.8%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별 종사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수급노인은 수급노인에 비해 현 직종에 오래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급노인의 경우 현 직종 종사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이 36.4%로 10년 이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중년기의 직장 또는 직업에서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지역별 경제활동 노인의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읍면부의 노인들이 20년 이상의 종사기간을 보이는 것에 비해 동부 노인의 경우 5년미만 종사자가 38.5%, 5~10년 미만 종사자가 12.6%로 중장년층 이후에 재취업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10년미만의 종사기간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경우 현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전기·중기 노인에 비해 길며, 전기·중기노인의 경우 5년미만의 비율이 22.4%와 23.3%로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직종별 종사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관리직·전문직에서는 5년 미만은 18.2%이

며, 10년 이상~15년 미만인 27.3%, 15~20년 미만이 9.1%이며, 20년 이상이 45.5%로 평균에 비해 10년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무·서비스·판매종사직의 경우 종사기간이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특징을 보이며, 농임업의 경우 77.4%가 20년 이상의 종사기간을 보이고 있다. 기능원 및 기계 조립종사직의 경우 5년 미만이 27.3%로 타 직종에 비해 높으며, 단순노무종사직의 경우는 특히 68.9%가 5년 미만의 종사기간을 보이고 있고, 장기간 종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부표 4-3-3 참조).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상은 10년 미만의 비율이 높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현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별 종사기간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10년 미만의 종사기간을 나타내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새로운 직종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에 한 일을 계속하는 경향으로 종사기간이 긴 특성을 나타낸다(부표 4-3-3 참조).

〈표 3-2〉 근로노인의 종사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전체	20.5	10.9	5.6	6.2	56.8	100.0(322)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7.1	8.2	5.5	8.9	60.3	100.0(146)
수급	23.3	13.1	5.7	4.0	54.0	100.0(176)
지역						
동부	38.5	12.6	7.4	10.4	31.1	100.0(135)
읍·면부	7.5	9.6	4.3	3.2	75.4	100.0(187)
성						
남자	20.6	8.0	7.4	4.0	60.0	100.0(175)
여자	20.9	14.2	3.4	8.8	52.7	100.0(148)
연령						
65~69세	22.4	12.7	8.2	6.7	50.0	100.0(134)
70~74세	23.3	7.5	4.2	4.2	60.8	100.0(120)
75세 이상	12.9	14.3	2.9	8.6	61.4	100.0(70)

노인의 36.4%는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근로희망 여부는 현재근로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노인의 81.4%는 계속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비근로 노인의 경우 20.6%만이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라서는 수급하는 노인의 31.6%가 근로를 희망하며, 비수급노인은 44.7%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희망율은 높아지는 것이 보여지며, 수급 노인 중 소득인정액 40%이상의 노인의 근로희망률은 비수급노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급노인에 비해 비수급노인의 근로희망율이 더 높은 것은 수급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으며, 고연령층의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동부는 32.7%가 희망하는 반면, 읍면부에서는 44.4%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약 3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희망율은 연령이 젊은 초기노인의 경우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3-3〉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근로희망 여부

(단위: %, 명)

	희망	비희망	계(명)
전체	36.4	63.6	100.0(1,28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44.7	55.3	100.0(467)
수급	31.6	68.4	100.0(820)
(소득인정액 기준 ¹⁾)			
20%미만	(20.1)	(79.9)	100.0(249)
20~40%미만	(28.8)	(71.2)	100.0(250)
40%이상	(45.2)	(54.8)	100.0(250)
현재 근로여부			
근로	81.4	18.6	100.0(334)
비근로	20.6	79.4	100.0(953)
지역			
동부	32.7	67.3	100.0(886)
읍·면부	44.4	55.6	100.0(400)
성			
남자	55.0	45.0	100.0(477)
여자	25.3	74.7	100.0(810)
연령			
65~69세	47.9	52.1	100.0(426)
70~74세	39.7	60.3	100.0(415)
75세 이상	22.2	77.8	100.0(445)

주: 1) 소득인정액 자료가 있는 노인 중 본인응답자 1,1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3-4〉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중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미래에 일을 희망하고 있는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액이 현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할 때 근로에 대한 의사의 변화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증가하거나 현재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근로활동 또는 구직활동을 그만두겠는지에 대한 문항에 68.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에 대한 의사는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은 76.1%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노인은 61.7%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근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기노인일 수록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근로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음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동기는 경제적 이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의지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40.7%로 과반수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액수는 최고 월 8만 4천원으로 경제활동을 대체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라도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수의 증가는 노인의 경제활동 의지에 영향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액수에 따라 구직의사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월 15만원~20만원 미만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27.8%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0만원 이상 이라면 24.3%로 나타났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현 수준의 약 2배로 증가시킬 때는 노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부표 4-3-6 참조).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는 구직의사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구직의사의 변화

(단위: %, 명)

	아니오	예	계(명)
전체 ¹⁾	68.2	31.8	100.0(296)
지역			
동부	68.1	31.9	100.0(160)
읍·면부	68.1	31.9	100.0(135)
성			
남자	76.1	23.9	100.0(134)
여자	61.7	38.3	100.0(162)
연령			
65~69세	72.6	27.4	100.0(95)
70~74세	65.5	34.5	100.0(116)
75세 이상	66.7	33.3	100.0(84)
결혼상태			
유배우	74.9	25.1	100.0(183)
무배우	57.5	42.5	100.0(113)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59.3	40.7	100.0(54)
20~40%미만	71.6	28.4	100.0(81)
40%이상	68.2	31.8	100.0(132)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 가운데 비해당 524명 제외

2)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자료가 있는 노인 중 응답자 318명 분석

나.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이 노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근로유인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퇴직 이후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의 건강상태나 일과 여가에 대한 선호, 소득 및 자산 등의 개인적 요인들과 함께, 정년제도 등 노동시장 여건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 역시 장·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퇴직 이후 소득은 물론, 퇴직 이전의 근로와 저축 등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책결정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다.¹⁰⁾ 사실, 많은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조사(earning test), 자산조사(means-test) 혹은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공

10)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시행되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관련 기존 연구가 매우 드물. 하지만, 공적연금제도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이만우·김진영·김대철, 2008; 김원섭·우해봉, 2008; 문형표·이지혜, 2008; 이승렬·최강식, 2007).

적이전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¹¹⁾

일반적으로 자산조사 혹은 소득조사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가구)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targeting),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전체적인 분배 상태를 개선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가구)의 근로 의욕과 저축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소득조사는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에, 그리고 자산조사는 저축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개인들의 행태적 반응을 발생시킴으로써 전체 분배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급 가능한 최대급여액 수준, 소득·자산조사 시 공제액(혹은 가치) 수준, 그리고 비공제액에 대한 급부금의 축소비율(한계세율)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개인들의 총 노동공급 혹은 저축 등의 단기적인 반응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수급권이 발생하는 개인들의 장기적인 행태적 반응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여하튼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은 급여대상범위를 협소하게 하면서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거나 혹은 급여대상범위를 넓히면서 낮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와 같은 방식은 대상 집단의 근로유인과 저축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에, 후자와 같은 방식은 근로유인과 저축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높은 한계세율에 따른 왜곡과 보편적 급부 제공에 따른 비용 사이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장 적절한 정도의 소득·자산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와 근로유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말한 문제를 단순화시켜, 노인의 근로활동참여(정도)에 대한 단기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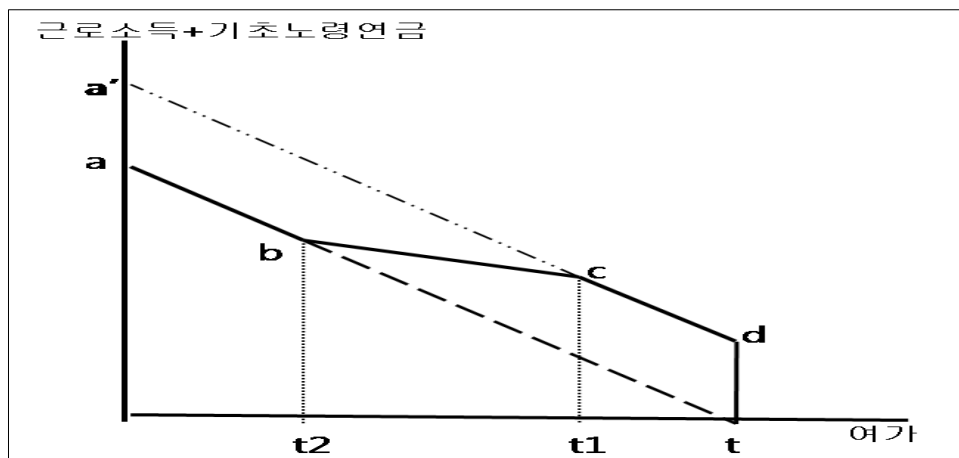
11) 다른 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이전제도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Piggot, Robalino, and Jimenez-Martin(2008) 참고 할 것.

저 살펴보도록 하자. 경제학적 연구들 대부분은 해당 문제에 대해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 문제라는 전통적인 노동공급모형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여가가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할 때,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근로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대체효과는 여가의 기회비용이 하락함으로써 여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그림 3-1]과 같이 예산제약선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자산은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이 존재한다고 하자. a_t 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전의 예산제약선이고, a'_d 는 근로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산제약선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림 3-1]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예산제약선의 변화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8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월40만원을 초과하는 노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조사 시 월35만 원(2009년 월 37만원)의 소득은 공제(2008.8. 시행규칙 개정)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월 3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에 있는 노인에게는 수급자격이 주어지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이를 [그림 3-1]을 통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이 35만원에 해당하는 노동량을 t_1 , 75만원에 해당하는 근로활동수준을 t_2 라고 할 때, t_1 이하의 근로활동을 하는 이들은 월 최대 연금액을 수급함으로써 예산제약선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반면, t_2 이상인 자들은 수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됨으로써 예산제약선은 변하지 않는다. 만일 t_1 과 t_2 사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지급된다. 따라서 이때의 감액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일종의 조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의 예산제약선은 bc 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인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활동 수준이 t_2 이하인 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t_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예산선에 변화가 없고, 그 결과 근로유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t_1 - t_2 사이인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모호하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효과에 의해 근로활동을 축소할 유인이 있지만, 대체효과에 의해 해당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활동이 t - t_1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산선이 dc 로 수직으로 이동함으로써 소득효과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기초노령연금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활동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적 예측은 너무 단순하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서와 같이, 근로소득과 자산평가액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근로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산평가액에 따라서 예산선이 굴절하는 근로활동수준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자산평가액까지 고려하고자 한다면, 퇴직 이후 시기뿐만 아니라, 이전 시

기의 저축과 근로활동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가구/개인들은 소득과 사망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애기간동안의 노동과 저축(혹은 소비)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조사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는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산조사에 의한 암묵적인 한계세율을 통해 저축을 감소시킬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미래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선호에 대한 명확한 가정을 전제로 기초노령연금이 근로활동과 저축에 미치는 장기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림 3-1]을 통해 살펴본 이론적 예측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장의 목적이 지난 일 년 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저축에 미친 효과를 검토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단기적인 이론적 예측과 실증분석을 통한 확인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하에서 노동공급과 저축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선호를 전제로 한 장기적인 분석의 예측¹²⁾ 역시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확인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위의 단기적인 이론적 예측, 즉 소득조사방식의 제도가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이때, 많은 연구들은 소득조사 방식의 제도가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중차분방법(Difference-in-Difference)과 같은 자연적 실험(natural experiment)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¹³⁾ 이 방법은 특정 제도가 도입 혹은 변화되기 전·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제도로부터 영향 받는 수혜집단의 행태변화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들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Gruber and Orszag(2003)에 따르면, 해당 연구들의 결과는 분석방법, 분석대상 시기, 혹은 사용

12) 해당 연구는 Dynamic Programming Model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이러한 연구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 혹은 예상되는 제도변화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efton, van de Ven, and Weale(2008)을 참조할 것.

13) 이외에도 대표적인 분석방법은 'bunch analysis'와 '축약형의 방정식을 이용한 분석(reduced-form equation analysis)'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ruber and Orszag(2003) 참고. 한편, 이중차분방법은 본 장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것임.

하는 자료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은퇴행태에 건강과 여가에 대한 선호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 정년제도와 기업·조직차원의 요인들, 그리고 사회정책·제도적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방하남 외, 2005),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회보장제도와 저축과의 관계에 대한 소득·자산조사 방식의 제도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편이다.¹⁴⁾ 이는 현재의 부(wealth)가 과거로부터의 저축이 누적된 결과임을 고려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분석을 위해선 장기적인 분석틀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저축을 포함한 금융·실물자산에 대한 조사자료가 갖는 전통적인 측정오차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노인의 저축행위와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편으로써, 이들 연구들의 성과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제도가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실증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바, 기존 논의들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주어진 한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저축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현상은 “퇴직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현상(일명, saving puzzle)”이다.¹⁵⁾ 왜냐하면 이것은 퇴직 이후의 노인은 근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근로시기의 저축으로부터 마련한다는 경제학의 생애주기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노령층이 지속적으로 저축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상속인에게 의도적으로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다. 특히, 노령층의 저축행위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에 함의하는 바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차

14)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하여 SSI가 노령자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Neumark and Powers(1998)가 가장 최근이며, 거의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5) Mirer(1979), Menchik and David(1983), Kapteyn and Lusardi(2000)

16) 하지만, Hurd(1987, 1989)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설을 지지하고 있음.

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타적 동기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산을 남기기 위해 고령층이 저축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 공적이전 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이전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손에 대한 유산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의 저축행위가 자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댓가로써 유산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공적이전이 자손들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정당성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노인들의 저축행위는 사망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계획하지 못한 높은 지출부담(질병, 장기요양), 예측하지 못한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Borsch-Supan and Stahl, 1991; Borsch-Supan, 1992)과 같은 예비적 동기,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바램(Davies, 1981)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정리하면, 노인들(가구)의 저축률이 0보다 크거나 혹은 연령에 따라 부의 수준이 증가하는 현상 자체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로써, 현상 그 자체만으로는 노령층의 저축행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Jurges(2001)에 따르면 자신의 연구를 포함해 기존 연구들의 결과만으로는 “순수한 생애주기가설 혹은 유산동기를 포함한 생애주기 가설 중에 어느 하나도 (노령층의) 저축행위에 대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Jurges, 2001:p.410)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Jurges(2001)는 유산에 대한 선호 측정과 관련해서 기존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객관적 측정방법(objective method)으로써, 아이(향후 잠재적 상속인)를 갖고 있는지와 같은 대리변수로부터 유산동기를 추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측정방법(subjective method)으로써 설문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녀를 둔 개인의 저축과 소비행위가 자녀가 없는 개인의 행위들과 다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만일 유산동기가 저축행위의 원인이라면, 자녀가 없는 노인이 과거의 재산으로부터 더 많이 예금을 인출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저축에 대한 유산동기와 배치(Hurd, 1987)되기도 하는데,

사후에 상속하기 보다는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말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실태조사」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실태조사」에서는 상속 여부와 의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문하고 있다. 사실, 주관적 측정방법이 더욱 직관적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하여 그 결과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허위응답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여 응답할 수 있다. 둘째, 유산동기 그 자체가 부의형성과정에 내생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정치의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유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이득으로부터 비롯한 이득의 경우, 해당 이득을 자손과 공유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Hurd and Smith, 1999).

이에 노령층의 저축행위와 관련해서 「실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부 관련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때, 살펴볼 내용은 연령에 따른 저축 실태, 저축의 주요 이유, 그리고 상속 여부와 의지이다.

먼저, 〈부표 4-4-1〉을 통해 정기적금·예금 거래의 연령대별 실태를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래내용이 없고, 새로이 가입한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령층의 저축행위는 생애주기가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표 4-4-1〉의 정기적금 및 예금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문항을 보면, 생활비 부족(22.0%), 의료비 사용(13.1%), 사망 시 필요자금(10.0%)과 같은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전체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자녀의 필요와 자녀에 대한 상속 목적이 12.7%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수급자 집단은 예비적 동기(생활비 부족(38.2%), 의료비 사용(19.2%), 사망 시 필요자금(5.6%))에 의한 저축 비중이 평균에 비해 더 큰 반면, 자녀의 필요 혹은 상속을 목적으로 저축한 경우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비수급자 집단은 단순히 저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6%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필요(12.4%)라는 응답이 수급집단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부표 4-4-2〉에서 가구형태별로 정기적금·예금 거래를 보면, 가구형태 중에서 ‘가입했다’고 응답한 것은 노인부부인 경우에 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축의 주요 이유는 생활비부족(19.2%)과 의료비 마련(21.2%)이라고 응답했다. 노인독신가구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중에서는 1.4% 정도가 ‘가입했다’고 동일한 비중으로 응답했지만, 그 주요 이유를 보면 전자의 경우 생활비 부족(44.4%)과 사망 시 필요자금(22.2%)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생활비 부족과 자녀의 필요가 각각 2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의 필요를 위해 저축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해 유산동기에 의한 저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생활비 부담이 적고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필요에 따른 저축이 명확하게 유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자녀의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댓가인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산상속실태와 유산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내용을 보면 (〈표 4-6〉과 〈표 4-7〉 참조), 노인의 42.4%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자녀에게는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8.1%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응답이 53.0%,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한 경우는 10.7%로써,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다.

한편, 갖고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지만 아직은 물려주지 않은 노인의 상속예정시점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노인(약 78~80%)은 본인·배우자 사망 직전 혹은 사망 후로 응답하였고,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수급집단(7%)에 비해 비수급집단(5%)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들의 경우 상속을 해줄 만한 재산이 없거나 상속의지가 없는 노인은 약 63%로써 절반 이상이고, 이미 물려준 경우에도 대부분은 논·밭·주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현금지원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이 상속을 통해 왜곡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예정 시점으로 사망 직전과 이후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약 78%),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7%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상속의 동기가 이타적이기 보다는 교환적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상속을 통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의 저축행위와 관련해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저축행위는 집계차원에서 보면 생애주기가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노인,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집단의 저축행위에서 유산동기에 비해 훨씬 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동기가 자녀에 대한 이타적 동기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유산을 위한 저축으로 왜곡되거나 혹은 기존의 민간저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든 저축보다는 현재 부담이 큰 보건의료비와 식비 등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표 4-4〉 참고)은 위의 예상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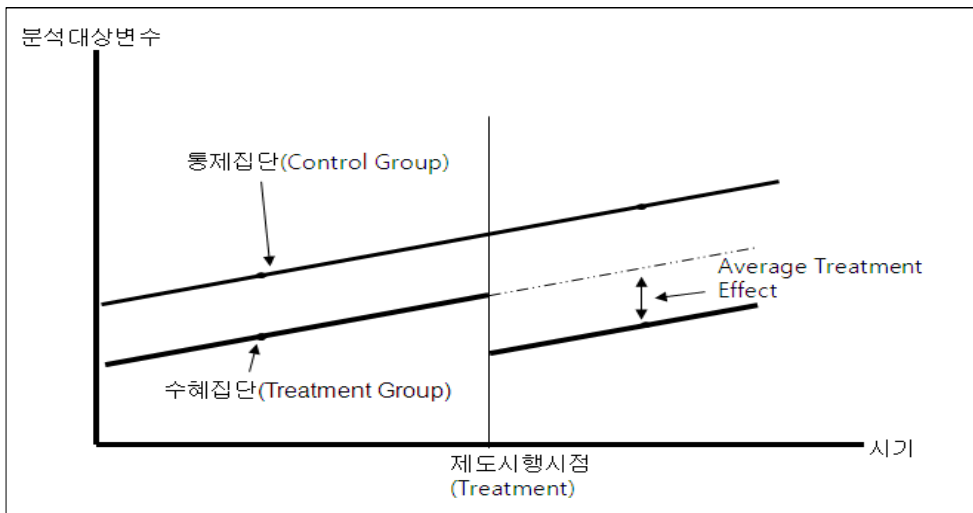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사회평가방법에서 대표적인 자연적 실험(natural experiment) 방법 중에 하나인 이중차분 방법(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DID’)을 이용한다(DeLeire, 2000)¹⁷⁾. DID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특정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treatment group)과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control group)의 제도 시행 이전의 차이(일차 차분)가 특정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변화(이차 차분)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3-2]에서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수혜집단(혹은 처리집

17) DID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Blundell and Dias, (2008)을 참고할 것.

단 treatment group)으로 하고,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집단을 비교집단(혹은 통제 집단 control group)이라고 하자. 이때, 제도 시행 이전의 두 집단 간 차이(근로활동의 차이)가 제도 시행 이후에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만일, [그림 3-2]에 서처럼 두 집단 간 차이가 제도 시행 전후로 변화하는 경우(근로활동이 축소되는 경우) 수급효과(혹은 처리효과 treatment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3-2] DID 방법의 도해



보다 구체적으로 DID방법을 이용한 분석모형은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text{일반적인 모형: } Y_{it} = \alpha + \lambda D_i + \gamma D_t + \delta D_i D_t + \beta X_{it} + \epsilon_{it} \quad (1)$$

여기서, i 는 노령자 개인을,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D_i 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집단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수급=1, 미수급=0), D_t 는 제도 시행 이전(0)과 이후(1)를 의미하는 더미변수이다. $D_i D_t$ 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으로써, 그 계수인 δ 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DID 추정량이다.

한편, Y_{it} 는 분석대상변수로써,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변수들이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활동과 관련된 변수가 분석대상변수로 활용될 것이며, 개인들의 성·연령 등과 같은 특성변수들인 X_{it} 는 각각의 분석목적에 따라 약간씩 상

이하에 구성될 것이다.

이때, DID 추정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림 3-2〉에서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수급 노인집단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들의 근로유인을 저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DID 분석방법은 특정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가상의 상황에서 정책(안)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모의실험과는 달리, 서베이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행태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자연적 실험(natural experiment) 방법으로써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많은 연구들이 DID를 이용하여, 관련된 정책들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방법의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DID 방법의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고려하여 그 해석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Blundell and Dias, 2008).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규모와 구성이 정책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외생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실험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정책변화 이전에 이미 그 변화를 예상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제도변화를 제외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공통적임을 전제로 한다.¹⁸⁾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와 같은 이중차분 방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8) 본 장에서 사용하는 「실태조사」 자료는 2007년과 2008년의 근로소득과 사적이전 수준에 대해 회고적인 내용의 자료로써, 일정정도의 측정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자료는 본 장의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한편, 노인들의 근로활동과 관련해선 근로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근로이력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이때 그 주요 결과가 노인일자리아업DB(2005.1.-2008.10)를 이용한 분석(〈부록〉참조)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가 갖는 문제점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사료됨.

3)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근로활동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이전 시기부터 조사시점까지 조사대상 노인들의 근로활동 이력에 대한 회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해당 근로이력 중에서 2007년과 2008년 근로활동 여부와 근로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출·가공하여 이용한다¹⁹⁾. 이때, 유의할 점은 실태조사에서 경제활동참여기간은 월단위로 조사되고 있는데, 임시·일용직 등과 같은 일자리의 특성상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월을 정상적인 근로기간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일수 혹은 근로시간 단위로 조사된 자료가 보다 적절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자료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사료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2007년과 2008년 각 연도에 근로한 경험의 최소한 1개월이라도 있는 경우($lpart=1$)와 전혀 없는 경우($lpart=0$)로 구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text{모형(1): } lpart_{it} = \alpha + \beta X_{it} + \lambda D_i + \gamma D_t + \delta D_i D_t + \epsilon_{it}$$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과 2008년의 근로기간(WT)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근로기간 분포가 ‘0’개월 혹은 12개월에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절단된 토빗분석을 수행한다.²⁰⁾

19) 한편, 「실태조사」에서는 2007년과 2008년의 근로에 의한 소득(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바, 이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보다는 근로기간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근로소득 항목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문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힘(이에 관심있는 독자에게는 해당 결과를 제공할 것임). 다른 한편, 〈부록〉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2007년과 2008년에 근로에 의한 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의 유무와 수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며, 이때의 주요 결과 역시 본문의 결과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 이와 같은 경우, probit 모형의 추정결과는 종속변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를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반면, ols 추정결과는 종속변수가 불연속적이고 제한됨으로써 편의(bias)가 발생한다. Tobit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Wooldridge(2002)를 참조.

모형(2):

$$\ln(WT) = \alpha + \beta X + \lambda D_i + \gamma D_t + \delta D_i D_t + \epsilon \quad \text{if } 0 < \ln(WT) < \ln(12)$$

$$\ln(WT) = 0 \quad \text{if } \ln(WT_{it}) \leq 0$$

$$\ln(WT) = \ln(12) \quad \text{if } \ln(12\text{개월}) \leq \ln(WT_{it})$$

이때, 두 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설명변수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D_i , 수급=1, 미수급=0)와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에 대한 변수(D_t , 이전=0, 이후=1), 그리고 두 변수의 교차항인 $D_i D_t$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앞의 DID방법에 따라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들로서 노인의 인구경제학적 특성 변수들인 연령, 성별(남성=1, 여성=0), 학력, 건강, 거주지역, 주거형태, 월생활비용, 그리고 가구구성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이때, 학력은 중졸더미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졸미만, 고졸이상 더미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건강에 대한 변수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건강(좋은)’과 ‘건강(나쁨)’ 더미변수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광역시 거주자를 ‘1’, 기타 지역 거주자를 ‘0’으로 설정하였으며, 주거형태는 자가·전세를 ‘0’, 기타형태(월세, 무상)를 ‘1’로 설정하였으며, 월생활비용은 로그를 취하여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세대구성에 대해서는 노인부부(혹은 단독)와 동거하는 가구구성원을 크게 자녀, 손자녀, 그리고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본 분석에서는 ‘노인부부(혹은 단독)+성인자녀’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노인부부(혹은 단독)’만으로 구성된 가구, 그리고 ‘노인부부(혹은 단독)+손자녀 혹은 기타’로 구성된 가구에 가공·추가하였다.

한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경우 즉각적인 반응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까지 1,2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확대한 바,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는 65세~69세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였다. 즉, 2008년 9월은 1단계 사업이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인 반면, 2단계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써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반응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은 물론, 사업단계별로 대상 집단을 구분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²¹⁾

21) 이때, 주의할 것은 월35만원의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시행규칙은 8월에 시행되어 7월부터 소급적용한 점

〈표 3-5〉 기초노령연금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프로빗 분석

변수	전체집단		1단계		2단계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수급집단	-0.0077	0.0311	-0.0217	0.0378	0.0106	0.0563
제도시행	0.0304	0.0317	0.0200	0.0408	0.0535	0.0522
DiDt	-0.0252	0.0402	0.0000	0.0496	-0.0808	0.0723
연령	-0.0016***	0.0002	-0.0019***	0.0002	-0.0018*	0.0010
광역시 거주	-0.2282***	0.0192	-0.2197***	0.0225	-0.2496***	0.0364
남성	0.1936***	0.0211	0.2040***	0.0241	0.1717***	0.0421
중졸미만	0.1110***	0.0303	0.0919**	0.0355	0.1389**	0.0573
고졸이상	-0.0698*	0.0351	-0.1053**	0.0406	-0.0174	0.0636
노인단독 및 부부	0.1073***	0.0271	0.0811**	0.0341	0.1543***	0.0459
노인부부+손자녀 및 기타	0.1531***	0.0514	0.2300***	0.0598	-0.0642	0.1049
건강상태(좋은)	0.0715**	0.0306	0.0964***	0.0382	0.0447	0.0526
건강상태(나쁨)	-0.0797***	0.0244	-0.0348	0.0295	-0.1769***	0.0428
월생활비용	-0.0583***	0.0190	-0.0578**	0.0229	-0.0628*	0.0342
자가·전세이외의 주거형태	-0.0887***	0.0245	-0.0941***	0.0277	-0.0377	0.0509
obs.	2572		1780		792	
Log of Likelihood	-1471.1065		-982.12325		-476.46	

〈표 3-5〉와 〈표 3-6〉는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와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DiDt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사업단계별 대상 집단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활동참여를 포기하게 하거나, 혹은 근로기간을 축소시킨다는 일부의 우려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 차이와 제도 시행 전후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수급자를 판별하기 위해 소득·자산조사를 거치지만, 자격심사 시 상당수준의 근로소득을 공제함으로써 근로활동여부가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동일한 이유로 인해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꿀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것 역시 위의 결과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다. 따라서, 2단계 대상자 중 일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7월에 근로활동을 줄였다가 8월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근로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고려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밝힘.

〈표 3-6〉 기초노령연금이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 Tobit(양측절단)

변수	전체집단		1단계		2단계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수급집단	-1.1245	1.3557	-1.8911	1.7868	-0.2013	2.0767
제도시행	0.6067	1.3834	-0.0330	1.9390	1.5576	1.9486
DiDt	-0.5627	1.7687	0.8260	2.3532	-2.9213	2.7682
연령	-0.0665***	0.0089	-0.0883***	0.0141	-0.0672*	0.0377
광역시 거주	-11.3564***	1.3361	-12.1176***	1.7625	-10.0944***	2.0221
남성	9.2427***	1.3021	10.7009***	1.7638	6.9003***	1.9127
중졸미만	4.1137***	1.4420	3.6809**	1.8475	4.1944*	2.2629
고졸이상	-4.0454**	1.6595	-6.3293***	2.3073	-1.6294	2.3836
노인단독 및 부부	5.0418***	1.3124	4.3943**	1.7634	5.6810***	1.9433
노인부부+손자녀 및 기타	6.2327***	2.1726	10.5499***	2.8103	-3.7250	4.1176
건강상태(좋은)	3.3755***	1.3103	4.7157***	1.7747	1.8733	1.9210
건강상태(나쁨)	-3.0952***	1.0886	-1.4395	1.3950	-5.9212***	1.8136
월생활비용	-2.6024***	0.8548	-3.0470***	1.1328	-1.9537	1.2885
자가·전세이외의 주거형태	-4.3458***	1.1970	-5.1113***	1.5392	-1.7142	1.9041
obs.	2572		1780		792	
Log of Likelihood	-1930.8111		-1268.9317		-649.224	

한편,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활동참여 혹은 근로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위의 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혹은 인적자본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 개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 임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면 취업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위의 결과들은 쉽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표 3-5〉 과 〈표 3-6〉 의 결과들 중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확률이 낮고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결과는 근로유인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과는 상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인들의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요인이 근로생애기에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시기 성인들에 대한 공적부조와 유사하게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의 근로활동에 대한 일종의 조세로써 근로유인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은 실증차원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으로 노인들의 근로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요소들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관련 이

론이 수정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크게 무리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3-5>와 <표 3-6>의 결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위의 결과들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다 발전된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이에 그 결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가구구성이 노인의 근로유인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에게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부부(단독포함)와 손자녀 및 기타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부부(단독포함)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확률이 높고 근로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다.

둘째, 일반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근로유인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위의 분석결과들은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자가·전세로 사는 노인이 월세 및 무상주택에 사는 노인에게 비해 경제활동참여확률도 높고 근로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는 하나의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노인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기 보다는 현재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유지하거나 적응하고자 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단순히 경제적 궁핍함 혹은 필요성에 의존해서 근로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건강상의 이유 혹은 사회적 참여 등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셋째, 월 생활비용이 클수록 경제활동참여확률이 낮고 근로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결과 역시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생활을 위한 비용이 크다면 이를 위한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결과 근로에 대한 유인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지출 속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혹은 저축 등과 같이 당장의 생계 이외의 필요한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시기에 있는 성인의 경우 그럴 것이다. 반면에 노인은 현재의 생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²²⁾ 따

22) 한편,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목적으로 저축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마련을 위해

라서 노인의 월생활비용 수준은 현재 보유·획득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정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월생활비용이 높을수록 근로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 지도 모른다.

넷째, 기초노령연금의 사업대상자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력(고졸이상), 가구구성, 건강상태, 월생활비용, 주거형태 변수들은 사업대상자 집단별로 유의성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각각의 집단이 70세 이상과 65~69세라는 서로 다른 연령대에 속한 노인들임을 고려할 때, 각 집단별 고유한 특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노령층의 근로유인을 축소시킨다는 일부의 우려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평가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근로유인에 대해 다른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자격조건과 급여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의 근로유인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일반적인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2.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

가. 사적이전 실태: 현금 및 현물지원²³⁾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작동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 상황의 노인에게 사적이전은 주요 소득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현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 노인층의 사적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적이전의 내용은 어떠한지, 그러한 지원이 정기적인가 여부에 따라서도 살펴볼 것인데, 이는 다음 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노인의 사적이전 실태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노인 중 현금 및 현물 등 사적지원을 받은 비율은 91.7%로 대부분의 노인이 현금이나 현물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적이전을 받은 노인 중 38.6%는 정기적인

근로활동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23) 가구단위 및 개인단위에서 파악된 사적이전소득액 총액에 관해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바 있음.

현금지원을, 83.8%는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84.0%는 현물지원을 받고 있어 노인의 약 70% 정도는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는 노인의 약 35%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92.6%가 사적이전을 받고 있으며, 기초노령비수급자의 경우는 90.8%로 큰 차이는 없다. 사적이전의 내용에 있어서도 비공식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따른 차이는 매우 적다. 단지 정기적인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40.7%로 기초노령비수급자의 34.5%에 비하여 약 5%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이전 수혜율

(단위: % 명)

	사적이전	사적이전의 내용 ¹⁾			
	수혜율	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수혜율	현물지원 수혜율	(대상자수)
전체	91.7	38.6	83.8	84.0	(1,192)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90.8	34.5	83.0	84.9	(466)
수급	92.6	40.7	84.2	84.0	(819)
지역					
동부	90.6	39.5	80.5	81.0	(896)
읍·면부	94.1	36.6	90.8	90.5	(404)
성					
남자	91.3	34.7	84.0	85.6	(480)
여자	92.0	40.7	83.7	83.2	(820)
연령					
65~69세	91.1	35.5	82.1	84.9	(428)
70~74세	90.6	38.4	86.5	81.4	(417)
75세 이상	93.4	41.5	83.0	85.4	(454)
결혼상태					
유배우	93.0	35.8	86.0	85.1	(748)
무배우	89.9	42.5	80.7	82.5	(553)

주: 1) 사적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1,19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현금지원의 경우 지급액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액수는 수급노인에 비하여 비수급노인에게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지원액의 경우도 비수급노인에게서 높다.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하여, 무배우 노인은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정기적인 현물지원액은 많은 반면 비정기적인 현물지원액은 적다.

또한 노인독신의 경우 정기적인 지원액이 가장 많고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비정기적인 지원액이 많은 등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실제 생활비 수준의 소득확보가 중요한 노인집단의 경우는 정기적인 지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 용돈 수준의 비정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부표 4-3-11 참조).

현물지원의 경우 노인의 제특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 노인이, 유배우에 비하여 무배우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생활용품 지원율이 높고 외식 및 음식물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다.

〈표 3-8〉 제특성별 현금지원액

(단위: 만원, 명)

현금	월평균 정기적 지원액(단위:만원)	대상자(명)	평균 연간 총 비정기적 지원액(단위:만원)	대상자(명)
전체	15.4	460	38.4	999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9.8	146	33.6	638
수급	13.3	309	47.4	352
지역				
동부	16.8	321	40.4	654
읍·면부	12.1	139	34.6	345
성				
남자	13.1	152	44.8	368
여자	16.5	307	34.6	631
연령				
65~69세	16.3	139	45.5	320
70~74세	14.3	145	35.2	327
75세 이상	15.5	176	34.9	352
결혼상태				
유배우	12.3	249	40.1	598
무배우	18.9	211	35.9	401
지원한 자녀의 경제수준				
매우 좋다	24.5	18	100.2	27
약간 좋다	23.6	100	42.8	154
보통이다	12.8	214	43.7	426
약간 나쁘다	11.3	92	24.0	263
매우 나쁘다	11.3	19	15.2	91

주: 1)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460명중 지원금액에 대한 무응답 13명을 제외한 결과임.

2)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1,192명중 지원금액에 대한 무응답 41명을 제외한 결과임

〈표 3-9〉 제특성별 현물지원내용

(단위: % 명)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기타	계
전체	0.8	7.8	20.7	1.3	67.5	1.9	100.0(1,002)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4	11.9	21.7	0.6	63.6	0.8	100.0(360)
수급	0.5	5.5	20.2	1.9	69.4	2.5	100.0(638)
지역							
동부	0.8	7.6	21.1	1.7	68.2	0.6	100.0(658)
읍·면부	0.9	8.1	20.0	0.9	65.8	4.3	100.0(345)
성							
남자	1.1	9.1	15.2	1.3	71.7	1.6	100.0(375)
여자	0.6	6.8	24.0	1.4	65.0	2.1	100.0(628)
연령							
65~69세	1.5	5.7	23.9	0.6	66.2	2.1	100.0(331)
70~74세	0.6	10.4	18.8	1.3	67.9	1.0	100.0(308)
75세 이상	0.0	7.2	19.6	2.2	68.5	2.5	100.0(362)
결혼상태							
유배우	1.0	8.3	16.9	1.2	71.2	1.4	100.0(591)
무배우	0.2	7.1	26.3	1.5	62.2	2.7	100.0(410)

나. 사적이전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IMF 이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공적이전에 비해 여전히 사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가 더욱 크다는 연구결과들(손병돈, 1998, 1999; 김진욱, 2001;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은 이후 사적이전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촉진시킨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연구들은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효과가 확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연구들을 촉진시켰다(정의신, 2007).

이에 사적이전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사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는 물론, 사적이전의 동기 혹은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사적이전의 동기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공적이전의 실효성을 가름해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적이전에 대한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같은 공적이전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간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사적이전의 동기로서 주목받은 것은 크게 4가지이다. 먼저,

부양과 이전의 수혜자인 부모(자식)와 이를 제공하는 자식(부모) 사이의 자원교류 행위는 수혜자와 제공자의 소득수준과 정(positive)의 관계를 갖는다는 교환적 동기(exchange motive)와 부(negative)의 관계를 갖는다는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²⁴⁾가 주목받았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모방심리로 이전행위를 설명하는 전 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와 동양의 전통적 가족문화를 배경으로 한 효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한편, 본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기초노령수급자가 받는 사적이전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만일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적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사적이전을 일정정도 구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가구경제패널조사(KHPS)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강성진·전형준(2005)은 한국의 가구들은 전반적으로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사적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공적이전에 의해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진재문(1999)은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한다는 일관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KLIPS 자료를 활용한 김희삼(2006)의 연구에서도 이타적 동기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 교환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교환이 아니라 노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KLIPS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성재민(2006)의 연구에서는 이타적 동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이전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우선, 김희삼(2008)이 지적하듯이, 공적이전에 포함되는 항목(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적이전의 발생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인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특성, 그리고 고

24) 이타적 동기는 제공자의 효용이 수혜자의 효용과 정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며, 교환적 동기는 이전에 따른 효용이 소비수준과 자녀의 복지,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용상태, 소득계층 등과 같은 수많은 요인들(안종범, 2006; 구인회, 2001; 손병돈, 1998; 김희삼, 2006; 정의신, 2008)은 물론, ‘효’와 같은 문화적 요인들(손병돈, 1998; 진재문, 1999) 역시 사적이전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사적이전 발생에 미치게 되는 심리적 요인 혹은 부모-자녀 간 소득 관계로서 설명하기 힘든 측면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완·수정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정의신, 2008).

김희삼(2008)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그동안의 수많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도 사적이전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데이터와 분석목적에 맞는 적절한 모형을 통해 사적이전행위와 관련해서 보다 풍부하고 발전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소득에 미치는 영향²⁵⁾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근로유인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게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하나는 이전 수준에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발생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다른 한 방법은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토빗모형(좌측절단)을 이용한다.

이때, 소득계층별로 사적이전의 동기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손병돈, 1998; 정의신, 2008)를 고려하여, 토빗모형 이외에도 OLS 모형과 분위회귀모형의 결과들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²⁶⁾ 실태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과 관련된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이다. 가구단위로 조사한 사적이전액, 개인단위로 조사한 사적이전액, 그리고 현금(정기·비정기)과 현물 형태의 사적이전을 제공자별로 조사한 월평균 항목들이 존재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 중에서 개인단위로 조사한 사적이전액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왜냐하면, 개인단위의 사적이전에 대한

25)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방법은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분석(98~100쪽)과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26) 분위회귀모형에 대해서는 Buchinsky, M.(1998) 참고할 수 있음.

항목은 2007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사적 이전액이 각각 조사됨으로써 이중차분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말한 3가지 항목 중에서 제공자별 현금·현물지원내용은 손자녀 유무 혹은 돌봄 여부, 그리고 부모-자녀 간 왕래 정도와 제공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2008년 한 해에 대해서만 조사됨으로써 본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구단위의 사적이전액은 자녀로부터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받은 이전액 뿐만 아니라, 그 역방향으로 이루어진 사적이전액 역시 포함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인단위의 사적이전 금액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액이 월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응답한 경우와 월 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측치들은 특이치(outlier)로써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사적이전의 발생여부에 대한 프로빗모형과 사적이전 수준에 대한 토빗모형에서는 월 1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0'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해당 모형의 특성상, 실제로 '0'값으로 조사한 자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만 원 미만의 자료를 제외하기 보다는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모형과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을 밝힌다.

정리하면, 이하에서 살펴볼 프로빗과 토빗모형의 결과는 사적이전액이 0에서 9천 원 이하인 경우 사적이전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OLS와 분위회귀 모형들의 결과는 사적이전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만을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이다.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설명변수 혹은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DID분석방법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더미(D_i , 수급자=1, 비수급자=0), 연도더미(D_t , 수급 이전시기=0, 이후 시기=1), 그리고 D_i 와 D_t 의 교차항인 D_iD_t 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노인의 인구경제학적 특성 변수로써, 연령, 성별(남성=1, 여성=0), 학력, 건강, 거주지역, 그리고 주거형태에 대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변수들은 앞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셋째, 소득과 관련된 변수는 노인 개인의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총소득만을 포함시켰다. 간혹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득관련 변수 설정에 있어서 다양한 소득원을 모두 고려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곤 한다. 이에 본 분석에서도 다양한 소득원들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주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과 사적이전 사이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기에,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해당 결과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넷째, 관계성 변수로는 동거·비동거 자녀를 모두 포함한 생존자녀수와 상속여부 변수를 설정하였다. 상속에 대한 변수는 현재 상속할 재산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상속한 경우와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상속하지 않는 경우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3-10〉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이 사적이전 발생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빗 분석과 토빗분석(좌측절단) 결과이다. 우선,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핵심 변수인 DiDt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사적이전이 구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급집단 더미변수(Di)를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소득·자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임에도 이들이 사적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는 것은 이타적 동기보다는 다른 동기, 특히 교환적 동기에 의해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앞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3-10〉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변수	Probit		Tobit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수급집단	-0.0480***	0.0180	-0.2361***	0.0857
제도시행	0.0078	0.0204	0.0969	0.0884
DiDt	0.0178	0.0244	0.1163	0.1134
노인총소득(사적이전 제외)	-0.0104***	0.0036	-0.1053***	0.0162
광역시 거주	-0.0253*	0.0134	0.0203	0.0600
연령	0.0002**	0.0001	0.0009**	0.0004
중졸이하더미	-0.0299	0.0183	-0.3663***	0.0881
고졸이상더미	-0.0131	0.0231	-0.0647	0.1016
남성더미	-0.0016	0.0142	-0.2890***	0.0636
건강상태(좋은)	-0.0137	0.0191	-0.1541*	0.0827
건강상태(나쁨)	-0.0078	0.0150	-0.1146*	0.0675
전부 상속	-0.1022**	0.0524	-0.3303**	0.1487
상속 하지 않음	-0.0514***	0.0149	-0.4194***	0.0652
자가·전세이외의 주거형태	0.0358**	0.0143	0.3870***	0.0757
생존자녀수	0.0612***	0.0042	0.2609***	0.0177
obs.	2,572		2572	
Log of Likelihood	-912.25319		-4216.963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위의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 역시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향후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과 상속의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이미 모든 재산을 상속했거나 상속할 재산 혹은 의지가 없는 경우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결과는 교환적 동기에 의해 사적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노인의 총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이 적고,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들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적이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공적이전에 따른 구축효과를 발생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생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타적·교환적 동기 이외의 요소,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효’ 혹은 자녀들 사이의 경쟁적 전시효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사적이전의 동기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일관되게 지지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서와 같이 사적이

전은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표 3-10〉의 결과는 그와 같은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를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사적이전소득과 관련하여 소득계층별로 사적이전 행태와 요인이 다르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하는 바(손병돈, 1998; 정의신, 2008), 이를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도 노인의 총소득(사적이전 제외)을 기준으로 상·중·하위 계층을 구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한편, 소득계층별로 사적이전행태와 요인이 다르다는 것은 사적이전 수준에 따라 그 행태와 요인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들 모형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이 월평균 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표 3-11〉은 전체집단과 소득계층별로 수행한 일반회귀모형 분석결과이다. 전체 집단에 대한 결과와 소득계층별 결과가 조금씩 다르지만, 본 분석의 주요 관심사인 DiDt 변수에 대한 결과, 즉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고려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1〉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소득계층별 효과비교

모형	총소득 기준			
	OLS	상위계층(OLS1)	중간계층(OLS2)	하위계층(OLS3)
수급집단	-0.091	-0.112	-0.358*	0.001
제도시행	0.078	0.101	0.006	0.092
DiDt	0.046	0.08	0.056	-0.062
노인총소득(사적이전 제외)	-0.077***	-	-	-
광역시 거주	0.126**	0.091	-0.026	0.268**
연령	0.001	0	0	0.001
중졸미만	-0.321***	-0.155	-0.413**	-0.433***
고졸이상	-0.035	0.027	-0.001	-0.215
남성다미	-0.359***	-0.224**	-0.473***	-0.366***
건강상태(좋은)	-0.153*	-0.17	0.041	-0.326**
건강상태(나쁨)	-0.085	-0.287***	0.007	-0.02
전부 상속	-0.165	-0.073	-0.118	-0.508*
상속 하지 않음	-0.282***	-0.255**	-0.323***	-0.219*
자가·전세이외의 주거형태	0.341***	0.088	0.385***	0.508***
생존자녀수	0.088***	0.091***	0.076**	0.064*
상수항	4.545***	3.894***	5.549***	4.030***
obs	2,193	734	725	734

여성일수록, 그리고 생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적이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속할 재산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상속할 재산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 사적이전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동일하다. 반면에 거주지역, 중졸이하 학력, 건강상태, 상속관련, 그리고 주거형태 요인들은 소득계층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하위계층에 있어서 상속할 재산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이미 모두 상속한 경우의 사적이전 수준이 낮은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 때 교환적 동기에 의한 사적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위의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모형의 결과를 〈표 3-12〉을 통해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도 DiDt 변수에 대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12〉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사적이전 분위별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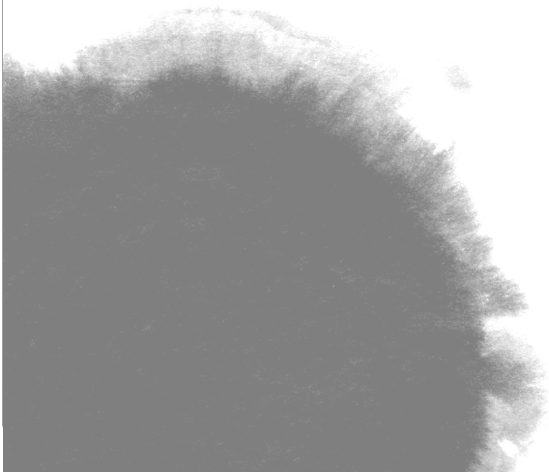
모형	사적이전소득 기준 분위회귀					OLS
	QR_10	QR_30	QR_50	QR_70	QR_90	
수급집단	-0.329***	-0.192	-0.062	0	-0.082	-0.091
제도시행	0.034	0.072	0.096	0.112	0.08	0.078
DiDt	0.018	0.037	0.049	0.023	0.063	0.046
노인총소득 (사적이전 제외)	-0.043**	-0.051*	-0.089***	-0.109***	-0.087***	-0.077***
7대광역시	-0.033	0.021	0.241**	0.278***	0.114	0.126**
연령	0.001**	0.001*	0.001	0	0	0.001
중졸미만	-0.116	-0.358**	-0.318**	-0.250**	-0.394***	-0.321***
고졸이상	-0.078	-0.089	-0.011	0.081	0.06	-0.035
남성	-0.380***	-0.385***	-0.438***	-0.213***	-0.327***	-0.359***
건강상태(좋은)	-0.054	-0.244*	-0.226*	-0.067	0.023	-0.153*
건강상태(나쁨)	-0.151*	-0.148	-0.11	-0.021	0.003	-0.085
전부 상속	-0.111	0.002	-0.446*	-0.14	-0.144	-0.165
상속 하지 않음	-0.333***	-0.352***	-0.361***	-0.222***	-0.127	-0.282***
자가·전세이외 의 주거형태	0.324***	0.265**	0.468***	0.493***	0.279***	0.341***
생존자녀수	0.072***	0.126***	0.124***	0.073***	0.019	0.088***
상수항	2.711***	3.187***	4.312***	5.291***	6.190***	4.545***
obs	2193					

노인의 총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이 낮다는 것은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데, 분위별 추정계수값을 비교해보면 50분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그 탄력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의 총소득 1단위가 증가할 때 축소되는 사적이전은 50분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별 차이는 생존자녀수의 경우 중하분위, 상속할 재산 혹은 의지가 없는 경우의 중하분위, 그리고 자가·전세 이외의 주거형태의 경우 중상분위에서 다른 분위에 비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정리하면,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사적이전의 구축효과 분석하였지만,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적이전의 행태와 요인이 소득계층 혹은 사적이전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적이전에 대한 공적이전의 구축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04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노인의 일상생활



IV.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노인의 일상생활

기초노령연금은 직접적으로 노인의 소득수준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은 직접적으로 노인의 자산운영이나 지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소득의 변화는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과 가치관이나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산운영과 지출, 사회참여활동, 가치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자산 운영 및 지출실태

가. 자산운영

노인 또는 노인의 배우자의 2008년 일년 동안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면, 정기적금·예금을 제외하고는 가입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비율이 매우 낮다(부표 2-4-1~2-4-6 참조). 즉,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1년 동안 노인 또는 노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이루어진 금융 및 부동산 거래의 규모가 매우 적어 기초노령연금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현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가입율이 높은 정기 적금·예금의 경우, 노인의 82.4%는 전혀 가입해 있지 않으며 2008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가 11.4%, 2008년도 1년 동안 해지나 신규가입을 한 경우가 약 6%로 나타나 신규가입이나 해지 등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로 비교해보면 수급노인의 90.9%가 전혀 정기적금·예

금을 들고 있지 않는데 비하여 비수급노인은 67.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급노인의 경우 2.0%가 신규가입을 한 반면, 비수급노인의 경우는 6.8%가 신규가입을 하였고, 해지한 비율은 수급노인이 2.0%, 비수급 노인이 3.4%이다.

읍면부 거주노인에 비하여 동부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유배우 노인이 정기적금·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 노인의 제특성별 정기적금·예금 거래 실태

(단위: %, 명, 천원)

	전체	기초노령 연금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수급	비수급	동부	읍·면 부	남자	여자	65~69 세	70~74 세	75세 이상	유배우	무배우
거래내용												
1년간 가입/해지 없음	82.4	90.9	67.3	80.0	87.9	76.7	85.8	79.3	80.3	87.2	75.5	91.7
가입(매입)했다	3.7	2.0	6.8	3.7	3.7	5.2	2.8	5.4	3.6	2.4	5.7	1.1
해지(매도)했다	2.5	2.0	3.4	3.2	0.7	3.1	2.1	2.1	3.4	2.0	3.3	1.3
2008년전 가입	11.4	5.2	22.4	13.1	7.7	15.0	9.3	13.3	12.7	8.4	15.4	6.0
계 ¹⁾	100.0 (1,300)	100.0 (777) ¹⁾	100.0 (362) ²⁾	100.0 (896)	100.0 (404)	100.0 (480)	100.0 (819)	100.0 (429)	100.0 (417)	100.0 (454)	100.0 (748)	100.0 (553)

주: 1) 비해당 42명 제외

2) 비해당 105명 제외

3) 문항 해당응답자 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나. 지출실태

노인의 지출실태는 가구수준에서의 지출을 보여주는 생활비와 개인적인 지출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용돈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노인가구는 월평균 123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수급노인의 생활비가 106만6천원으로 비수급노인의 151만5천원에 비하여 약 50만원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유사하게 생활수준도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인이 특성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생활비가 100만원 미만인 것에 비하여 동부는 134만1천원으로 지역간 생활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여자노인에 비하여 남자노인,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유배우 노인의 평균생활비가 약간 높은 수준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인의 월평균 용돈은 9만1천원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월평균 용돈은 6만7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급여액인 8만4천원의 80% 수준이다. 제특성별 용돈의 규모는 생활비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부노인이 읍·면부 거주노인에 비하여 용돈의 규모가 크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용돈액수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용돈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남자노인의 월평균 용돈이 12만6천원임에 비하여 여자노인은 7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혼상태별 차이도 커, 유배우 노인의 월평균 용돈이 10만7천원임에 비하여 무배우 노인은 7만2천원이다.

〈표 4-2〉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명, 천원)

	1만원~50만원	50만원~100만원	1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계(명)	월평균 생활비 (천원)
전체	21.2	34.1	43.5	1.2	100.0(1,300)	1,230.5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5.8	29.5	63.7	1.1	100.0(468)	1,514.5
수급	30.4	36.6	31.7	1.3	100.0(820)	1,066.3
지역						
동부	18.6	30.8	49.3	1.2	100.0(896)	1,340.6
읍·면부	27.7	31.3	39.8	1.2	100.0(404)	986.6
성						
남자	10.2	39.0	49.8	1.0	100.0(480)	1,314.3
여자	27.7	31.3	39.8	1.2	100.0(819)	1,181.5
연령						
65~69세	15.6	29.4	54.3	0.7	100.0(429)	1,334.2
70~74세	19.5	38.9	39.9	1.7	100.0(416)	1,262.3
75세 이상	28.1	34.3	36.3	1.3	100.0(455)	1,103.5
결혼상태						
유배우	8.0	41.7	49.1	1.2	100.0(748)	1,311.8
무배우	39.1	23.9	35.8	1.3	100.0(553)	1,120.8

〈표 4-3〉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 월평균 용돈

(단위: %, 명, 천원)

	0	1천원~ 1만원	1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계(명)	월평균 용돈 (천원)
전체	6.7	1.2	28.0	25.7	36.3	1.7	0.3	100.0(1,300)	91.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0	0.0	15.2	27.0	49.7	4.3	0.9	100.0(467)	136.7
수급	8.2	1.8	35.4	25.2	29.1	0.2	0.0	100.0(820)	66.5
지역									
동부	6.0	0.9	26.4	26.5	38.4	1.3	0.4	100.0(897)	94.0
읍·면부	8.4	2.0	31.7	23.8	31.7	2.5	0.0	100.0(404)	85.7
성									
남자	4.4	0.6	20.0	24.0	46.9	3.3	0.8	100.0(480)	126.0
여자	8.2	1.6	32.7	26.7	30.2	0.6	0.0	100.0(820)	71.1
연령									
65~69세	4.0	0.9	22.8	26.1	43.1	2.3	0.7	100.0(429)	106.6
70~74세	6.0	1.2	28.4	27.2	35.3	1.4	0.5	100.0(416)	92.3
75세 이상	10.1	1.5	32.7	23.9	30.7	1.1	0.0	100.0(456)	76.3
결혼상태									
유배우	5.4	0.8	23.4	25.8	41.8	2.4	0.4	100.0(747)	106.0
무배우	8.5	1.8	34.3	25.5	29.1	0.7	0.2	100.0(553)	71.8

다. 여유돈 지출희망 항목

노인에게 여유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은 항목을 2개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언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노인은 여유돈이 생긴다면 지출하고 싶은 항목으로 보건의료비를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어 그 비율이 24.5%이다. 부채 상환이라는 응답이 9.4%, 식비 9.2%, 주거 관련비 7.4%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것과 관련된 항목을 언급하고 있어 노인의 생활이 여유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양오락비로 11.4%, 저축 7.9%의 순으로 응답한 노인도 있어 노인 내에 생활 수준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노령수급자의 경우 보건의료비라는 응답이 27.3%로 비수급 노인의 19.4%에 비하여 약 8%포인트 높아 경제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비에 대한 압박이 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경우 식비라는 응답도 11.2%로 비수급 노인의 5.7%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교양오락비라는 응답은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의 경우 17.7%로 수급 노인의 7.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은 노년기의 필수적인 지출항목인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부담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비수급 노인은 교양오락비라고 하는 상위욕구 충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제특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외식과 교양오락비라는 응답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높아 남자노인의 외부활동지향성을 볼 수 있다.

〈표 4-4〉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기초노령연금		지역		성	
		수급	비수급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9.2	11.2	5.7	9.4	8.8	6.8	10.6
외식비	6.0	6.3	5.6	5.9	6.5	8.3	4.7
교육비	2.0	2.2	1.8	2.0	2.0	1.9	2.1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7.4	7.5	7.4	6.5	9.6	6.8	7.8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4.5	27.3	19.4	23.5	26.7	21.0	26.5
가구집기가사용품	0.6	0.6	0.4	0.7	0.3	0.4	0.6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4.5	4.5	4.3	5.0	3.3	0.6	6.7
교양오락비	11.4	7.8	17.7	12.0	9.8	17.6	7.7
교통비	0.6	0.8	0.2	0.6	0.8	1.1	0.4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0.2	0.3	0.0	0.1	0.5	0.2	0.2
경조사비	0.9	1.2	0.6	0.9	1.0	1.3	0.7
사회공헌	6.1	4.5	8.8	7.3	3.3	5.5	6.4
저축	7.9	6.8	9.8	7.4	9.1	9.6	6.9
부채상환	9.4	9.5	9.3	10.0	8.1	10.0	9.0
기타	9.3	9.6	8.8	8.8	10.3	8.9	9.6
계 ¹⁾	100.0 (1,281)	100.0 (818)	100.0 (463)	100.0 (882)	100.0 (397)	100.0 (471)	100.0 (809)

주: 1) 본인응답자 1300명 가운데 무응답 5명, 비해당 14명 제외.

〈표 4-5〉 노인의 결혼상태·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연령			결혼상태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유배우	무배우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9.2	8.0	7.5	12.0	7.1	12.1
외식비	6.0	4.7	5.1	8.1	7.1	4.6
교육비	2.0	1.2	2.7	2.3	1.6	2.6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7.4	7.1	7.7	7.4	7.2	7.7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4.5	22.4	26.6	24.6	22.8	26.7
가구집기가사용품	0.6	0.5	1.0	0.2	0.5	0.6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4.5	6.1	4.8	2.5	3.3	6.1
교양오락비	11.4	12.5	9.7	12.0	15.2	6.3
교통비	0.6	0.5	0.0	1.4	0.9	0.2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0.2	0.2	0.0	0.5	0.0	0.4
경조사비	0.9	0.9	1.7	0.2	0.9	0.9
사회공헌	6.1	8.7	4.3	5.2	6.2	5.9
저축	7.9	8.9	8.0	6.8	9.2	6.1
부채상환	9.4	12.0	11.8	4.5	9.5	9.4
기타	9.3	6.4	9.2	12.4	8.4	10.7
계 ¹⁾	100.0 (1281)	100.0 (425)	100.0 (414)	100.0 (443)	100.0 (737)	100.0 (544)

주: 1) 무응답 5명, 비해당 14명 제외

라. 재산상속 실태

기대되는 소득의 증대는 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자신을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조사된 재산상속 실태를 살펴본 〈표 4-6〉에 의하면 노인의 42.4%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35.9%가 아직 물려주지 않았다, 나를 위해 이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지 자녀에게는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8.1%의 순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응답이 53.0%로 비수급 노인의 23.2%에 비하여 매우 높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상속할 재산이 없는 노인이 절반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수급 노인의 경우 54.2%가 아직 물려주지 않고 있지만 수급노인의 경우는 26.0%만이 아직 물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응답이

읍·면부 거주노인에 비하여 높으나 이미 물려주었다는 응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응답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직 물려주지 않은 비율이 높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비율이 낮다. 결혼 상태별로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 이미 물려주었다는 응답이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높고, 아직 안 물려주었다는 응답은 낮다.

〈표 4-6〉 노인의 제특성별 재산상속 실태

(단위: % 명)

	물려줌 ¹⁾	아직 안 물려줌	물려줄 생각 없음 ²⁾	물려줄 재산 없음	물려줄 사람이 없음	계
전체	11.9	35.9	8.1	42.4	1.7	100.0(1,300)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0.5	54.2	10.7	23.2	1.5	100.0(467)
수급	12.4	26.0	6.8	53.0	1.9	100.0(820)
지역						
동부	8.1	32.2	9.9	47.6	2.3	100.0(896)
읍·면부	20.4	44.3	4.1	30.7	0.5	100.0(404)
성						
남자	8.4	49.8	12.1	29.2	0.6	100.0(480)
여자	14.0	27.8	5.8	50.1	2.4	100.0(820)
연령						
65~69세	9.3	42.6	9.2	36.7	2.1	100.0(426)
70~74세	10.7	38.7	9.8	39.7	1.1	100.0(415)
75세 이상	15.0	27.8	5.7	49.6	2.0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9.4	45.3	10.3	34.1	0.9	100.0(751)
무배우	15.3	23.2	5.1	53.6	2.8	100.0(549)

주: 1) 전부 또는 일부 물려준 경우임. 5.7%가 전부를 6.3%가 일부를 물려주었음.

2) 나를 위해 이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의 경우로 그 비율은 각각 7.4%와 0.7%임.

〈표 4-7〉 노인의 제특성별 상속예정 시점

(단위: % 명)

	사망 직전에	본인·배우자 사망 후에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생각해본 적 없음	기타 ¹⁾	계 ²⁾
전체	32.7	41.4	5.9	12.1	7.9	100.0(47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4.2	36.9	5.0	14.1	10.0	100.0(260)
수급	31.0	46.8	7.0	9.8	5.3	100.0(214)
지역						
동부	32.0	40.0	7.3	12.7	8.1	100.0(292)
읍·면부	33.9	43.6	3.7	11.3	7.6	100.0(182)
성						
남자	35.3	44.7	3.9	10.3	5.8	100.0(240)
여자	30.1	38.0	8.0	14.1	10.0	100.0(234)
연령						
65~69세	33.6	34.2	7.9	14.1	10.1	100.0(185)
70~74세	31.2	48.5	5.4	11.3	3.7	100.0(163)
75세 이상	33.5	42.6	3.6	10.4	9.9	100.0(126)
결혼상태						
유배우	32.0	45.2	4.8	12.5	5.6	100.0(344)
무배우	34.7	31.3	8.8	11.2	14.0	100.0(130)

주: 1) 곧, 자녀결혼후, 건강이 나빠졌을 때, 기타 등을 포함함.

2) 물려줄 생각이 있지만 아직 물려주지 않은 본인응답자 474명을 대상으로 함.

갖고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지만 아직은 물려주지 않은 노인의 경우 41.4%가 상속 예정 시점으로 본인·배우자 사망 후를 생각하고 있고 32.7%가 사망 직전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도 12.1%에 달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경우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고 본인·배우자 사망 후라는 응답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 주관적인 생활수준 및 미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대

약 5%만이 가구의 생활수준은 좋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4.6%, 약간 나쁘다가 34.1%, 매우 나쁘다가 26.3%이다. 기초노령연금수급노인의 경우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36.1%, 약간 나쁘다가 35.5%로 약 70%의 노인이 자신의 가구 생활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비수급 노인 중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 약간 나쁘다는 응답이 31.6%로 약 40%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노인의 비중이 낮다는 현상이 발견된다.

〈표 4-8〉 노인의 제특성별 주관적 가구 생활 수준

(단위: %, 명)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명)
전체 ¹⁾	0.3	4.6	34.6	34.1	26.3	100.0(1,286)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0.9	10.0	48.5	31.6	9.0	100.0(468)
수급	0.0	1.6	26.7	35.5	36.1	100.0(819)
지역						
동부	0.5	4.5	33.3	35.8	25.9	100.0(888)
읍·면부	0.0	5.0	37.5	30.3	27.3	100.0(400)
성						
남자	0.4	5.5	36.3	34.9	22.9	100.0(476)
여자	0.1	4.2	33.7	33.7	28.3	100.0(810)
연령						
65~69세	0.2	6.1	37.6	32.6	23.5	100.0(426)
70~74세	0.5	4.1	31.7	35.6	28.4	100.0(416)
75세 이상	0.2	3.8	34.6	34.4	27.0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0.5	5.3	36.9	37.3	19.9	100.0(742)
무배우	0.0	3.8	31.5	29.9	34.8	100.0(546)

주: 1) 비해당 14명 제외

한편 미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9.7%에 불과하며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4.4%,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5.8%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경우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9.5%로 비수급 노인의 10.1%에 비하여 약간 낮으나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객관적인 생활수준을 감안해볼 때 수급노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읍면부 노인에 비하여 동부 노인에게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의 경제수준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표 4-9〉 노인의 제특성별 미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대정도

(단위: %, 명)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계(명)
전체 ¹⁾	9.7	44.4	45.8	100.0(1,286)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0.1	46.3	43.7	100.0(467)
수급	9.5	43.4	47.1	100.0(820)
지역				
동부	11.5	44.6	43.9	100.0(886)
읍·면부	5.8	44.0	50.3	100.0(400)
성				
남자	9.4	40.3	50.3	100.0(477)
여자	10.0	46.9	43.1	100.0(810)
연령				
65~69세	12.9	40.6	46.5	100.0(426)
70~74세	10.4	41.7	48.0	100.0(415)
75세 이상	6.3	50.7	43.0	100.0(446)
결혼상태				
유배우	9.2	42.6	48.2	100.0(741)
무배우	10.5	47.0	42.6	100.0(545)

주: 1) 비배당 14명 제외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실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은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 단체, 취미·여가활동 단체, 정치·사회운동 단체, 사교단체, 종교단체의 참여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참여기간은 193.6개월로 16년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빈도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매일 참여가 14.6%로 매우 높으며, 주1회 19.8%, 2주 1회 6.2%, 월1회 36.2%로 월1회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취미·여가활동 단체의 참여는 3.3%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100.4개월 참여했으며 참여빈도에서도 주1회이상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7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치·사회운동단체는 1.0%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교단체 38.0%, 종교

단체 2.6%로 나타났다. 사교단체와 종교단체의 참여빈도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취미·여가활동단체와 유사하게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사회운동단체의 경우 참여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참여기간은 취미·여가활동단체가 가장 짧아 약 8년 이며, 종교단체의 경우 평균 참여기간이 17년으로 매우 길다.

〈표 4-10〉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단체별 참여빈도 및 평균 참여기간¹⁾

(단위: %, 개월)

구분	참여여부		참여빈도 및 평균 참여기간 ¹⁾							평균참여 기간(개월)
	비참여	참여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명)	
자원봉사활동단체	98.2	1.8	14.6	-	19.8	6.2	36.2	23.3	100.0 (24)	193.6
취미·여가활동단체	96.7	3.3	18.1	23.1	32.6	4.9	16.7	4.6	100.0 (43)	100.4
정치·사회운동단체	99.0	1.0	9.4	-	9.0	8.1	21.7	51.8	100.0 (13)	104.3
사교단체	62.0	38.0	22.2	15.4	2.7	1.4	37.6	20.8	100.0 (494)	196.3
종교단체	97.4	2.6	1.5	45.5	20.0	4.8	28.2	-	100.0 (34)	203.4
기타	99.0	1.0	16.6	25.1	-	-	24.4	34.0	100.0 (13)	225.6

주: 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56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노인의 특성별 사회참여단체 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경우 노인의 1.8%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보다는 동부가 약간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배우가 무배우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은 떨어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참여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여가활동단체 참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이 수급 노인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참여율이 약 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취미·여가활동 참여율은 감소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

강상태별로는 건강이 좋은 노인이 참여율이 크게 높다.

정치·사회운동단체 참여율은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이 수급 노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약간 높고, 남성노인,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사교단체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차이가 커, 수급노인은 32.6%로 비수급 노인의 48.4%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 읍면부가 동부지역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단체 참여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유사한 사교단체 참여율을 보이지만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참여율이 다소 떨어짐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참여율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참여율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단체별 참여를 통하여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수급 노인의 참여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단체 활동은 경제적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4-11〉 노인의 제특성별 사회참여단체 참여율

(단위: %)

특성	자원봉사 활동단체 참여율	취미·여가 활동단체 참여율	정치·사회 운동단체 참여율	사교단체 참여율	종교단체 참여율
전체	1.8	3.3	1.0	38.0	2.6
기초노령연금 ¹⁾					
비수급	3.9	5.6	2.4	48.4	2.6
수급	0.7	2.1	0.2	32.6	2.8
지역					
동부	2.1	3.4	0.7	31.4	3.0
읍·면부	1.2	3.2	1.5	52.7	2.0
성					
남자	2.3	5.2	2.7	43.1	1.7
여자	1.6	2.2	-	35.1	3.2
연령					
65~69세	2.8	4.0	0.7	38.5	2.6
70~74세	1.9	3.6	1.0	39.3	2.4
75세 이상	0.9	2.4	1.3	36.3	3.1

주: 1)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3. 노인의 노후부양에 대한 가치관

가. 노년기 노동 의무에 대한 가치관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해 노인의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90.7%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4.5%의 노인만이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노년기 노동을 매우 가치있는 일이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 즉,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는 노인의 92.8%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도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급 노인의 경우 비수급 노인에 비해 약간 낮은 89.7%가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노년기 노동에 대한 가치는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노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노년기 노동에 대해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 노인의 69.5%는 노후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동의하고 있으며, 25.0%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53.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5.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노인의 경우 강한 남성가장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음으로 노동 가치관에서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노동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결혼상태에서는 유배우의 노인이 무배우의 노인에 비해 노년기 노동에 대해 강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5~69세 노인은 93.2%가 동의하며, 70~74세는 92.3%, 75세 이상 노인은 8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를 기점으로 노년기에 노동 의무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줄어든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무학노인이 초등학교 이상 학력에 비해 낮은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에서 가장 높은 노년기 노동 수행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4-4-21 참조).

〈표 4-12〉 노인의 제특성별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전체	59.0	31.7	4.8	3.5	1.0	100.0(1,28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64.7	28.1	4.1	2.1	1.1	100.0(467)
수급	55.9	33.8	5.2	4.3	0.9	100.0(820)
지역						
동부	58.5	32.1	5.0	3.3	1.1	100.0(887)
읍·면부	60.3	30.8	4.5	4.0	0.5	100.0(400)
성						
남자	69.5	25.0	3.4	1.3	0.8	100.0(476)
여자	53.0	35.6	5.7	4.7	1.0	100.0(809)
연령						
65~69세	65.3	27.9	3.5	2.1	1.2	100.0(426)
70~74세	57.0	35.3	5.0	2.6	0.0	100.0(416)
75세 이상	55.2	31.8	5.8	5.4	1.8	100.0(446)
결혼상태						
유배우	64.8	29.1	3.9	1.3	0.8	100.0(742)
무배우	51.1	35.2	6.0	6.4	1.3	100.0(546)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신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 가구 노인이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노인 부부가구 노인의 경우 95.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매우 좋은 경우 96.0%가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95.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약간 좋거나, 보통, 약간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은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동의 수준은 88.6%~90.2%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동의는 취업중인 노인의 경우 71.0%가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24.8%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비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도 55.0%가 강한 동의, 34.1%가 약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4-4-21 참조).

나.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노후생활보장에 있어 국가의 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은 응답노인의 28.6%가 국가가 노인의 생활보장 지원책임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48.3%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76.9%의 노인은 국가는 노인의 생활보장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특성별 국가의 노후생활보장 책임에 대한 동의수준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그 외의 지역, 성, 결혼상태 및 연령, 가구형태, 경제활동여부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가구월평균 소득 집단별 가치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 국가의 노후생활보장 책임에 대한 동의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무학 노인의 경우 국가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의무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인 반면, 대학 이상의 경우 44.4%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건강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

우 강한 동의의 의견을 표현한 노인이 38.0%이며, 그 이외의 건강상태의 노인은 이보다 낮은 비율의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표 4-13과 부표 4-4-22 참조).

〈표 4-13〉 노인의 제특성별 국가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전체	28.6	48.3	15.9	6.6	0.5	100.0(1,289)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29.8	45.7	15.7	7.7	1.1	100.0(466)
수급	28.0	49.8	16.1	6.0	0.1	100.0(821)
지역						
동부	29.5	47.3	15.8	7.0	0.5	100.0(886)
읍·면부	27.0	50.8	16.3	5.5	0.5	100.0(400)
성						
남자	31.4	45.5	15.1	7.5	0.4	100.0(477)
여자	27.1	50.1	16.4	5.9	0.5	100.0(809)
연령						
65~69세	27.5	47.7	17.6	6.6	0.7	100.0(426)
70~74세	28.7	51.6	11.6	7.5	0.7	100.0(415)
75세 이상	29.9	46.1	18.2	5.6	0.2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31.0	46.3	15.1	7.2	0.4	100.0(741)
무배우	25.5	51.2	16.9	5.9	0.6	100.0(545)

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4.9%이며,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노후 지원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동의한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으로 노후 부양에 있어 자녀의 책임보다는 국가에 의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에게서 자녀의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성,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 등에 따라 자녀의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이 자녀의 부모부양책임에 대해 더욱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무배우 상태의 노인의 경우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갖고 있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신가구의 노인들은 자녀의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가구의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에 비해 그렇지 않은 노인은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와 부표 4-4-23 참조).

〈표 4-14〉 노인의 제특성별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전체	24.9	43.4	18.2	12.0	1.5	100.0(1,287)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25.1	37.8	18.2	16.5	2.4	100.0(466)
수급	24.8	46.7	18.2	9.4	1.0	100.0(820)
지역						
동부	25.9	43.5	18.3	11.0	1.2	100.0(887)
읍·면부	22.4	43.1	18.2	14.2	2.0	100.0(401)
성						
남자	24.9	39.0	19.1	15.1	1.9	100.0(477)
여자	24.9	46.0	17.8	10.1	1.1	100.0(810)
연령						
65~69세	23.0	42.3	17.4	15.0	2.3	100.0(426)
70~74세	23.9	45.1	17.1	13.3	0.7	100.0(415)
75세 이상	27.9	43.1	20.0	7.9	1.1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24.7	40.6	18.1	14.4	2.3	100.0(742)
무배우	25.3	47.3	18.3	8.6	0.4	100.0(545)

라.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에 대한 가치관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우선적 책임주체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조사대상 노인의 54.6%는 본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로 응답한 노인은 17.3%, 국가로 응답한 노인은 27.6%로 본인 또는 자녀, 가족이라는 사적 책임의 가치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생활비 마련에 있어 최우선적 책임주체에 있어 자녀보다는 국가에 의한 노후 보장의 책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자녀에 의한 부모 지원의 책임과 국가에 의한 노인 지원 책임에 대한 동의수준 결과와 비교하여 본다면 국가의 노인지원책임에 대해 76.9%가 동의하며, 자녀의 부모 지원책임에 대해서 68.3%가 동의하고 있어 자녀보다는 국가에 의한 노후 생활보장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은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자녀나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적 및 공적 이전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마련이라는 응답률은 비수급 노인이 65.5%로 수급노인의 48.4%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노인의 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은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활동,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 본인책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남성 노인의 63.9%가 본인책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노인의 경우는 49.1%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자녀책임과 국가책임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무배우 노인에 비해 본인책임을 강조하였으며, 무배우 노인은 자녀책임과 국가책임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노후생활비 마련의 책임주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국가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이와같은 경향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일수록 자녀와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형태에 따른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노인부부가구 노

인은 노인독신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에 비해 본인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특히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자녀책임과 국가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15와 부표 4-4-24 참조).

〈표 4-15〉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스스로 마련	자녀 마련	국가 차원보장	기타	계
전체	54.6	17.3	27.6	0.5	100.0(1,28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65.5	10.1	23.3	1.1	100.0(467)
수급	48.4	21.5	30.0	0.1	100.0(820)
지역					
동부	55.6	16.7	27.4	0.3	100.0(887)
읍·면부	52.5	19.0	28.0	0.5	100.0(400)
성					
남자	63.9	11.5	24.3	0.2	100.0(477)
여자	49.1	20.7	29.5	0.6	100.0(810)
연령					
65~69세	66.9	12.4	20.7	0.0	100.0(426)
70~74세	50.7	19.0	30.0	0.2	100.0(416)
75세 이상	46.4	20.4	32.1	1.1	100.0(446)
결혼상태					
유배우	61.3	14.0	24.5	0.1	100.0(742)
무배우	45.5	21.8	31.7	0.9	100.0(545)

마.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은 자녀에 의한 책임보다 더 강한 요인으로 노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노인의 76.9%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에 의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로 인식되고 기대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이 국가의 노후부양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19.1%는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53.3%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의 노후부양 지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별로 비교해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

은 노인에 비해 국가지원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노인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인것에 비해 남성 노인은 11.6%로 낮았으며, 유배우자에 비해 무배우자가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국가지원의 충분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국가의 지원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노인, 무배우,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정도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신가구가 타 가구형태에 비해 국가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국가지원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6〉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단위: % 명)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전체	3.0	16.1	27.5	40.8	12.5	100.0(1,28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9	12.0	29.5	39.4	17.2	100.0(465)
수급	3.5	18.4	26.4	41.9	9.8	100.0(819)
지역						
동부	2.6	16.3	26.7	41.7	12.8	100.0(885)
읍·면부	3.8	15.8	29.5	39.3	11.8	100.0(400)
성						
남자	1.7	9.9	26.7	43.8	17.9	100.0(475)
여자	3.7	19.8	28.0	39.3	9.3	100.0(810)
연령						
65~69세	2.1	14.3	27.0	42.0	14.6	100.0(426)
70~74세	3.1	15.0	29.2	39.6	13.0	100.0(414)
75세 이상	3.8	18.7	26.5	41.3	9.7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2.0	12.4	26.2	43.1	16.3	100.0(743)
무배우	4.2	21.4	29.1	38.1	7.2	100.0(543)

4. 노인의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Tobin에 의해 개발되어진 LSI(Life

Satisfaction Index)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12개 항목별 5점 척도로 12점~60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이다. 조사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평균 32.25²⁷⁾수준으로 5점 척도를 고려해볼 때 보통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값이 0.834로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냈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12개 항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표 4-17〉과 같다.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이외의 긍정적 항목들은 중간점수인 3.0을 넘지 못하고, 2.67, 2.70, 2.59, 2.50, 2.25, 2.67점으로 낮았으며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7번 항목과 9번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과거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항목 6개에서는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8번 항목인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는 평균 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번 항목인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가 3.16점으로 노인들이 느끼는 역할의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17〉 생활만족도 평균점수(5점만점)

	평균
1.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3.01
2.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2.67
3.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3.07
4. 요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 들이다.	2.70
5.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3.16
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2.59
7.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2.50
8.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	3.84
9. 남은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2.25
10.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2.67
11.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을 느낀다.(*)	3.11
12. 조그만 일이 생겨도 쉽게 화가 난다.(*)	2.92

주: *는 부정적 항목임.

27) 부정적 항목(1,3,5,8,11,12)의 점수는 역으로 계산하였음.

이러한 만족도의 수준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비교해보면, 비수급노인이 수급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성별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성,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경제활동과 기초노령수급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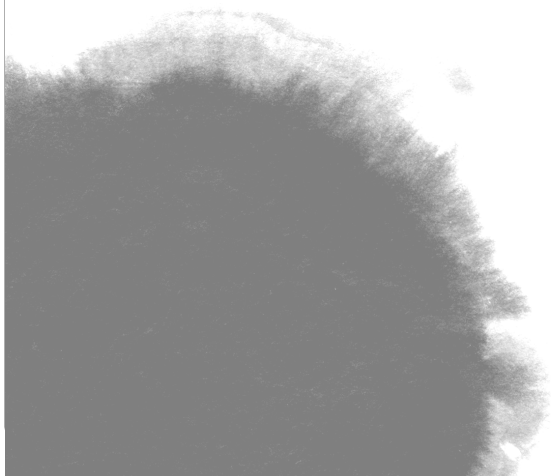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유배우상태의 노인이 무배우의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4세의 중기노인이 65~69세의 초기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 독신가구가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 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과 부표 4-4-26 참조).

〈표 4-18〉 노인의 제특성별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전체 (평균점수/명)	32.25(1,286)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5.39
수급	30.47
지역	
동부	32.35
읍·면부	32.04
성	
남자	33.40
여자	31.58
연령	
65~69세	33.52
70~74세	31.82
75세 이상	32.45
결혼상태	
유배우	33.21
무배우	30.95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및
제도에 대한 의견



V.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및 제도에 대한 의견

노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새로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노인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장에서는 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태도 및 필요성, 기초노령연금 제도 설계 기준에 대한 의견,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급시의 느낌이나 생활상의 변화, 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가.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수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인지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1〉과 같다. 먼저, 노령연금제도 인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9.5%가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명칭은 알고 있으나 제도의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3.6%로 대다수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칭은 모르지만 제도의 내용은 알고 있는 노인도 17.0%이며, 기초노령연금의 명칭과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노인은 9.9%이다. 즉 노인의 약 90%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 중 과반수 이상이 명칭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다. 이들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꾸준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 42.2%가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36.9%가 명칭은 알고 있지만 제도의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지역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지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인 경우 46.8%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무배우인 경우 35.0%가 명칭은 알고 있지만 제도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유배우인 경우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37.1%가 명칭은 알지만 제도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초등학교 42.7%, 중학교 53.4%, 고등학교 50.7%, 대학 이상 50.9%가 가장 많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력별 차이가 있다.

가구형태별 인지수준을 살펴보면 노인독신의 경우 37.3%가 명칭은 알지만 제도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과 달리 노인부부 43.6%, 자녀동거 39.0%, 기타 51.1%가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결혼상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수준과 함께 생각해보면 타인에 의한 정보제공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 중이거나 미취업인 경우 모두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각각 41.0%,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명칭은 알지만 제도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취업 중인 경우 38.3%, 미취업의 경우 31.9%로 나타났다.

〈표 5-1〉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수준

(단위: %, 명)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명칭은 모르지만 제도의 내용은 알고 있다.	명칭은 알지만 제도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계(명)
전체 ¹⁾	39.5	17.0	33.6	9.9	100(1,286)
지역					
동부	42.2	16.6	32.0	9.2	100.0(887)
읍·면부	33.7	18.0	36.9	11.5	100.0(401)
성					
남자	52.5	12.6	29.6	5.3	100.0(476)
여자	31.9	19.7	35.8	12.6	100.0(809)
결혼상태					
유배우	46.8	13.6	32.4	7.2	100.0(740)
무배우	29.9	21.6	35.0	13.6	100.0(546)
연령					
65~69세	43.2	17.8	33.6	5.4	100.0(426)
70~74세	42.8	15.0	32.6	9.7	100.0(414)
75세 이상	33.2	18.2	34.3	14.3	100.0(446)
교육수준					
무학	25.9	22.8	37.1	14.2	100.0(429)
초등학교	42.7	16.0	31.7	9.6	100.0(520)
중학교	53.4	12.3	31.5	2.7	100.0(146)
고등학교	50.7	10.3	32.4	6.6	100.0(136)
대학이상	50.9	10.9	32.7	5.5	100.0(55)
가구형태					
노인독신	29.2	19.0	37.3	14.4	100.0(284)
노인부부	43.6	15.1	33.1	8.2	100.0(498)
자녀동거	39.0	16.6	34.9	9.5	100.0(410)
기타 ²⁾	51.1	23.4	19.1	6.4	100.0(94)
경제활동					
취업중	41.0	12.0	38.3	8.7	100.0(332)
미취업	39.0	18.8	31.9	10.3	100.0(953)

주: 1) 본인응답자 1,28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응답자 전체의 63.7%가 2008년 12월 조사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수치이다. 현재 5.5%가 신청한 상태라고 응답했

으며 신청했으나 탈락하였다는 노인이 14.2%이다. 한편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노인
은 16.4%로 노인의 절대 다수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59.1%가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73.9%가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읍·면부
거주노인의 경제수준이 도시지역 노인에 비하여 낮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성별로 살
펴보면 남성 노인의 52.3%, 여성 노인의 70.4%가 현재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이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 노인의
78.4%가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74세 노인은 65.6%,
65~69세 노인 46.5%의 순으로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인 경우 50.9%, 무배우인 경우 81.90%가 받고 있
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
령연금을 더 많이 수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형태로 살펴보면 노인독신
인 경우 84.5%, 자녀동거인 경우 61.3%, 기타의 경우 61.1%, 노인 부부인 경우
54.2%의 순으로 수급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 살펴보면 매우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71.7%가 수급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나쁘다 68.7%, 약간 좋다
60.9%, 보통이다 57.3%, 매우 좋다 32.0%의 순으로 수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고, 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이 높
아 이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미취업의 경우 66.9%가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중인 노인의 54.5%가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월세로 거주자가 89.0%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상
88.6%, 전세 66.5%, 자가 5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 무상 거주자의 수급 비
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소유자의 경우 탈락율이 높거나 아예 신
청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노인(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가 노인자신의 기
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기늬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2〉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단위: %, 명)

	받고 있다.	현재 신청한 상태이다.	신청했으나 탈락하였다.	신청하지 않았다.	발던 중 취업 등의 사유로 탈락하였다.	계(명)
전체 ¹⁾	63.7	5.5	14.2	16.4	0.2	100(1,286)
지역						
동부	59.1	6.4	15.4	18.7	0.3	100.0(887)
읍·면부	73.9	3.5	11.3	11.3	0.0	100.0(399)
성						
남자	52.3	6.9	18.5	21.6	0.6	100.0(476)
여자	70.4	4.6	11.6	13.4	0.0	100.0(811)
결혼상태						
유배우	50.9	7.0	20.0	22.5	0.1	100.0(741)
무배우	81.9	3.3	6.2	8.2	0.4	100.0(546)
연령						
65~69세	46.5	9.4	18.3	25.6	0.2	100.0(426)
70~74세	65.6	4.8	15.9	13.2	0.5	100.0(416)
75세 이상	78.4	2.3	8.6	10.8	0.0	100.0(444)
교육수준						
무학	86.5	2.6	6.8	4.2	0.0	100.0(429)
초등학교	60.3	8.1	16.2	15.4	0.0	100.0(519)
중학교	50.0	6.2	21.9	21.9	0.0	100.0(146)
고등학교	37.5	4.4	19.9	36.0	2.2	100.0(136)
대학이상	18.9	3.8	17.0	60.4	0.0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신	84.5	1.1	4.9	9.5	0.0	100.0(284)
노인부부	54.2	5.4	19.4	20.8	0.2	100.0(496)
자녀동거	61.3	9.7	13.9	14.6	0.5	100.0(411)
기타 ¹⁾	61.1	0.0	15.8	23.2	0.0	100.0(9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32.0	6.0	20.0	42.0	0.0	100.0(50)
약간 좋다	60.9	1.5	15.8	21.8	0.0	100.0(202)
보통이다	57.3	7.9	16.1	17.7	0.9	100.0(316)
약간 나쁘다	68.7	4.8	13.4	13.0	0.0	100.0(499)
매우 나쁘다	71.7	6.8	10.0	11.4	0.0	100.0(219)
경제활동						
취업중	54.5	8.1	20.5	16.0	0.9	100.0(332)
미취업	66.9	4.6	11.9	16.5	0.0	100.0(955)
거주형태						
자가	53.1	6.1	18.2	22.6	0.0	100.0(808)
전세	66.5	5.7	13.3	12.7	1.9	100.0(158)
월세	89.0	4.5	3.9	2.6	0.0	100.0(155)
무상	88.6	3.0	5.4	3.0	0.0	100.0(167)

주: 1) 본인응답자 128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비신청 이유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의 비신청 이유는 84.0%가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제도에 잘 몰라서가 10.1%, 받고 싶지 않아서가 4.8%이며, 신청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신청절차 보다는 선정 기준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그 다음 응답으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남자와 여자의 주관적인 비신청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신의 경우 역시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다른 가구형태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독신의 경우 정보 제공 습득 및 전달에 대한 경로의 미비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주형태별로는 응답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세, 월세 거주자는 100% 받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응답하였다. 자가 거주자 역시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의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에 반하여 무상 거주자는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받고 싶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이 동일하였다.

〈표 5-3〉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비신청 이유

(단위: %, 명)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신청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받고 싶지 않아서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기타	계(명)
전체 ¹⁾	84.0	0.1	10.1	4.8	0.7	0.2	100.0(211)
지역							
동부	85.5	0.0	10.2	3.6	0.6	0.0	100.0(166)
읍·면부	80.0	0.0	11.1	8.9	0.0	0.0	100.0(45)
성							
남자	86.3	0.0	5.9	7.8	0.0	0.0	100.0(102)
여자	82.4	0.0	14.8	1.9	0.9	0.0	100.0(108)
결혼상태							
유배우	87.3	0.0	8.5	4.2	0.0	0.0	100.0(165)
무배우	75.6	0.0	15.6	6.7	2.2	0.0	100.0(45)
연령							
65~69세	87.0	0.0	8.3	4.6	0.0	0.0	100.0(108)
70~74세	87.3	0.0	9.1	3.6	0.0	0.0	100.0(55)
75세 이상	75.0	0.0	14.6	8.3	2.1	0.0	100.0(48)
교육수준							
무학	89.5	0.0	10.5	0.0	0.0	0.0	100.0(19)
초등학교	82.5	0.0	13.8	2.5	1.3	0.0	100.0(80)
중학교	87.1	0.0	3.2	9.7	0.0	0.0	100.0(31)
고등학교	81.6	0.0	16.3	2.0	0.0	0.0	100.0(49)
대학이상	90.6	0.0	0.0	9.4	0.0	0.0	100.0(32)
가구형태							
노인독신	70.4	0.0	22.2	3.7	3.7	0.0	100.0(27)
노인부부	86.4	0.0	10.7	2.9	0.0	0.0	100.0(103)
자녀동거	86.2	0.0	8.6	5.2	0.0	0.0	100.0(58)
기타 ²⁾	90.5	0.0	0.0	9.5	0.0	0.0	100.0(2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85.7	0.0	4.8	9.5	0.0	0.0	100.0(21)
약간 좋다	90.7	0.0	7.0	2.3	0.0	0.0	100.0(43)
보통이다	83.9	0.0	12.5	3.6	0.0	0.0	100.0(56)
약간 나쁘다	81.5	0.0	12.3	6.2	0.0	0.0	100.0(65)
매우 나쁘다	84.0	0.0	8.0	4.0	4.0	0.0	100.0(25)
경제활동							
취업중	86.5	0.0	9.6	3.8	0.0	0.0	100.0(52)
미취업	83.0	0.0	10.7	5.0	1.3	0.0	100.0(159)
거주형태							
자가	84.0	0.0	11.0	5.0	0.0	0.0	100.0(181)
전세	100.0	0.0	0.0	0.0	0.0	0.0	100.0(20)
월세	100.0	0.0	0.0	0.0	0.0	0.0	100.0(4)
무상	25.0	0.0	25.0	25.0	0.0	0.0	100.0(4)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문항 가운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11명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태도 및 필요성

가. 경로연금 폐지와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태도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로 경로연금 폐지와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표 5-4>와 같다.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88.2%의 높은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았던 노인의 경우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78.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경로연금을 받지 않았던, 즉 경로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생활수준이 높았던 노인은 대부분인 9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들은 교통비 외에는 정부로부터 소득과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므로 이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면 수급자의 50.5%가 잘한 편이다, 41.8%가 매우 잘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수급자는 52.0%가 잘한 편이다, 28.7%가 매우 잘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수급자에 비하여 매우 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소득인정액기준 그룹별로 보았을 때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수치적인 차이는 보였다. 0~20%에 속한 소득계층은 50.4%가 잘한 편이다, 37.9%가 매우 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40%에 속한 소득계층은 49.2%가 잘한 편이다, 42.8%가 매우 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40~60%에 속한 소득계층은 56.2%, 40.6%가 각각 잘한 편이다, 매우 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에서 52.5%가 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6.3%는 매우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에서는 잘한 편이라고 48.0%가 응답하였으며, 매우 잘한 편이다 38.9%, 보통이다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53.3%, 여자는 49.9%가 잘한 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매우 잘한 편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34.5%, 38.6%로 각각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기타 가구의 45.2%가 매우 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녀동거 가구의 55.2%와 노인부부 가구 52.2%, 노인독신 가구 46.8%는 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별, 거주형태별로도 유사한 응답이 나타났다.

〈표 5-4〉 노인의 제특성별 경로연금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매우 잘한 편이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된 편이다	매우 잘못된 편이다	계(명)
전체 ¹⁾	37.1	51.1	8.9	2.3	0.6	100.0(1286)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28.7	52.0	13.7	4.5	1.1	100.0(467)
수급	41.8	50.5	6.2	1.1	0.4	100.0(818)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37.9)	(50.4)	(8.9)	(2.0)	(0.8)	100.0(248)
20~40%미만	(42.8)	(49.2)	(7.2)	(0.8)	(0.0)	100.0(250)
40%이상	(40.6)	(56.2)	(2.8)	(0.0)	(0.4)	100.0(249)
경로연금 수급여부 ³⁾						
비수급	43.9	51.0	4.7	0.3	0.1	100.0(688)
수급	31.3	47.3	14.5	5.3	1.5	100.0(131)
지역						
동부	36.3	52.5	8.1	2.4	0.7	100.0(887)
읍·면부	38.9	48.0	10.6	2.3	0.3	100.0(398)
성						
남자	34.5	53.3	8.4	3.2	0.6	100.0(475)
여자	38.6	49.9	9.1	1.9	0.5	100.0(810)
결혼상태						
유배우	36.2	51.8	8.8	2.4	0.8	100.0(740)
무배우	38.3	50.0	9.1	2.2	0.4	100.0(548)
연령						
65~69세	29.9	56.9	9.9	2.8	0.5	100.0(425)
70~74세	41.1	48.8	7.9	1.9	0.2	100.0(416)
75세 이상	40.3	47.4	8.9	2.2	1.1	100.0(447)
교육수준						
무학	39.8	49.5	8.8	1.6	0.2	100.0(430)
초등학교	37.2	52.2	7.3	2.3	1.0	100.0(519)
중학교	39.6	47.2	10.4	2.8	0.0	100.0(144)
고등학교	32.1	51.8	12.4	2.9	0.7	100.0(137)
대학이상	22.2	63.0	11.1	3.7	0.0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37.7	46.8	12.0	3.2	0.4	100.0(284)
노인부부	36.1	52.2	8.4	2.6	0.6	100.0(498)
자녀동거	35.8	55.2	6.5	1.9	0.5	100.0(413)
기타 ⁴⁾	45.2	38.7	14.0	0.0	2.2	100.0(93)

	매우 잘한 편이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된 편이다	매우 잘못된 편이다	계(명)
경제활동						
취업중	35.5	51.2	10.3	2.1	0.9	100.0(330)
미취업	37.7	51.0	8.4	2.4	0.5	100.0(957)
거주형태						
자가	34.9	52.4	9.5	2.6	0.6	100.0(809)
전세	41.0	49.4	8.3	0.6	0.6	100.0(156)
월세	38.9	48.4	8.3	3.8	0.6	100.0(157)
무상	42.5	47.9	7.8	1.2	0.6	100.0(167)

주: 1) 대리응답 14명 제외

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 분석대상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나.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교통수당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노인의 48.9%가 받고 있었던 보편적인 제도인 교통수당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30.6%가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교통수당 폐지 의견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수급자인 경우 13.3%가 매우 잘한 편이다, 39.2%가 잘한 편이다로 52.5%가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23.9%가 보통, 19.2%가 잘못된 편이다, 4.4%가 매우 잘못된 편이다로 약 23.6%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비수급자는 42.4%가 찬성, 43.2%가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 수급자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급자는 교통수당 폐지 이후에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부분으로 수급을 하게 되지만 비수급자는 교통수당 폐지 이후 기타 보조가 없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부터 49.0%, 50.4%, 59.2%의 찬성율을 보여 수급자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교통수당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찬성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는 47.4%가 찬성, 31.3%가 반대한 반면, 읍·면부는

52.4%가 찬성, 29.4%가 반대하고 있어 읍·면부보다는 동부에서 교통수당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65~69세는 45.6%가 찬성, 32.4%가 반대, 70~74세는 47.8% 찬성, 29.3%반대, 75세 이상은 53.0%찬성, 30.3%반대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수당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노인(50.5%찬성)에 비해 비취업 노인(48.3%)이 교통수당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5-5〉 노인의 제특성별 교통수당 폐지 의견

(단위: %, 명)

	매우 잘한 편이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된 편이다	매우 잘못된 편이다	계(명)
전체 ¹⁾	13.1	35.8	20.5	22.3	8.3	100.0(1286)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12.8	29.6	14.3	27.8	15.4	100.0(467)
수급	13.3	39.2	23.9	19.2	4.4	100.0(821)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10.8)	(38.2)	(25.7)	(21.7)	(3.6)	100.0(249)
20~40%미만	(15.2)	(35.2)	(24.0)	(18.8)	(6.8)	100.0(250)
40%이상	(13.6)	(45.6)	(18.4)	(18.8)	(3.6)	100.0(250)
지역						
동부	12.0	35.3	21.4	22.9	8.4	100.0(886)
읍·면부	15.7	36.7	18.2	20.9	8.5	100.0(401)
성						
남자	10.3	34.9	18.1	26.9	9.9	100.0(476)
여자	14.7	36.4	21.9	19.6	7.4	100.0(810)
결혼상태						
유배우	11.9	35.2	18.9	23.6	10.4	100.0(741)
무배우	14.7	36.6	22.5	20.7	5.5	100.0(546)
연령						
65~69세	13.4	32.2	22.1	24.2	8.2	100.0(426)
70~74세	12.8	35.0	22.9	19.6	9.7	100.0(414)
75세 이상	13.0	40.0	16.6	23.1	7.2	100.0(445)
교육수준						
무학	11.9	41.3	24.0	17.2	5.6	100.0(429)
초등학교	14.8	34.2	18.7	23.5	8.8	100.0(520)
중학교	8.9	36.3	22.6	20.5	11.6	100.0(146)
고등학교	16.9	27.9	16.2	30.9	8.1	100.0(136)
대학이상	7.4	25.9	14.8	35.2	16.7	100.0(54)
노인부부	12.0	34.7	19.9	23.9	9.4	100.0(498)

	매우 잘한 편이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잘못된 편이다	매우 잘못된 편이다	계(명)
자녀동거	12.4	38.2	18.2	20.9	10.2	100.0(411)
가구형태						
노인독신	17.8	36.7	18.9	21.7	4.9	100.0(286)
기타 ³⁾	7.5	26.9	38.7	22.6	4.3	100.0(93)
경제활동						
취업중	12.4	38.1	19.6	21.1	8.8	100.0(331)
미취업	13.3	35.0	20.8	22.7	8.2	100.0(954)
거주형태						
자가	13.9	36.3	18.3	22.8	8.8	100.0(808)
전세	5.7	39.2	24.7	21.5	8.9	100.0(158)
월세	11.5	30.8	29.5	21.2	7.1	100.0(156)
무상	18.1	34.9	18.1	22.3	6.6	100.0(166)

주: 1) 대리응답 14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게 동일하게 물어본 결과 전체적인 의견을 보았을 때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97.3%였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나오지 않은 반면 비수급자들은 소수 응답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인정액별로는 20~40%미만과 40%이상에 속한 소득계층이 기초노령연금 필요성에 대하여 9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미만 소득계층이 98.4%의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통하여 조사에 응답한 노인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많음을 알 수 있으나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수급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필요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과반수가 넘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경우 5.6%가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을 눈여겨 볼 만하다.

경제활동별로는 취업중인 노인보다 미취업의 노인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6〉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필요성

(단위: %,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명)
전체 ¹⁾	65.5	31.8	1.5	1.1	0.2	100.0(1,286)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59.4	34.6	2.6	3.0	0.4	100.0(468)
수급	69.0	30.2	0.9	0.0	0.0	100.0(819)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66.3)	(32.1)	(1.6)	(0.0)	(0.0)	100.0(249)
20~40%미만	(70.0)	(29.6)	(0.4)	(0.0)	(0.0)	100.0(250)
40%이상	(70.0)	(29.6)	(0.4)	(0.0)	(0.0)	100.0(250)
지역						
동부	67.1	30.4	1.5	1.0	0.0	100.0(885)
읍·면부	62.1	34.9	1.5	1.0	0.5	100.0(401)
성						
남자	65.0	31.4	1.9	1.7	0.0	100.0(477)
여자	65.7	31.9	1.4	0.7	0.2	100.0(811)
결혼상태						
유배우	66.5	30.2	1.8	1.5	0.0	100.0(741)
무배우	64.1	33.9	1.1	0.5	0.4	100.0(546)
연령						
65~69세	60.0	36.5	1.4	1.6	0.5	100.0(427)
70~74세	67.2	29.4	2.2	1.2	0.0	100.0(415)
75세 이상	69.2	29.4	0.9	0.4	0.0	100.0(445)
교육수준						
무학	65.1	32.8	1.4	0.7	0.0	100.0(430)
초등학교	66.2	31.5	1.3	0.6	0.4	100.0(521)
중학교	58.9	36.3	2.7	2.1	0.0	100.0(146)
고등학교	69.9	26.5	1.5	2.2	0.0	100.0(136)
대학이상	68.5	25.9	0.0	5.6	0.0	100.0(54)
가구형태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명)
노인독신	64.2	32.3	1.8	1.1	0.7	100.0(285)
노인부부	67.4	29.2	1.8	1.6	0.0	100.0(497)
자녀동거	64.2	34.3	0.7	0.7	0.0	100.0(411)
기타 ³⁾	64.2	32.6	3.2	0.0	0.0	100.0(95)
경제활동						
취업중	59.5	37.5	1.8	0.6	0.6	100.0(331)
미취업	67.6	29.7	1.4	1.3	0.0	100.0(955)
거주형태						
자가	63.8	33.1	1.5	1.4	0.2	100.0(807)
전세	67.3	30.8	1.3	0.6	0.0	100.0(156)
월세	68.6	28.2	3.2	0.0	0.0	100.0(156)
무상	69.3	30.1	0.0	0.6	0.0	100.0(166)

주: 1) 대리응답 14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기초노령연금 제도설계 기준에 대한 의견

가. 기초노령연금 적정액에 대한 의견

기초노령연금의 1인당 적정액에 대한 의견은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수급자는 월 10~15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급자는 현재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직접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급자들은 현재 받는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수급자들은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응답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기준 20%미만과 20~40%미만의 소득계층은 월 10~15만원, 현재수준, 월 15~20만원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40%이상의 소득계층은 월 10~15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나 그 다음으로 월 15~20만원, 현재 수준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과 읍·면부 지역이 각각 37.6%, 33.8%로 월 10~15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월 10~15만

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23.3%가 월 15~20만원이 적당하다고 그 다음 응답률이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26.2%가 현재수준이라고 응답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무배우 모두 월 10~15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모두 월 10~15만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65~69세, 75세 이상은 그 다음으로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70~74세는 월 15~2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이상 노인은 월 10~15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 고졸노인은 월 15~20만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 응답률로는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는 현재수준, 월 15~2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졸 이상 노인의 경우 월 20~30만원, 월 30만원 이상, 월 15~20만원, 현재 수준으로 다른 교육수준과는 상이한 응답률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의 가구는 월 10~15만원 수준의 향상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거주형태별로는 거주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월 10~15만원을 희망하였으며 자가, 전세, 월세 거주자의 경우 그 다음으로 현재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무상 거주자의 경우 월 15~20만원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표 5-7〉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적정액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현재 수준	월 10~15만원	월 15~20만원	월 20~30만원	월 30만원 이상	계(명)
전체 ¹⁾	23.9	36.4	20.4	13.1	6.1	100.0(1282)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30.8	28.7	21.6	11.0	8.0	100.0(464)
수급	19.9	40.8	19.8	14.3	5.1	100.0(818)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25.8)	(40.3)	(16.1)	(14.5)	(3.2)	100.0(248)
20~40%미만	(18.8)	(40.8)	(18.0)	(17.6)	(4.8)	100.0(250)
40%이상	(15.7)	(37.3)	(25.7)	(13.3)	(8.0)	100.0(249)

	현재 수준	월 10~15만원	월 15~20만원	월 20~30만원	월 30만원 이상	계(명)
지역						
동부	24.3	37.6	20.2	11.6	6.3	100.0(882)
읍·면부	23.0	33.8	21.0	16.5	5.8	100.0(400)
성						
남자	19.9	31.0	23.3	16.6	9.2	100.0(477)
여자	26.2	39.6	18.8	11.1	4.3	100.0(805)
결혼상태						
유배우	22.7	35.7	21.0	13.1	7.4	100.0(739)
무배우	25.7	37.5	19.6	12.9	4.3	100.0(541)
연령						
65~69세	26.7	31.0	23.2	12.1	7.1	100.0(423)
70~74세	18.8	38.6	21.0	15.5	6.0	100.0(414)
75세 이상	26.0	39.7	17.2	12.0	5.2	100.0(443)
교육수준						
무학	25.8	37.7	19.5	12.3	4.7	100.0(430)
초등학교	25.9	37.8	18.9	12.0	5.4	100.0(518)
중학교	22.9	38.9	19.4	14.6	4.2	100.0(144)
고등학교	17.6	29.4	30.1	13.2	9.6	100.0(136)
대학이상	7.4	25.9	20.4	24.1	22.2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23.6	42.1	14.6	13.9	5.7	100.0(280)
노인부부	21.7	40.2	18.3	13.3	6.4	100.0(497)
자녀동거	24.1	29.8	25.4	13.9	6.8	100.0(410)
기타 ³⁾	34.7	29.5	27.4	6.3	2.1	100.0(95)
경제활동						
취업중	24.1	34.0	18.4	16.3	7.2	100.0(332)
미취업	23.8	37.3	21.1	12.0	5.8	100.0(951)
거주형태						
자가	24.0	35.8	21.4	11.3	7.5	100.0(804)
전세	28.7	38.2	15.9	14.6	2.5	100.0(157)
월세	22.7	38.3	17.5	15.6	5.8	100.0(154)
무상	19.9	36.1	22.9	18.1	3.0	100.0(166)

주: 1) 대리응답 14명, 무응답 4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규모에 대한 의견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2월 현재 약 60% 가량의 노인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급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항의 응답은 아래 <표 5-8> 과 같다. 응답자 노인의 45.6%는 대체로 그렇다, 18.4%가 그렇지 않다, 17.1% 매우 그렇다,

16.5% 보통이다, 2.4% 전혀 그렇지 않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서 의견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급자와 비수급자 49.7%, 38.2%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수급자의 경우 20.5% 매우 그렇다, 15.4% 보통이다, 13.4% 그렇지 않다는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 27.0% 그렇지 않다, 18.5% 보통이다, 11.2%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인정액기준별로는 20%미만 소득계층과 40%이상 소득계층은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20~40%미만 소득계층은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의 순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46.1%)와 읍·면부(44.5%)의 노인들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응답률에는 근소한 차이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대체로 그렇다(43.1%, 47.1%)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남자의 경우 20.4%가 그렇지 않다, 17.0% 보통이다, 16.0%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17.8%가 매우 그렇다, 17.2% 그렇지 않다, 16.2% 보통이다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두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 무학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동일하였으며 초졸의 경우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졸의 경우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졸, 대졸 이상의 경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의 순으로 나타남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독신 가구의 경우 보통이다 18.0%, 매우 그렇다 17.6%, 그렇지 않다 12.7%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부부 가구는 그렇지 않다 20.4%, 보통이다 18.3%, 매우 그렇다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다 20.2%, 매우 그렇다 17.8%, 보통이다 12.4%로 노인부부, 자녀동거 가구는 규모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8〉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17.1	45.6	16.5	18.4	2.4	100.0(1285)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11.2	38.2	18.5	27.0	5.2	100.0(466)
수급	20.5	49.7	15.4	13.4	1.0	100.0(819)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19.0)	(51.6)	(15.7)	(12.5)	(1.2)	100.0(248)
20~40%미만	(22.9)	(51.4)	(10.8)	(14.5)	(0.4)	100.0(249)
40%이상	(18.0)	(50.0)	(16.0)	(14.8)	(1.2)	100.0(250)
지역						
동부	16.8	46.1	16.4	18.4	2.3	100.0(885)
읍·면부	17.8	44.5	16.8	18.3	2.8	100.0(400)
성						
남자	16.0	43.1	17.0	20.4	3.6	100.0(476)
여자	17.8	47.1	16.2	17.2	1.7	100.0(809)
결혼상태						
유배우	15.3	44.0	17.6	20.0	3.1	100.0(739)
무배우	19.3	47.8	15.0	16.1	1.5	100.0(546)
연령						
65~69세	14.1	44.6	18.8	18.8	3.8	100.0(426)
70~74세	18.3	47.0	14.2	18.8	1.7	100.0(415)
75세 이상	18.9	45.3	16.4	17.6	1.8	100.0(444)
교육수준						
무학	16.3	49.9	16.3	16.3	1.2	100.0(429)
초등학교	19.2	44.8	15.6	17.9	2.5	100.0(520)
중학교	15.6	41.5	21.1	17.0	4.8	100.0(147)
고등학교	14.8	45.2	15.6	22.2	2.2	100.0(135)
대학이상	10.9	30.9	16.4	34.5	7.3	100.0(55)
가구형태						
노인독신	17.6	49.6	18.0	12.7	2.1	100.0(284)
노인부부	16.7	42.5	18.3	20.4	2.0	100.0(496)
자녀동거	17.8	46.3	12.4	20.2	3.2	100.0(410)
기타 ³⁾	13.8	45.7	20.2	17.0	3.2	100.0(94)
경제활동						
취업중	15.4	42.5	15.4	22.0	4.8	100.0(332)
미취업	17.7	46.7	16.9	17.1	1.6	100.0(953)
거주형태						
자가	16.1	44.7	16.4	19.8	3.0	100.0(807)
전세	16.6	44.6	21.0	16.6	1.3	100.0(157)
월세	19.7	49.7	15.3	12.1	3.2	100.0(157)
무상	20.0	46.7	14.5	18.8	0.0	100.0(165)

주: 1) 대리응답 14명, 무응답 1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제활동별로는 취업중이거나 미취업의 경우 모두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취업중인 노인의 22.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미취업의 노인의 17.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미취업의 노인의 경우 17.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부부) 소유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자녀의 소득수준이나 노인부부이외의 동거가구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로연금 제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와 같이 빈곤해소 정책들이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가구단위의 소득수준 산정기준과는 다른 개념의 선정기준이 도입된 것이다. 노인부양에 대한 자녀 또는 동거가족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문화에서 노인 개인과 부부를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 5-9>와 같다.

노인의 65.1%는 선정기준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2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서는 현재 수급하고 있는 노인은 68.5%가 현재 기준에 대해 찬성하며, 비수급 노인은 59.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급하는 노인은 본인들의 수급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 기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비수급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수급노인의 소득수준별 현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부터 65.1%, 70.4%, 68.1%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어 수급노인 내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은 찬성 63.5%, 반대 29.3%이며, 읍·면부는 찬성 68.8%, 반대 24.8%로 동부 지역이 읍면부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62.4% 찬성, 27.9% 반대, 여자는 66.1% 찬성, 28.1% 반대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자 노인의 찬성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65~69세는 62.7%, 70~74세 64.6%, 75세 이상은 67.8%로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부부)의 소득수준만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상 응답자의 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찬성수준이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비율은 고졸이 72.1%, 대졸이 59.1%, 무학 66.0%, 초등학교 64.2%, 중학교 64.2%로 나타났다.

라. 기초노령연금제도 차등지급에 대한 의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월 2만원~8만 4천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2008년 기준). 이와 같이 차등 지급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항의 응답은 〈표 5-10〉과 같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로는 수급 노인의 83.9%가 찬성하는 반면 비수급 노인의 73.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현 제도 설계에 대해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 80%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지급에 대한 찬성정도는 동부(78.7%)에 비해 읍면부(82.8%)가 다소 높으며, 남자(76.7%)에 비해 여자(81.9%)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76.5%)에 비해 무배우(84.6%)가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차등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무학과 초졸이 중졸이상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9〉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24.3	40.8	6.9	18.4	9.6	100.0(1286)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19.3	39.7	4.7	23.0	13.3	100.0(466)
수급	27.1	41.4	8.3	15.8	7.4	100.0(819)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23.7)	(41.4)	(8.4)	(19.3)	(7.2)	100.0(249)
20~40%미만	(27.2)	(43.2)	(5.6)	(15.2)	(8.8)	100.0(250)
40%이상	(28.3)	(39.8)	(10.4)	(14.7)	(6.8)	100.0(251)
지역						
동부	22.6	40.9	7.2	19.3	10.0	100.0(886)
읍·면부	28.3	40.5	6.5	16.3	8.5	100.0(400)
성						
남자	25.2	38.2	8.8	17.4	10.5	100.0(477)
여자	23.8	42.3	5.8	19.0	9.1	100.0(811)
결혼상태						
유배우	24.5	40.8	7.0	17.3	10.4	100.0(740)
무배우	24.0	40.9	6.8	19.8	8.4	100.0(545)
연령						
65~69세	24.2	38.5	7.0	18.1	12.2	100.0(426)
70~74세	21.9	42.7	6.0	20.0	9.4	100.0(415)
75세 이상	26.7	41.1	7.9	17.1	7.2	100.0(445)
교육수준						
무학	28.0	38.0	6.3	19.6	8.2	100.0(429)
초등학교	20.8	43.4	7.7	17.5	10.6	100.0(519)
중학교	24.7	36.3	6.8	21.9	10.3	100.0(146)
고등학교	27.2	44.9	6.6	13.2	8.1	100.0(136)
대학이상	18.5	40.7	5.6	22.2	13.0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25.4	37.3	10.9	18.0	8.5	100.0(284)
노인부부	25.4	42.3	6.0	16.3	10.1	100.0(497)
자녀동거	22.1	43.1	5.1	20.2	9.5	100.0(411)
기타 ³⁾	24.5	34.0	7.4	22.3	11.7	100.0(94)
경제활동						
취업중	19.0	40.7	9.3	18.7	12.3	100.0(332)
미취업	26.2	40.7	6.2	18.2	8.7	100.0(955)
거주형태						
자가	25.1	42.3	5.3	17.6	9.7	100.0(808)
전세	25.6	36.5	12.8	19.9	5.1	100.0(156)
월세	24.5	38.7	7.1	16.1	13.5	100.0(155)
무상	19.3	39.2	9.0	22.9	9.6	100.0(166)

주: 1) 대리응답 14명 제외

2) 수급상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0〉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차등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31.1	48.9	8.0	9.1	3.0	100.0(1286)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24.9	48.1	7.7	13.9	5.4	100.0(466)
수급	34.6	49.3	8.2	6.3	1.6	100.0(821)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32.3)	(52.0)	(8.1)	(6.9)	(0.8)	100.0(248)
20~40%미만	(36.4)	(47.6)	(10.0)	(5.2)	(0.8)	100.0(250)
40%이상	(33.2)	(51.2)	(6.0)	(6.0)	(3.6)	100.0(250)
지역						
동부	29.6	49.1	7.9	10.2	3.3	100.0(886)
읍·면부	34.5	48.3	8.3	6.8	2.3	100.0(400)
성						
남자	31.5	45.2	8.6	9.2	5.5	100.0(476)
여자	30.9	51.0	7.7	9.0	1.5	100.0(810)
결혼상태						
유배우	29.8	46.7	8.2	10.7	4.6	100.0(741)
무배우	32.8	51.8	7.5	7.0	0.9	100.0(546)
연령						
65~69세	30.4	47.3	6.8	12.0	3.5	100.0(425)
70~74세	32.1	48.6	8.5	8.2	2.7	100.0(414)
75세 이상	30.8	50.8	8.5	7.2	2.7	100.0(445)
교육수준						
무학	32.4	50.8	9.8	6.3	0.7	100.0(429)
초등학교	30.3	50.7	6.7	8.1	4.2	100.0(519)
중학교	29.3	45.6	7.5	14.3	3.4	100.0(147)
고등학교	33.8	38.2	8.8	14.7	4.4	100.0(136)
대학이상	27.8	50.0	3.7	13.0	5.6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34.7	49.1	4.9	9.8	1.4	100.0(285)
노인부부	30.4	47.6	8.3	9.9	3.8	100.0(496)
자녀동거	30.7	49.1	9.5	7.8	2.9	100.0(411)
기타 ³⁾	25.8	53.8	8.6	9.7	2.2	100.0(93)
경제활동						
취업중	29.4	48.0	7.8	10.8	3.9	100.0(333)
미취업	31.6	49.1	8.1	8.6	2.7	100.0(956)
거주형태						
자가	30.7	48.5	8.1	9.3	3.5	100.0(807)
전세	32.5	44.6	8.3	11.5	3.2	100.0(157)
월세	28.8	51.9	7.7	9.0	2.6	100.0(156)
무상	33.1	51.8	7.8	6.0	1.2	100.0(166)

주: 1) 대리응답 14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기초노령연금을 가난한 노인에게 지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선택적 지급)과 모든 노인에게 지금 수준의 액수를 지급(보편적 지급)하는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응답은 가난한 노인에게 많은 액수(선택적 지급)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82.2%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서는 수급과 비수급 노인 모두 과반수 이상 선택적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비수급 노인의 경우 보편적 지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급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에 비해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읍·면부 모두 선택적 지급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읍·면부의 경우 보편적 지급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결혼 상태별, 연령별 모두 대부분 선택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약간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선택적 지급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동별로는 취업중, 미취업 노인 모두 선택적 지급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미취업의 경우 선택적 지급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는 수급자는 모든 형태의 거주자의 응답률이 선택적 지급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자가 거주자의 경우 보편적 지급에 대한 응답률이 기타 거주형태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11〉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발전방향 의견

(단위: %, 명)

	가난한 노인에게 많은 액수 지급	모든 노인에게 지금 수준의 액수 지급	계(명)
전체 ¹⁾	82.2	17.8	100.0(1286)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비수급	75.4	24.6	100.0(467)
수급	86.1	13.9	100.0(820)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87.6)	(12.4)	100.0(249)
20~40%미만	(91.2)	(8.8)	100.0(250)
40%이상	(79.6)	(20.4)	100.0(250)
지역			
동부	85.6	14.4	100.0(886)
읍·면부	75.0	25.0	100.0(400)
성			
남자	79.5	20.5	100.0(477)
여자	83.8	16.2	100.0(810)
결혼상태			
유배우	80.3	19.7	100.0(741)
무배우	84.8	15.2	100.0(546)
연령			
65~69세	84.2	15.8	100.0(425)
70~74세	80.0	20.0	100.0(415)
75세 이상	82.7	17.3	100.0(445)
교육수준			
무학	85.1	14.9	100.0(429)
초등학교	81.3	18.7	100.0(520)
중학교	76.2	23.8	100.0(147)
고등학교	81.8	18.2	100.0(137)
대학이상	85.2	14.8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81.7	18.3	100.0(284)
노인부부	78.9	21.1	100.0(497)
자녀동거	84.9	15.1	100.0(411)
기타 ³⁾	89.5	10.5	100.0(95)
경제활동			
취업중	74.9	25.1	100.0(331)
미취업	84.8	15.2	100.0(954)
거주형태			
자가	79.4	20.6	100.0(807)
전세	89.2	10.8	100.0(157)
월세	85.3	14.7	100.0(156)
무상	86.1	13.9	100.0(166)

주: 1) 대리응답 14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시 느낌 및 평가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의 느낌과 생각

〈표 5-12〉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수급시의 생각을 질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이제야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항목의 경우 25.5%가 매우 그렇다, 35.5%가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약 6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약 20%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한편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은 약 50.7%,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항목의 경우는 약 75.8%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노인개인의 삶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항목에는 약 82.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기대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항목의 경우도 동 비율이 약 82.1%이다. 반면, ‘주위에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 23.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많은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 노인은, 내가 진짜 노인이 되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국가가 잘살게 되었다는 생각,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겠다는 기대를 하였다. 낙인에 대한 우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공공부조에 비하여 지급대상자가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노인의 제특성별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긍정적인 응답율은 각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질수록 이제야 주는구나 하는 생각과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응답율은 높아진 반면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20%미만과 20~40%미만 집단은 각각 약 30% 정도가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란 생각을 나타내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40%이상 집단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약 15%정도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에 거주하는 수급노인에 비하여 읍·면부 거주노인의 경우 이제야 주는구나 하

는 응답과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다는 생각을 가진 비율이 높아 정부로부터의 노후소득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이제야 주는 구나하는 응답과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다는 생각을 가진 비율이 높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월등히 높아 75.2%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낮다. 또한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높는데, 이는 여유돈이 생기면 보건의료비에 지출하고 싶다는 응답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때, 건강수준이 나쁜 노인은 보건의료비에 쓸 수 있는 여유돈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12〉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느낌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국가가 이제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25.5	35.5	17.7	16.7	4.5	100.0(818)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	30.8	24.1	21.3	4.0	100.0(820)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26.6	49.3	11.2	11.3	1.6	100.0(820)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22.0	46.6	14.3	13.8	3.3	100.0(820)
‘노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39.0	43.0	6.3	10.4	1.3	100.0(820)
‘주위에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5.6	18.0	10.9	35.7	29.7	100.0(820)

〈표 5-13〉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대한 느낌

(단위: % 명)

	이제야 주는구나 하는 생각	노인으로서의 권리 찾음	국가가 잘 살게 되었음을 느낌	경제적인 여유 기대감	노인이 되었다는 느낌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란 생각
전체	61.1	50.7	75.8	68.7	82.1	23.7
소득인정액 기준 ¹⁾						
20%미만	56.6	44.2	74.0	75.5	82.3	27.3
20~40%미만	60.0	46.8	77.2	70.8	83.6	31.2
40%이상	69.1	58.6	75.5	60.8	81.1	14.8
지역						
동부	56.9	46.4	74.3	70.5	79.9	23.1
읍·면부	68.5	58.3	78.5	65.4	86.0	24.7
성						
남자	62.0	54.2	78.4	53.8	80.8	20.6
여자	60.7	49.1	74.7	75.2	82.6	25.0
연령						
65~69세	52.0	46.3	73.1	68.8	84.5	27.6
70~74세	60.9	47.7	73.3	66.7	82.7	21.1
75세 이상	66.3	55.5	79.4	70.2	80.3	23.4
결혼상태						
유배우	64.4	52.0	78.8	59.2	82.3	20.2
무배우	58.3	49.6	73.4	76.6	81.9	26.6
교육수준						
무학	60.6	47.1	74.1	75.5	83.2	27.8
초등학교	63.7	53.5	77.1	66.3	82.0	19.6
중학교	60.0	61.5	75.1	56.5	86.7	26.3
고등학교	49.6	46.4	83.4	58.5	72.3	11.7
대학이상	62.2	39.3	69.5	29.4	59.2	36.3
가구형태						
노인독신	58.1	45.1	74.0	75.9	84.2	31.4
노인부부	66.7	52.3	78.5	57.8	82.1	20.1
자녀동거	56.4	52.4	74.6	74.6	81.9	20.7
기타	67.9	58.7	76.4	63.0	73.7	21.3
자녀수						
1명 이하	51.4	34.0	76.6	62.8	76.1	30.4
2명	54.6	45.6	82.7	65.9	85.5	32.5
3명	62.5	48.8	74.1	73.4	84.8	24.7
4명	63.9	57.1	70.7	72.5	84.8	22.3
5명 이상	64.7	57.2	77.9	66.0	79.6	17.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61.1	50.4	80.6	56.3	69.5	17.5
약간 좋다	57.7	50.6	74.2	68.5	80.8	15.2
보통이다	58.3	55.0	77.0	62.8	82.8	23.7
약간 나쁘다	64.3	52.5	74.2	71.2	84.3	24.9
매우 나쁘다	59.7	41.8	79.0	71.2	78.8	28.3
경제활동						
취업중	65.4	57.8	77.9	66.5	90.7	21.3
미취업	59.9	48.7	75.3	69.4	79.7	24.4
거주형태						
자가	62.1	54.0	74.6	67.4	83.0	19.5
전세	54.1	49.6	82.9	67.2	79.3	27.3
월세	57.7	42.2	71.6	68.8	74.2	33.3
무상	66.0	49.6	78.3	73.2	88.6	24.2

주: 1)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나. 기초노령연금의 도움 정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에게 이 되는가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 5-14〉과 같다. 전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들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도움정도는 20%미만, 20~40%미만, 40%이상의 집단이 각각 84.8%, 86.5%, 84.4%로 수급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와 읍·면부가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순으로 응답한 비율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57.2%, 여자 56.6%가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 31.9%, 남자 18.8%로 그저 그렇다 응답 비율은 남자 12.8%, 여자 5.8%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9세에서 높게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부분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률 가운데 중학교 졸업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노인 가운데 대학 이상 졸업 노인이 27.3%로 눈에 띄는 결과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가구의 경우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가구 보다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낮으며 그저 그렇다의 응답률이 20.7%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14〉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계(명)
전체 ¹⁾	27.9	56.8	7.9	6.5	0.8	100.0(820)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26.4	58.4	7.2	7.6	0.4	100.0(250)
20~40%미만	34.3	52.2	6.8	6.0	0.8	100.0(251)
40%이상	24.8	59.6	9.2	5.2	1.2	100.0(250)
지역						
동부	27.3	57.4	7.3	7.3	0.8	100.0(524)
읍·면부	29.2	55.6	9.2	5.4	0.7	100.0(295)
성						
남자	18.8	57.2	12.8	9.6	1.6	100.0(250)
여자	31.9	56.6	5.8	5.3	0.5	100.0(571)
결혼상태						
유배우	23.1	58.1	10.5	7.0	1.3	100.0(372)
무배우	32.0	55.9	5.8	6.0	0.2	100.0(447)
연령						
65~69세	23.7	63.6	10.1	2.0	0.5	100.0(198)
70~74세	29.6	51.5	9.9	7.7	1.5	100.0(274)
75세 이상	29.2	57.0	4.9	8.3	0.6	100.0(349)
교육수준						
무학	31.6	58.4	4.1	5.4	0.5	100.0(370)
초등학교	28.1	57.2	8.9	5.1	0.6	100.0(313)
중학교	21.9	46.6	21.9	9.6	0.0	100.0(73)
고등학교	15.7	58.8	7.8	13.7	3.9	100.0(51)
대학이상	0.0	63.6	9.1	27.3	0.0	100.0(11)
가구형태						
노인독신	37.3	51.0	4.1	7.5	0.0	100.0(241)
노인부부	24.2	58.7	8.2	7.8	1.1	100.0(269)
자녀동거	21.8	63.9	8.3	4.4	1.6	100.0(252)
기타 ³⁾	31.0	41.4	20.7	6.9	0.0	100.0(5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8.8	56.3	12.5	12.5	0.0	100.0(16)
약간 좋다	25.0	60.5	10.5	3.2	0.8	100.0(124)
보통이다	20.4	60.2	8.8	9.9	0.6	100.0(181)
약간 나쁘다	32.4	55.4	6.7	5.2	0.3	100.0(343)
매우 나쁘다	30.6	52.9	6.4	7.6	2.5	100.0(157)
거주형태						
자가	24.9	60.1	7.9	5.4	1.6	100.0(429)
전세	29.5	52.4	9.5	8.6	0.0	100.0(105)
월세	27.5	53.6	7.2	11.6	0.0	100.0(138)
무상	35.8	52.7	7.4	4.1	0.0	100.0(148)
경제활동						
취업중	27.6	54.7	9.9	6.1	1.7	100.0(181)
미취업	28.0	57.4	7.4	6.6	0.6	100.0(639)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 820명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3)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5-15〉 ~ 〈표 5-18〉과 같다. 가장 많은 노인이 응답한 항목은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43.0%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고 19.6%,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주거관련 비용(월세 포함)의 지출 부담 및 생활비 부담 감소, 손주 용돈 줄 수 있게 된 것, 세금에 대한 부담 감소, 마음의 여유 등이 있었으며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와 읍·면부 모두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읍·면부 거주자가 동부 거주자보다 이에 대한 응답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와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남자는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변화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여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한 변화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경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원하는 것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과의 차이가 있다면 65~69세 노인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떳떳해졌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감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변화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감소가 가장 많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동일하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떳떳해졌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신,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감

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변화의 순으로 다른 변수들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감소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다른 가구 형태와 같으나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타가구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자녀, 손자녀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경제적 부분의 부담감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주형태별로는 자개인 경우 병원 가는 것에 부담 감소,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세, 월세, 무상 거주자의 경우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감소의 결과는 동일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부분이 자가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별로도 다른 변수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소득인정액기준 20%미만 집단과 20~40%미만 집단의 경우 의료비 부담 감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변화 순으로 나타났으나, 40%이상 집단의 경우 의료비 부담 감소,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지출의 우선순위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1순위로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과 같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보건의료비에 주로 지출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단위: %, 명)

	전체	지역		성별		결혼상태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유배우	무배우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18.5	17.9	19.7	20.9	17.5	16.6	20.2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43.0	39.0	50.2	38.6	44.9	43.6	42.6
친목모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1.3	1.1	1.7	3.2	0.5	2.4	0.2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0.6	0.8	0.3	0.8	0.5	1.1	0.2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땀땀해졌다	7.1	8.7	4.1	8.0	6.7	7.2	7.0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2.5	3.4	1.0	1.6	3.0	1.9	3.1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	19.6	19.6	19.7	17.7	20.4	18.7	20.4
기타	7.3	9.5	3.4	9.2	6.5	8.6	6.3
계 ¹⁾	100.0 (820)	100.0 (526)	100.0 (295)	100.0 (249)	100.0 (570)	100.0 (374)	100.0 (446)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노인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표 5-16〉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단위: %, 명)

	연령			교육수준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18.6	20.1	17.3	19.9	19.5	9.6	20.0	0.0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41.2	43.1	44.1	46.2	40.3	41.1	38.0	54.5
친목모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1.5	1.5	0.9	0.3	1.0	6.8	0.0	9.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0.0	0.4	1.2	0.3	0.6	1.4	2.0	0.0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몇몇해졌다	10.1	4.7	7.2	6.5	7.3	11.0	2.0	18.2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0.5	2.9	3.5	2.4	2.9	4.1	0.0	0.0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	20.1	22.3	17.3	18.8	21.1	17.8	24.0	0.0
기타	8.0	5.1	8.6	5.6	7.3	8.0	14.0	18.2
계 ¹⁾	100.0 (199)	100.0 (274)	100.0 (347)	100.0 (372)	100.0 (313)	100.0 (73)	100.0 (50)	100.0 (11)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노인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표 5-17〉 노인의 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단위: %, 명)

	가구형태				거주형태				경제활동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²⁾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취업중	미취업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21.3	16.2	17.5	22.4	20.0	21.9	13.6	17.0	17.1	19.1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37.9	41.7	51.2	34.5	45.8	30.5	35.0	50.3	42.0	43.3
친목모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0.4	2.6	1.2	0.0	1.9	1.0	0.7	0.7	1.7	1.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0.4	1.5	0.0	0.0	0.5	2.9	0.0	0.0	0.0	0.8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몇몇해졌다	0.0	6.3	11.9	20.7	7.4	10.5	8.6	2.0	5.5	7.5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2.5	1.1	3.2	5.2	1.2	5.7	2.9	4.1	1.1	3.0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	28.8	22.1	9.5	13.8	16.0	22.9	27.1	21.1	25.4	17.7
기타	8.8	8.5	5.6	3.4	7.2	4.8	12.1	4.8	7.2	7.4
계 ¹⁾	100.0 (240)	100.0 (271)	100.0 (252)	100.0 (58)	100.0 (430)	100.0 (105)	100.0 (140)	100.0 (147)	100.0 (181)	100.0 (639)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노인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8〉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단위: %, 명)

	소득인정액 구분		
	20%미만	20~40%미만	40%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17.7	20.4	18.4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39.4	45.2	43.6
친목모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0.4	0.8	2.4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0.8	0.0	0.4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몇몇해졌다	8.4	5.6	7.2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2.8	3.2	1.6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	20.1	21.2	18.0
기타	10.4	3.6	8.4
계 ¹⁾	100.0(249)	100.0(250)	100.0(250)

주: 1)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75% 이상이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와 읍·면부 거주자 대부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도 역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도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는 13.3%가 불만족한 편이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는 70% 이상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족 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60% 이상이 제도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나 대학 이상 졸업자의 30%는 불만족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구형태별, 거주형태별, 경제활동별로 보았을 때 65%이상이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인정액별로 역시 대부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인정액 구분에 따른 세 집단의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각각 74.2%, 76.4%, 75.7%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불만족 비율은 40%이상 집단의 경우가 12.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19〉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전체	지역		성별		결혼상태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유배우	무배우
매우 만족한다	31.1	28.1	36.3	26.9	32.9	31.0	31.1
만족하는 편이다	44.2	43.9	44.7	42.6	44.8	43.0	45.0
보통이다	15.4	17.9	10.8	16.9	14.7	15.5	15.4
불만족한 편이다	8.6	9.9	6.4	13.3	6.7	9.4	8.1
매우 불만족하다	0.7	0.2	1.7	0.4	0.9	1.1	0.4
계 ¹⁾	100.0 (820)	100.0 (524)	100.0 (295)	100.0 (249)	100.0 (571)	100.0 (374)	100.0 (447)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노인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표 5-20〉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연령			교육수준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매우 만족한다	33.8	29.2	31.0	35.0	29.8	21.6	27.5	10.0
만족하는 편이다	44.4	49.3	39.9	42.3	47.8	41.9	41.2	50.0
보통이다	14.1	12.4	18.4	15.4	12.8	25.7	15.7	10.0
불만족한 편이다	7.6	8.4	9.5	6.2	9.3	10.8	15.7	30.0
매우 불만족하다	0.0	0.7	1.1	1.1	0.2	0.0	0.0	0.0
계 ¹⁾	100.0 (198)	100.0 (274)	100.0 (348)	100.0 (371)	100.0 (312)	100.0 (74)	100.0 (51)	100.0 (10)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노인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표 5-21〉 노인의 가구형태 · 거주형태 · 경제활동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가구형태				거주형태				경제활동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²⁾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취업중	미취업
매우 만족한다	34.2	32.8	26.2	31.0	32.6	25.7	26.1	35.4	34.8	30.0
만족하는 편이다	43.3	43.5	42.1	58.6	45.7	40.0	44.9	41.5	40.3	45.2
보통이다	14.2	13.7	20.6	6.9	14.5	21.0	16.7	13.6	14.9	15.5
불만족한 편이다	7.5	8.5	11.1	3.4	6.3	13.3	12.3	8.2	8.3	8.8
매우 불만족하다	0.8	1.5	0.0	0.0	0.9	0.0	0.0	1.4	1.7	0.5
계 ¹⁾	100.0 (240)	100.0 (271)	100.0 (252)	100.0 (58)	100.0 (429)	100.0 (105)	100.0 (138)	100.0 (147)	100.0 (181)	100.0 (639)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노인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략응답 14명 제외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22〉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소득인정액 구분		
	20%미만	20~40%미만	40%이상
매우 만족한다	26.2	37.2	29.5
만족하는 편이다	48.0	39.2	46.2
보통이다	16.1	16.8	12.4
불만족한 편이다	8.9	6.8	10.4
매우 불만족하다	0.8	0.0	1.6
계 ¹⁾	100.0(248)	100.0(250)	100.0(251)

주: 1)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마. 기초노령연금 지출의 우선순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은 돈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 중 1순위로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난방비, 광열수도비 등)가 21.4%, 식비(주식비와 부식비)가 21.3%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식비(주식비와 부식비)로 24.3%, 주거관련비 18.3%, 보건의료비 14.2%, 교양오락비 10.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인이 보건의료비, 식비, 주거관련비에 중점

적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은 돈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제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보다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에 사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며, 성별로는 남자는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와 식비(주식비와 부식비)가 동일하게 나온 반면 여자는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69세 24.4%, 70~74세 31.6%, 75세 이상 30.8%가 모두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로 가장 먼저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65~69세 22.8%, 70~74세 23.5%가 식비(주식비와 부식비)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75세 이상은 22.5%가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가구가 보건의료비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독신가구는 주거관련비 지출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이상이 보건의료비 지출이 1순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노인의 36.5%가 식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별로는 취업중인 노인과 미취업인 노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중인 노인은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식비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미취업인 노인은 보건의료비, 식비, 주거관련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별로는 0~20% 소득계층은 보건의료비, 주거관련비, 식비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20~40%, 40~60% 소득계층은 보건의료비, 식비, 주거관련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지역		성		연령		
		동	읍·면부	남	여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1.3	23.4	17.8	23.4	20.5	22.8	23.5	19.0
외식비	3.3	3.1	3.7	6.5	1.9	2.5	2.6	4.3
교육비	1.3	0.8	2.0	0.4	1.6	0.0	2.6	1.2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21.4	20.9	22.6	22.2	21.1	19.8	21.3	22.5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9.5	28.2	31.6	23.4	32.1	24.4	31.6	30.8
가구집기가사용품	0.1	0.0	0.3	0.0	0.2	0.0	0.0	0.3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1.8	2.5	0.3	0.4	2.3	4.1	0.4	1.4
교양오락비	1.7	2.1	1.0	2.8	1.2	2.0	1.1	1.7
교통비	2.6	2.5	3.0	4.8	1.6	2.0	1.8	3.5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3.1	1.9	5.1	4.0	2.8	5.6	3.7	1.4
경조사비	0.9	1.1	0.3	1.2	0.7	0.0	1.1	1.2
기타	3.8	4.6	2.4	3.2	4.0	0.5	4.8	4.9
저축	2.5	2.9	1.7	1.2	3.0	2.5	2.9	2.0
부채상환	0.5	0.4	0.7	0.4	0.5	0.5	1.1	0.0
손자녀 용돈	2.5	1.9	3.7	2.0	2.8	4.6	0.0	3.2
가구전체 생활비	3.7	3.8	3.7	4.0	3.7	8.6	1.5	2.6
전체 ¹⁾	100.0 (820)	100.0 (522)	100.0 (297)	100.0 (248)	100.0 (570)	100.0 (197)	100.0 (272)	100.0 (347)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표 5-24〉 노인의 결혼상태 · 가구형태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결혼상태		가구형태			
		유배우	무배우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²⁾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1.3	25.8	17.6	21.1	26.4	15.5	22.0
외식비	3.3	4.6	2.2	1.2	4.8	3.6	3.4
교육비	1.3	0.3	2.0	2.1	0.4	1.2	3.4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21.4	20.4	22.1	31.0	22.7	11.9	15.3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9.5	27.7	31.0	23.1	27.1	39.3	23.7
가구집기가사용품	0.1	0.3	0.0	0.0	0.4	0.0	0.0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1.8	0.5	2.9	1.2	0.4	4.4	0.0
교양오락비	1.7	2.2	1.3	1.7	1.9	1.6	1.7
교통비	2.6	3.8	1.6	2.1	2.2	3.2	5.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3.1	3.0	3.3	5.4	3.0	0.4	5.1
경조사비	0.9	1.1	0.7	0.8	0.4	1.6	1.7
기타	3.8	2.4	4.9	3.3	2.2	5.6	5.1
저축	2.5	1.3	3.3	1.7	1.1	4.4	3.4
부채상환	0.5	0.5	0.4	0.8	0.0	0.8	0.0
손자녀 용돈	2.5	1.9	3.1	1.2	1.5	4.0	6.8
가구전체 생활비	3.7	4.3	3.3	3.3	5.6	2.8	3.4
전체 ¹⁾	100.0 (820)	100.0 (372)	100.0 (448)	100.0 (242)	100.0 (269)	100.0 (252)	100.0 (59)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5-25〉 노인의 교육수준 · 경제활동 · 주거형태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교육수준					경제활동		주거형태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취업 중	미취업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1.3	19.4	20.8	23.3	36.5	10.0	18.9	22.0	18.5	38.1	28.3	11.4
외식비	3.3	3.8	3.5	0.0	1.9	10.0	2.8	3.4	4.2	3.8	14.	2.0
교육비	1.3	0.5	2.2	0.0	1.9	0.0	1.7	1.8	0.5	2.9	0.0	3.4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21.4	22.6	19.5	21.9	25.0	10.0	30.6	18.7	19.9	13.3	23.9	29.5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9.5	30.4	30.4	31.5	11.5	40.0	23.3	31.2	32.7	28.6	21.0	28.9
가구집기가사용품	0.1	0.3	0.0	0.0	0.0	0.0	0.6	0.0	0.2	0.0	0.0	0.0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1.8	2.2	1.9	1.4	0.0	0.0	2.2	1.7	3.3	0.0	0.0	0.0
교양오락비	1.7	0.8	2.6	2.7	1.9	0.0	1.7	1.7	1.6	0.0	0.7	4.0
교통비	2.6	1.1	3.5	5.5	1.9	10.0	2.2	2.8	3.3	1.9	2.9	1.3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3.1	2.4	3.8	1.4	1.9	20.0	6.1	2.3	3.0	0.0	4.3	4.7
경조사비	0.9	0.5	1.0	0.0	3.8	0.0	0.6	0.9	0.7	0.0	2.9	0.0
기타	3.8	4.6	3.8	2.7	1.9	0.0	0.0	4.8	3.0	6.7	3.6	4.0
저축	2.5	3.5	1.9	1.4	1.9	0.0	3.3	2.2	1.6	2.9	2.9	4.0
부채상환	0.5	0.5	0.3	0.0	1.9	0.0	0.6	0.5	0.5	0.0	0.0	1.3
손자녀 용돈	2.5	3.8	1.6	1.4	3.8	0.0	1.1	3.0	3.0	0.0	2.2	3.4
가구전체 생활비	3.7	3.8	3.2	6.8	3.8	0.0	4.4	3.6	4.0	1.9	5.8	2.0
전체 ¹⁾	100.0 (820)	100.0 (372)	100.0 (313)	100.0 (73)	100.0 (52)	100.0 (10)	100.0 (180)	100.0 (642)	100.0 (428)	100.0 (105)	100.0 (138)	100.0 (149)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표 5-26〉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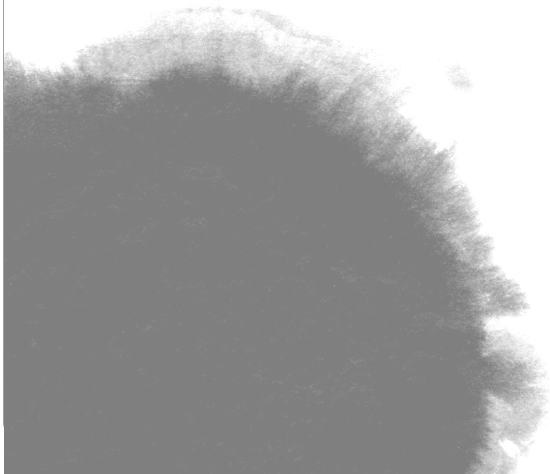
(단위: %, 명)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20~40%미만	40%이상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1.3	19.9	22.4	24.6
외식비	3.3	4.6	2.5	4.2
교육비	1.3	0.8	2.1	0.0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21.4	22.8	21.6	24.2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9.5	31.1	32.4	27.1
가구집기가사용품	0.1	0.0	0.0	0.4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1.8	2.1	3.7	0.4
교양오락비	1.7	0.0	0.0	0.0
교통비	2.6	0.0	0.0	0.0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3.1	2.5	1.7	4.7
경조사비	0.9	1.7	0.8	0.4
기타	3.8	4.6	4.6	3.0
저축	2.5	3.7	2.1	1.7
부채상환	0.5	0.0	0.8	0.8
손자녀 용돈	2.5	3.7	1.2	3.0
가구전체 생활비	3.7	2.5	4.1	5.5
전체 ¹⁾	100.0 (820)	100.0 (241)	100.0 (241)	100.0 (236)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대리응답 14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적 영향



VI.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적 영향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노인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을 소득재분배라는 측면과 지방정부의 예산구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은 소득재분배 현상을 세대간 및 세대내 재분배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고,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지니계수 분석방법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분담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고령화율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관련 예산구성을 중심으로한 예산분석을 실시하여 기초노령연금도입 전후로 예산상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가. 소득재분배 정의

소득재분배라고 하면 기존의 소득상태에서 다른 소득상태로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변화는 어떠한 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상태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재분배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소득이 줄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는, 마치 제로섬 게임²⁸⁾과 같은 상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와 소득보전제도(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동시에 작용하여야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세제도의 적용으로 저소득층은 적게(혹은 면제) 고소득층은 많이 내고 소득보전제도에서는 반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적 소득이전을 받음으로써 소득재분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경우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세와 같이 고소득층에 상대적 부담을 크게 하여 소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공적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소득재분배 형태는 전자와 같이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공적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을 변화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누구에게 공적소득을 더 많이 이전하느냐에 따라 상대적 소득격차를 줄이는 경우로 조세의 경우와 반대적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및 분석방법

1) 사용자료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자료」 3차년도 가구자료이다. 3차년도 자료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인적특성, 근로소득, 자산상태 등에 대해 살펴보고,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여부를 통해 제도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를 GINI 계수 분해기법을 활용하여 세대내 및 세대간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28) 게임의 참여자들이 다 같이 동시에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볼 수가 없는, 승자와 패자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참가자의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0이 되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이 2008년부터여서 조사자료 내에서는 동 제도관련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적용에 따른 효과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즉, 조사 시점에서의 소득과 자산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서열화하여 하위 60%(혹은 70%~100%)의 노인가구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적용집단을 100%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초연금화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동 분석에 활용한 소득은 가구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²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식과 같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월) = 유형별 월평균소득의 합계(국세청자료)
+ 공적연금 월 급여액(공적연금 관리기관별 자료)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부채)×소득환산율(5%)+연간 자동차세액)/12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기준이며, 음(-)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자료: 정경희 외,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7.

동 분석에 활용될 변수를 노인 및 비노인 가구로 구분하여 자료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 <표 6-1> 과 같다. 노인 및 비노인가구에 대한 구분은 가구 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였으므로 기존의 분류방식인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이 노인부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부양의무자 조건 없음) 기존의 노인 가구주 가구로 분석하는 방법과는 차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 6-1> 에 의하면, 2007년 기준 비노인가구의 경상소득³⁰⁾은 연간 4,702만원이었으며, 노인가구는 2,476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기준으로는 3,978만원으로

29) 이렇게 한 이유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분단위는 소득인정액으로, 분석단위는 가구소득으로 하였다.

30) 가구경상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자산소득+공·사적이전소득+기타소득(경로연금+교통수당)으로 구성하였으며,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제외한 이유는 20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이 적용되면 동 항목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은 것임(이하 동일).

나타났다. 가구주 평균연령은 52.2세로 이중 노인가구는 67.4세, 비노인가구는 44.8세로 나타났다.

〈표 6-1〉 노인 및 비노인 가구의 경제현황 및 인적 특성

(단위 : 만원, %)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등 기타	경상 소득	순자산	가구주 평균연령
비노인가구	평균	4,136	509	422	181	4,702	7,863	44.8세
	N	4,062	1,155	1,464	4,179	4,247	4,211	
노인가구	평균	2,093	601	396	399	2,476	9,337	67.4세
	N	1,314	674	2,018	2,037	2,047	1,981	
전체	평균	3,636	543	407	252	3,978	8,335	52.2세
	N	5,376	1,828	3,483	6,216	6,294	6,192	

주: 1) * 가구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노인가구)와 하지 않는 경우(비노인가구)로 구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 원시자료.

2) 분석가정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가정을 필요로 한다. 연구가정과 관련하여, 현 기초노령연금제도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가정하였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조사시점인 2007년에는 실태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2007년을 2008년 시점이후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실제 제도적용시점과는 차이가 있지만, 제도가 절대기준이 아닌 상대기준 즉 소득인정액의 하위 60%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석시점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008년 기준인 노인단독가구 월40만원, 노인부부가구³¹⁾ 월64만원(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조사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60%이하에 있게 되는 노인가구를 수급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적용비율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노인의 70%~100%까지 10%p씩 적용비율을 증대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차등적용(1:1.6)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가구균등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셋째, 재산의 소득환산률 적용

31) 신청인이 65세 이상 노인('08.1~6월까지)는 70세 이상, 배우자 연령은 무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재산종류에 무관하게 순자산에 대해 연 5%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넷째, 연금액 수준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가정에서는 외부자료에서 오는 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자료상의 조사대상자(59세미만) 평균소득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상한소득의 존재에서 오는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 국민연금상한선인 360만원이상자 비율을 고려하여 동 비율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상한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래 표에서 와 같이 현행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최고소득기준인 3,450천원 이상자의 비율이 전체의 19.1%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소득서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80.9%선에 있는 가입자의 소득을 상한소득으로 설정하였다.

〈표 6-2〉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2008.10월말 기준)

(단위 : 천명, %, 천원)

구분	총계		사업장		지역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계	13,364	100.0	9,515	100.0	3,790	100.0	59	100.0
0~885미만	70	0.5	45	0.5	23	0.6	2	4.0
885이상-1,710미만	2,591	19.4	1,160	12.2	1,420	37.5	11	18.7
1,710이상-2,870미만	5,585	41.8	3,438	36.1	2,105	55.6	41	69.7
2,870이상-3,450미만	2,563	19.2	2,385	25.1	175	4.6	3	4.6
3,450이상	2,556	19.1	2,487	26.1	67	1.8	2	2.9

주: 1)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5,050,258명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08.12.

다섯째,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단계별로 감액하는 취지는 동일하나,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의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동일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현행 기준에 의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정 소득인정액이하(단독 노인가구 기준 40만원, 부부노인가구 기준 64만원) 노인가구는 최소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가정을 설정하였다.

아래 표는 현행 제도상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 중 1인 수급시를 고려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차액, 연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기준 연금액 수준

노인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32만원미만	32만원이상 ~34만원미만	34만원이상 ~36만원미만	36만원이상 ~38만원미만	38만원이상 ~40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2만원 이하
	연금액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 가구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56만원미만	56만원이상 ~58만원미만	58만원이상 ~60만원미만	60만원이상 ~62만원미만	62만원이상 ~6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2만원 이하
	연금액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2008.

다음 표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부수급 연금액에 20%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때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에 따른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표 6-4〉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기준 연금액 수준

소득인정액	52만원미만	52만원이상 ~56만원미만	56만원이상 ~60만원미만	60만원이상 ~6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초과	8만원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초과 ~8만원이하	0원 ~4만원이하
연금액	13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주: 부부수급자중 각각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연금액은 부부수급액의 1/2이 지급됨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2008.

여섯째, 소득유형은 소득구분을 5개 분위로 구분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20%선은 1분위, 가장 높은 20%선은 5분위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가정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6-5> 와 같다.

<표 6-5>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분석가정

구분	현행 제도	분석가정
선정기준 및 범위	○2008년 기준 노인단독가구 월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64만원(소득인정액 기준)	○200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60%~100%에게 적용(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소득계층을 구분
선정대상별 차등적용 여부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차등적용(1:1.6)	좌동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좌동
기초노령연금액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의 5%	○조사대상자(59세미만) 평균소득의 5% 이하 - 단 상한선은 국민연금 360만원이상자의 비율과 동일해 지는 소득으로 함.
소득인정액+기초노령연금액 > 선정기준액	○단계별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본인 수급), 40,000원 단위(부부 수급)로 절감하여 지급	○합산금액(소득인정액+기초노령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동일하도록 감액.
소득유형(소득분위)	-	○소득구간을 각 20%선으로 동일하게 하여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

자료: 강성호(2008)를 참조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층적 소득보장개념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후소득원을 아래 [그림 6-1]과 같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에 따른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즉, 4층(사적근로 등)은 사적근로,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자산수준과 관련되고, 2~3층(퇴직금, 개인연금)은 퇴직금, 개인연금과 관련되며, 1층(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그림 6-1]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구성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피용자	자영 자	공무원, 사학, 군인	차상위 저소득층	빈곤선 이하 계층
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 연금				
	2층					
1차 안전망 (공적연금 등)	1층	국민연금				
최종안전망					기초노령연금	
(빈곤선)	0층					기초생활보장제 도

여기서 1~4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층 부분에는 자산영역이 있는데 이것과 소득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혹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노후소득수준은 이러한 각 층별 노인의 소득구성원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된다.

3) 지니계수 분해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전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세대내 및 세대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불평등 지수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의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 및 비노인 집단간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분석하고, 또한 노인 세대내에서의 소득재분배 즉,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³²⁾

이제 여기서 활용한 지니계수 분해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³³⁾. GINI 계수 요인분

32) 기초노령연금이 노인과 관련되므로 비노인집단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된다.

33) 자세한 내용은 Dagum, C(1997)를 참고하기 바란다(강성호·김준영, 2007 재인용).

해는 GINI 계수 산출식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각 요인별로 재분배효과의 기여수준을 밝히는 데 적용한다. 지니계수의 일반적 형태는 식 (1)과 같이 표본추출 가중치를 포함하여 나타낼 수 있다.

$$G = \frac{1}{2\bar{Y}} \sum_{i=1}^n \sum_{j=1}^n |y_i - y_j| p_i p_j$$

(1)

단, \bar{Y} : 평균소득, y_i, y_j : i, j의 소득, p_i, p_j : i, j번째 표본의 추출 가중치

이러한 가중치가 포함된 지니계수를 집단별로 요인 분해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집단내(WGC: Within Gini Coefficient)와 집단간(BGC: Between Gini Coefficient)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지니계수 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Dagum, 1997).

$$G = \Delta / 2\bar{Y} = \sum_{j=1}^k \sum_{h=1}^k \sum_{i=1}^{n_j} \sum_{r=1}^{n_h} |y_{ji} - y_{hr}| / 2n^2 \bar{Y} = \sum_{j=1}^k \sum_{h=1}^k \Delta_{jh} p_j p_h / 2\bar{Y}$$

(2)

식 (2)를 살펴보면, 분석 모집단은 총 k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집단을 j집단과 h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집단 내에는 각각 n_j, n_h 만큼의 관측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식 (2)의 의미는 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집단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 지니계수(TGC: Total Gini Coefficient)를 산출하는 식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전체 지니계수 값을 집단내 및 집단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집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집단내 지니계수 산출방법을 살펴보자. j집단의 집단내 지니계수값을 산출한다고 할 때, j집단의 단순 지니계수(G_{jj})는 다음 식 (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_{jj} = \Delta_{jj} / (2\overline{Y}_j) = \sum_{i=1}^{n_j} \sum_{r=1}^{n_j} |y_{ji} - y_{jr}| / (2n_j^2 \overline{Y}_j)$$

(3)

식 (3)의 경우는 전체 지니계수 산출식과 비교할 때 관측치 수만 다를 뿐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지니계수는 집단내 지니계수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집단내 지니계수가 전체 지니계수의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측치 차이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집단내 단순 지니계수에 인구비율과 소득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집단내 가중 지니계수(G_w)를 산출할 수 있다.

$$G_w = \sum_{j=1}^k G_{jj} p_j s_j \quad (p_j = n_j/n, \quad s_j = n_j \overline{Y}_j / n \overline{Y}, \quad \text{단, } j = 1, 2, \dots, k)$$

(4)

다음으로 집단간 지니계수를 살펴보기 위해 j집단 이외에 h집단($j \neq h$)을 가정하여 집단 간 지니계수(G_{jh}) 값을 산출할 수 있다.

$$G_{jh} = \Delta_{jh} / (\overline{Y}_j + \overline{Y}_h) = \sum_{i=1}^{n_j} \sum_{r=1}^{n_h} |y_{ji} - y_{hr}| / (n_j n_h (\overline{Y}_j + \overline{Y}_h))$$

(5)

식 (5)의 경우도 동일 집단($j=h$) 내에서의 소득격차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된 것을 서로 다른 집단($j \neq h$) 간의 관계식으로 변환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집단내 단순 지니계수 산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간 지니계수도 집단내 지니계수 산출과 마찬가지로 인구와 소득비율을 가중치로서 고려하게 되면 집단간 가중 지니계수(G_b)를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G_b = \sum_{j=2h=1}^k \sum_{j=1}^{j-1} G_{jh} (p_j s_h + p_h s_j)$$

(6)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집단내, 집단간 지니계수를 합한 총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 = G_w + G_b = \frac{1}{2} \sum_{j=1}^k \sum_{h=1}^k G_{jh} (p_j s_h + p_h s_j)$$

(7)

여기서 식 (7)을 보다 단순화하여 재정리하면 다음 식 (8)와 표현할 수 있다.

$$G = \sum_{j=1}^k \sum_{h=1}^k G_{jh} p_j s_h$$

(8)

이러한 과정을 식 (2)와 식 (8)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지니계수를 집단내 및 집단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식 (5)를 Δ 로 치환하여 식 (2)에 대입하게 되면 아래 식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G = \sum_{j=1}^k \sum_{h=1}^k G_{jh} (\bar{Y}_j + \bar{Y}_h) p_j p_h / 2 \bar{Y}$$

(9)

식 (8)와 식 (9)를 전개하여 풀면 서로 일치하게 되므로 전체 지니계수는 집단내와 집단간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집단내 및 집단간 지니계수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집단을 어떻게 혹은 몇 개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두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석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분해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산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6-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지니계수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집단을 g_j 와 g_h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의 수를 k 이라고 가정하면, 아래 왼쪽그림과 같이 $k \times k$ 형태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각 행렬로 표현된 것(g_{jh})은 두 집단(j, h)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지니계수로 볼 수 있고, 만일 $j = h$ 가 될 경우는 집단내 지니계수(아래 그림에서의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가 된다. 나머지($j \neq h$)는 모두 집단간 지니계수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6-2] 지니계수 요인 분해 모형

〈집단을 k 으로 구분시($k \times k$ 행렬)〉							〈집단을 2개로만 구분시(2×2 행렬)〉		
$g_i \backslash g_j$	g_1	g_2	g_3	g_4	...	g_k	$G_j \backslash G_h$	G_1	G_2
g_1	g_{11}	g_{12}	g_{13}	g_{14}	...	g_{1k}	G_1	G_{11}	G_{12}
g_2	g_{21}	g_{22}					G_1	G_{21}	G_{22}
g_3	g_{31}		g_{33}				G_2	G_{31}	G_{32}
g_4	g_{41}			g_{44}					
...			
g_k	g_{k1}					g_{kk}			

왼쪽 그림에서 사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집단을 새로운 집단으로 다시 묶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즉, 현재 집단은 $k \times k$ 행렬로 되어 있지만 가장 단순한 행렬식($k = 2$)인 2×2 행렬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k \times k$ 행렬에 있는 $g_{11}+g_{12}+g_{13}+g_{21}+g_{22}+g_{23}+g_{31}+g_{32}+g_{33}$ 를 합한 값은 2×2 행렬의 G_{11} 이 되고, $g_{44}+g_{45}+g_{46}+g_{54}+g_{55}+g_{56}+g_{64}+g_{65}+g_{66}$ 를 합한 값은 G_{22} 와 일치한다. 물론 G_{11} 과 G_{22} 의 합은 2×2 행렬에서 집단내 지니계수가 된다. 당연히 나머지 부분(G_{12}, G_{21})은 집단간 지니계수가 된다.

따라서, 집단을 무한히 나눌 경우 전체 지니계수값에는 차이가 없지만 집단내 지

니계수는 계속 줄어들고 집단간 지니계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음영의 면적 차이를 확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니계수 분해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집단내 및 집단간 지니계수를 기초노령연금 적용여부에 따른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 산출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60%이하인 노인가구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급노인 가구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수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6-6〉에서는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의 소득유형별로 각 소득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비노인가구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므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소득 변화는 없고, 노인가구 중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소득보장수준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균등화 소득인정액 대비 보장수준³⁴⁾은 수급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60%→100%) 3.8%, 5.2%, 6.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6〉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의 소득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가구)

노인가구 여부		균등화 경상소득	균등화 소득인정액(A)	기초노령연금(B)			보장수준(C=A+B)		
				60%적용	80%적용	100%적용	60%적용	80%적용	100%적용
비노인가구	평균	2,672	2,896				2,672	2,672	2,672
	N	4,247	4,247				4,247	4,247	4,247
노인가구	평균	1,487	1,765	94	96	97	1,543	1,564	1,584
	N	2,047	2,047	1,229	1,639	2,047	2,047	2,047	2,047
노인단독	평균	1,510	1,768	94	96	97	1,574	1,592	1,607
	N	1,303	1,303	886	1,115	1,303	1,303	1,303	1,303
노인부부	평균	1,447	1,759	92	96	97	1,489	1,514	1,544
	N	744	744	343	524	744	744	744	744
전체	평균	2,286	2,528	94	96	97	2,305	2,311	2,318
	N	6,294	6,294	1,229	1,639	2,047	6,294	6,294	6,294

주: 평균소득의 5%적용(10%적용은 동 결과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약 2배정도 증가하는 수준임)

34) 〈표 6-6〉에 의하면 $(C-A)/A \times 100\%$ 로 산출

한편, 비노인가구 대비 노인가구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비율은 55.7%(1,487/2,672), 균등화 소득인정액의 비율은 60.9%(1,765/2,896)로 나타나, 경상소득에 비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할 때는 그만큼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상대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수록(유동성 증대) 생활의 여유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노후에는 소득보다는 자산의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유동화를 높여 준다면 다소 노후소득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시장에서의 역모기지 등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모기지제도가 정착되기는 아직 상당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에서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적으므로 노인가구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나마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이 노인빈곤 문제를 다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가구가 수급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 6-7〉와 같이 수급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수급자의 경우(60%적용범위, 평균소득의 5%적용) 전체 노인가구 대비 수급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구소득 비율은 80.8%(1,201/1,487)였으며, 수급 후 보장수준 비율은 83.9%(1,295/1,543)로 약 3.1%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범위를 확대할수록 수급노인가구의 보장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⁵⁾.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소득재분배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지니계수 값의 변화정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35) 적용범위를 80%로 할 경우 각각 83.3%, 85.3%로 나타났다.

〈표 6-7〉 노인가구 중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단위 : 연간 만원, 가구)

수급여부		60%적용			80%적용			100%적용		
		균등화 가구 소득*	기초 노령 연금	보장수준 (가구소득+ 기초노령 연금)	균등화 가구소득	기초 노령 연금	보장수준 (가구소득+ 기초노령 연금)	균등화 가구 소득	기초 노령 연금	보장수준 (가구소득+ 기초노령 연금)
비수급 노인가구	평균 N	1,916 819		1,916 819	2,484 409		2,484 409			
수급 노인가구	평균 N	1,201 1,229	94 1,229	1,295 1,229	1,238 1,639	96 1,639	1,334 1,639	1,487 2,047	97 2,047	1,584 2,047
노인단독	평균 N	1,277 886	94 886	1,372 886	1,277 886	97 886	1,374 886	1,510 1,303	97 1,303	1,607 1,303
노인부부	평균 N	1,006 343	92 343	1,097 343	1,006 343	97 343	1,102 343	1,447 744	97 744	1,544 744
합계	평균 N	1,487 2,047	94 1,229	1,543 2,047	1,487 2,047	96 1,639	1,564 2,047	1,487 2,047	97 2,047	1,584 2,047

주: 평균소득의 5%적용(10%적용은 동 결과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약 2배정도 증가하는 수준임)

라. 분석결과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활용할 경우 집단내 및 집단간 지니계수로 분해할 수 있다. 집단을 어느수준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즉, 집단의 수에 따라 집단내 및 집단간 지니계수 값은 달라지게 되므로 분석집단을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세대내 및 세대간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므로 집단을 크게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노인가구 혹은 비노인가구이더라도 그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다시 집단을 구분하여 세부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소득변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비노인가구에 대한 심층분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1분위~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³⁶⁾, 또한 모든 노인가가 수급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독 및 부부수급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36) 주의할 점은 소득분위 구분시 노인과 비노인 각각에 대해 구분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구에서 소득계층을 5분위로 구분한 다음 이 중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이하 동일).

먼저 기초노령연금에서의 효과는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소득변화에 따라 재분배효과가 나타나므로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중요한 분석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노인가구 세대내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1)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 노인 對 비노인가구

본 절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적용에 따른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하여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수행하였다.

세대간 소득재분배효과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변화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표 6-8〉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 전후에 따른 소득재분배 변화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지니계수 분해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 및 비노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두 집단을 구분한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구분변수로 하고 수급 후 '가구소득'³⁷⁾을 가구균등화 지수로 조정한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소득 기준에 의한 선정이 아니라 노인부부단위의 경제적 능력(소득인정액)에 의한 선정이므로 노인(부부) 단위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은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경제력 평가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³⁸⁾로 조정한 후 동 소득인정액을 서열화하여 60%이하³⁹⁾에 있는 노인가구를 수급대상으로 하되, 분석대상소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 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7년 전체가구(비노인가구 포함)의 '가구소득' 기준 총 지니계수는 0.3871로 나타났으며, 집단내 지니계수는 0.2087, 집단간 지니계수는 0.1784로 나타났다. 동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추정해 보기 위해 다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지니계수치를 비교할 수 있다. 이때 그동안 대부분 통계청 도시가계 근로소득기준으로

37) 가구경상소득과 기초노령연금액의 합(소득인정액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외한 값)으로 정의한다 (이하 동일).

38) 가구균등화 지수는 부부의 경우 1.6을 나누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노인 부부가 노인단독세대 보다 1.6배를 더 수급하는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가정한 것이다.

39) 적용범위를 70%~100%로 확대한 경우도 추정방법은 동일하다.

분석한 경우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로 분석한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도시가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근 지니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김준영·강성호·이광호(200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0.30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불평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⁴⁰⁾. 한편, 자영자까지 고려한 지니계수는 노동패널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전병유외(2007.4)에 의하면 자영소득을 포함한 지니계수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0.4053~0.435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⁴¹⁾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동 연구에서 자영자 소득까지 고려한 지니계수는 자영자소득까지만 포함한 것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때 때 추정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각 요인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A값의 5% 지원)

(단위 : 지니계수, %)

구분		불평등기여도(전체)			불평등기여도(노인)			불평등기여도(비노인)		
		합	집단내	집단간	합	집단내	집단간	합	집단내	집단간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3871 (0.00%)	0.2087 (0.00%)	0.1784 (0.00%)	0.1191 (0.00%)	0.0299 (0.00%)	0.0892 (0.00%)	0.2680 (0.00%)	0.1788 (0.00%)	0.0892 (0.00%)
기초 노령 연금 적용 후	60% 적용	0.3802 (-1.78%)	0.2066 (-1.00%)	0.1736 (-2.70%)	0.1160 (-2.58%)	0.0292 (-2.23%)	0.0868 (-2.70%)	0.2642 (-1.43%)	0.1774 (-0.80%)	0.0868 (-2.70%)
	70% 적용	0.3790 (-2.09%)	0.2062 (-1.16%)	0.1727 (-3.18%)	0.1155 (-3.02%)	0.0291 (-2.53%)	0.0864 (-3.18%)	0.2635 (-1.68%)	0.1771 (-0.94%)	0.0864 (-3.18%)
	80% 적용	0.3780 (-2.36%)	0.2060 (-1.28%)	0.1720 (-3.61%)	0.1151 (-3.33%)	0.0291 (-2.49%)	0.0860 (-3.61%)	0.2628 (-1.92%)	0.1769 (-1.08%)	0.0860 (-3.61%)
	90% 적용	0.3772 (-2.54%)	0.2058 (-1.36%)	0.1714 (-3.93%)	0.1149 (-3.49%)	0.0292 (-2.18%)	0.0857 (-3.93%)	0.2623 (-2.12%)	0.1766 (-1.22%)	0.0857 (-3.93%)
	100% 적용	0.3772 (-2.57%)	0.2058 (-1.36%)	0.1713 (-3.98%)	0.1151 (-3.33%)	0.0295 (-1.37%)	0.0857 (-3.98%)	0.2620 (-2.23%)	0.1764 (-1.36%)	0.0857 (-3.98%)

- 주: 1) () 안은 기초노령연금 적용 전 지니계수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적용 후 지니계수 분해치의 변화를
 2) 전체 가구 수는 6,294가구, 노인가구는 2,047가구, 비노인가구는 4,247가구임(가중치 적용가구 수).
 3) 앞의 식에서 $k = 2$ 인 2×2 행렬로 산출된 것임.

- 40) 이병희(2007, p214)의 경우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를 0.303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진권·임병인(2004) 등에서도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으로는 지니계수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 전병유외(2007.4)에서는 도시가계조사와 노동패널조사간의 지니계수 상이성에 대해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KLIPS로 총가구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1997~2003년 기간 지니계수는 최소 0.4053부터 최대 0.4352값까지 나타나 통계청이 도시가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지니계수(동 기간 약 0.28~0.32)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두 데이터 셋 사이에 존재하는 표본의 성격 차이에 기인함을 밝혔다. 즉 KLIPS 데이터와는 달리 도시가계조사는 비농가 도시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의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추정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동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노인집단내의 집단내 불평등(0.1788)이 전체 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⁴²⁾

여기서 전체가구 기준 집단내 지니계수는 노인집단과 비노인집단 지니계수 기여분의 합이고, 집단간 지니계수는 노인집단과 비노인집단의 상호작용에 따른 불평등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집단을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집단내 지니계수는 세내내 불평등을, 집단간 지니계수는 세대간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이 세대간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전체가구 기준에서 집단간 지니계수 변화정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적용으로 집단간 지니계수는 적용 전에 비해 감소하여 수급범위가 확대될수록 감소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 기초노령연금은 세대간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8>에 제시된 결과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의 5%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수준에 따라 그 비율은 다소 변동할 여지는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노인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경우 소득재분배 수준은 더욱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표 6-9>는 급여수준을 높일 경우(A값의 10% 지원)의 지니계수 변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본적인 설명은 앞서와 같으나,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A값 지원 비율 대비 지니계수 변화율로 표현하면, A값 지원 비율이 5%p 증가(5%→10%)에 합계, 집단내, 집단간 지니계수 감소비율은 현행과 같이 수급범위 60%로 가정할 경우 전체가구 기준으로 각각 약 1.54%p(-1.78%→-3.32%), 0.87%(-1.00%→-1.87%), 2.33%(-2.70%→-5.03%)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물론 비노인가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당집단의 집단내 지니계수값이 크진 이유도 있겠지만, 비노인가구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9〉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A값의 10% 지원)

(단위 : 지니계수, %)

구분		불평등기여도(전체)			불평등기여도(노인)			불평등기여도(비노인)		
		합	집단내	집단간	합	집단내	집단간	합	집단내	집단간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3871 (0.00%)	0.2087 (0.00%)	0.1784 (0.00%)	0.1191 (0.00%)	0.0299 (0.00%)	0.0892 (0.00%)	0.2680 (0.00%)	0.1788 (0.00%)	0.0892 (0.00%)
기초 노령금 후	60% 적용	0.3742 (-3.32%)	0.2048 (-1.87%)	0.1694 (-5.03%)	0.1134 (-4.77%)	0.0287 (-4.00%)	0.0847 (-5.03%)	0.2608 (-2.68%)	0.1761 (-1.51%)	0.0847 (-5.03%)
	70% 적용	0.3716 (-3.99%)	0.2040 (-2.24%)	0.1676 (-6.04%)	0.1123 (-5.73%)	0.0284 (-4.80%)	0.0838 (-6.04%)	0.2594 (-3.22%)	0.1756 (-1.81%)	0.0838 (-6.04%)
	80% 적용	0.3695 (-4.53%)	0.2035 (-2.50%)	0.1661 (-6.91%)	0.1115 (-6.39%)	0.0284 (-4.84%)	0.0830 (-6.91%)	0.2581 (-3.71%)	0.1750 (-2.11%)	0.0830 (-6.91%)
	90% 적용	0.3680 (-4.92%)	0.2031 (-2.67%)	0.1649 (-7.55%)	0.1111 (-6.74%)	0.0286 (-4.30%)	0.0825 (-7.55%)	0.2570 (-4.11%)	0.1745 (-2.40%)	0.0825 (-7.55%)
	100% 적용	0.3679 (-4.97%)	0.2031 (-2.68%)	0.1648 (-7.65%)	0.1115 (-6.41%)	0.0291 (-2.71%)	0.0824 (-7.65%)	0.2564 (-4.33%)	0.1740 (-2.68%)	0.0824 (-7.65%)

- 주: 1) () 안은 기초노령연금 적용 전 지니계수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적용 후 지니계수 분해치의 변화를
 2) 전체 가구 수는 6,294가구, 노인가구는 2,047가구, 비노인가구는 4,247가구임(가중치 적용가구 수).
 3) 앞의 식에서 $k = 2$ 인 2×2 행렬로 산출된 것임.

따라서, A값 지원 비율의 증가에 따라 세대간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세대내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비노인가구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노인가구의 집단내 지니계수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즉, 지니계수 분해방법에 의해 산출되는 지니계수 값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이다⁴³⁾. 그러나, 비노인 집단의 집단내 지니계수 변화비율은 노인집단의 집단내 지니계수 변화비율에 비해 작으므로 비노인 집단의 집단내 지니계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집단의 집단내 지니계수 변화비율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니계수 절대 변화수치는 매우 적으므로 노인집단의 집단내 지니계수 변화도 전체 지니계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은 세대간 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세대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노인 세대내의 분배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노인가구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점적으로

43) 이는 앞의 식 (4)에서 $s_j = n_j \overline{Y_j} / n \overline{Y}$ 가 자신집단의 소득뿐 아니라 다른 집단의 소득까지 고려된 전체 소득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 노인가구 분석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으로 노인가구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변화효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노인가구 소득유형을 1분위~5분위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분해의 균형을 위해 비노인가구도 5가지 유형으로 하여 총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가구 중에서도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동 집단 간에도 재분배효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노인 가구를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단독수급 및 부부수급가구로 구분하여서도 살펴보았다. 다만, 분석결과는 노인가구 중심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소득분위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노인가구 중 1, 2분위 가구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소득 및 순자산 수준이 모두 떨어져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될 확률은 높으나, 급여수준은 예산 범위에 맞춰져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성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제도의 적용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수급자 선정은 가구 내 노인(65세이상)이 1명이상 존재하는 가구 중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60%⁴⁴⁾이하에서 결정된다. 동 분석에서는 이러한 현행 제도를 기본형태로 하고 단계별로 수급범위를 확대하여 노인가구 모두 (100%) 수급자가 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표 6-8〉과 〈표 6-9〉에서 노인가구의 집단내 지니계수 산출결과를 살펴보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다음으로 제도 적용 및 수급범위 확대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정도를 살펴본다.

44) 2008년에는 60%, 2009년에는 70%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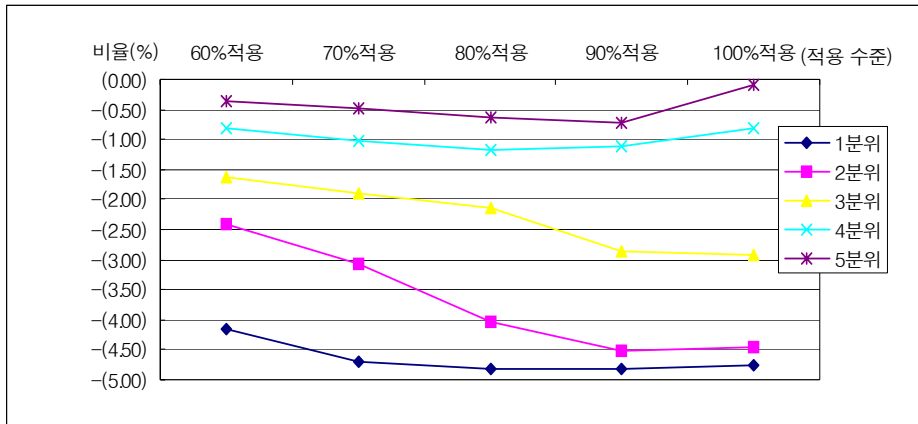
A값의 5%(10%)를 지원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노인가구의 집단내 지니계수는 0.0229로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적용 후 집단내 지니계수는 수급범위를 60%~100%로 할 경우, 각각 0.0292(0.0287), 0.0291(0.0284), 0.0291(0.0284), 0.0292(0.0286), 0.0295(0.0291)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으로 노인 세대내 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완화정도는 수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불평등도가 개선되다가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선율⁴⁵⁾을 비교할 때 A값의 5%를 지원할 경우(〈표 6-8〉) 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 70%에서 노인가구 집단내 지니계수 개선율이 최고로 나타나고, A값의 10%를 지원경우(〈표 6-9〉)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 80%에서 노인가구 집단내 지니계수 개선율이 최고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지니계수 개선치는 크지 않아 전체 지니계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구분(2×2행렬)에서 소득기준으로 각 5분위로 구분한 10×10행렬로 전환하여 노인 가구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다음 〈표 6-10〉과 같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를 각 5개 소득유형(총 10개 소득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초노령연금 적용 전후의 노인가구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계수 분배 방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동 분석결과는 국민연금 A값의 5%를 지원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후의 분석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하였다. 이는 A값의 10%를 지원하여도 재분배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 이외에는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가구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적용확대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6-3]과 같다. 이에 의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기초노령연금 적용 후에 지니계수 값이 줄어들어 그 개선율은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선 정도는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저소득층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45) 지니계수 분해치의 변화율이 -이면 ‘개선율’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6-3] 기초노령연금 적용 및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별 지니계수 개선율 추이



이제 노인가구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표 6-10>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자. 여기서는 집단내 지니계수 변화치가 절대적으로 작으므로 전체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가구의 전체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첫째, 노인 1분위 가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전과 적용범위 60%에서 100%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재분배효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적용범위를 80% 이상으로 할 경우 소득재분배성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집단내와 집단간으로 구분해 보면, 집단내의 경우는 비중이 작지만 기초노령연금 적용범위를 증가하면 재분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단간 지니계수는 다소 비중이 크고 적용범위를 80%까지는 재분배성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으로 경우 소득재분배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2분위와 3분위의 경우도 1분위와 크게 다르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90%까지 적용할 때 까지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다소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띠다가 이후에는 완만하게 나타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도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 개선 수준이 3분위 이하 소득계층보다는 작으며, 특징적인 것은 90%이상 적용 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들어 오히려 노인 가구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재분배 측면에서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노인가구의 집단내 지니계수는 여기서는 10×10 행렬로 산출된 것이므로 2×2 행렬 산출된 노인가구 집단내 및 집단간 지니계수와는 차이가 있다. 이유는 앞의 [그림 6-2]에서 보듯이 k (집단수)가 증가할수록 집단내 지니계수는 매우 감소하고 집단간 지니계수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6-10〉에서의 집단내 지니계수는 6개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지니계수 기여수준을 의미하므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의 동일한 특성가진 집단보다 집단 규모가 매우 작을 것이므로 집단내 지니계수는 작아지고 집단간 지니계수는 커지게 된다. 즉, 〈표 6-8〉에서의 집단내 지니계수는 [그림 6-2]의 오른쪽 그림 (2×2 행렬)에서의 $G11+G22(\sum_{i=1, j=1}^5 g_{ij} + \sum_{i=6, j=6}^{10} g_{ij})$ 에 해당하며, 〈표 6-10〉에서의 집단내 지니계수는 $\sum_{i=1}^{10} g_{ii}$ (단, $k=10$)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2×2 행렬에서의 집단내 지니계수 값이 $\sum_{i=1, j=1}^5 g_{ij} + \sum_{i=6, j=6}^{10} g_{ij} - \sum_{i=1}^{10} g_{ii}$ 만큼 크다고 하겠다.

종합적으로 보면, 적용범위를 확대할수록 노인가구의 소득재분배성은 증가하나 고소득 노인가구 계층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소 역진적⁴⁶⁾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집단간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방향에 따라 전체 불평등도는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재분배성이 나타나서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이전 보다 적용이후에는 포괄범위에 관계없이 재분배성을 갖지만, 제도적용 이후의 특정 포괄범위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역진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6-10〉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노인가구 소득유형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지니계수, %)

구분			지니계수 분해치(노인)					
			노인가구 Gini		WGC(집단내)		BGC(집단간)	
1분위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0524	(0.00)	0.0010	(0.00)	0.0514	(0.00)
	기초노령 연금 적용후	60%적용	0.0502	(-4.14)	0.0010	(-3.47)	0.0492	(-4.16)
		70%적용	0.0499	(-4.69)	0.0010	(-2.77)	0.0489	(-4.73)
		80%적용	0.0498	(-4.82)	0.0010	(-1.37)	0.0488	(-4.89)
		90%적용	0.0499	(-4.80)	0.0010	(-1.30)	0.0488	(-4.87)
		100%적용	0.0499	(-4.76)	0.0010	(-1.36)	0.0489	(-4.83)
2분위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0223	(0.00)	0.0004	(0.00)	0.0219	(0.00)
	기초노령 연금 적용후	60%적용	0.0217	(-2.40)	0.0004	(3.45)	0.0213	(-2.51)
		70%적용	0.0216	(-3.06)	0.0004	(1.67)	0.0212	(-3.14)
		80%적용	0.0214	(-4.05)	0.0004	(-1.39)	0.0210	(-4.10)
		90%적용	0.0212	(-4.50)	0.0004	(-1.27)	0.0209	(-4.56)
		100%적용	0.0213	(-4.45)	0.0004	(-1.36)	0.0209	(-4.51)
3분위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0126	(0.00)	0.0002	(0.00)	0.0124	(0.00)
	기초노령 연금 적용후	60%적용	0.0124	(-1.62)	0.0002	(1.70)	0.0122	(-1.67)
		70%적용	0.0124	(-1.91)	0.0002	(1.97)	0.0121	(-1.98)
		80%적용	0.0123	(-2.15)	0.0002	(3.17)	0.0121	(-2.24)
		90%적용	0.0122	(-2.87)	0.0002	(-1.14)	0.0120	(-2.90)
		100%적용	0.0122	(-2.92)	0.0002	(-1.36)	0.0120	(-2.94)
4분위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0108	(0.00)	0.0002	(0.00)	0.0107	(0.00)
	기초노령 연금 적용후	60%적용	0.0107	(-0.81)	0.0002	(1.82)	0.0106	(-0.86)
		70%적용	0.0107	(-1.01)	0.0002	(2.08)	0.0105	(-1.06)
		80%적용	0.0107	(-1.18)	0.0002	(1.96)	0.0105	(-1.23)
		90%적용	0.0107	(-1.12)	0.0002	(1.53)	0.0105	(-1.16)
		100%적용	0.0107	(-0.82)	0.0002	(-1.36)	0.0106	(-0.81)
5분위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0210	(0.00)	0.0006	(0.00)	0.0204	(0.00)
	기초노령 연금 적용후	60%적용	0.0210	(-0.36)	0.0006	(-0.32)	0.0203	(-0.36)
		70%적용	0.0209	(-0.47)	0.0006	(-0.42)	0.0203	(-0.47)
		80%적용	0.0209	(-0.64)	0.0006	(-0.48)	0.0203	(-0.64)
		90%적용	0.0209	(-0.71)	0.0006	(-0.46)	0.0203	(-0.72)
		100%적용	0.0210	(-0.11)	0.0006	(-1.42)	0.0204	(-0.07)
전체 (노인)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1191	(0.00)	0.0024	(0.00)	0.1167	(0.00)
	기초노령 연금 적용후	60%적용	0.1160	(-2.58)	0.0024	(-0.69)	0.1136	(-2.62)
		70%적용	0.1155	(-3.01)	0.0024	(-0.67)	0.1131	(-3.06)
		80%적용	0.1151	(-3.32)	0.0024	(-0.51)	0.1127	(-3.38)
		90%적용	0.1149	(-3.49)	0.0024	(-0.86)	0.1125	(-3.54)
		100%적용	0.1151	(-3.33)	0.0024	(-1.37)	0.1127	(-3.37)

주: 1) () 안은 기초노령연금 적용 전 지니계수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적용 후 지니계수 분해치의 변화율

2) 전체 가구 수는 6,294가구, 노인가구는 2,047가구, 비노인가구는 4,247가구이며, 이중 노인가구이면서 1~5분위 가구수는 각각 860, 461, 286, 226, 213가구임.

3) 앞의 식에서 $k=10$ 인 10×10 행렬로 산출 된 것임.

나) 수급여부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다음에서는 노인가구 중에서 수급여부별로 볼 때 세대내 소득재분배 현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 <표 6-11>은 노인가구를 수급과 비수급가구로 구분하고 비노인가구를 포함하여 3×3 행렬로 분석한 다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적용 전후의 지니계수 변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 6-11>에서 노인가구의 수급과 비수급에 따른 재분배효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수급자범위를 확대해 갈수록 노인 수급가구의 지니계수 값이 줄어들지만 노인 비수급 가구의 지니계수 값 또한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 수급가구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비수급 노인 가구에 남는 가구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비수급 노인가구 집단에서는 지니계수가 감소(빈도수 감소 효과)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지니계수 치의 상대비율로 표현하면 수급범위를 확대할수록 노인 수급 가구보다 노인 비수급 가구에서 지니계수 감소비율이 더욱 커서 수급가구 노인의 상대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11>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노인가구 수급여부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지니계수, %)

구분			전체		WGC(집단내)		BGC(집단간)	
			Gini	비율	Gini	비율	Gini	비율
기초노령연금 적용전(노인 전체)			0.1191		0.0143		0.1048	
기초노령연금 적용후	60%적용	노인(수급)	0.0699	(60.29)	0.0089	(62.92)	0.0610	(59.92)
		노인(비수급)	0.0461	(39.71)	0.0053	(37.08)	0.0408	(40.08)
		노인(전체)	0.1160	(100.00)	0.0142	(100.00)	0.1018	(100.00)
	70%적용	노인(수급)	0.0698	(60.43)	0.0089	(63.18)	0.0609	(60.05)
		노인(비수급)	0.0457	(39.57)	0.0052	(36.82)	0.0405	(39.95)
		노인(전체)	0.1155	(100.00)	0.0141	(100.00)	0.1014	(100.00)
	80%적용	노인(수급)	0.0697	(60.58)	0.0089	(63.34)	0.0608	(60.20)
		노인(비수급)	0.0454	(39.42)	0.0052	(36.66)	0.0402	(39.80)
		노인(전체)	0.1151	(100.00)	0.0141	(100.00)	0.1011	(100.00)
	90%적용	노인(수급)	0.0697	(60.65)	0.0089	(63.32)	0.0608	(60.28)
		노인(비수급)	0.0452	(39.35)	0.0052	(36.68)	0.0401	(39.72)
		노인(전체)	0.1149	(100.00)	0.0140	(100.00)	0.1009	(100.00)
	100%적용	노인(수급)	0.0697	(60.55)	0.0089	(62.93)	0.0608	(60.22)
		노인(비수급)	0.0454	(39.45)	0.0052	(37.07)	0.0402	(39.78)
		노인(전체)	0.1151	(100.00)	0.0141	(100.00)	0.1010	(100.00)

주: 1) ()안의 비율은 해당 집단별 노인가구(전체) 지니계수 대비 비율임

기초노령연금 적용을 전후로 하여 노인 가구의 소득재분배 상태가 개선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100%적용 시는 90%적용 시 보다 다소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적용범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수록 노인 수급가구의 지니계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재분배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으나 포괄성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포괄범위 90%까지는 전체 지니계수가 0.1149로 나타나고 있고 100%수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적용 전 보다는 낮지만 0.1151로 나타나 적용범위를 일정이상으로 할 경우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는 앞에서의 〈표 6-8〉에서의 설명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다) 단독 및 부부노인 수급유형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다음에서는 노인가구 수급자를 단독 및 부부수급기준으로 분리할 때 세대내 소득재분배 현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 〈표 6-12〉는 〈표 6-11〉에서 노인 수급가구를 단독 및 부부기준으로 분리하여 4×4행렬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비수급과 전체 노인가구에서의 지니분해 결과는 동일하므로 이는 생략하였다.

〈표 6-12〉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단독 및 부부 노인 수급유형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지니계수, %)

구분				지니계수 분해치(전체)					
				Gini		WGC(집단내)		BGC(집단간)	
수급 가구	노인 단독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0524	(0.00)	0.0051	(0.00)	0.0473	(0.00)
		기초노령연금 적용후	60%적용	0.0507	-(3.28)	0.0050	-(0.82)	0.0457	-(3.55)
			70%적용	0.0506	-(3.47)	0.0050	-(0.93)	0.0456	-(3.74)
			80%적용	0.0505	-(3.55)	0.0050	-(1.08)	0.0455	-(3.82)
			90%적용	0.0505	-(3.61)	0.0050	-(1.22)	0.0455	-(3.87)
			100%적용	0.0505	-(3.62)	0.0050	-(1.36)	0.0455	-(3.86)
	노인 부부	기초노령연금 적용전*		0.0201	(0.00)	0.0005	(0.00)	0.0195	(0.00)
		기초노령연금 적용후	60%적용	0.0193	-(3.82)	0.0005	-(0.91)	0.0188	-(3.90)
			70%적용	0.0192	-(4.07)	0.0005	-(0.94)	0.0187	-(4.15)
			80%적용	0.0192	-(4.12)	0.0005	-(1.08)	0.0187	-(4.20)
			90%적용	0.0192	-(4.14)	0.0005	-(1.22)	0.0187	-(4.22)
			100%적용	0.0192	-(4.13)	0.0005	-(1.36)	0.0187	-(4.20)

주: 1) () 안은 기초노령연금 적용 전 지니계수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적용 후 지니계수 분해치의 변화율(개선율)

2) 수급자 비율을 60%로 할 경우, 수급노인 가구 수는 1,229가구, 이중 노인단독가구는 886가구, 노인부부가구는 343가구로 분석된 것임.

3) *는 가구소득 기준 60%이하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 값임.

〈표 6-12〉에 의하면, 수급가구 중 노인부부 가구에 비해 노인단독 가구의 지니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의 소득격차에 의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집단 내 구성원 수, 즉 수급노인가구 중 노인단독 가구(886가구)가 노인부부가구(343가구)보다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⁴⁷⁾. 한편, 수급범위를 확대해 갈수록 노인단독보다는 노인부부 가구의 개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되는 지니계수의 절대치가 매우 작으므로 전체 분배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값의 5%수준에서 지원한다고 할 경우 수급가구 중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원 규모를 증가한다면 다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지니계수 측면에서의 변화⁴⁸⁾는 여전히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7) 즉, 두 집단규모의 상대비율이 2.6 : 1이므로 지니계수 격차도 이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48) A값의 5%수준에서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도 수급자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가구의 지니계수는 소숫점 4자리 정도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는 것을 볼 때 A값의 10%정도의 변화도 지니계수 변화 측면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 소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탄생은 국민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연금 평균소득인 A값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하락과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분석은 국민연금 제도와 연계 속에서 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다층노후소득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999년 4월에 전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지만, 재정문제를 비롯한 사각지대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등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2007년 7월 개정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만을 의지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되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가 있어 다층화가 되어있지만, 체계적으로 총화를 실현하지 못해 다층적 의미의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나아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체계화한 실질적 의미의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축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층체계 관점에서 공적연금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공적연금이라기 보다는 공공부조적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저소득노인계층에 대해 2009년 이후 노인가구의 70%까지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공적연금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그 동안 소득재분배 지수 중 가장 일반화된 형태인 Gini계수를 활용한 제도분석에 있어서 분해적 요소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요인별 효과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여 Gini계수를 요인분해 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분배 요인을 관찰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 A값의 5%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 전후의 분배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기초노령연

금제도의 도입은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향상(비록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을 가져와 사회전체의 분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수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재분배는 개선되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는 무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내 및 집단간의 재분배적 요소의 영향에 의해 개선되다가 약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동 분석에 의하면 수급범위 80~90%를 전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의 순기능성이 약화되는 전환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원수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연금 A값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재분배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특성에 있어서는 5% 지원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노인가구를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 적용 전후에 따른 효과가 1분위 노인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제도적용을 받지 않는 비빈곤 노인가구의 경우도 상대소득의 변화로 인해 지니계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여섯째, 수급여부별로 구분하여 노인가구 소득재분배성을 살펴본 결과, 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갈수록 노인 수급가구의 지니계수 값이 줄어들지만 노인 비수급 가구의 지니계수 값 또한 감소하는데, 이는 노인 수급가구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비수급 노인 가구에 남는 가구 수는 줄어들어 나타나는 효과로 설명되었다. 일곱째, 수급가구 중 노인부부 가구에 비해 노인단독 가구의 지니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 소득격차라기 보다 집단내 빈도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다소 효과적일 수 있으나, 빈곤으로 부터의 완전한 탈피 혹은 강한 재분배성을 갖기에는 현행 국민연금 A값의 5%수준의 수급액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현행제도의 소득재분배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기초노령연금의 100%수급권 보장은 노인가구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는 이로운 것으로 판단되나, 재분배 관점에서는 다소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과정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실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개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에 있어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와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경로연금제도가 서울(50:50)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70:30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비율을 일괄 적용했던 것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고령화율을 반영하여 차등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며,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도의 국가부담 비율은 회계년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최근3년간 재정자주도 평균치와 회계년도 전전년도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수에 기초한 노인인구비율에 기초하여 확정된 <표 6-13> 과 같은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231개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가부담 비율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14> 와 같다.

<표 6-13> 기초노령연금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기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표 6-14〉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별 분포

		06년 노인인구비율		
		14%미만	14%이상 20%미만	20%이상
3년간 평균 재정 자주도 평균치	90% 이상	국가부담비율: 40%	국가부담비율: 50%	국가부담비율: 60%
		3개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 과천시	-	-
	80% 이상 90% 미만	국가부담비용비율: 50%	국가부담비용비율: 60%	국가부담비용비율: 70%
		27개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충남) 계룡시	-	-
	80% 미만	국가부담비율: 70%	국가부담비율: 80%	국가부담비율: 90%
		108개 (서울)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시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가장군,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철원군,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41개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전남)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울릉군, (경남)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52개 (인천) 강화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실제 국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표 6-15>와 같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율을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도 편차가 나타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과 기초가 50:50의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이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높아 70:30이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 60:40으로 분담하고 있다.

도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20:80의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어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율이 높다. 예외적으로 전라북도가 30:70, 경상남도가 50:50의 분담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6-15>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고-광역-기초의 분담비율 실태

지역	기초단체수	국가 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	계
서울특별시	2	40	30(50:00)	30(50:00)	100.0
	19	50	25(50:00)	25(50:00)	100.0
	4	70	15(50:00)	15(50:00)	100.0
부산광역시	16	70	21(70:00)	9(30:00)	100.0
대구광역시	8	70	18(60:00)	12(40:00)	100.0
인천광역시	8	70	18(60:00)	12(40:00)	100.0
	1	80	12(60:00)	8(40:00)	100.0
	1	90	6(60:00)	4(40:00)	100.0
광주광역시	5	70	18(60:00)	12(40:00)	100.0
대전광역시	5	70	18(60:00)	12(40:00)	100.0
울산광역시	5	70	18(60:00)	12(40:00)	100.0
경기도	1	40	12(20:00)	48(80:00)	100.0
	7	50	10(20:00)	40(80:00)	100.0
	20	70	6(20:00)	24(80:00)	100.0
	3	80	4(20:00)	12(80:00)	100.0
강원도	8	70	6(20:00)	24(80:00)	100.0
	10	80	4(20:00)	16(80:00)	100.0
충청북도	5	70	6(20:00)	24(80:00)	100.0
	4	80	4(20:00)	16(80:00)	100.0
	3	90	2(20:00)	8(80:00)	100.0
충청남도	1	50	10(20:00)	40(80:00)	100.0

지역	기초단체수	국가 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	계
전라북도	3	70	6(20:00)	24(80:00)	100.0
	8	80	4(20:00)	16(80:00)	100.0
	4	90	2(20:00)	8(80:00)	100.0
	3	70	9(30:00)	21(70:00)	100.0
	3	80	6(30:00)	14(70:00)	100.0
전라남도	8	90	3(30:00)	7(70:00)	100.0
	4	70	6(20:00)	24(80:00)	100.0
	3	80	4(20:00)	16(80:00)	100.0
경상북도	15	90	2(20:00)	8(80:00)	100.0
	5	70	6(20:00)	24(80:00)	100.0
	6	80	4(20:00)	16(80:00)	100.0
경상남도	12	90	2(20:00)	8(80:00)	100.0
	8	70	15(50:00)	15(50:00)	100.0
	3	80	10(50:00)	10(50:00)	100.0
	9	90	2(20:00)	8(80:00)	100.0
제주특별자치도	1	70	30	-	100.0

나. 분석 자료 개요

기초노령연금이 경로연금에 비하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복지사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초노령연금도입 후에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예산규모 및 복지사업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경험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자치도⁴⁹⁾와 231개 기초자치단체 중 30%를 선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 무작위 30%를 선정하여 6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49) 제주특별자치단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있어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선정의 모집단에서 제외시켰음.

〈표 6-16〉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명

시도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명	시도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명
서울	서초구 용산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북구 강서구	경기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광주시 과천시 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부산	강서구 진구 중구 동래구 사상구	강원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인제군
대구	달성군 중구 달서구	충북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영동군
인천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충남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홍성군 계룡시
광주	광산구	전북	정읍시 장수군 고창군 순창군
대전	중구	전남	여수시 화순군 순천시 무안군 강진군 고흥군 완도군
울산	중구	경북	경산시 영천시 예천군 청도군 의성군 봉화군
		경남	진해시 양산시 사천시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

본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기초자치단체 인구현황자료, 기초노령연금수급자현황, 재정자주도, 기초자치단체의 2007~2008년 세출예산자료이다.

기초자치단체 인구현황자료는 2007년과 2008년도의 노인인구수와 총 인구수자료로 이는 통계청(<http://www.kosis.kr>)의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현황자료는 2008년 12월말 기준 지역별 수급자현황자료(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의 재정자주도 관련 자료는 2004~2006년(3개년) 행정자치부의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 게시된 재정자주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현황자료는 69개 선별된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부 세출내역과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2007~2008년 예산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예산항목은 총예산(국고, 광역, 자체), 사회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국고, 광역, 자체), 경로연금(국고, 광역, 자체), 교통수당(광역, 자체), 기초노령연금(국고, 광역, 자체)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69개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율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17〉과 같으며, 이하 분석은 이러한 국고보조율별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을 분류하여 기초노령연금관련 예산의 특성과 변화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⁵⁰⁾.

50) 연도별 예산의 비교는 물가상승율, 예산의 자연증가율, 신규사업 실시 등을 감안하여야 정확할 것이나 그러한 내용을 표준화하여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자료가 취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표 6-17〉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별 분포

		06년 노인인구비율		
		14%미만	14%이상 20%미만	20%이상
3년간 재정 자주도 평균치	90% 이상	국가부담비용비율: 40%	국가부담비용비율: 50%	국가부담비용비율: 60%
		2개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시	-	-
	80% 이상 90% 미만	국가부담비용비율: 50%	국가부담비용비율: 60%	국가부담비용비율: 70%
		7개 (서울)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동구, (경기) 안양시, 용인시, (충남) 계룡시	-	-
	80% 미만	국가부담비용비율: 70%	국가부담비용비율: 80%	국가부담비용비율: 90%
		35개 (서울) 강북구, 강서구, (부산) 중구, 진구, 동래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 남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중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인제군, (충북) 제천시, 증평군, (충남) 아산시, 서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해시, 양산시	9개 (경기) 양평군, (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충남) 연기군,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화순군, (경북) 영천시, (경남) 사천시	16개 (인천) 강화군, (충북) 영동군, (전북)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전남) 고흥군, 강진군, 무안군, 완도군, (경북) 의성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주: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자주채원)/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임.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채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부부금의 합계액임.

다. 2008년도의 예산구성 현황

분석대상이 된 69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율을 살펴보면 평균 수급자수는 12,188명이며 평균수급율은 60.6%이다(〈표 6-16〉 참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최소 1,661명부터 최대 34,383명까지 큰 변이를 보이며 수급률도 25.4%~89.5%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의 경제수준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의 단순 비교만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예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큰 차이가 있고 행정적인 서비스 대상이 되는 절대적인 수급자의 규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수 및 수급율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큰 차이가 발견된다. 수급자수는 중앙지원율 50%(이하 유형2) 지역이 가장 높아 16,066명이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이 80%(이하 유형4)이나 90%(이하 유형5)인 기초자치단체는 만명 전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고보조율이 40%(이하 유형1)인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수는 4,910명으로 가장 적다. 즉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령화율이 한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수급자수는 고령화율이 14%미만이며 재정자주도가 80~90% 수준인 기초자치단체(유형2)의 경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수급율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율과 비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유형1의 기초자치단체는 수급율이 29.3%인 반면, 유형5인 기초자치단체는 수급율이 71.6%로 2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율이 재정자주도와 고령화율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는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인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정경희 외, 2006)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관련 평균 예산액은 92억 6,111만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의 평균 예산액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평균수급자수가 많은 가장 많은 유형2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가 평균 예산액은 약 132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유형3의 기초자치단체로 100억 9,592만원이다. 이에 반해 평균수급자수가 4,910명으로 국고보조율이 가장 낮은 유형1의 경우 4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6-18〉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예산액 현황

(단위: 기초자치단체수, 명, %, 천원)

재정자주도 및 고령화율	중앙 지원을	기초자치 단체수	기초노령연금 평균 수급자수	기초노령연금 평균 수급률	기초노령연금 평균 예산액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2	4,910	29.3	4,525,248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6	16,066	40.6	13,256,975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36	13,648	59.6	10,095,921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9	10,264	65.7	7,981,634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16	9,440	71.6	7,191,714
전체		69	12,188	60.6	9,260,110
최소			1,661	25.4	1,179,779
최대			34,583	89.5	25,653,013

1) 기초자치단체 총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비중

2008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총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3.2%이며, 최소 0.8%부터 최대 9.7%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서 갖는 비중과 부담은 상이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총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의 비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가 가장 적은 유형1에서는 전체예산의 약 1.5%인 반면, 수급자수가 많은 유형2와 유형3은 각각 3.8%와 3.6%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총예산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초자치단체내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즉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총액 중 기초노령연금의 자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0.7%로 총 예산중 기초노령연금총액의 비중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높은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 또한 기초자치단체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에 비례하고 있어 유형2가

1.2%, 유형3이 0.8%이다. 그러나 유형1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는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기초자치단체 부담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로 유형6의 0.3%에 비하여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초노령수급자수의 차이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15.0%로 노인인구의 비중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유형5에서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20.2%를 나타나고 있고 유형1에서 그 비율이 8.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5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적고 기초노령연금수급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기초노령연금예산이 노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46.8%로 노인복지사업의 절반가량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지역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정자주도가 높은 유형1에서는 노인복지예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형2에서는 51.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유형5의 48.0%, 유형3의 47.2%, 유형4의 45.5%의 순이다. 이는 노인복지사업중 기초노령연금제도 이 외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고보조를 자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의 영향이 큼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6-19〉 기초자치단체의 총 예산 및 사업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에 차지하는 비중

(단위:%)

	중앙 지원율	총예산대비 기초노령연금 비중	자체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의 자체예산 비중	사회복지예산 대비 기초노령연금 비중	노인복지예산 대비 기초노령연금 비중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1.5	0.6	8.5	19.2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3.8	1.2	14.9	51.7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3.6	0.8	13.0	47.2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2.5	0.5	15.4	45.5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2.8	0.3	20.2	48.0
전체		3.2	0.7	15.0	46.8
최소		0.8	0.2	5.4	13.8
최대		9.7	1.7	25.1	65.1

2) 기초노령연금 예산 중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규모와 비중

재정자주도와 고령화율을 감안한 국고부담의 차등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급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예산에 있어서의 국고부담의 차등이 의도한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급증시키지 않거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예산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6-20〉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중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평균 16억 1,847만원인데, 최소 2억 2,051만원에서 최대 79억 183만원까지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의 절대적 규모에 편차가 크다.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유형2가 가장 그 예산규모가 커 평균 약 42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약 18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유형3, 약 15억원을 지출하는 유형1, 12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유형4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는 국고보조율이나 노인인구 비율보다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절대적인 수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반면 유

형5에서는 약 5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유형2의 1/8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 것이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규모가 유형1에 비하여 약 절반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국고보조율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매우 경감시켰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인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액수는 129만5천원이며 이는 국고부담율과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다. 즉, 유형1의 경우 341만8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유형2로 249만5천원, 유형3은 134만5천원, 유형4는 112만7천원이다. 유형5의 경우 그 액수가 56만2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유형4의 약 절반수준이며 유형1과 비교해서는 1/5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지급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총예산에서 평균 1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담비는 최소 3.5%에서 48.0%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동 비율은 유형1의 경우 가장 높아 39.4%이며, 다음이 유형2로 30.0%로 유형1과 유형2는 모두 기초노령연금예산총액의 3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반면 유형3과 유형4는 각각 18.3%와 14.6%로 10%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형5는 가장 낮은 수준인 7.4%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국고보조율과 반비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은 재정자주도 80%를 기준으로 하여 양분되며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이 급감하며, 특히 유형5에서 분담율이 7.4%대로 매우 낮은 것이다.

〈표 6-20〉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중 자체예산액수 및 비중

(단위: 천원, %)

	중앙 지원율	기초노령연금 예산 중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지출액	수급자1인당 기초자치단체 부담 평균 액수	기초노령연금 예산 중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부담율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1,531,259.0	341.8	39.4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4,235,542.3	249.5	30.0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1,780,941.4	134.5	18.3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1,151,950.9	112.7	14.6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544,836.1	56.2	7.4
전 체		1,618,472.4	129.5	16.9
최소		220,512	24.4	3.5
최대		7,901,827	392.3	48.0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관련 예산의 변화

1) 노후소득보장 예산의 변화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2007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지급되었었다. 경로연금은 소득과 재산조사에 기초하여 하위 15% 내외 수준에 지급액이 5만원~3만 630원으로 지급되었던 제도이며, 교통수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한 모든 65세 이상에게 지급되었던 제도이다. 2008년 경로연금을 확대개편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교통수당은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단계별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과도기적으로 교통수당과 관련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후소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한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⁵¹⁾.

51) 2007년도의 경우 노후소득관련예산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5%이며, 2008년도의 경우는 10.2%이다.

〈표 6-21〉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가현황(2007~2008년)

	중앙 지원율	2007년 평균 노후소득보장예산	2008년 평균 노후소득보장예산	평균 증가액	평균 증감율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2,785,966	6,003,288	3,217,322	114.8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6,036,388	15,560,036	9,523,648	153.9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4,177,993	11,187,394	7,009,401	168.0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3,547,509	8,756,926	5,209,417	147.4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3,121,776	7,979,970	4,858,193	158.5
전 체		3,972,087	10,356,592	6,384,505	160.3
최소		515,393	1,335,207	819,814	77.0
최대		10,429,575	28,182,229	17,752,654	227.3

〈표 6-21〉에 의하면 2007년도의 노후소득보장관련 총예산은 평균 39억7,209만원으로 최소 5억 1,539만원부터 최대 104억 2,958만원까지 약 100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8년도의 경우는 13억 3,521만원부터 281억 1,322만원까지로 변화하여 약 270억 정도의 차이로 그 폭이 커졌음을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2007년 대비 2008년의 노후소득보장관련 총예산의 증가액을 살펴보면 평균 63억 8,451만원이 증가하였고 최소 증가액을 보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8억1,981만원이 증가하였고 최대 증가액을 보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77억5,265만원의 증가하였다. 증감율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의 예산은 평균 2007년 예산의 1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노후소득보장관련 총예산이 감소하여 2007년도 대비 77%수준인 곳이 있는 반면 2007년의 2.3배의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관련 총예산의 변화를 국고보조율에 따라 살펴보면 절대 증가액의 경우는 유형2가 가장 그 규모가 커서 95억 2,365만원이며 다음이 유형3으로 70억901만원이다. 다음은 52억 942만원인 유형4이며 유형5도 48억 5,819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액의 규모가 적은 곳은 유형1로 32억 1,732만원이다. 이러한 예산의 변화를 증가율로 살펴보면 유형3의 경우가 증가율이 가장 높아 1.7배

이며, 다음이 유형5로 1.6배, 유형2와 4가 약 1.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형1이 증감율이 가장 낮아 1.1배 수준이다. 즉 유형2는 증가액의 규모는 가장 크지만 증가율로는 유형3이 가장 높으며, 유형1은 증가액의 규모나 증가율에 있어 모두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소득과 관련된 예산의 전부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22〉에 의하면 2007년에 기초자치단체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과 관련하여 부담한 예산은 평균 21억 8,059만원인데 비하여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교통수당과 같은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24억 483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2억2,424만원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비 5.7%의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2007년의 노후소득보장예산은 3억 8,447만원~72억 5,713만원의 범주를 보이고 있고, 2008년의 경우는 4억 2,894만원~104억 9,506만원으로 큰 변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7~2008년 사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의 변화액수는 11억 4,548만원이 감소한 기초자치단체부터 45억 9,675만원이 증가한 기초자치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예산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8년에 노후소득보장예산이 오히려 61.4%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거의 2배 수준인 97.1%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결과는 곧 기초노령연금도입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제도도입에 앞서 우려했던 것처럼 모든 기초자치단체에게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하는 예산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국가부담비율을 차등화하여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대시키지 않으려는 제도설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오히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감소를 가져온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생겨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간에 형평성에 문제를 가져왔다는 점도 발견된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예산중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 예산의 변화를 국가부담비율에 따라 비교해보면 국가부담비율이 40%인 기초자치단체는 69.2%의 증가율을, 50%인 기초자치단체는 6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70%인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는 15.6%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중앙정부가 기초노령연금예산의 70% 이하를 부담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이 증가하였다. 반면 80%를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오히려 14.1%의 감소를, 9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34.2%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분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표 6-22〉 노후소득보장예산 중 기초부담의 변화

	중앙 지원율	노후소득보장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액수 및 변화율			
		2007	2008	평균 변화액수	변화율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1,475,683	2,442,026	966,343	69.2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3,462,478	5,711,182	2,248,703	61.6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2,247,878	2,552,555	304,677	15.6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2,103,400	1,810,110	-293,290	-14.1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1,680,033	1,162,446	-517,586	-34.2
전체		2,180,594	2,404,830	224,236	5.7
최소		384,467	428,942	-1,145,479	-61.4
최대		7,257,129	10,495,055	4,596,746	97.1

이렇게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에 있어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율을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 〈표 6-23〉이다. 유형1의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액이 2007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유형2의 경우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액의 증가를 경험하였는데 대다수가 4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유형3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36개중 5.6%인 2개 지역은 20~40%의 감소를 30.6%는 20%미만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 11개 기초자치단체는 20~40% 미만의 증가를 7개 기초자치단체는 4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절반은 예산의 감소를 다른 절반은 예산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고보조율은 동일하지만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의 규모 변화의 양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형4의 경우는 9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개⁵²⁾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유형5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1개 소⁵³⁾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4의 경우는 20% 미만의 감소가 다수인 것에 비하여 유형5는 20% 이상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40% 이상의 감소를 보이는 기초자치단체도 유형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낮은 유형1과 유형2는 모두 예산의 증가를 경험하였고 국고보조율이 매우 높은 유형4와 5는 대부분이 예산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반면 국고보조율이 70%인 유형3의 경우는 증가와 감소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등 유형 내에서도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

〈표 6-23〉 노후소득보장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부담액의 변화율(2007-2008년)

	중앙 지원율	40% 이상 감소	20~40%미 만 감소	20% 미만 감소	20% 미만 증가	20~40% 미만 증가	40%이상 증가	계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	-	-	-	-	2(100.0)	2(100.0)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	-	-	16.7(1)	-	83.3(5)	100.0(6)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	5.6(2)	30.6(11)	13.9(5)	30.6(11)	19.4(7)	100.0(36)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	22.2(2)	66.7(6)	11.1(1)	-	-	100.0(9)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31.3(5)	56.3(9)	6.3(1)	6.3(1)	-	-	100.0(16)
전 체		7.2(5)	18.8(13)	26.1(18)	11.6(8)	15.9(11)	20.3(14)	100.0(69)

2)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복지예산에 미친 영향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2008년의 예산의 2007년도 대비 변화를 전체예산의

- 52) 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노령연금예산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2007년에 비하여 매우 크게 감소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동일유형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중 10개는 2007년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증가하였음.
- 53) 이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도의 노후소득예산중 교통수당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형내의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노후소득예산중 교통수당예산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8.1%이나 본 기초자치단체는 본 비중이 19.3%에 달하고 있음.

증가율에 비하여 노후소득예산의 증가폭이 매우 큼을 볼 수 있다. 즉 전체예산의 증가율은 18.2%인데 비하여 노후소득보장예산은 60.3%로 약 42%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증가율에 비하여 그 폭이 큰 30.0%이며, 노인복지는 이보다 높은 7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나 노인복지예산의 경우 모두 노후소득보장예산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8.2%와 22.0%로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가가 노인복지예산의 증가와 그 결과 사회복지전체 예산의 증대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변화에는 기초자치단체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전체예산의 경우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기초자치단체부터 54.7%까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까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별 차이의 폭이 더 커서 -6.3%~107.9%의 범주를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의 경우는 최대 증가율을 보인 기초자치단체는 169.5%에 달하고 있다. 이 또한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여 노인복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간의 변화의 양상에 있어 편차가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변화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증가율에 있어서는 유형1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증가율은 비교적 유형별 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제외한 사회복지예산증가율을 살펴보면 유형4의 경우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급감한다. 노인복지전체예산의 경우 유형2에서 가장 증가율이 커(93.9%) 거의 2배가 된 반면 유형1의 경우는 20.4%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유형4, 유형5, 유형6은 60~7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예산중 노후소득예산을 제외한 예산, 즉 기타노인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유형2와 유형3은 20%대의 증가율을 유형4와 유형5는 1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형1은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감소하였다.

앞서 살펴본 예산항목별로 나타나는 유형별 차이를 종합하여 보면, 유형1의 경우는 전체예산의 증가율이 매우 낮으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평균수준, 노인소득보장예산의 증가폭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타노인복지예산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복지를 제외한 사회복지의 증가는 총예산의 증가폭에 비하여 크게 이루어졌지만 기타노인복지사업예산은 거의 변화가 없다.

유형2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국평균과 유사한 변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

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폭이 큰 편이며, 기타노인복지의 경우도 평균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형3의 경우는 전체예산, 사회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에 있어서 평균보다 약간씩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형4는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5의 경우는 총예산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사회복지예산과 노인복지예산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형5의 경우는 노후소득보장예산증가율이 전국평균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노인복지예산증가율이 평균보다 낮고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도 평균보다 낮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산증가가 평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타노인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일반을 축소하는 일방적인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타노인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변화의 폭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이다.

〈표 6-24〉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예산 증감율(2007~2008)

	중앙 지원율	전체예산 증가율	사회복지예산 변화		노인복지예산 변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노후소득 보장 제외 증가율	노인복지 예산의 평균 증가율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노인복지 평균 증가율	노후소득보장 예산의 평균 증가율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4.8	23.6	17.0	20.4	-0.1	14.8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20.5	38.3	26.2	93.9	25.9	53.9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19.2	31.4	21.1	78.1	26.9	68.0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13.5	21.3	9.9	62.6	14.0	47.4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19.6	29.6	13.4	66.5	16.6	58.5
전 체		18.2	30.0	18.2	73.7	22.0	60.3
최소		-2.4	-6.3	-12.3	0.9	-47.9	-23.0
최대		54.7	107.9	96.1	169.5	126.6	127.3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의 증감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제외한 사회복지예산의 변화실태를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감소한 36개 기초자치단체중 5.6%만이 노후소득보장을 제외한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한 33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3.0%만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형과도 무관하다.

〈표 6-25〉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자체예산) 증감에 따른 사회복지예산(노후소득보장 제외)의 증감실태(2007~2008)

	중앙 지원율	비소득 소득예산(자체예산)		10%이상 감소	10%미만 감소	10%미만 증가	10%이상 증가	계
		감소	증가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감소	-	-	-	-	-	-
		증가	-	-	-	100.0(2)	100.0(2)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감소	-	-	-	-	-	
		증가	-	-	16.7(1)	83.3(5)	100.0(6)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감소	-	-	23.1(3)	76.9(10)	100.0(13)	
		증가	4.3(1)	-	13.0(3)	82.6(19)	100.0(23)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감소	-	12.5(1)	50.0(4)	37.5(3)	100.0(8)	
		증가	-	-	-	100.0(1)	100.0(1)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감소	-	6.7(1)	33.3(5)	60.0(9)	100.0(15)	
		증가	-	-	100.0(1)	-	100.0(1)	
전 체		감소	-	5.6(2)	33.3(12)	61.1(22)	100.0(36)	
		증가	3.0(1)	-	15.2(5)	81.8(27)	100.0(33)	

다음으로는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의 증감에 따른 기타노인복지예산의 변화실태를 비교해보았는데(〈표 6-26〉 참조), 이를 통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이 기타 노인복지사업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의 증감에 따른 기타 노인복지사업예산의 일관된 변화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감소하였음에도 기타노인복지예산이 감소한 기초자치단체가 감소를 경험한 기초자치단체의 약 1/3에 달하고

있으며⁵⁴⁾,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증가한 기초자치단체중 2/3는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노인복지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요약하면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의 증대와 기타노인복지예산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한 지자체는 약 15%에 불과하다. 이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26〉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자체예산) 증감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노인복지예산 증감(2007~2008)

	중앙 지원율	비소득	10%이상 감소	10%미만 감소	10%미만 증가	10%이상 증가	계
		소득예산 (자체예산)					
재정자주도 90이상, 노인인구 14%미만	40% (유형1)	감소	-	-	-	-	-
		증가	50.0(1)	-	-	50.0(1)	100.0(2)
재정자주도 80~9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50% (유형2)	감소	-	-	-	-	-
		증가	-	16.7(1)	-	83.3(5)	100.0(6)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미만	70% (유형3)	감소	7.7(1)	30.8(4)	7.7(1)	53.8(7)	100.0(13)
		증가	17.4(4)	13.0(3)	4.3(1)	65.2(15)	100.0(23)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14이상~20%미만	80% (유형4)	감소	25.0(2)	12.5(1)	12.5(1)	50.0(4)	100.0(8)
		증가	0	0	0	100.0(1)	100.0(1)
재정자주도 80미만, 고령화율 20%이상	90% (유형5)	감소	20.0(3)	6.7(1)	6.7(1)	66.7(10)	100.0(15)
		증가	100.0(1)	0	0	0	100.0(1)
전 체		감소	16.7(6)	16.7(6)	8.3(3)	55.6(20)	100.0(36)
		증가	18.2(6)	12.1(4)	3.0(1)	66.7(22)	100.0(33)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분담비용의 부담형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노후소득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6-27〉과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분담비용 비율별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노후소득예산의 변화실태를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분담비용 비율에 따른 일정한 변화 유형이 도출되지 않았다. 즉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분담비용 비율별로 감소

54)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노인복지예산의 증가율이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55)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의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를 경험한 기초자치단체와 증가를 경험한 기초자치단체가 혼재해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부담형태가 기초단체의 부담액 변화에 일관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7〉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수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예산에서의 기초자치단체 부담의 증감 현황

	감소	증가	계
20(도 지역:전북제외)	22	22	44
30(전북)	4	0	4
50(서울)	1	4	5
55(서울 예외) ¹⁾	0	2	2
60(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	2	9
70(부산)	2	3	5
전체	36	33	69

주: 1) 광역지자체가 50%를 부담하되, ①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자치구 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② 노인인구수가 자치구 평균보다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시 전체 노인인구비율보다 높은 경우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된 경우 5%p 추가 부담.

마. 소결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전인 2007년과 도입 후인 2008년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분석결과 평균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후 노후소득보장예산이 2007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성상의 변화양상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하다. 구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도의 노후소득관련 예산 총액은 급증하였다. 즉, 2008년도의 노후소득관련 예산 총액은 2007년도에 비하여 평균 63억 8,451만원이 증가한 103억5,659만원으로, 이는 2007년 예산의 160.3%의 규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소득관련 예산 총액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커 분석대상 69개 기초자치단체중 2007년에 비하여 최대 97.1%가 증가한 곳이 있는 한편 61.4%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까지 그 변화의 폭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절대 액수로 2007년에 비하여 노후소득예산이 46억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약 11억 4천만원이 감소한 기초자치단체까지 다양하다. 즉, 평균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예산증대가 있었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한 규모의 예산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둘째, 이러한 노후소득관련 예산총액의 증가가 곧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노후소득예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을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중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약 절반은 감소를 경험하였다. 반면, 40% 이상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도 약 1/5의 규모에 달하는 등의 크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제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감소를 경험한 기초자치단체가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타 제도에 비하여 국고보조의 수준이 높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국고지원율별로 비교해보았으나,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분담형태별로도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재정자주도와 고령화율을 국고차등지원의 준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별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노후소득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정자주도가 80%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약 40%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노후소득예산의 증가를 경험하여 전체평균보다 조금 낮다. 그러나 고령화율의 경우는 고령화율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기초자치단체중 노후소득예산의 증가를 경험한 비율이 8%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 이는 지금의 국가부담비율의 차등화가 고령화가 높은 지역의 예산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작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감과 사회복지와 기타 노인복지예산의 변화에 있어서도 일관된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나 노인복지관련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나 기타노인복지 예산의 변화의 폭과 양상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도 설계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우려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노후소득예산의 증대를 이어가지는 않았으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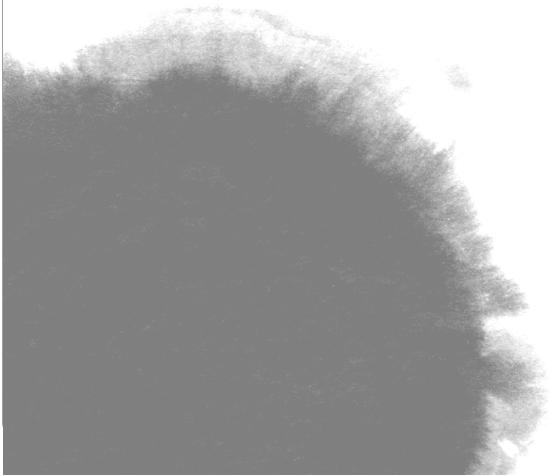
초노령연금도입 후 경험하는 예산상의 변화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간의 큰 편차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국고차등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즉, 현재의 재정자주도와 고령화율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국고차등지원제도는 차등지원율을 결정하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감안함으로써 고령화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예산상의 이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율이 14%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노후소득예산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국고지원방식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요구되는 것이다. 즉 국고보조차등 지원의 합리적 개선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인화, 2008; 정해식, 2008).

또한 우려했던 것처럼 기초노령연금도입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의 확대와 축소한 양상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지방노인복지에는 예산적 요인보다는 지자체장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와 같은 정책적 판단이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자체장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신규사업의 실시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노인복지예산 전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본 분석이 2007년과 2008년 예산만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의 그 이전 년도부터의 노인복지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본 분석에서 나타난 특성이 2008년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2009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다.

07

결론



VII.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노인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와 함의를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소득 및 빈곤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기초노령연금여 여부에 따른 노인의 개인소득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수급노인은 5만5천원이 증가한데 비하여 비수급 노인은 8천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등 개인소득 증가에 있어 기초노령연금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기간 중 노인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서 51.2%로 약간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8만4천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액으로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가구에서의 노인개인소득의 비중을 높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절대 빈곤을 변화는 아니더라도 빈곤갭 비율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소득충족율을 증가시켰으며, 기초노령연금이 기존의 경로연금이나 다른 소득원에 비하여 대상자의 규모나 빈곤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공적연금 등 기존 공적연금이나 사적이전과 비교할 때 빈곤완화효과가 큰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이 노인의 소득수준을 크게 상승시켜 절대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높지는 않지만 기존의 경로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비하여 수급규모가 광범위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완화효과는 특히 여성노인이나 7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더 크고, 사회보험소득이 높거나 소득수

준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액수가 용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평균용돈수준은 6만7천원으로 2008년도 기준 최고 기초노령연금액 8만4천원의 80% 수준이다.

두 번째로, 노인에게 있어 사적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과 상관없이 사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소득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급노인의 경우 29.0%로 비수급노인의 23.4%보다 훨씬 높으며, 사적이전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 또한 수급노인이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높다. 즉,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노인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등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소득에 있어 대체적인 소득원이 아닌 보완적인 소득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액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사적이전의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증빙되지 않았다.

셋째, 근로활동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절반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액수가 증가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어도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등 현재액수의 기초노령연금액 수준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노인의 건강상태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차이와 제도 시행 전 후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등,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자 선정체제와 수급액 수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근로활동 구축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노령연금수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일상생활에 있어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인의 정기적금·예금을 제외하고는 가입율이 매우 낮고 부동산 거래도 매우 드문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단체참여율도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상태로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따른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활동참여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단체활동 참여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노년기 노동가치와 관련

해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노후 소득보장의 책임에 관해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있어서의 국가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것처럼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낮는데, 이는 그들의 소득수준이 비수급 노인에 비하여 낮은 등의 이유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 급여액도 삶의 양식을 바꿀 정도의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존에 경로연금을 수급하지 않았던 소득층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개진되었다. 그러나 교통수당폐지와 관련해서는 약 30%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층에서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하여 노인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경우 10~15만원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노인과 노인의 배우자의 자산만으로 선정하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초노령연금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약 80%정도가 가난한 노인에게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 20%가 모든 노인에게 지금 수준의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다수가 공공부조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실제적으로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액수가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보건의료비, 식비,

주거관련비용 등 생활필수 지출항목에 지출하고 있다.

여섯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범위가 확대될수록 지니계수의 감소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세대간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재분배 수준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향상을 가져와 사회전체의 분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재분배는 개선되지만 80~90%를 전후로 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의 순기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전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서 크게 나타나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일곱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후소득관련 예산이 증대되었지만 차등국고보조, 교통수당예산의 활용 등이 이루어져 실제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예산이 증가한 곳은 약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2007년에 비하여 노후소득보장예산이 20% 이상 감소한 기초자치단체도 약 1/4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후 기타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되는 구축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감에 따른 일정한 변화양상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예산적 요인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시사점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범주적 공공부조의 중간적 성격으로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모호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본 제도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거나 향후 국민연금 급여의 성숙에 따라 미국의 SSI와 유사한 공공부조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방향이 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격이 명확하게 되어야만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이 명확히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정책의 결정은 다양한 요인과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사회전체적인

권익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변화 등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인 조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송근원, 김태성, 1995). 그런데 사회전체적인 발전과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은 정책대상이 ‘바라는’ 것⁵⁶⁾이라는 측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실시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다수가 가난한 노인에게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으로의 발전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선호가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제도간의 정합성을 고려해볼 때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거시적인 조망 속에서 노인의 바람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노인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있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일부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통합에 관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모색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본 연구결과 나타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의 모색은 제도도입의 목적에 상응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완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적용범위에 초점을 두고 정의할 경우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로 정의될 수 있다. 2008년도 현재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는 21.1%로 추계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08), 20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70%로 확대됨에 따라 이 비율은 10%대로 축소되었을 것이며,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80%로 확대한다면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될 것이다. 그런

56) 바라는 것(desire)이 주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비교적 제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욕구(need)는 사회의 해악을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해준다(송근원·김태성, 1995).

데 이러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역할이 큰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성숙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의 초점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국민연금제도의 제도개선과 연동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국민연금수급여부와는 무관하게 미리 설정된 지급대상 규모에 맞추어 선정기준이 결정되고 있다.

한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가 여부에 따른 형식논리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공적소득보장체계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개념을 도입한다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최저보증연금제도로의 성격으로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목표로 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빈곤⁵⁷⁾ 완화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제도 설계로도 일정 정도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왔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좀 더 빈곤완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확대와 급여수준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향의 변화를 먼저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보다도 노인빈곤완화에 있어 어떠한 선택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소득이전소득은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⁸⁾. 즉, 공적소득이전 중에서는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완화효과가 클 뿐, 대표적인 공공부조이지만 지급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기초보장제도의 빈곤완화

57) 노인가구의 빈곤의 심각성은 비노인가구에 비하여 심각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노인가구의 증대가 우리나라의 빈곤율의 완화속도가 느린 이유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구인회, 2004).

58) 공적이전소득은 사적소득이전에 비하여 그 규모와 생활안정효과와 빈곤완화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교성, 2002).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교성, 2002; 이현주 외, 2008). 그에 비할 때 2009년 현재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빈곤 완화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정부보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급범위가 타 제도에 비하여 넓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갭 비율이나 소득충족률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초노령연금이 다른 정부보조에 비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현재보다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완화의 폭이 적다. 반면 지급액의 수준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경우 빈곤율이 비교적 확실하게 감소되고 빈곤갭비율도 빈곤율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가구들의 생활수준이 다소 향상되는 것이다. 이는 빈곤해소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급범위의 확대와 지급액의 확대 중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노인빈곤 해소에 있어 더 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급대상규모와 관련해서는 제도도입시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도입 1년만에 지급대상자가 60%에서 70%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지급대상을 8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급액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A값)의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단계적 조정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본 연구결과 향후 노인빈곤완화에 있어 지급액의 상향조정을 통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체적인 조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두 번째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새로운 목표를 추가적으로 설정해볼 수 있다. 즉, 노인빈곤 해소라는 목표와 더불어 노인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불평등 완화라는 거시적인 이슈를 제도 개선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연령계층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 계층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방법이다(여유진, 김태완, 200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완화효과도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선택이 더 사회적 효용이 큰가를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지급수준으로는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액을 확대하는 경우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러한 순기능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범위의 80% 수준에서 효과가 완화된 후 90% 전후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확대하는 경우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빈곤율 완화의 폭은 매우 적고, 80%의 지급대상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발전된다면 상위 20% 이내의 노인에게 지급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역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상자로서의 노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정책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경우 소득의 증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출 특히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소득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다른 집단에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볼 때 노인의 지출감소라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소득수준을 갖고 있더라도 지출이 감소할 경우 체감되는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고 경제적인 상황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인구집단과는 달리 지속적인 건강의 악화가 예상되는 집단이라는 특징을 갖는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비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기초노령수급 노인의 다수가 보건의료비에 급여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은 것을 큰 변화로 지적하고 있는 점들이 이러한 보완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건강보조식품이나 치과진료 등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현주 외, 2008). 이러한 욕

구는 저소득 노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방안의 모색과 건강보험 지급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창출적 접근과 동시에 지출억제적 정책이 함께 수행될 때 노인의 정책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요예산의 분담방안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현재의 국고차등지원율의 조정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의 차등국고보조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부담 증가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의 증가를 절반은 예산의 감소를 경험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고령화율과 재정자주도는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이 두개의 기준을 동시에 반영하기 보다는 실제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 또는 노인인구수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아직 도입 1년에 불과하여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인빈곤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사회적으로도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는 의미있는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09년도 기준 최대 8만 8천원이라는 급여액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그 액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가 도입된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파악된 것이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해석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성호·김경아(2007). 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중·고령자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대회**.
- 강성호·김준영(2007).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공공경제**, 제12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 강성진·권혁진(2006). 가격균등화와 빈곤 평가: 한국도시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중심으로. **경제학 연구**, 54(4), pp. 61-97.
- 강성호·김철주·최은아(2007).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안 연구-유족, 부양가족연금 중심으로. **NPS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강성호(2008).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 추정. **제1회 복지패널학술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 권문일(2000). 국민연금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 359 ~ 375.
- _____(2004). 국민연금제도의 빈곤완화 기대효과. **사회복지정책**, 18권 : 291-310.
- 김경아(2008). 국내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4호: pp. 1503-1525.
- 김대철·권혁진(2007). 국민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 효과분석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pp. 251-275.
- 김수완 외(2005).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05.

김수완·조유미(2005).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를 중심으로 **NPS 국민연금연구원** Working Paper 2005-01.

_____ (2006). 겨울,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29권: pp. 5-37

김태완 외(2008). 2008년 빈곤통계연보 연구보고서 2008-1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광희(2008).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제22권: pp. 29~51.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

박인화(2008).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재정지출 동향 분석 제 3호, 국회예산정책처, pp. 29~61.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년도 예산 개요**

보건복지부(2007). **내부자료**, 2007. 7.

석재은·김용하(200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8권 1호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연구보고서 2005-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김태완(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95~134.

이병희(2007).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경제발전학회**, pp. 211 ~ 238.

이상은(2006).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전반기 학술대회**.

이현주·강신욱·김태완·노대명·박세경 외(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정책보고서 2008-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차)**.

정경희·오영희·이윤경 외(2005).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이윤경·오영희 외(2006).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정해식(2008).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장지연·부가청·이혜정·신현구·이철희·장숙량·조성일·Lisa F. Berkman(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연구보고서 2008-03,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신동균·신관호·이성균·남기곤(2007).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 2007-03, **한국노동연구원**.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제22권 제3호

_____(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 제22권 제3호

통계청(2006). **가계조사**.

통계청(2007). **2007년 고령자통계**.

현진권·임병인(2004).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증연구의 한계. **응용경제** 제6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 49 ~ 68.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 187 ~ 209.

_____(2005). 공적연금체계의 빈곤완화 효과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2호: pp. 77 ~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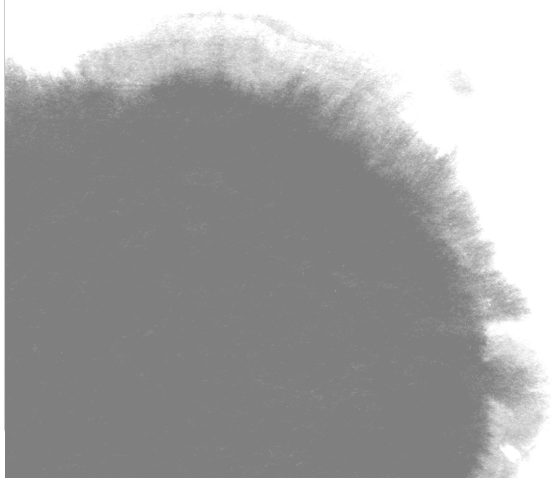
Barrientos, Armando(2003). "What is the Impact of Non-Contributory Pensions on Poverty? Estimates from Brazil and South Africa", 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Bertranou, F, CO Grushka(2002). "The Non-Contributory Pension programme in Argentina: Assessing th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ESS Paper.

Bertranou, Fabio M., Wouter van Ginneken and Carmen Solorio(2004). "The impact of tax-financed pensions on poverty reduction in Latin America: Evidence from Argentina, Brazil, Chile, Costa Rica and Urugua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7(4).

- Foster, Greer and Thorbecke(1984).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Vol 52, no3 pp. 763-764.
- McGarry, Kathleen(2000). "Guaranteed Income: SSI and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Poor.", NBER Working Paper No.7574.
- Oshio, Takashi & Satoshi Shimizuyani(2005).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benefits on income and poverty of the elderly in japan",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4(2), pp.54-66.
- Rodrigues, Carlos Farinha(2001). "Anti-pover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Guaranteed Minimum Income Programme in Portugal", ISEG/DE Working Paper.
- Schwarzer, H, AC Querino(2002). "Non-contributory Pensions in Brazil: Th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Geneva: ILO, Social Security Policy and Development Branch.
- Smeeding Timothy M. & Susanna Sandstrom, "Poverty and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A Cross-National View of Low Income Older Women", CRP WP.
- Timothy M. Smeeding(2001).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national comparis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s.

부 록





부 록

- [부록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
- [부록 2] 실태조사 조사지역
- [부록 3] 실태조사 설문지
- [부록 4] 실태조사 결과표
- [부록 5] 한국복지패널 개요
- [부록 6] 사적이전 소득에 관한 다변량 분석결과표
- [부록 7]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관한 이중치분 분석

부록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단계로 2008.1월부터 6월까지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의 60%, 2단계로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노인의 60%, 그리고 2009년 4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체노인의 70%(약 360만명)로 확대(3단계)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선정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부표 1-1-1〉과 같은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근거로 한다. 즉,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의 경우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이다.⁵⁹⁾

〈부표 1-1-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구 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 ¹⁾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 ²⁾	9,600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 ³⁾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360만원	26,112만원 이하

주: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59) 2009년도 선정기준액을 환산하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조사(earning test)와 자산조사(means-test)에서 근로소득과 금융재산 일정금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2008년 8월 14일 시행규칙 개정). 동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월 35만 원의 근로소득(2009년 월 37만원)과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게 되었다.⁶⁰⁾ 그리고 2009년 1월부터는 금융자산 공제액을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2009년부터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하였다. 이때,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도시는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환산하지 않는다.⁶¹⁾

기초노령 연금액은 2008년의 경우 노인 1인기준 월 최대 8만4천원(부부 134,000원)⁶²⁾이었으며, 2009년 4월부터 노인단독가구 매월 87만 원, 노인부부가구 13만 9천 원을 최대로 지급한다. 이때,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노인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부표 1-1-2〉 노인단독가구의 감액 구간과 연금액 (2008년)

소득인정액	32만원미만	32만원이상 ~34만원미만	34만원이상 ~36만원미만	36만원이상 ~38만원미만	38만원이상 ~40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2만원 이하
연금액	84,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60)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은 2008년 7월 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함.

61)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62)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A값)(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써 매년 변동됨.

부록 2. 실태조사 조사지역

번호	특·광역시	시군구	동읍면	번호	특·광역시	시군구	동읍면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1	경기도	양주시	회천2동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2동	52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53	강원도	춘천시	강남동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54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1동	5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5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3동	5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송정동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58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59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6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 3동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61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 1동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0동	6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63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64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66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동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67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2동	68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2동
1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69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70	전라북도	임실군	신태면
21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2동	7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2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72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23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	73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동
24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74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25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2동	75	전라남도	보성군	북내면
26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6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27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77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78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29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3.5동	7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80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3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1동	81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3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82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33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34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	84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35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85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36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86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37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1.장생포동	8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38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39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89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40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90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4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91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4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92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4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93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44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94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동
45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95	경상남도	사천시	벌용동
46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96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47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97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4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98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49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99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5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10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부록 3. 실태조사 설문지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변화에 관한 조사

행정동코드										개인코드									
광역시	시군구			동읍면															

주 소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도	군	면	리	번지	호	
응답자 성명	노인 성명			전화번호			() _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월 __일 __시 __분~ __시 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월 __일 __시 __분~ __시 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3	__월 __일 __시 __분~ __시 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 다음은 해당 노인과의 면접조사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거 가구원이 있을 경우 동거인에게 노인의 의사소통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동거인이 없을 경우 조사원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②의 경우에만 대리응답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오	판단자 가구원 조사원	
① 의사소통 가능(조사가능)				
② 의사소통이 불가능 할 경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 할 경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유형	0) 본인응답	응답자 관계
	1) 동거인 대리응답 (노인과의 관계: _____)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비동거인 대리응답(노인과의 관계: _____)	
(※ 조사원: 대리응답의 경우는 노인과의 관계 list를 확인하여 해당번호를 기록하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인사말씀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변화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귀하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비밀이 철대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 조사원: ★가 표시되어 있는 문항은 대리응답시 작성해야 할 문항입니다.

♣가 표시되어 있는 질문은 가구 내 65세 이상 된 노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 한 분에게만 질문하신 후 가구 내 다른 노인의 설문지에 옮겨 적으시오

가구원 사항

☺ 조사원: 1. 대리응답시 모두 작성하시오

2. 가구 내 다수의 노인이 계속 거주 한 분에게만 질문하시고 옮겨 적으시오

총가구원수 명 대상노인수 완료노인수 노인가구형태 응답자

번호	1. 생년월일	2. 결혼상태	3. 노인과의 관계	4. 성	5. 학력	6. 경제활동 참여여부
일련번호	이 분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조사원: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앞번호 6자리를 기입하시오. 노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상 생년월(4자리)을 기입하시고 끝 두 자리는 99로 기입하시오.)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미상 ⑨ 비해당 (14세이하)	노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노인이 다수인 경우는 최고 고령자를 기준으로 기록하시오.)	① 남자 ② 여자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 이상	① 예 ② 아니오 ⑨ 비해당 (14세 이하)
01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2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3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4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5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6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7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8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09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10	____년 ____월 ____일 () 띠, (양력, 음력)					

※ 노인가구형태(노인가구형태의 기준 노인은 나이가 가장 적은 노인입니다.)

- | | |
|-------------------------------------|------------------------|
| 01 노인독신가구 | 11 노인+손자녀(기혼 손자녀) |
| 02 노인부부가구 1: 부부 중 1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12 노인독신+노부모(부 또는 모) |
| 03 노인부부가구 2: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 13 노인부부+노부모(부 또는 모) |
| 04 노인+기혼이들+(미혼자녀) | 14 노인독신+노부모(부 또는 모)+자녀 |
| 05 노인+기혼이들+(미혼자녀)+손자녀 | 15 노인부부+노부모(부 또는 모)+자녀 |
| 06 노인+미혼자녀 | 16 노인독신+친척 |
| 07 노인+기혼딸+(미혼자녀) | 17 노인부부+친척 |
| 08 노인+기혼딸+(미혼자녀)+손자녀 | 18 노인독신+비혈연 |
| 09 노인+손자녀(기혼 손자녀) | 19 노인부부+비혈연 |
| 10 노인+손자녀(미혼 손자녀) | 20 기타 노인가구 |

노인의 일반적 특성

1.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이십니까? ☐

-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어르신의 가족 중 따로 사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도 포함하여 질문하십시오(행방불명은 제외).

♣★2.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어르신의 생존자녀가 있습니까?(결혼한 자녀와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① 없다. → (질문 3으로 가시오)

① 있다. → (남: 명, 여: 명, 계: 명)

※ 조사원: 가구원 사항과 <질문 2>를 참조하여 총 자녀수를 기록하십시오.

자녀수	남	여
1) 동거자녀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2) 비동거자녀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3) 총자녀수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3. 2008년 이후 어르신과 함께 살게 된 가구원(자녀, 비자녀 포함)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① 있다. → (총: 명, 관계:)

(※ 노인과의 관계코드 참조)

♣★4. 2008년 이후 어르신과 따로 살게 된 가구원(자녀, 비자녀 포함)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① 있다. → (총: 명, 관계:)

(※ 노인과의 관계코드 참조)

♣★5. 어르신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은 어르신 닉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

① 자가 → (질문 5-1로 가시오)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⑤ 무상

(→ ②, ③, ④, ⑤, ⑥의 경우 질문 5-2로 가시오)

② 전세(월세 없음)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⑥ 기타(무엇: _____)

♣★5-1. 이 집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① 노인 본인

③ 노인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② 노인의 배우자

④ 기타(_____)

♣★5-2.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어르신(배우자 포함) 소유의 집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① 있다.

※ 다음 질문은 자녀 또는 친인척,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현금현물)에 대한 문항입니다.

★6. 어르신께서는 2008년도 1년간 **자녀 또는 친인척,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현금이나 물품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p.4 질문 7로 가시오)

② 있다. → (질문 6-1로 가시오)

【보기 1】 지원해 준 사람(단체)		
① 배우자	② 장남·며느리	③ 그 외의 아들·며느리
④ 장녀·사위	⑤ 그 외의 딸·사위	⑥ 손자녀·배우자
⑦ 부모	⑧ 형제·자매	⑨ 그 외의 친척
⑩ 친구·이웃	⑪ 가정봉사원·간병인	⑫ 종교단체(목사·신부·스님 등)
⑬ 동사무소(사회복지 담당공무원)	⑭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⑮ 기타(누구: _____)
【보기 2】 자녀의 경제수준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보기 3】 지원 물품		
① 여가(여행 및 관광) ② 건강용품(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보조기구 등) ③ 생활용품		
④ 전자제품 ⑤ 의식 및 음식물 ⑥ 기타(무엇: _____)		

★6-1. 어르신께서는 2008년도 1년간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① 아니오 → (질문 6-2로 가시오)

② 예 → (질문 6-1-1로 가시오)

★6-1-1. 어르신께 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1	2	3	4	5
1) 지원해 준 사람(단체) 【보기 1】 참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금액(월 평균 ____만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지원한 자녀의 경제수준 (*자녀만 응답, 그 외는 비해당) 【보기 2】 참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2. 어르신께서는 2008년도 1년간 **비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① 아니오 → (질문 6-3로 가시오)

② 예 → (질문 6-2-1로 가시오)

★6-2-1. 어르신께 **비정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이며, 1년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1	2	3	4	5
1) 지원해 준 사람(단체) 【보기 1】 참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금액(1년 총 ____만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지원한 자녀의 경제수준 (*자녀만 응답, 그 외는 비해당) 【보기 2】 참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3 어르신께서는 2008년도 1년간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선물 등 비금전적인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㉑ 아니오 → (질문 7로 가시오) ① 예 → (질문 6-3-1로 가시오)

★6-3-1. 어르신께 현물이나 선물을 준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이며, 무엇이었습니까?

	1	2	3	4	5
1) 지원해준 사람(단체) 【보기 1】 참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지원용품 【보기 3】 참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지원한 자녀의 경제수준 (※자녀만 응답 그 외는 비해당) 【보기 2】 참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다음 질문은 재산 상속에 대한 문항입니다.

♣★7. 어르신께서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셨습니까? ☐

- ① 전부 물려 줌 → (질문 7-1로 가시오)
 ② 일부만 물려 줌 → (질문 7-1로 가시오)
 ③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아직 안 물려 줌 → (질문 7-2로 가시오)
 ④ 나를 위해 이용(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없음) → (p5 「노인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질문으로 가시오)
 ⑤ 사회 환원(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없음)
 ⑥ 물려줄 재산 없음
 ⑦ 상속할 가족(자녀 포함) 및 지인이 없음

♣★7-1. 다음 각 항목별로 가장 최근 상속한 재산은 무엇이며, 액수는 얼마입니까?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상속년도	평	액수
1) 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평	<input type="text"/> 천만원
2) 밭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평	<input type="text"/> 천만원
3) 임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평	<input type="text"/> 천만원
4) 건축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평	<input type="text"/> 천만원
5) 주택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평	<input type="text"/> 천만원
6) 각종 분양권 및 이용권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평	<input type="text"/> 천만원
7) 현금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만원
8)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만원

㉑ 조사원: 본 질문을 마친 후 p.5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문항으로 가시오.

7-2. 언제 물려 줄 예정입니까? ☐

- ① 곧 (1년 이내에) ② 자녀결혼 후
 ③ 건강이 나빠졌을 때 ④ 사망 직전에
 ⑤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⑥ 본인(배우자)의 사망 후에
 ⑦ 생각해 본 적이 없음 ⑧ 기타(언제: _____)

노인의 소득 및 재산

♣★1. 다음은 **어르신** **택**의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어르신 택의 연평균 월수입액을 다음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의 종류	1-1. 2008년 월평균 수입액	1-2. 2007년 월평균 수입액
1)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2) 개인 재산·금융·연금소득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3)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공적연금, 기타사회보험급여,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4) 사적이전소득(친인척·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5) 기타소득(무엇: _____)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6) 월 총 가구소득 (계)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2. 다음은 **어르신 개인**의 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어르신 개인의 연평균 월수입액을 다음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의 종류	2-1. 2008년 월평균 수입액	2-2. 2007년 월평균 수입액
1) 근로소득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2) 사업 및 부업소득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3) 재산소득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4) 금융소득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5) 은행, 보험 등에 의한 개인연금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6) 공적연금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 공적연금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없음 ①있음) ① 보훈연금 () ② 장애연금() ③ 국민연금 () ④ 공무원연금() ⑤ 군인연금() ⑥ 별정우체국 연금() ⑦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 ⑧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		
7) 기타 사회보험 급여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8)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9) 교통수당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10)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현물지원인 경우 환산)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11)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현물지원인 경우 환산)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13) 참전명예수당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14)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15) 기타 소득(무엇:_____)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16) 월평균 총수입(계)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천원

☺ 조사원: 2008년 1년간 새로운 거래가 없는 경우 ⑨비해당으로 체크하십시오.

★4. 현재 어르신 닥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천원

☺ 조사원: 부채에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미리 탄 갯돈(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기타부채(공과금, 월세, 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 등) 등이 포함됨.

★5. 지난 1년간 어르신 닥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천원

☺ 조사원: 생활비에는 식비, 외식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경조사비, 문화활동비, 가구잡화소모품,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등이 포함됨.

★6. 지난 1년간 어르신 닥의 월평균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천원

어르신께서는 여유 돈이 있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주판식으로 설문 응답을 한 후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첫째:

--	--

 둘째:

--	--

항	목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외식비
③ 교육비	④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⑤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⑥ 가구집가사용품
⑦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⑧ 교양오락비
⑨ 교통비	⑩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⑪ 경조사비	⑫ 사회공헌
⑬ 저축	⑭ 부채상환
⑮ 기타	

8. 어르신께서는 현재 어르신 님의 생활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9. 어르신은 가까운 미래에 어르신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②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③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노인의 경제활동

★1.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어르신은 경제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음 → (질문 2로 가시오)

② 있음 → (질문 1-1로 가시오)

★1-1. 일자리 유형 (별첨 세부직업분류표에서 해당하는 직업번호를 찾아 번호를 기록하시오.)	★1-2. 종사상 지위 (【보기】의 종사상 지위에서 번호를 찾아 기록하시오.)	★1-3. 종사 기간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보기】 종사상의 지위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 조사원 확인 사항: 응답자의 현재(조사시점) 근로상태

- ① 일을 하고 있다. ② 일을 하지 않고 있다.

☐

2.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는 계속하고 싶으십니까?

① (계속) 일하고 싶다.

② 일을 하고 싶지 않다.

☐

㉡ 조사원 확인 사항: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질문 3, 4>를 작성하시오.

	현재 일함	일하지 않음
미래 일 희망	질문 3	질문 3/질문 4
미래 일 희망하지 않음	질문 3	p.1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3. 어르신께서는 일을 하시는 또는 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일하는 것이 좋아서 ② 돈이 필요해서
③ 건강유지를 위해서 ④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⑤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⑥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⑦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⑧ 일손이 모자라서
⑨ 기타(무엇: _____)

4. 어르신께서는 구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 아니요 → (질문 4-2로 가시오)

㉡ 예 → (질문 4-1로 가시오)

4-1. 어르신께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모두 말씀해주세요 (㉢없음 ㉣있음)

① 가족 또는 친척에게 부탁소개 ☐

② 친구나 이웃에게 부탁소개 ☐

③ 신문광고, 거리광고 활용 ☐

④ 공공취업알선센터 ☐

⑤ 복지관, 사회복지관 ☐

⑥ 민간직업소개소 ☐

⑦ 동사무소 ☐

⑧ 취업박람회 ☐

⑨ 업체를 직접 찾아다님 ☐

⑩ 기타 (무엇: _____) ☐

4-2. 어르신께서는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을 소개시켜 주는 기관을 몰라서

② 구직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③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로

⑤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⑥ 기타(무엇: _____)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1. 어르신께서는 다음 중 현재 어떤 사회활동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1-1. 참여여부 ① 비참여 (p10 질문 2로 가시오) ② 현재참여	★1-2. 참여기간 참여 시작 시기	★1-3. 월 참여빈도 ① 거의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⑥ 월 1회 미만
1) 자원봉사활동 단체 (예: 복지관의 실버봉사단, 교회의 자원봉사활동그룹,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봉사활동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2) 취미·여가활동 단체 (예: 사진동호회, 실버밴드, 여행 동아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3) 정치사회운동단체 (예: 정당가입, 대한노인회, 효운동연합회, 참여연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4) 사교단체 (예: 계모임, 경로당화원, 동창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5) 종교단체 (예: 선교, 성경공부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예배, 불공 등 일상적인 종교활동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6) 기타(무엇: _____)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checkbox"/>

☺ 조사원: 위의 사회참여활동 중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에게만 <질문 2> 를 물어보시오

2. 어르신께서는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참여할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② 경제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③ 건강상의 이유로 ④ 주위에서 만류하기 때문에
 ⑤ 가정 내에 다른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⑥ 피곤하고 귀찮아서
 ⑦ 먹고살기 힘들어서 ⑧ 기타(이유:_____)

가치관

1. 다음 질문에 대하여 어르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는 것을 말씀해주시시오.

질문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노인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한다.					
2) 국가는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					
3) 자녀는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을 드려야 한다.					

※ 다음 질문에 대하여 어르신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시오.

2. 어르신께서는 노후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스스로(또는 부부) 마련하는 것이 좋다.
 ② 자녀 또는 가족(부부 제외)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④ 기타(어떻게: _____)

3. 어르신께서는 국가가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부족하다.

4.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시오.

질문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2)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3)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4) 요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 들이다.					
5)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7)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8)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					
9) 남은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10)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1)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을 느낀다.					
12) 조그만 일이 생겨도 쉽게 화가 난다.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노인에게만 질문하십시오.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

☺ 조사원: 기초노령연금은 1단계(70세 이상) 2008년 1월 지급, 2단계(65세 이상) 2008년 7월 지급으로 확대됨을 참고

★1. 어르신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셨습니까? 2008년 월

★2.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신청하셨습니까?

신청인

① 내가 직접 하였다.

② ~~경로연금 신청자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었다(자동신청)~~

③ 기타 ()

④ 대신 해주었다. → (누구:)

(※ 노인관계 list 확인)

관계

☺ 조사원: 질문3~5에 앞서 노인개인소득관련 질문(p.6)의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에 대한 응답내용을 확인하십시오.

★3. 어르신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이전에 경로연금을 받으셨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4.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에서 더 많은 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제도입니다. 경로연금제도가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한 편이다.

② 잘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못된 편이다.

⑤ 매우 잘못된 편이다.

★5. 어르신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이전에 교통수당을 받으셨습니까?

① 아니오 → (질문 6으로 가시오)

② 예 → (질문 5-1로 가시오)

★5-1. 받으셨다면 현재에도 받고 계십니까?

① 아니오

② 예

6.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노인교통수당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교통수당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한 편이다.

② 잘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못된 편이다.

⑤ 매우 잘못된 편이다.

★7. 어르신께서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 조사원: ①~⑪중 선택하고 ⑫는 응답자가 구체적인 항목을 모르는 경우에만 선택하도록 하시오.

첫째

둘째

항 목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외식비

③ 교육비

④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⑤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⑥ 가구집가사용품

⑦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⑧ 교양오락비

⑨ 교통비

⑩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⑪ 경조사비

⑫ 사회공헌

⑬ 기타

⑬ 저축

⑭ 부채상환

⑭ 손자녀 용돈

⑮ 친인척지원

⑮ 가구전체 생활비

㉔ 조사원: <질문8>에 앞서 「노인의 경제활동」(p.8)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미래 일을 희망하는 경우만 질문하십시오. 그 외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로 가시오.

8.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증가하거나 현재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어르신께서는 일(또는 일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

㉑ 아니오 →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로 가시오)

㉒ 예 → (질문 8-1로 가시오)

8-1.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면 일(또는 일을 구하는 일)을 그만 두시겠습니까?

☐

㉓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㉔ 월 10만원~15만원 미만 수준

㉕ 월 15만원~20만원 미만 수준

㉖ 월 20만원 이상 수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1. 어르신께서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받았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을 말씀해주시시오

질문	①매우 그렇다	②다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국가가 이제야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3)'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4)'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5)'노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6)'주위에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
☐
☐
☐
☐

2. 어르신께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후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

① 내가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②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③ 친목모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④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아졌다.

⑤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땀땀해졌다.

⑥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⑦ 가족 내 문제를 해결 할 때 나의 의견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다.

⑧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

⑨ 기타(무엇: _____)

3.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9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4.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의 액수가 1인당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 ① 현재수준 ② 월 10~15만원 미만
③ 월 15~20만원 미만 ④ 월 20~30만원 미만
⑤ 월 30만원 이상

5. 기초노령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9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6. 어르신께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7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현재 기초초령연금은 노인의 $\frac{2}{3}$ 가량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노인이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능력 있는 자녀가 있어도 노인(부부) 소유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2만원~8만 4천원까지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어르신께서는 기초초령연금을 가난한 노인에게 지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과 모든 노인에게 지금 수준의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9

- ① 가난한 노인에게 많은 액수 지급 ② 모든 노인에게 지금 수준의 액수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문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설문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4. 실태조사 결과표

1. 노인의 일반특성

〈부표 4-1-1〉 노인가구형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전체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¹⁾
지역					
동부	68.9	61.9	61.1	84.5	63.8
읍·면부	31.1	38.1	38.9	15.5	36.2
성					
남자	36.9	11.1	54.6	33.8	34.7
여자	63.1	88.9	45.4	66.2	65.3
결혼상태					
유배우	57.5	0.6	99.8	47.2	49.7
무배우	42.5	99.4	0.2	52.8	50.3
연령					
65~69세	33.0	18.5	39.1	34.4	37.5
70~74세	32.1	33.6	32.5	31.5	28.1
75세 이상	35.0	48.0	28.4	34.0	34.4
교육수준					
무학	33.5	55.0	20.0	34.6	36.0
초등학교	40.4	31.8	49.6	38.2	27.8
중학교	11.4	3.6	13.1	12.7	20.0
고등학교	10.5	8.1	11.3	11.6	8.8
대학이상	4.2	1.6	6.1	2.9	7.4
평균자녀수(명)	3.83	3.73	3.93	3.89	3.35
주관적 건강상태 ²⁾					
매우 좋다	3.9	2.5	3.6	4.8	5.5
약간 좋다	15.7	16.0	15.0	15.5	19.0
보통이다	24.5	16.5	25.2	29.3	24.4
약간 나쁘다	38.8	46.8	36.8	36.5	35.7
매우 나쁘다	17.1	18.2	19.4	13.8	15.4
경제활동					
취업중	25.6	20.7	35.6	18.0	20.6
미취업	74.4	79.3	64.4	82.0	79.4
거주형태					
자가	62.7	38.4	71.8	69.5	57.5
전세	12.1	12.7	13.1	11.5	8.2
월세	12.4	19.6	6.6	12.3	20.9
무상	12.9	29.3	8.5	6.6	13.4
기초노령연금 ³⁾					
비수급	36.3	15.5	45.8	38.6	38.8
수급	63.7	84.5	54.2	61.4	61.2
계 (명)	100.0 (1,300)	100.0 (284)	100.0 (501)	100.0 (414)	100.0 (100)

주: 1)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3)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부표 4-1-2〉 경제활동상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전체	취업중	미취업
지역			
동부	68.9	42.9	77.8
읍·면부	31.1	57.1	22.2
성			
남자	36.9	53.8	31.2
여자	63.1	46.2	68.8
결혼상태			
유배우	57.5	75.3	51.4
무배우	42.5	24.7	48.6
연령			
65~69세	33.0	41.9	29.9
70~74세	32.1	36.7	30.5
75세 이상	35.0	21.4	39.6
교육수준			
무학	33.5	28.4	35.3
초등학교	40.4	45.3	38.7
중학교	11.4	11.7	11.3
고등학교	10.5	10.7	10.4
대학이상	4.2	3.9	4.3
가구형태			
노인독신	21.9	17.7	23.3
노인부부	38.6	53.7	33.4
자녀동거	31.8	22.4	35.1
기타 ¹⁾	7.7	6.2	8.2
평균자녀수(명)	3.83	4.09	3.74
주관적 건강상태 ²⁾			
매우 좋다	3.9	6.7	2.9
약간 좋다	15.7	18.9	14.6
보통이다	24.5	27.8	23.4
약간 나쁘다	38.8	37.9	39.1
매우 나쁘다	17.1	8.8	20.0
거주형태			
자가	62.7	75.0	58.4
전세	12.1	8.1	13.5
월세	12.4	7.0	14.2
무상	12.9	9.9	13.8
기초노령연금 ³⁾			
비수급	36.3	45.6	33.1
수급	63.7	54.4	66.9
계	100.0	100.0	100.0
(명)	(1,300)	(332)	(968)

주: 1)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3)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부표 4-1-3〉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받고 있음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음	전혀 받은 적이 없음	계(명)	평균 수급기간 (개월)
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7	93.7	3.7	100.0(820)	104.9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90.6	0.9	8.6	100.0(467)	79.6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16.0	84.0	100.0(820)	68.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	-	100.0	100.0(46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6	1.2	83.2	100.0(819)	84.0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0.2	0.4	99.4	100.0(467)	58.8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7.2	1.1	81.7	100.0(819)	79.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0.2	0.4	99.4	100.0(467)	58.8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1-4〉 성별 및 연령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정책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교통수당						
현재 받고 있음	34.6	45.4	28.3	44.0	35.2	24.9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60.0	49.8	65.9	39.8	64.6	75.1
전혀 받은 적이 없음	5.4	4.8	5.8	16.2	0.2	-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96.0	92.6	98.1	33.0	82.8	159.0
경로연금(구 노령연금)						
현재 받고 있음	-	-	-	-	-	-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10.2	5.7	12.9	4.3	9.6	16.4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9.8	94.3	87.1	95.8	90.4	83.6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68.2	61.0	70.2	21.4	58.2	85.9
기초보장제도(구 생활보호)						
현재 받고 있음	10.0	5.5	12.7	6.6	9.2	14.1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0.9	0.8	1.0	0.5	1.7	0.7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9.0	93.7	86.3	92.9	89.2	85.2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83.5	78.3	85.0	58.0	76.4	100.6
의료급여(구 의료보호)						
현재 받고 있음	11.1	5.9	14.1	7.3	10.8	15.0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0.8	1.0	0.7	0.7	1.4	0.7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8.1	93.1	85.2	92.0	87.7	84.3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79.4	73.2	81.2	55.5	72.5	9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88)	(476)	(810)	(426)	(415)	(445)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1-5〉 가구형태별 및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정책	전체	가구형태				경제활동 참여여부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취업중	미취업
교통수당							
현재 받고 있음	34.6	18.7	41.4	38.2	31.9	42.3	32.0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60.0	78.9	51.5	57.2	59.6	52.0	62.8
전혀 받은 적이 없음	5.4	2.5	7.0	4.6	8.5	5.7	5.2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96.0	112.8	85.6	96.2	97.3	77.8	102.3
경로연금(구 노령연금)							
현재 받고 있음	-	-	-	-	-	-	-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10.2	27.5	4.8	2.4	19.1	2.7	12.9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9.8	72.5	95.2	97.6	80.9	97.3	87.1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68.2	68.2	57.3	107.4	60.6	56.9	69.1
기초보장제도(구 생활보호)							
현재 받고 있음	10.0	27.0	4.6	2.7	18.1	1.8	12.9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0.9	1.1	1.0	1.0	1.1	0.9	0.9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9.0	71.9	94.4	96.3	80.9	97.3	86.2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83.5	82.2	81.0	99.1	80.0	51.2	85.8
의료급여(구 의료보호)							
현재 받고 있음	11.1	29.8	5.2	3.2	19.1	2.4	14.0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0.8	1.1	1.0	0.7	1.1	0.9	0.8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8.1	69.1	93.8	96.1	79.8	96.7	85.1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79.4	78.3	79.1	90.3	75.6	49.5	8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88)	(284)	(497)	(411)	(94)	(332)	(955)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1-6〉 결혼상태별 및 교육수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서비스정책	전체	결혼상태		교육수준				
		유배우	무배우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교통수당								
현재 받고 있음	34.6	44.9	20.5	16.2	37.3	41.5	62.5	65.5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60.0	47.8	76.6	80.7	57.1	48.3	33.1	21.8
전혀 받은 적이 없음	5.4	7.3	2.9	3.0	5.6	10.2	4.4	12.7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96.0	83.0	112.9	115.1	89.0	79.4	86.9	72.0
경로연금(구 노령연금)								
현재 받고 있음	-	-	-	-	-	-	-	-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10.2	3.9	18.7	18.9	6.3	2.7	8.1	3.7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9.8	96.1	81.3	81.1	93.7	97.3	91.9	96.3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68.2	59.2	70.9	69.2	62.3	63.3	75.1	108.6
기초보장제도(구 생활보호)								
현재 받고 있음	10.0	4.0	18.2	17.6	7.3	2.7	8.1	-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0.9	0.7	1.3	1.6	0.6	0.7	-	1.9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9.0	95.3	80.6	80.7	92.1	96.6	91.9	98.1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83.5	84.5	83.2	82.3	82.4	76.1	93.5	116.0
의료급여(구 의료보호)								
현재 받고 있음	11.1	4.6	20.0	18.8	8.7	3.4	8.1	-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0.8	0.8	0.9	1.4	0.4	0.7	-	1.9
전혀 받은 적이 없음	88.1	94.6	79.1	79.8	91.0	95.9	91.9	98.1
평균 수급(참여기간(개월))	79.4	78.6	79.7	80.1	75.2	65.1	93.6	11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88)	(742)	(546)	(430)	(520)	(147)	(136)	(55)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교통수단 수급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받고 있음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음	전혀 받은 적이 없음	계(명)	평균 수급기간 (개월)
전체	34.6	60.0	5.4	100.0(1,288)	96.0
지역					
동부	40.0	55.2	4.9	100.0(886)	94.3
읍·면부	22.8	70.5	6.8	100.0(400)	100.0
성					
남자	45.4	49.8	4.8	100.0(476)	92.6
여자	28.3	65.9	5.8	100.0(810)	98.1
결혼상태					
유배우	44.9	47.8	7.3	100.0(741)	83.0
무배우	20.5	76.6	2.9	100.0(546)	112.9
연령					
65~69세	44.0	39.8	16.2	100.0(427)	33.0
70~74세	35.2	64.6	0.2	100.0(415)	82.8
75세 이상	24.9	75.1	-	100.0(445)	159.0
교육수준					
무학	16.3	80.7	3.0	100.0(430)	115.1
초등학교	37.3	57.1	5.6	100.0(520)	89.0
중학교	41.5	48.3	10.2	100.0(147)	79.4
고등학교	62.5	33.1	4.4	100.0(136)	86.9
대학이상	65.5	21.8	12.7	100.0(55)	72.0
가구형태					
노인독신	18.7	78.9	2.5	100.0(284)	112.8
노인부부	41.4	51.5	7.0	100.0(497)	85.6
자녀동거	38.2	57.2	4.6	100.0(411)	96.2
기타 ²⁾	31.9	59.6	8.5	100.0(94)	97.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60.8	29.4	9.8	100.0(51)	85.3
약간 좋다	34.8	59.2	6.0	100.0(201)	102.4
보통이다	41.0	54.9	4.1	100.0(315)	85.9
약간 나쁘다	31.0	64.0	5.0	100.0(500)	99.5
매우 나쁘다	27.4	65.8	6.8	100.0(219)	99.6
경제활동					
취업중	42.3	52.0	5.7	100.0(331)	77.8
미취업	32.0	62.8	5.2	100.0(954)	102.3
거주형태					
자가	42.9	51.9	5.2	100.0(808)	90.2
전세	34.4	60.5	5.1	100.0(157)	99.6
월세	16.7	76.3	7.1	100.0(156)	102.1
무상	10.8	83.7	5.4	100.0(166)	115.4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1-8〉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연금 수급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받고 있음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음	전혀 받은 적이 없음	계(명)	평균 수급기간 (개월)
전체	-	10.2	89.8	100.0(1,288)	68.2
지역					
동부	-	10.9	89.1	100.0(886)	69.2
읍·면부	-	8.5	91.5	100.0(400)	65.5
성					
남자	-	5.7	94.3	100.0(476)	61.0
여자	-	12.9	87.1	100.0(809)	70.2
결혼상태					
유배우	-	3.9	96.1	100.0(741)	59.2
무배우	-	18.7	81.3	100.0(545)	70.9
연령					
65~69세	-	4.2	95.8	100.0(426)	21.4
70~74세	-	9.6	90.4	100.0(415)	58.2
75세 이상	-	16.4	83.6	100.0(445)	85.9
교육수준					
무학	-	18.9	81.1	100.0(429)	69.2
초등학교	-	6.3	93.7	100.0(520)	62.3
중학교	-	2.7	97.3	100.0(146)	63.3
고등학교	-	8.1	91.9	100.0(136)	75.1
대학이상	-	3.7	96.3	100.0(54)	108.6
가구형태					
노인독신	-	27.5	72.5	100.0(284)	68.2
노인부부	-	4.8	95.2	100.0(496)	57.3
자녀동거	-	2.4	97.6	100.0(410)	107.4
기타 ²⁾	-	19.1	80.9	100.0(94)	60.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	2.0	98.0	100.0(50)	128.8
약간 좋다	-	7.0	93.0	100.0(201)	61.9
보통이다	-	5.1	94.9	100.0(316)	80.8
약간 나쁘다	-	12.2	87.8	100.0(499)	64.8
매우 나쁘다	-	17.7	82.3	100.0(220)	69.7
경제활동					
취업중	-	2.7	97.3	100.0(332)	56.9
미취업	-	12.9	87.1	100.0(955)	69.1
거주형태					
자가	-	3.5	96.5	100.0(807)	63.4
전세	-	18.5	81.5	100.0(157)	52.7
월세	-	33.3	66.7	100.0(156)	81.3
무상	-	13.3	86.7	100.0(166)	65.6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1-9〉 노인의 일반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이용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받고 있음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음	전혀 받은 적이 없음	계(명)	평균 수급기간 (개월)
전체	10.0	0.9	89.0	100.0(1,288)	83.5
지역					
동부	11.4	0.9	87.7	100.0(886)	87.0
읍·면부	7.0	1.0	92.0	100.0(400)	71.0
성					
남자	5.5	0.8	93.7	100.0(476)	78.3
여자	12.7	1.0	86.3	100.0(810)	85.0
결혼상태					
유배우	4.0	0.7	95.3	100.0(741)	84.5
무배우	18.2	1.3	80.6	100.0(545)	83.2
연령					
65~69세	6.6	0.5	92.9	100.0(425)	58.0
70~74세	9.2	1.7	89.2	100.0(415)	76.4
75세 이상	14.1	0.7	85.2	100.0(446)	100.6
교육수준					
무학	17.6	1.6	80.7	100.0(431)	82.3
초등학교	7.3	0.6	92.1	100.0(520)	82.4
중학교	2.7	0.7	96.6	100.0(146)	76.1
고등학교	8.1	-	91.9	100.0(136)	93.5
대학이상	-	1.9	98.1	100.0(53)	116.0
가구형태					
노인독신	27.0	1.1	71.9	100.0(285)	82.2
노인부부	4.6	1.0	94.4	100.0(497)	81.0
자녀동거	2.7	1.0	96.3	100.0(410)	99.1
기타 ²⁾	18.1	1.1	80.9	100.0(94)	8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0	2.0	96.1	100.0(51)	99.0
약간 좋다	6.9	-	93.1	100.0(202)	74.9
보통이다	5.4	0.9	93.7	100.0(316)	87.6
약간 나쁘다	12.4	0.4	87.2	100.0(500)	84.2
매우 나쁘다	16.8	2.7	80.5	100.0(220)	83.0
경제활동					
취업중	1.8	0.9	97.3	100.0(332)	51.2
미취업	12.9	0.9	86.2	100.0(955)	85.8
거주형태					
자가	2.8	0.5	96.7	100.0(808)	71.8
전세	19.1	1.3	79.6	100.0(157)	64.8
월세	37.2	2.6	60.3	100.0(156)	101.6
무상	10.8	1.2	88.0	100.0(166)	74.9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1-10〉 노인의 일반특성별 의료급여 수급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받고 있음	현재 받지 않으나 받은 적이 있음	전혀 받은 적이 없음	계(명)	평균 수급기간 (개월)
전체	11.1	0.8	88.1	100.0(1,288)	79.4
지역					
동부	12.5	0.7	86.8	100.0(887)	83.3
읍·면부	7.8	1.3	91.0	100.0(400)	66.4
성					
남자	5.9	1.0	93.1	100.0(444)	73.2
여자	14.1	0.7	85.2	100.0(810)	81.2
결혼상태					
유배우	4.6	0.8	94.6	100.0(742)	78.6
무배우	20.0	0.9	79.1	100.0(546)	79.7
연령					
65~69세	7.3	0.7	92.0	100.0(427)	55.5
70~74세	10.8	1.4	87.7	100.0(416)	72.5
75세 이상	15.0	0.7	84.3	100.0(446)	96.3
교육수준					
무학	18.8	1.4	79.8	100.0(430)	80.1
초등학교	8.7	0.4	91.0	100.0(520)	75.2
중학교	3.4	0.7	95.9	100.0(146)	65.1
고등학교	8.1	-	91.9	100.0(136)	93.6
대학이상	-	1.9	98.1	100.0(53)	116.0
가구형태					
노인독신	29.8	1.1	69.1	100.0(285)	78.3
노인부부	5.2	1.0	93.8	100.0(497)	79.1
자녀동거	3.2	0.7	96.1	100.0(410)	90.3
기타 ²⁾	19.1	1.1	79.8	100.0(97)	75.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0	2.0	96.1	100.0(51)	99.0
약간 좋다	6.9	-	93.1	100.0(202)	74.6
보통이다	5.4	0.3	94.3	100.0(315)	89.0
약간 나쁘다	13.4	0.6	86.0	100.0(500)	80.5
매우 나쁘다	20.0	2.7	77.3	100.0(220)	75.3
경제활동					
취업중	2.4	0.9	96.7	100.0(332)	49.5
미취업	14.0	0.8	85.1	100.0(955)	81.8
거주형태					
자가	3.2	0.6	96.2	100.0(807)	65.6
전세	21.0	1.3	77.7	100.0(157)	63.0
월세	39.1	1.9	59.0	100.0(156)	99.8
무상	13.3	0.6	86.1	100.0(166)	68.4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 및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소득실태

〈부표 4-2-1〉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실태

(단위: % 명)

	2008년도 평균 가구소득	2007년도 평균 가구소득	2007년-2008년도 가구소득 변화액	가구소득 증가자 비중	2008년도 평균 개인소득	2007년도 평균 개인소득	2007년-2008년도 개인소득 변화액	개인소득 증가자 비중
전체	1,450.7	1,399.0	51.7	72.5	491.2	455.8	35.4	74.7
지역								
동부	1569.4	1535.4	34.0	68.8	456.0	430.1	25.9	72.0
읍·면부	1187.7	1096.7	90.9	81.0	569.2	512.9	56.4	80.7
성								
남자	1535.3	1468.1	67.2	71.9	659.0	632.6	26.4	71.5
여자	1401.1	1358.5	42.6	72.9	392.9	352.3	40.7	76.5
결혼상태								
유배우	1535.6	1477.3	58.3	71.0	508.3	486.3	22.0	68.4
무배우	1335.9	1293.2	42.7	74.7	468.1	414.5	53.6	83.0
연령								
65~69세	1623.2	1603.2	19.9	70.2	534.6	523.7	10.9	66.4
70~74세	1468.6	1399.8	68.8	70.0	558.4	527.0	31.4	75.3
75세 이상	1271.6	1205.6	65.9	77.1	388.6	326.5	62.2	81.9
교육수준								
무학	1130.6	1035.2	95.4	82.1	338.7	281.3	57.4	86.9
초등학교	1422.7	1408.3	14.4	70.6	467.0	441.2	25.8	71.4
중학교	1919.9	1905.0	15.0	67.8	617.1	588.8	28.3	67.8
고등학교	1751.0	1657.6	93.4	59.1	690.1	670.5	19.5	63.2
대학이상	2249.6	2192.6	57.0	61.1	1103.8	1092.7	11.1	55.6
가구형태								
노인독신	635.1	576.1	59.0	81.7	633.4	569.7	63.7	83.1
노인부부	1006.1	954.9	51.2	71.1	530.2	498.1	32.1	70.1
자녀동거	2389.9	2353.4	36.4	65.0	348.4	322.7	25.7	75.1
기타	2109.5	2013.6	95.9	85.0	482.9	470.8	12.1	72.0
자녀수								
1명 이하	982.1	948.7	33.4	73.3	423.6	392.5	31.1	75.0
2명	1835.8	1797.6	38.2	69.2	535.7	502.1	33.6	69.2
3명	1632.2	1633.0	-0.8	69.8	549.4	536.4	13.0	70.9
4명	1529.2	1466.6	62.6	72.7	553.8	519.0	34.8	73.4
5명 이상	1261.2	1166.9	94.3	75.5	405.0	349.8	55.2	8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817.1	1716.1	101.0	72.0	889.6	851.1	38.5	68.0
약간 좋다	1703.3	1631.7	71.5	75.7	717.3	685.1	32.1	76.2
보통이다	1571.0	1550.6	20.5	68.3	517.2	498.4	18.8	70.9
약간 나쁘다	1342.1	1290.0	52.1	74.4	403.2	358.9	44.3	77.4
매우 나쁘다	1212.8	1149.3	63.5	70.8	370.0	328.4	41.5	74.0
경제활동								
취업중	1374.6	1318.1	56.5	73.2	786.1	751.9	34.2	70.0
미취업	1476.8	1426.8	50.0	72.3	389.9	354.0	35.8	76.2
거주형태								
자가	1722.5	1671.9	50.6	71.1	551.8	521.1	30.7	72.1
전세	1136.7	1137.7	-1.0	63.1	359.7	336.3	23.4	70.7
월세	1008.3	922.4	85.9	77.0	417.4	378.1	39.3	80.1
무상	846.4	772.6	73.9	84.4	390.7	324.9	65.8	85.0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933.7	1938.4	-4.7	57.4	772.0	766.0	6.0	51.0
수급	1176.5	1093.5	83.1	81.0	335.2	283.0	55.2	88.2

〈부표 4-2-2〉 노인의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명)

	2008년도	2007년도
전체	50.9	50.3
지역		
동부	47.0	46.3
읍·면부	59.5	59.1
성		
남자	56.4	56.4
여자	47.6	46.7
결혼상태		
유배우	42.6	42.6
무배우	62.0	60.6
연령		
65~69세	44.5	45.0
70~74세	53.4	52.8
75세 이상	54.6	53.0
교육수준		
무학	55.4	54.7
초등학교	47.1	46.6
중학교	43.7	42.8
고등학교	55.2	54.9
대학이상	58.9	59.1
가구형태		
노인독신	99.4	98.4
노인부부	51.9	51.7
자녀동거	20.4	19.1
기타	34.0	35.1
자녀수		
1명 이하	62.6	61.6
2명	47.2	46.6
3명	49.1	48.7
4명	47.6	46.9
5명 이상	52.4	52.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57.9	57.5
약간 좋다	52.2	51.9
보통이다	48.3	47.6
약간 나쁘다	50.7	50.0
매우 나쁘다	53.5	52.9
경제활동		
취업중	61.3	61.4
미취업	47.3	46.5
거주형태		
자가	45.1	44.7
전세	50.9	49.2
월세	58.7	59.0
무상	71.2	69.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47.7	47.5
수급	53.1	52.2

〈부표 4-2-3〉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구성(2008년도)

(단위: % 명)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의 비율	개인 재산·금융·연금소 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소득 전체
전체	39.1	6.6	26.9	27.0	0.3	100.0(1,300)
지역						
동부	40.3	7.5	25.6	26.3	0.3	100.0(896)
읍·면부	36.6	4.6	29.8	28.7	0.3	100.0(404)
성						
남자	42.1	8.4	24.9	24.4	0.3	100.0(480)
여자	37.4	5.6	28.1	28.6	0.3	100.0(820)
결혼상태						
유배우	39.4	9.3	24.8	26.2	0.3	100.0(747)
무배우	38.8	2.9	29.8	28.1	0.3	100.0(553)
연령						
65~69세	46.3	8.5	23.7	21.3	0.2	100.0(429)
70~74세	40.1	6.7	25.6	27.5	0.1	100.0(417)
75세 이상	31.5	4.8	31.2	32.0	0.5	100.0(454)
교육수준						
무학	35.4	2.6	33.4	28.0	0.6	100.0(436)
초등학교	41.6	6.4	24.4	27.5	0.1	100.0(525)
중학교	46.6	11.0	17.4	25.0	0.1	100.0(148)
고등학교	37.4	10.1	25.7	26.6	0.3	100.0(136)
대학이상	29.0	20.5	28.7	21.8	0.1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11.2	3.3	41.0	44.1	0.4	100.0(284)
노인부부	25.7	11.2	29.5	33.2	0.4	100.0(501)
자녀동거	73.0	3.2	13.4	10.3	0.1	100.0(414)
기타	45.8	7.2	30.2	16.7	0.1	100.0(100)
자녀수						
1명 이하	33.1	5.2	47.7	13.8	0.1	100.0(116)
2명	45.7	7.4	29.4	17.4	0.1	100.0(130)
3명	39.0	9.6	26.3	25.0	0.1	100.0(331)
4명	43.4	7.4	21.9	27.3	0.1	100.0(304)
5명 이상	35.8	3.8	24.6	35.1	0.6	100.0(42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51.8	9.9	17.9	20.4	0.1	100.0(50)
약간 좋다	42.4	7.2	25.3	25.0	0.0	100.0(202)
보통이다	43.6	7.6	24.3	24.3	0.2	100.0(315)
약간 나쁘다	37.6	5.5	27.8	28.6	0.5	100.0(500)
매우 나쁘다	30.7	6.2	32.5	30.4	0.2	100.0(220)
경제활동						
취업중	54.7	4.5	20.0	20.2	0.5	100.0(332)
미취업	33.8	7.3	29.3	29.4	0.2	100.0(968)
거주형태						
자가	45.4	9.2	20.4	24.8	0.2	100.0(815)
전세	36.7	5.6	35.7	21.7	0.3	100.0(157)
월세	32.8	0.2	45.0	21.9	0.1	100.0(161)
무상	17.1	1.1	33.4	47.8	0.5	100.0(167)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42.5	15.5	18.2	23.4	0.4	100.0(467)
수급	37.3	1.5	32.0	29.0	0.2	100.0(820)

〈부표 4-2-4〉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실태변화(소득액)

(단위: % 명)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액	개인 재산·금융·연금소 득액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소득 전체
전체	-31.3	-0.6	55.4	25.8	2.4	51.7
지역						
동부	-43.0	-4.3	51.2	27.9	2.3	34.0
읍·면부	-5.3	7.5	64.8	21.2	2.8	90.9
성						
남자	-23.0	-1.6	53.8	35.1	2.9	67.2
여자	-36.2	-0.1	56.4	20.3	2.1	42.6
결혼상태						
유배우	-35.8	-2.4	56.5	37.6	2.4	58.3
무배우	-25.3	1.7	54.0	9.9	2.4	42.7
연령						
65~69세	-53.0	1.1	42.8	26.4	2.6	19.9
70~74세	-16.5	-7.3	57.0	35.3	0.3	68.8
75세 이상	-24.5	3.9	65.8	16.6	4.2	65.9
교육수준						
무학	1.7	-0.1	66.4	22.3	5.0	95.4
초등학교	-63.1	3.3	52.7	21.2	0.3	14.4
중학교	-51.4	-11.7	54.7	23.9	-0.6	15.0
고등학교	1.9	3.5	35.4	46.3	6.2	93.4
대학이상	-18.0	-22.9	45.9	52.0	0.0	57.0
가구형태						
노인독신	-10.2	0.5	52.3	12.4	4.0	59.0
노인부부	-42.1	-4.6	59.1	35.3	3.7	51.2
자녀동거	-48.7	3.3	50.1	31.3	0.5	36.4
기타	34.7	0.0	67.7	-6.0	-0.5	95.9
자녀수						
1명 이하	-16.7	-0.2	38.4	12.1	-0.1	33.4
2명	-43.6	-2.1	55.5	27.7	0.6	38.2
3명	-70.4	-8.0	49.5	25.6	2.5	-0.8
4명	-8.3	0.7	58.8	11.3	0.1	62.6
5명 이상	-17.4	4.6	62.3	39.6	5.2	94.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57.3	-5.3	43.2	6.7	-0.9	101.0
약간 좋다	-11.8	4.2	54.9	24.2	0.0	71.5
보통이다	-41.2	-10.4	48.2	19.9	4.0	20.5
약간 나쁘다	-33.2	3.6	58.0	20.5	3.2	52.1
매우 나쁘다	-55.3	0.5	61.3	55.5	1.7	63.5
경제활동						
취업중	-29.6	11.2	49.6	19.1	6.3	56.5
미취업	-31.9	-4.7	57.4	28.1	1.1	50.0
거주형태						
자가	-29.4	-1.2	50.4	28.9	2.0	50.6
전세	-83.6	-0.5	62.1	15.9	5.1	-1.0
월세	11.7	2.9	65.0	5.9	0.4	85.9
무상	-32.5	-1.2	64.6	39.0	4.0	73.9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49.6	-2.0	15.8	25.9	5.2	-4.7
수급	-22.1	0.2	77.5	26.6	0.9	83.1

〈부표 4-2-5〉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실태변화(증가를 경합한 노인의 %)

(단위: % 명)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액	개인 재산·금융·연금소 득액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소득 전체
전체	19.6	4.2	82.2	42.4	1.4	72.5
지역						
동부	17.7	4.1	78.8	40.1	1.6	68.8
읍·면부	23.7	4.5	89.6	47.5	1.2	80.9
성						
남자	23.8	5.2	80.4	41.5	1.3	71.9
여자	17.1	3.7	83.2	42.9	1.6	72.9
결혼상태						
유배우	22.4	5.5	79.1	42.0	1.1	71.0
무배우	15.7	2.5	86.4	42.9	2.0	74.7
연령						
65~69세	24.9	5.1	80.6	36.6	0.9	70.2
70~74세	19.2	3.1	79.4	45.3	1.4	70.0
75세 이상	14.8	4.4	86.4	45.2	2.0	77.1
교육수준						
무학	19.5	0.9	90.6	47.0	2.8	82.0
초등학교	19.0	5.1	81.1	41.0	0.8	70.6
중학교	26.2	8.7	83.1	41.9	0.7	67.8
고등학교	16.8	5.1	68.4	34.6	1.5	59.1
대학이상	14.8	9.3	57.4	38.2	0.0	61.1
가구형태						
노인독신	4.6	1.4	87.3	47.2	2.8	81.7
노인부부	15.8	6.8	79.5	43.6	1.6	71.1
자녀동거	32.4	4.3	78.7	39.6	0.7	65.0
기타	27.0	0.0	94.1	34.0	0.0	85.0
자녀수						
1명 이하	11.2	0.9	76.7	34.5	2.6	73.3
2명	21.5	3.8	78.5	36.9	0.8	69.2
3명	19.0	4.5	80.7	38.2	0.3	69.8
4명	21.7	5.3	80.9	45.4	1.3	72.7
5명 이상	20.0	4.5	86.9	47.3	2.4	75.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8.0	4.0	68.0	34.0	0.0	72.0
약간 좋다	17.3	4.5	83.2	39.6	0.5	75.7
보통이다	22.9	6.7	80.0	39.7	1.3	68.3
약간 나쁘다	21.2	3.2	84.2	43.8	2.4	74.4
매우 나쁘다	11.4	3.2	81.8	47.7	0.5	70.8
경제활동						
취업중	32.1	6.3	82.2	38.0	1.8	73.2
미취업	15.2	3.5	82.2	43.9	1.3	72.3
거주형태						
자가	22.8	5.9	78.0	41.8	0.6	71.1
전세	14.6	3.2	82.3	38.0	3.2	63.1
월세	17.4	1.3	91.9	35.4	1.9	77.0
무상	10.2	0.0	92.8	55.7	3.6	84.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21.0	8.1	52.9	34.3	1.5	57.4
수급	18.8	2.1	98.7	46.9	1.5	81.0

〈부표 4-2-6〉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2008년)

(단위: % 명)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친인척으로부터 터의 보조금	사회단체로부터 터의 보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개인소득 전체
전체	5.5	8.4	8.1	20.3	38.0	5.1	6.0	100.0 (1,299)
지역								
동부	6.8	4.7	8.1	19.9	38.7	0.9	6.9	100.0(895)
읍·면부	2.8	16.6	8.2	21.2	36.4	14.3	4.1	100.0(404)
성								
남자	8.9	16.3	13.9	13.2	26.0	12.0	2.9	100.0(480)
여자	3.5	3.8	4.7	24.5	45.0	1.0	7.8	100.0(819)
결혼상태								
유배우	6.3	10.9	10.0	14.3	38.6	7.8	2.3	100.0(746)
무배우	4.4	5.0	5.5	28.4	37.2	1.4	11.0	100.0(553)
연령								
65~69세	8.2	10.5	12.4	11.5	37.9	13.5	3.7	100.0(428)
70~74세	6.3	10.9	7.2	22.1	36.2	0.5	5.7	100.0(417)
75세 이상	2.3	4.1	4.9	26.9	39.7	1.4	8.5	100.0(454)
교육수준								
무학	2.2	7.0	4.8	30.6	36.9	1.5	10.5	100.0(436)
초등학교	6.9	9.3	7.1	17.4	41.5	10.8	4.5	100.0(525)
중학교	6.0	9.9	10.0	14.7	39.4	1.4	2.0	100.0(148)
고등학교	8.1	8.6	14.5	11.4	31.8	0.6	3.6	100.0(136)
대학이상	11.2	6.2	23.4	3.1	26.9	0.1	1.2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신	4.7	6.7	4.6	16.7	42.7	1.7	16.6	100.0(284)
노인부부	5.5	11.2	9.5	13.0	42.5	11.6	2.6	100.0(501)
자녀동거	5.9	6.4	7.7	30.4	32.2	0.5	1.8	100.0(413)
기타	6.2	7.5	12.9	25.0	25.9	1.3	10.0	100.0(100)
자녀수								
1명 이하	8.8	1.0	7.0	21.1	16.2	2.7	28.0	100.0(116)
2명	6.1	11.4	13.5	19.7	25.3	1.5	8.6	100.0(129)
3명	8.3	6.4	10.2	17.2	35.2	0.7	5.7	100.0(331)
4명	5.0	10.0	4.6	21.6	42.8	18.5	2.6	100.0(304)
5명 이상	2.6	9.9	7.7	21.7	46.6	0.6	1.8	100.0(42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8.5	13.7	11.7	9.3	27.5	0.5	0.9	100.0(50)
약간 좋다	5.7	11.1	9.0	19.6	35.6	27.6	3.9	100.0(202)
보통이다	8.5	9.2	10.1	17.6	36.2	0.5	3.8	100.0(315)
약간 나쁘다	2.7	8.1	6.3	22.2	41.2	0.8	7.3	100.0(498)
매우 나쁘다	4.8	4.7	7.1	21.6	37.9	2.0	9.7	100.0(220)
경제활동								
취업중	14.0	31.3	6.5	10.7	26.0	16.8	1.0	100.0(332)
미취업	2.6	0.5	8.7	23.6	42.1	1.1	7.7	100.0(966)
거주형태								
자가	4.7	10.9	9.6	18.6	38.6	7.2	1.6	100.0(814)
전세	8.8	2.9	6.6	23.3	31.2	1.2	12.5	100.0(157)
월세	8.5	5.4	5.4	23.6	27.4	1.6	22.0	100.0(161)
무상	3.6	4.4	4.7	22.3	51.5	1.6	6.1	100.0(167)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7.2	11.4	15.0	0.0	40.5	0.5	0.2	100.0(466)
수급	4.6	6.8	4.0	31.4	36.6	7.8	9.4	100.0(820)

〈부표 4-2-7〉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변화액)

(단위: % 명)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친인척으로부 터의 보조금	사회단체로부 터의 보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개인소득 전체
전체	-11.0	-5.0	3.1	36.6	12.2	16.3	1.4	35.4
지역								
동부	-15.5	-6.2	3.6	33.5	11.8	-0.4	1.6	25.9
읍·면부	-1.0	-2.4	2.1	43.5	13.0	53.3	1.1	56.7
성								
남자	-18.2	-8.3	5.5	28.0	15.3	44.8	1.3	26.4
여자	-6.8	-3.1	1.7	41.7	10.4	-0.4	1.5	40.7
결혼상태								
유배우	-15.6	-5.6	3.7	25.1	15.2	28.9	1.2	22.0
무배우	-4.8	-4.2	2.3	52.2	8.1	-0.8	1.7	53.6
연령								
65~69세	-21.6	-1.1	4.7	18.0	5.6	50.3	1.1	10.9
70~74세	-10.2	-10.2	3.6	39.4	13.6	0.6	2.0	31.4
75세 이상	-1.8	-3.9	1.2	51.7	17.1	-1.4	1.1	62.2
교육수준								
무학	-6.7	-3.4	0.9	52.3	16.2	-0.8	2.2	57.4
초등학교	-8.9	-7.5	2.6	33.4	5.3	40.9	1.7	25.8
중학교	-19.2	0.4	2.6	27.8	16.1	0.7	0.6	28.3
고등학교	-23.6	-3.0	6.4	19.5	15.0	-0.3	0.3	19.5
대학이상	-12.0	-13.6	19.2	9.8	28.0	0.1	-2.3	11.1
가구형태								
노인독신	-4.8	-2.8	3.4	51.9	12.7	-1.8	3.5	63.7
노인부부	-13.8	-2.3	4.5	27.5	17.3	43.1	1.2	32.1
자녀동거	-13.5	-8.8	1.4	37.6	9.5	0.0	1.0	25.7
기타	-4.4	-9.2	2.2	35.0	-3.8	0.8	-1.7	12.1
자녀수								
1명 이하	-10.8	0.2	2.3	35.8	8.1	1.5	-0.8	31.1
2명	-5.8	-10.6	9.0	27.4	13.5	0.0	1.5	33.6
3명	-22.6	-6.7	4.2	27.8	10.0	-2.5	3.1	13.0
4명	-8.0	-5.3	2.0	36.9	8.9	71.3	2.1	34.8
5명 이상	-5.7	-3.2	1.4	46.5	17.0	0.4	0.2	55.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8.7	-6.7	9.5	19.4	5.6	0.2	0.4	38.5
약간 좋다	-10.3	-7.7	2.7	36.2	10.6	106.3	1.3	32.1
보통이다	-19.7	-3.5	3.1	30.5	10.1	0.1	0.8	18.8
약간 나쁘다	-7.4	-3.3	2.5	40.3	11.1	-1.6	1.9	44.3
매우 나쁘다	-15.0	-8.5	3.6	40.7	22.1	2.3	1.4	41.5
경제활동								
취업중	-5.5	-8.0	2.3	28.8	10.2	64.2	0.5	34.2
미취업	-12.9	-3.9	3.4	39.3	12.8	-0.2	1.7	35.8
거주형태								
자가	-6.5	-6.2	4.2	30.2	11.3	25.2	0.3	30.7
전세	-33.7	-2.8	2.3	38.1	12.1	0.9	4.6	23.4
월세	-12.7	-5.5	0.9	47.4	3.1	2.9	5.7	39.3
무상	-10.0	-0.8	0.8	56.2	25.4	0.1	-0.4	65.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8.8	-8.3	7.4	0.0	10.7	0.4	0.0	6.0
수급	-12.5	-3.2	0.7	57.2	13.4	25.6	2.2	52.2

〈부표 4-2-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

(단위: % 명)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개인소득 전체
전체	3.3	4.6	16.7	63.9	37.3	6.4	5.3	74.6
지역								
동부	3.2	1.8	13.8	59.5	35.9	6.3	5.8	72.0
읍·면부	3.5	10.6	23.0	73.8	40.3	6.7	4.2	80.7
성								
남자	5.4	8.5	29.6	52.7	37.3	4.2	3.8	71.5
여자	2.1	2.3	9.3	70.5	37.3	7.7	6.2	76.5
결혼상태								
유배우	3.9	5.8	20.5	50.5	36.6	3.7	2.3	68.4
무배우	2.5	3.1	11.6	82.1	38.2	10.0	9.4	83.0
연령								
65~69세	4.4	6.5	28.7	46.9	31.7	3.7	2.3	66.4
70~74세	3.6	4.6	14.4	66.2	41.5	5.0	4.6	75.3
75세 이상	1.8	2.6	7.7	78.0	38.8	10.1	8.8	81.9
교육수준								
무학	1.8	4.4	10.3	86.4	39.7	12.2	9.0	86.9
초등학교	4.4	4.8	15.6	60.0	36.3	3.6	4.2	71.4
중학교	4.7	5.4	25.0	51.0	39.9	3.4	1.4	67.8
고등학교	2.2	4.4	26.5	39.7	33.1	2.9	3.7	63.2
대학이상	3.6	3.6	30.9	18.5	32.7	3.6	0.0	55.6
가구형태								
노인독신	1.4	4.6	11.3	84.5	42.2	16.8	15.5	83.1
노인부부	4.0	7.2	20.4	54.5	39.0	4.6	2.6	70.1
자녀동거	3.9	2.2	15.0	61.6	35.0	1.4	2.2	75.1
기타	3.0	1.0	20.0	62.0	24.0	6.0	3.0	72.0
자녀수								
1명 이하	2.6	0.9	11.2	69.8	22.4	15.5	18.1	75.0
2명	5.4	4.6	21.5	53.8	24.6	8.5	7.7	69.2
3명	2.7	3.9	18.8	53.0	33.9	6.3	6.4	70.9
4명	3.6	4.6	13.5	65.1	45.4	3.6	3.0	73.4
5명 이상	3.1	6.2	17.4	73.1	42.1	5.0	1.9	8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0.0	4.0	26.0	31.4	37.3	4.0	2.0	68.0
약간 좋다	3.5	4.0	17.8	61.2	35.3	3.5	2.5	76.2
보통이다	5.1	4.7	21.3	58.1	34.9	1.9	3.5	70.9
약간 나쁘다	1.8	5.8	14.8	68.5	38.4	8.0	6.4	77.4
매우 나쁘다	2.7	3.2	12.3	71.4	40.5	12.7	9.5	74.0
경제활동								
취업중	7.8	17.7	26.1	55.3	34.2	4.5	1.2	70.0
미취업	1.8	0.1	13.5	66.9	38.4	7.0	6.8	76.2
거주형태								
자가	2.6	5.3	20.1	53.4	38.4	2.7	1.3	72.1
전세	5.7	1.9	10.8	68.4	31.8	7.0	8.9	70.7
월세	5.0	3.1	9.9	87.5	26.7	18.0	22.5	80.1
무상	3.0	5.4	12.6	89.2	47.0	13.2	5.4	85.0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9	5.4	27.4	0.6	32.4	2.1	0.2	51.0
수급	3.0	4.3	10.9	99.9	40.2	8.9	8.3	88.2

〈부표 4-2-9〉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의 부채

(단위: %, 명, 천원)

	부채								계(명)	평균부채 (천원)
	0원	1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만원	10000만원~ 50000만원	50000만원~ 1억	1억~ 5억	5억 이상~		
전체 ¹⁾	61.8	2.2	4.1	3.2	16.5	7.3	4.6	0.4	100.0(1300)	20915.2
지역										
동부	57.7	2.2	3.3	3.1	18.4	8.5	6.0	0.6	100.0(896)	26658.6
읍·면부	70.8	2.0	5.7	3.5	12.4	4.5	1.2	0.0	100.0(404)	7931.9
성										
남자	59.3	2.3	3.1	3.5	18.1	7.7	5.4	0.6	100.0(481)	27094.2
여자	63.0	2.2	4.6	3.0	15.6	7.1	4.1	0.3	100.0(822)	17170.3
연령										
65~69세	52.6	2.3	4.7	4.7	22.2	7.5	5.1	1.0	100.0(428)	32234.2
70~74세	60.3	2.6	4.3	4.3	12.7	10.3	5.3	0.2	100.0(418)	20154.7
75세 이상	71.9	1.8	3.1	0.9	14.7	4.2	3.5	0.0	100.0(455)	10709.4
결혼상태										
유배우	60.6	1.7	3.6	3.1	15.9	8.3	5.9	0.8	100.0(747)	28076.7
무배우	63.3	2.9	4.7	3.4	17.2	5.8	2.7	0.0	100.0(553)	11054.0
교육수준										
무학	67.9	2.5	5.3	3.9	14.0	4.4	2.1	0.0	100.0(436)	10104.4
초등학교	64.2	1.7	5.0	1.9	15.7	7.5	3.8	0.2	100.0(523)	15943.3
중학교	50.7	2.0	1.3	6.0	24.0	9.3	6.7	0.0	100.0(150)	21760.1
고등학교	54.4	0.7	1.5	3.7	17.6	13.2	8.1	0.7	100.0(136)	34232.6
대학이상	38.2	9.1	0.0	0.0	20.0	9.1	16.4	7.3	100.0(55)	117728.4
가구형태										
노인독신	82.7	3.2	3.5	2.5	5.3	1.8	1.1	0.0	100.0(284)	3681.2
노인부부	68.7	1.8	3.6	3.4	11.4	6.4	4.0	0.8	100.0(501)	20947.5
자녀동거	41.8	1.9	4.8	3.1	29.2	11.6	7.2	0.2	100.0(414)	30088.33
기타 ²⁾	51.0	3.0	5.0	4.0	21.0	8.0	7.0	1.0	100.0(100)	30718.8
거주형태										
자가	56.2	2.2	3.8	3.2	20.5	8.6	4.9	0.6	100.0(815)	24388.7
전세	71.5	1.9	3.8	1.3	11.4	5.1	5.1	0.0	100.0(158)	18052.7
월세	65.6	2.5	5.0	4.4	13.8	5.0	3.8	0.0	100.0(160)	15375.3
무상	75.6	2.4	4.8	4.2	4.8	5.4	3.0	0.0	100.0(168)	11380.1
경제활동										
취업중	61.7	2.1	6.3	5.4	13.6	6.9	3.6	0.3	100.0(332)	18209.6
미취업	61.7	2.2	3.3	2.4	17.6	7.3	5.0	0.5	100.0(967)	21738.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66.9	2.6	4.8	3.4	14.2	6.0	2.2	0.0	100.0(819)	10330.6
수급	53.4	1.5	3.0	2.8	20.0	.4	9.0	0.9	100.0(466)	35248.5

주: 1) 본인응답자와 대리응답자 포함한 1300명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소득창출행위

〈부표 4-3-1〉 노인의 2년간 경제활동 경험율 및 현재 경제활동을

특성	2년간 경제활동 경험율	근로율	(명)
지역			
동부	23.8	16.3	887
읍·면부	53.5	47.3	400
성			
남자	46.6	37.7	476
여자	24.9	19.0	810
연령			
65~69세	39.7	32.4	426
70~74세	37.5	29.9	416
75세 이상	22.5	16.0	445
결혼상태			
유배우	40.8	33.5	741
무배우	22.4	15.6	545
교육수준			
무학	27.7	21.9	430
초등학교	38.0	29.2	520
중학교	29.3	25.9	147
고등학교	30.1	25.5	136
대학이상	37.0	27.8	54
가구형태			
노인독신	28.5	21.8	284
노인부부	43.5	36.2	497
자녀동거	24.1	17.8	410
기타	27.7	20.0	9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50.0	44.0	50
약간 좋다	37.8	31.2	201
보통이다	37.1	29.8	315
약간 나쁘다	29.7	24.8	499
매우 나쁘다	26.0	14.2	219
기초노령연금4)			
비수급	36.6	32.3	467
수급	31.0	22.2	820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8.7	17.1	300
50~100만원 미만	38.5	31.6	397
100~200만원 미만	38.9	35.2	301
200만원 이상	23.9	17.6	289
계	33.0	25.9	1287

〈부표 4-3-2〉 경제활동노인의 종사직종

특성	관리자, 전문가	사무,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기능원, 기계조립원	단순노무직	계
전체	3.3	14.1	59.3	3.6	19.8	100.0(334)
지역						
동부	6.3	27.1	17.4	7.6	41.7	100.0(144)
읍·면부	1.1	3.7	91.5	0.5	3.2	100.0(188)
성						
남자	6.7	11.7	57.0	5.0	19.6	100.0(179)
여자	0.0	16.8	61.9	1.3	20.0	100.0(155)
연령						
65~69세	6.6	11.7	54.0	6.6	21.2	100.0(137)
70~74세	1.6	13.6	56.0	1.6	27.2	100.0(125)
75세 이상	1.4	18.3	74.6	0.0	5.6	100.0(71)
결혼상태						
유배우	4.0	10.9	63.3	4.4	17.3	100.0(248)
무배우	2.3	23.3	46.5	1.2	26.7	100.0(86)
교육수준						
무학	0.0	8.4	74.7	0.0	16.8	100.0(95)
초등학교	0.0	14.5	63.2	2.6	19.7	100.0(152)
중학교	5.4	18.9	45.9	8.1	21.6	100.0(37)
고등학교	14.7	17.6	29.4	11.8	26.5	100.0(34)
대학이상	28.6	28.6	21.4	0.0	21.4	100.0(14)
가구형태						
노인독신	0.0	22.2	54.0	1.6	22.2	100.0(63)
노인부부	3.3	8.9	75.0	3.9	8.9	100.0(180)
자녀동거	5.4	18.9	28.4	5.4	41.9	100.0(74)
기타	11.1	16.7	44.4	0.0	27.8	100.0(1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6.1	21.7	13.0	8.7	30.4	100.0(23)
약간 좋다	1.6	19.4	62.9	6.5	9.7	100.0(62)
보통이다	4.3	11.8	53.8	3.2	26.9	100.0(93)
약간 나쁘다	0.8	11.3	67.7	2.4	17.7	100.0(124)
매우 나쁘다	0.0	15.6	62.5	0.0	21.9	100.0(32)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0.0	15.4	63.7	1.6	19.2	100.0(182)
수급	7.9	12.6	53.6	5.3	20.5	100.0(151)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0.0	15.4	65.4	1.9	17.3	100.0(52)
50~100만원 미만	2.4	11.1	69.8	0.8	15.9	100.0(126)
100~200만원 미만	1.9	15.1	55.7	6.6	20.8	100.0(106)
200만원 이상	12.0	18.0	34.0	6.0	30.0	100.0(50)

〈부표 4-3-3〉 경제활동노인의 종사기간

특성	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이상	계
전체	20.5	10.9	5.6	6.2	56.8	100.0(322)
지역						
동부	38.5	12.6	7.4	10.4	31.1	100.0(135)
읍·면부	7.5	9.6	4.3	3.2	75.4	100.0(187)
직종						
관리직·전문직	18.2	0.0	27.3	9.1	45.5	100.0(11)
사무·서비스·판매	20.5	15.9	11.4	18.2	34.1	100.0(44)
농임어업	5.6	9.7	4.1	3.1	77.4	100.0(195)
기능원·기계조립	27.3	9.1	9.1	0.0	54.5	100.0(11)
단순노무직	68.9	13.1	1.6	6.6	9.8	100.0(61)
성						
남자	20.6	8.0	7.4	4.0	60.0	100.0(175)
여자	20.9	14.2	3.4	8.8	52.7	100.0(148)
연령						
65~69세	22.4	12.7	8.2	6.7	50.0	100.0(134)
70~74세	23.3	7.5	4.2	4.2	60.8	100.0(120)
75세 이상	12.9	14.3	2.9	8.6	61.4	100.0(70)
교육수준						
무학	15.2	16.3	5.4	3.3	59.8	100.0(92)
초등학교	22.1	6.2	2.8	4.8	64.1	100.0(145)
중학교	18.9	10.8	2.7	5.4	62.2	100.0(37)
고등학교	32.4	5.9	11.8	17.6	32.4	100.0(34)
대학이상	20.0	33.3	26.7	6.7	13.3	100.0(1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2.7	9.1	0.0	22.7	45.5	100.0(22)
약간 좋다	18.0	11.5	9.8	3.3	57.4	100.0(61)
보통이다	27.8	7.8	4.4	7.8	52.2	100.0(90)
약간 나쁘다	16.5	15.7	5.8	2.5	59.5	100.0(121)
매우 나쁘다	20.0	3.3	6.7	10.0	60.0	100.0(30)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7.1	8.2	5.5	8.9	60.3	100.0(146)
수급	23.3	13.1	5.7	4.0	54.0	100.0(176)

〈부표 4-3-4〉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근로희망 여부

(단위: %)

	희망	비희망	계(명)		희망	비희망	계(명)
현재 근로여부				가구형태			
근로	81.4	18.6	100.0(334)	노인독신	27.8	72.2	100.0(284)
비근로	20.6	79.4	100.0(953)	노인부부	41.5	58.5	100.0(497)
지역				자녀동거	34.9	65.1	100.0(411)
동부	32.7	67.3	100.0(886)	기타	41.7	58.3	100.0(94)
읍·면부	44.4	55.6	100.0(400)	주관적 건강상태			
성				매우 좋다	64.1	35.9	100.0(50)
남자	55.0	45.0	100.0(477)	약간 좋다	45.4	54.6	100.0(202)
여자	25.3	74.7	100.0(810)	보통이다	45.5	54.5	100.0(315)
연령				약간 나쁘다	30.3	69.7	100.0(500)
65~69세	47.9	52.1	100.0(426)	매우 나쁘다	22.5	77.5	100.0(220)
70~74세	39.7	60.3	100.0(415)	기초노령연금			
75세 이상	22.2	77.8	100.0(445)	비수급	44.7	55.3	100.0(467)
교육수준				수급	31.6	68.4	100.0(820)
무학	26.3	73.7	100.0(430)				
초등학교	39.9	60.1	100.0(520)				
중학교	37.3	62.7	100.0(146)				
고등학교	45.4	54.6	100.0(136)				
대학이상	57.2	42.8	100.0(54)				
계	36.4	63.6	100.0(1,288)	계	36.4	63.6	100.0(1,288)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3-5〉 노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향후 근로희망 이유¹⁾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육수준					기초노령연금수 급여부	
		무학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수급	비수급
향후 근로희망 이유								
일하는 것이 좋아서	3.9	1.5	4.9	2.2	5.8	5.2	2.0	6.0
돈이 필요해서	71.3	81.9	70.7	72.9	61.6	48.2	85.8	55.5
건강유지를 위해서	9.6	5.5	7.9	8.5	14.3	31.4	7.1	12.1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0.3	-	0.5	-	-	1.7	0.3	0.4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4.3	5.8	5.2	3.7	0.6	-	3.1	5.7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2.6	-	1.9	1.3	7.5	11.2	0.3	4.9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0.1	-	-	-	-	2.3	0.0	0.4
일손이 모자라서	1.4	1.5	1.7	-	2.3	-	0.7	2.3
기타	6.5	3.8	7.1	11.4	7.9	-	0.7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60)	(140)	(251)	(67)	(70)	(33)	(295)	(265)

주: 1) 본인응답자 1,288명 중 현재 근로 중인 노인과 현재 비근로 중이나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 56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명을 제외함.

〈부표 4-3-6〉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금액증가와 구직의사

(단위: %, 명)

	현재 수준	월 10만원~15만원 미만 수준	월 15만원~20만원 미만 수준	월 20만원 이상 수준	계(명)
전체 ¹⁾	-	17.9	27.8	24.3	100.0(94)
지역					
동부	-	13.5	32.7	53.8	100.0(52)
읍·면부	-	23.3	23.3	53.5	100.0(43)
성					
남자	-	12.5	25.0	62.5	100.0(32)
여자	-	21.0	29.0	50.0	100.0(62)
연령					
65~69세	-	7.7	23.1	69.2	100.0(26)
70~74세	-	17.1	29.3	53.7	100.0(41)
75세 이상	-	28.6	28.6	42.9	100.0(28)
결혼상태					
유배우	-	19.1	29.8	51.1	100.0(47)
무배우	-	17.0	25.5	57.4	100.0(47)
교육수준					
무학	-	18.9	37.8	43.2	100.0(37)
초등학교	-	16.3	18.6	65.1	100.0(43)
중학교	-	12.5	50.0	37.5	100.0(8)
고등학교	-	33.3	0.0	66.7	100.0(6)
대학이상	-	0.0	0.0	0.0	0(0)
가구형태					
노인독신	-	26.1	26.1	47.8	100.0(23)
노인부부	-	21.1	23.7	55.3	100.0(38)
자녀동거	-	10.7	32.1	57.1	100.0(28)
기타 ²⁾	-	0.0	25.0	75.0	100.0(4)
평균자녀수(명)	-	4.64	3.69	4.36	4.2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	0.0	100.0	0.0	100.0(2)
약간 좋다	-	9.1	18.2	72.7	100.0(11)
보통이다	-	10.7	28.6	60.7	100.0(28)
약간 나쁘다	-	29.7	24.3	45.9	100.0(39)
매우 나쁘다	-	7.1	35.7	57.1	100.0(14)
거주형태					
자가	-	17.0	25.5	57.4	100.0(47)
전세	-	5.6	44.4	50.0	100.0(18)
월세	-	7.7	46.2	46.2	100.0(13)
무상	-	43.8	0.0	56.3	100.0(16)
경제활동					
취업중	-	16.7	16.7	66.7	100.0(48)
미취업	-	19.6	39.1	41.3	100.0(46)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 가운데 비해당 725명 제외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3-7〉 기초노령연금의 근로활동 수준에 미치는 효과

변수	전체집단		1차 사업대상자		2차 사업대상자	
	MarginEffect	Std. Err.	MarginEffect	Std. Err.	MarginEffect	Std. Err.
수급집단	10.5157***	1.3908	12.4596***	1.9750	12.4596***	1.9750
제도시행	2.1715	1.4234	3.6907	2.2824	3.6907	2.2824
DiDt	-0.3597	1.6626	0.2592	2.4738	0.2592	2.4738
남성	-1.6552**	0.8421	4.6143***	1.0268	4.6143***	1.0268
연령	4.8389***	0.1073	2.0681***	0.1343	2.0681***	0.1343
7대광역시	8.6319***	0.8080	10.9815***	0.9919	10.9815***	0.9919
무학	-10.3350***	1.4933	-5.6259***	1.8341	-5.6259***	1.8341
초졸	11.4696***	1.3312	12.4353***	1.6717	12.4353***	1.6717
중졸	-6.9747***	1.5617	-4.2035**	1.9855	-4.2035**	1.9855
전문대이상	20.5871***	2.0400	13.4573***	2.7637	13.4573***	2.7637
자택	14.1764***	0.8972	12.5430***	1.0595	12.5430***	1.0595
단독가구	21.3588***	0.8988	18.7455***	1.0612	18.7455***	1.0612
건강(보통이상)	5.4602***	0.8577	4.6059***	1.0132	4.6059***	1.0132
건강(보통미만)	-20.5314***	3.1841	-17.7896***	3.6797	-17.7896***	3.6797
생계비수준(30만미만)	-32.3976***	1.0374	-29.3684***	1.1938	-29.3684***	1.1938
생계비수준(50만이상)	11.1194***	0.9006	9.4080***	1.0999	9.4080***	1.0999
재산환산액	0.7663***	0.2614	0.3208	0.3047	0.3208	0.3047
N	263,070		139,842		123,228	
Log of likelihood	-154,405.9		-93,635.1		-60,151.6	

주: 1) *, **, *** 는 각각 10%, 5%, 1% 유의도 수준임.
 2) left-censored at 0, right-censored at ln(180000)

〈부표 4-3-8〉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액수에 따른 구직의사

(단위: %, 명)

	구직의사		계(명)
	아니오	예	
전체 ¹⁾	68.2	31.8	100.0(296)
지역			
동부	68.1	31.9	100.0(160)
읍·면부	68.1	31.9	100.0(135)
성			
남자	76.1	23.9	100.0(134)
여자	61.7	38.3	100.0(162)
연령			
65~69세	72.6	27.4	100.0(95)
70~74세	65.5	34.5	100.0(116)
75세 이상	66.7	33.3	100.0(84)
결혼상태			
유배우	74.9	25.1	100.0(183)
무배우	57.5	42.5	100.0(113)
교육수준			
무학	66.4	33.6	100.0(110)
초등학교	66.4	33.6	100.0(131)
중학교	75.8	24.2	100.0(33)
고등학교	64.7	35.3	100.0(17)
대학이상	100.0	0.0	100.0(6)
가구형태			
노인독신	65.7	34.3	100.0(70)
노인부부	70.8	29.2	100.0(130)
자녀동거	65.4	34.6	100.0(81)
기타 ²⁾	73.3	26.7	100.0(15)
평균자녀수(명)	4.08	4.23	4.1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70.0	30.0	100.0(10)
약간 좋다	77.8	22.2	100.0(54)
보통이다	63.8	36.3	100.0(80)
약간 나쁘다	67.3	32.7	100.0(113)
매우 나쁘다	64.1	35.9	100.0(39)
거주형태			
자가	73.6	26.4	100.0(174)
전세	51.4	48.6	100.0(37)
월세	67.5	32.5	100.0(40)
무상	61.4	38.6	100.0(44)
경제활동			
취업중	73.7	26.3	100.0(179)
미취업	59.5	40.5	100.0(116)

주: 1)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 노인 가운데 비해당 524명 제외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3-9〉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이전 수혜율

(단위: % 명)

	사적이전	사적이전의 내용 ¹⁾			
	수혜율	정기적인 사적 지원수혜율	비정기적인 사적지원수혜율	사적 현물지원 수혜율	(대상자수)
전체	91.7	38.6	83.8	84.0	(1,192)
지역					
동부	90.6	39.5	80.5	81.0	(896)
읍·면부	94.1	36.6	90.8	90.5	(404)
성					
남자	91.3	34.7	84.0	85.6	(480)
여자	92.0	40.7	83.7	83.2	(820)
연령					
65~69세	91.1	35.5	82.1	84.9	(428)
70~74세	90.6	38.4	86.5	81.4	(417)
75세 이상	93.4	41.5	83.0	85.4	(454)
결혼상태					
유배우	93.0	35.8	86.0	85.1	(748)
무배우	89.9	42.5	80.7	82.5	(553)
교육수준					
무학	93.6	38.0	84.3	81.9	(436)
초등학교	92.6	39.9	85.2	84.0	(525)
중학교	92.6	43.1	86.2	85.4	(149)
고등학교	86.8	32.2	76.3	87.3	(136)
대학이상	79.6	31.8	76.7	90.7	(54)
가구형태					
노인독신	94.4	53.7	79.5	83.6	(284)
노인부부	97.2	39.8	87.9	86.7	(501)
자녀동거	86.7	27.1	83.2	81.1	(413)
기타	78.2	31.6	77.2	82.3	(101)
자녀수					
1명 이하	69.0	21.3	47.5	86.3	(116)
2명	76.2	31.3	80.6	86.7	(130)
3명	92.4	39.3	81.4	82.0	(331)
4명	98.7	36.7	88.7	83.0	(304)
5명 이상	97.1	44.4	90.2	85.0	(42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82.0	36.6	82.9	97.6	(50)
약간 좋다	90.6	33.9	85.7	82.5	(202)
보통이다	92.4	35.1	86.3	83.9	(315)
약간 나쁘다	92.0	42.7	83.0	84.1	(499)
매우 나쁘다	94.5	38.5	80.8	84.6	(220)
경제활동					
취업중	93.7	27.7	87.8	88.5	(332)
미취업	91.1	42.5	82.4	82.4	(967)
거주형태					
자가	91.9	35.9	86.0	83.4	(815)
전세	91.1	34.3	80.4	79.0	(157)
월세	86.9	35.2	71.2	86.4	(160)
무상	96.4	58.1	88.2	89.4	(167)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90.8	34.5	83.0	84.9	(466)
수급	92.6	40.7	84.2	84.0	(819)

주: 1) 사적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1,19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3-10〉 현금 및 현물지원자 현황

(단위: % 명)

	정기적인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지원
배우자	0.2	0.5	-
장남·며느리	51.6	42.2	35.0
그 외의 아들·며느리	21.4	21.7	12.8
장녀·사위	13.8	20.3	24.7
그 외의 딸·사위	8.8	10.5	13.0
손자녀·배우자	0.8	1.1	1.3
형제·자매	0.3	1.5	1.6
그 외의 친척	0.8	0.9	2.4
친구·이웃	1.1	0.5	3.2
종교단체(목사·신부·스님 등)	0.3	0.3	1.2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공무원)	-	-	0.1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	0.1	3.8
기타	0.9	0.5	0.8
	460명	999명	1,002명

주: 1)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은 460명,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은 999명, 현물지원을 받은 1,00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4-3-11〉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 현금지원액 규모

(단위: % 명)

현금	월평균 정기적 지원액 (단위:만원)	대상자(명)	년평균 비정기적 지원액 (단위:만원)	대상자(명)
전체	15.4	460	38.4	999
지역				
동부	16.8	321	40.4	654
읍·면부	12.1	139	34.6	345
성				
남자	13.1	152	44.8	368
여자	16.5	307	34.6	631
연령				
65~69세	16.3	139	45.5	320
70~74세	14.3	145	35.2	327
75세 이상	15.5	176	34.9	352
결혼상태				
유배우	12.3	249	40.1	598
무배우	18.9	211	35.9	401
교육수준				
무학	14.2	155	31.0	343
초등학교	13.7	194	29.6	414
중학교	21.1	59	37.7	119
고등학교	18.4	38	54.1	90
대학이상	19.6	14	183.2	33
가구형태				
노인독신	19.3	144	36.7	213
노인부부	12.7	194	46.8	428
자녀동거	15.6	97	30.6	298
기타	12.7	25	23.5	61
자녀수				
1명 이하	20.3	17	64.3	38
2명	23.0	31	39.1	79
3명	18.1	120	36.6	249
4명	13.3	110	45.0	266
5명 이상	13.0	181	32.0	36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7.5	15	27.3	34
약간 좋다	13.3	62	28.8	156
보통이다	13.7	102	50.2	251
약간 나쁘다	16.6	186	36.5	381
매우 나쁘다	15.8	80	36.7	168
경제활동				
취업중	11.8	86	32.4	273
미취업	16.2	374	40.6	726
거주형태				

현금	월평균 정기적 지원액 (단위:만원)	대상자(명)	년평균 비정기적 지원액 (단위:만원)	대상자(명)
자가	15.3	269	40.8	644
전세	14.7	49	39.6	115
월세	13.8	49	25.0	99
무상	16.8	93	35.7	142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9.8	146	47.4	352
수급	13.3	309	33.6	638
지원자				
배우자	30.0	1	17.2	5
장남·며느리	17.2	237	45.8	422
그 외의 아들·며느리	13.9	99	34.6	217
장녀·사위	14.3	63	28.4	202
그 외의 딸·사위	10.6	40	24.6	105
손자녀·배우자	6.9	4	38.7	11
형제·자매	21.0	1	66.2	15
그 외의 친척	13.6	4	150.2	9
친구·이웃	26.2	5	65.0	5
종교단체	10.0	1	11.5	3
복지기관	-	-	5.0	1
기타	3.2	4	8.2	5
지원한 자녀의 경제수준				
매우 좋다	24.5	18	100.2	27
약간 좋다	23.6	100	42.8	154
보통이다	12.8	214	43.7	426
약간 나쁘다	11.3	92	24.0	263
매우 나쁘다	11.3	19	15.2	91

주: 1)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460명중 지원금액에 대한 무응답 13명을 제외한 결과임.

2)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1,192명중 지원금액에 대한 무응답 41명을 제외한 결과임

〈부표 4-3-12〉 노인의 제특성별 현물지원수혜 내용

(단위: % 명)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기타	계
전체	0.8	7.8	20.7	1.3	67.5	1.9	100.0(1,002)
지역							
동부	0.8	7.6	21.1	1.7	68.2	0.6	100.0(658)
읍·면부	0.9	8.1	20.0	0.9	65.8	4.3	100.0(345)
성							
남자	1.1	9.1	15.2	1.3	71.7	1.6	100.0(375)
여자	0.6	6.8	24.0	1.4	65.0	2.1	100.0(628)
연령							
65~69세	1.5	5.7	23.9	0.6	66.2	2.1	100.0(331)
70~74세	0.6	10.4	18.8	1.3	67.9	1.0	100.0(308)
75세 이상	0.0	7.2	19.6	2.2	68.5	2.5	100.0(362)
결혼상태							
유배우	1.0	8.3	16.9	1.2	71.2	1.4	100.0(591)
무배우	0.2	7.1	26.3	1.5	62.2	2.7	100.0(410)
교육수준							
무학	0.0	5.1	23.0	1.2	67.2	3.6	100.0(335)
초등학교	0.2	7.9	21.7	1.5	68.0	0.7	100.0(406)
중학교	2.5	7.6	19.5	2.5	66.1	1.7	100.0(118)
고등학교	1.9	14.4	8.7	0.0	73.1	1.9	100.0(104)
대학이상	5.1	12.8	28.2	0.0	53.8	0.0	100.0(39)
가구형태							
노인독신	0.4	5.4	21.9	1.3	67.9	3.1	100.0(224)
노인부부	1.4	8.3	17.7	1.7	69.3	1.7	100.0(423)
자녀동거	0.0	10.3	24.5	1.0	63.8	0.3	100.0(290)
기타	0.0	1.5	20.0	1.5	70.8	6.2	100.0(65)
자녀수							
1명 이하	0.0	7.2	20.3	0.0	72.5	0.0	100.0(69)
2명	0.0	8.1	8.1	3.5	80.2	0.0	100.0(86)
3명	0.8	5.6	21.1	0.8	70.1	1.6	100.0(251)
4명	1.6	10.5	21.4	2.0	62.5	2.0	100.0(248)
5명 이상	0.6	7.5	22.8	0.9	65.4	2.9	100.0(34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0.0	10.3	20.5	0.0	66.7	2.6	100.0(39)
약간 좋다	3.3	7.9	13.9	0.0	69.5	5.3	100.0(151)
보통이다	0.4	6.9	24.1	2.9	64.9	0.8	100.0(245)
약간 나쁘다	0.5	8.3	22.8	1.8	65.8	0.8	100.0(386)
매우 나쁘다	0.0	7.4	17.7	0.0	72.6	2.3	100.0(175)
경제활동							
취업중	1.4	7.6	18.1	0.7	70.3	1.8	100.0(276)
미취업	0.4	7.9	21.8	1.5	66.5	1.9	100.0(725)
거주형태							
자가	1.3	8.2	23.7	0.8	64.1	1.9	100.0(624)
전세	0.0	12.3	10.5	4.4	72.8	0.0	100.0(114)
월세	0.0	4.2	19.2	2.5	73.3	0.8	100.0(120)
무상	0.0	4.9	16.7	0.7	73.6	4.2	100.0(14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4	11.9	21.7	0.6	63.6	0.8	100.0(360)
수급	0.5	5.5	20.2	1.9	69.4	2.5	100.0(638)
지원자							

	여가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기타	계
장남·며느리	0.6	6.5	12.5	0.6	78.4	1.4	100.0(352)
그 외의 아들·며느리	2.3	3.9	21.1	0.8	71.1	0.8	100.0(128)
장녀·사위	0.0	10.9	31.0	2.0	54.8	1.2	100.0(248)
그 외의 딸·사위	2.3	11.5	30.0	2.3	48.5	5.4	100.0(130)
손자녀·배우자	0.0	0.0	21.4	0.0	64.3	14.3	100.0(14)
형제·자매	0.0	6.3	0.0	0.0	93.8	0.0	100.0(16)
그 외의 친척	0.0	4.2	20.8	12.5	58.3	4.2	100.0(24)
친구·이웃	0.0	12.9	19.4	0.0	67.7	0.0	100.0(31)
종교단체	0.0	0.0	16.7	0.0	83.3	0.0	100.0(12)
동사무소	0.0	0.0	100.0	0.0	0.0	0.0	100.0(1)
복지기관	0.0	2.7	2.7	0.0	94.6	0.0	100.0(37)
기타	0.0	0.0	25.0	0.0	75.0	0.0	100.0(8)
지원한 자녀의 경제수준							
매우 좋다	0.0	3.7	40.7	0.0	55.6	0.0	100.0(27)
약간 좋다	1.4	11.1	22.9	2.1	60.4	2.1	100.0(144)
보통이다	1.6	9.2	23.0	1.3	63.3	1.6	100.0(379)
약간 나쁘다	0.0	7.1	16.5	1.3	73.2	1.8	100.0(224)
매우 나쁘다	0.0	2.1	21.6	0.0	72.2	4.1	100.0(97)

4. 노인의 일상생활

〈부표 4-4-1〉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연령별 정기적금 및 예금 거래 실태

(단위: %, 명, 천원)

	전체	기초노령연금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수급	비수급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유배우	무배우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82.4	90.9	67.3	80.0	87.9	76.7	85.8	79.3	80.3	87.2	75.5	91.7
가입(매입)했다	3.7	2.0	6.8	3.7	3.7	5.2	2.8	5.4	3.6	2.4	5.7	1.1
해지(매도)했다	2.5	2.0	3.4	3.2	0.7	3.1	2.1	2.1	3.4	2.0	3.3	1.3
비해당	11.4	5.2	77.6	13.1	7.7	15.0	9.3	13.3	12.7	8.4	15.4	6.0
계	100.0 (1300)	100.0 (777)1	100.0 (362)2	100.0 (896)	100.0 (404)	100.0 (480)	100.0 (819)	100.0 (429)	100.0 (417)	100.0 (454)	100.0 (748)	100.0 (553)
소유자												
본인	64.6	61.9	66.4	66.1	61.1	72.5	57.5	64.5	65.5	65.0	58.2	100.0
배우자	35.4	38.1	33.6	33.9	38.9	27.5	42.5	35.5	34.5	35.0	41.8	0.0
계 ³⁾	100.0 (80)	100.0 (33)	100.0 (48)	100.0 (62)	100.0 (18)	100.0 (40)	100.0 (40)	100.0 (31)	100.0 (29)	100.0 (20)	100.0 (67)	100.0 (13)
거래 금액(평균)	1220.4	221.9	2973.7	1604.1	329.2	1926.1	786.9	1666.0	1900.5	139.6	1955.2	197.7
거래 이유												
생활비가 부족해서	22.0	38.2	10.9	26.2	5.6	17.9	25.0	12.9	31.0	25.0	26.0	30.8
자녀가 필요로 해서	11.1	9.2	12.4	11.5	11.1	10.3	12.5	6.5	10.3	20.0	8.8	23.1
본인의 장례 등												
사망시 필요 자금	10.0	5.6	13.0	9.8	11.1	7.7	12.5	19.4	6.9	0.0	8.8	15.4
미련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	1.6	0.0	2.7	1.6	0.0	2.6	0.0	3.2	0.0	0.0	1.5	0.0
의료비 사용을												
위해서	13.1	19.2	8.9	11.5	16.7	12.8	12.5	3.2	10.3	35.0	16.2	0.0
저축	28.9	18.4	37.6	26.2	44.4	35.9	25.0	35.5	31.0	20.0	30.9	23.1
기타	12.4	9.4	14.4	13.1	11.1	12.8	12.5	19.4	10.3	0.0	13.2	7.7
계 ⁴⁾	100.0 (80)	100.0 (33)	100.0 (48)	100.0 (61)	100.0 (18)	100.0 (39)	100.0 (40)	100.0 (31)	100.0 (29)	100.0 (20)	100.0 (68)	100.0 (13)

주: 1) 비해당 42명 제외

2) 비해당 105명 제외

3) 문항 해당응답자 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문항 해당응답자 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4-2〉 노인의 교육수준·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정기적금 및 예금 거래 실태

(단위: %, 명)

	교육수준					가구형태				거주형태				경제활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²⁾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취업 중	미취업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93.1	80.4	73.2	73.0	64.8	92.3	75.0	83.3	88.1	78.7	79.7	93.8	92.2	81.9	82.6
가입(매입)했다	1.1	4.4	6.7	4.4	9.3	1.4	7.0	1.4	3.0	4.2	7.6	0.6	1.2	4.2	3.5
해지(매도)했다	0.9	3.2	0.7	5.1	5.6	1.4	3.2	2.2	3.0	3.4	0.0	0.6	1.8	2.7	2.4
비해당	4.8	12.0	19.5	17.5	20.4	4.9	14.8	13.0	5.9	13.7	12.7	5.0	4.8	11.1	11.5
계	100.0 (436)	100.0 (525)	100.0 (149)	100.0 (137)	100.0 (54)	100.0 (284)	100.0 (501)	100.0 (414)	100.0 (101)	100.0 (815)	100.0 (158)	100.0 (160)	100.0 (167)	100.0 (332)	100.0 (967)
소유자															
본인	55.6	62.5	63.6	83.3	71.4	100.0	58.8	66.7	66.7	62.3	58.3	100.0	100.0	73.9	61.4
배우자	44.4	37.5	36.4	16.7	28.6	0.0	41.2	33.3	33.3	37.7	41.7	0.0	0.0	26.1	38.6
계 ¹⁾	100.0 (9)	100.0 (40)	100.0 (11)	100.0 (12)	100.0 (7)	100.0 (8)	100.0 (51)	100.0 (15)	100.0 (6)	100.0 (61)	100.0 (12)	100.0 (3)	100.0 (4)	100.0 (23)	100.0 (57)
거래 금액(평균)	86.0	1125.7	1431.4	1484.2	9665.3	371.8	2671.7	181.7	492.0	1733.4	941.4	7.9	47.9	490.5	1454.1
거래 이유															
생활비가 부족해서	22.2	25.0	9.1	33.3	0.0	44.4	19.2	26.7	0.0	29.0	0.0	0.0	0.0	25.0	21.1
자녀가 필요로 해서	22.2	12.5	0.0	8.3	0.0	0.0	3.8	26.7	50.0	8.1	0.0	50.0	60.0	12.5	10.5
본인의 장례 등 사망시 필요 자금 마련	0.0	5.0	18.2	33.3	0.0	22.2	3.8	13.3	33.3	12.9	0.0	0.0	0.0	12.5	8.8
자녀에게 상속해 주기 위해	0.0	0.0	0.0	8.3	0.0	0.0	0.0	6.7	0.0	1.6	0.0	0.0	0.0	0.0	1.8
의료비 사용을 위해서	11.1	12.5	45.5	0.0	0.0	0.0	21.2	0.0	0.0	11.3	33.3	0.0	0.0	8.3	15.8
저축	22.2	32.5	27.3	16.7	57.1	33.3	36.5	20.0	0.0	27.4	50.0	50.0	0.0	29.2	29.8
기타	22.2	12.5	0.0	0.0	42.9	0.0	15.4	6.7	16.7	9.7	16.7	0.0	40.0	12.5	12.3
계	100.0 (9)	100.0 (40)	100.0 (11)	100.0 (12)	100.0 (7)	100.0 (9)	100.0 (52)	100.0 (15)	100.0 (6)	100.0 (62)	100.0 (12)	100.0 (2)	100.0 (5)	100.0 (24)	100.0 (57)

주: 1) 해당 문항응답자 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4-3〉 노인의 정기적금 및 예금 지출 거래 시기

(단위: %, 명)

시기(월)	비율
1월	8.1
2월	6.0
3월	10.5
4월	8.6
5월	7.3
6월	2.2
7월	5.0
8월	15.2
9월	15.7
10월	1.2
11월	14.5
12월	5.6
계	100.0(80)

〈부표 4-4-4〉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연령별 보험, 펀드, 부동산 거래 실태

(단위: %, 명)

	전체	기초노령연금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수급	비수급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유배우	무배우
보험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99.5	99.6	99.4	99.4	100.0	98.9	99.9	99.7	99.0	100.0	99.1	100.0
가입(매입)했다	0.3	0.4	0.2	0.5	0.0	0.7	0.1	0.3	0.8	0.0	0.6	0.0
해지(매도)했다	0.1	0.1	0.3	0.1	0.0	0.4	0.0	0.0	0.3	0.0	0.3	0.0
계	100.0 (1234) ¹⁾	100.0 (789) ²⁾	100.0 (434) ³⁾	100.0 (851)	100.0 (383)	100.0 (453)	100.0 (782)	100.0 (394)	100.0 (399)	100.0 (441)	100.0 (699)	100.0 (536)
펀드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99.7	99.9	99.3	99.4	100.0	99.4	99.9	99.0	100.0	100.0	99.5	100.0
가입(매입)했다	0.2	0.0	0.0	0.5	0.0	0.4	0.1	0.7	0.0	0.0	0.4	0.0
해지(매도)했다	0.1	0.1	0.7	0.1	0.0	0.2	0.0	0.2	0.0	0.0	0.1	0.0
계	100.0 (128) ⁴⁾	100.0 (814) ⁵⁾	100.0 (454) ⁶⁾	100.0 (851)	100.0 (383)	100.0 (476)	100.0 (805)	100.0 (421)	100.0 (411)	100.0 (449)	100.0 (737)	100.0 (544)
부동산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98.8	99.3	97.8	98.9	99.0	98.8	98.9	98.4	99.1	98.7	98.5	99.2
가입(매입)했다	1.0	0.7	1.8	1.0	1.0	0.9	1.1	1.6	0.9	1.1	1.1	0.8
해지(매도)했다	0.2	0.1	0.4	0.1	0.0	0.3	0.0	0.0	0.0	0.2	0.4	0.0
계	100.0 (1006) ⁷⁾	100.0 (690) ⁸⁾	100.0 (306) ⁹⁾	100.0 (705)	100.0 (300)	100.0 (344)	100.0 (661)	100.0 (313)	100.0 (318)	100.0 (376)	100.0 (528)	100.0 (478)

주: 1) 비해당 66명 제외

2) 비해당 31명 제외

3) 비해당 32명 제외

4) 비해당 19명 제외

5) 비해당 5명 제외

6) 비해당 13명 제외

7) 비해당 294명 제외

8) 비해당 130명 제외

9) 비해당 161명 제외

〈부표 4-4-5〉 노인의 교육수준·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보험, 펀드, 부동산 거래 실태

(단위: %, 명)

	교육수준					가구형태				거주형태				경제활동	
	무학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²⁾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취업중	미취업
보험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100.0	99.2	100.0	98.4	100.0	100.0	99.1	99.5	100.0	99.2	100.0	100.0	100.0	99.4	99.6
가입	0.0	0.4	0.0	1.6	0.0	0.0	0.4	0.5	0.0	0.5	0.0	0.0	0.0	0.3	0.3
(매입)했다															
해지	0.0	0.4	0.0	0.0	0.0	0.0	0.4	0.0	0.0	0.3	0.0	0.0	0.0	0.3	0.1
(매도)했다															
계	100.0 (430)	100.0 (491)	100.0 (132)	100.0 (128)	100.0 (53)	100.0 (284)	100.0 (469)	100.0 (393)	100.0 (92)	100.0 (766)	100.0 (151)	100.0 (155)	100.0 (162)	100.0 (314)	100.0 (921)
펀드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100.0	99.8	100.0	100.0	96.3	100.0	99.6	99.5	100.0	99.5	100.0	100.0	100.0	99.4	99.8
가입	0.0	0.0	0.0	0.0	3.7	0.0	0.2	0.5	0.0	0.4	0.0	0.0	0.0	0.3	0.2
(매입)했다															
해지	0.0	0.2	0.0	0.0	0.0	0.0	0.2	0.0	0.0	0.1	0.0	0.0	0.0	0.3	0.0
(매도)했다															
계	100.0 (434)	100.0 (518)	100.0 (143)	100.0 (131)	100.0 (54)	100.0 (278)	100.0 (495)	100.0 (409)	100.0 (98)	100.0 (799)	100.0 (157)	100.0 (159)	100.0 (165)	100.0 (332)	100.0 (949)
부동산															
거래내용															
거래가 없었다	100.0	97.7	99.1	99.0	100.0	100.0	98.4	98.5	100.0	98.5	100.0	98.7	99.4	98.7	99.0
가입	0.0	2.3	0.9	0.0	0.0	0.0	1.4	1.5	0.0	1.5	0.0	1.3	0.0	1.3	0.8
(매입)했다															
해지	0.0	0.0	0.0	1.0	0.0	0.0	0.6	0.0	0.0	0.0	0.0	0.0	0.1	0.0	0.3
(매도)했다															
계	100.0 (366)	100.0 (394)	100.0 (109)	100.0 (103)	100.0 (33)	100.0 (232)	100.0 (350)	100.0 (341)	100.0 (83)	100.0 (547)	100.0 (142)	100.0 (159)	100.0 (157)	100.0 (233)	100.0 (771)

주: 1) 해당 문항응답자 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4-6〉 노인의 보험, 펀드, 부동산 지출 실태

(단위: %, 천원, 명)

	보험 ¹⁾			펀드 ²⁾			부동산 ³⁾		
	전체	기초노령연금		전체	기초노령연금		전체	기초노령연금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소유자									
본인	83.2	86.6	78.4	44.0	0.0	56.4	77.8	80.8	75.6
배우자	16.8	13.4	21.6	56.0	100.0	43.6	22.2	19.2	24.4
거래 시기	0.0	-	-	0.0	-	-	0.0	-	-
2월	0.0	-	-	0.0	-	-	14.1	-	-
3월	0.0	-	-	14.6	-	-	0.0	-	-
4월	21.0	-	-	53.3	-	-	28.0	-	-
5월	9.4	-	-	32.0	-	-	0.0	-	-
6월	9.4	-	-	0.0	-	-	3.9	-	-
7월	0.0	-	-	0.0	-	-	23.2	-	-
9월	17.2	-	-	0.0	-	-	16.1	-	-
10월	0.0	-	-	0.0	-	-	11.0	-	-
12월	41.9	-	-	0.0	-	-	3.6	-	-
거래 금액(평균)	4.0	2.4	7.0	71.9	5.1	191.3	675.6	212.7	1508.2
거래 이유									
생활비가 부족해서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녀가 필요로 해서	0.0	0.0	0.0	0.0	0.0	0.0	3.9	9.1	0.0
본인의 장례 등 사망시 필요 자금 마련	28.2	48.1	0.0	0.0	0.0	0.0	8.6	20.2	0.0
자녀에게 상속해주기 위해	7.8	13.4	0.0	0.0	0.0	0.0	27.5	37.8	19.9
의료비 사용을 위해서	39.2	25.2	59.1	0.0	0.0	0.0	0.0	0.0	0.0
저축	0.0	0.0	0.0	78.0	0.0	100.0	60.0	0.0	0.0
기타	24.8	13.4	40.9	22.0	100.0	0.0	0.0	33.0	80.1
계	100.0 (6)	100.0 (3)	100.0 (2)	100.0 (4)	100.0 (1)	100.0 (3)	100.0 (12)	100.0 (5)	100.0 (7)

주: 1) 해당 문항응답자 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해당 문항응답자 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해당 문항응답자 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4-7〉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 월평균 생활비

(단위: %, 명, 천원)

	월평균 생활비				계(명)	월평균 생활비 (천원)
	1만원~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전체 ¹⁾	1.2	34.1	43.5	1.2	100.0(1,00)	1230.5
지역						
동부	18.6	30.8	49.3	1.2	100.0(896)	1340.6
읍·면부	27.7	31.3	39.8	1.2	100.0(404)	986.6
성						
남자	10.2	39.0	49.8	1.0	100.0(480)	1314.3
여자	27.7	31.3	39.8	1.2	100.0(819)	1181.5
연령						
65~69세	15.6	29.4	54.3	0.7	100.0(429)	1334.2
70~74세	19.5	38.9	39.9	1.7	100.0(416)	1262.3
75세 이상	28.1	34.3	36.3	1.3	100.0(455)	1103.5
결혼상태						
유배우	8.0	41.7	49.1	1.2	100.0(748)	1311.8
무배우	39.1	23.9	35.8	1.3	100.0(553)	1120.8
교육수준						
무학	34.6	35.1	29.1	1.1	100.0(436)	1009.6
초등학교	17.2	38.2	43.5	1.1	100.0(524)	1195.1
중학교	6.7	30.2	61.7	1.3	100.0(149)	1547.5
고등학교	13.9	29.2	55.5	1.5	100.0(137)	1423.6
대학이상	9.1	10.9	78.2	1.8	100.0(55)	1990.8
가구형태						
노인독신	70.8	24.3	4.9	0.0	100.0(284)	457.1
노인부부	11.2	56.9	31.9	0.0	100.0(501)	920.6
자녀동거	2.4	13.6	81.4	2.7	100.0(413)	2015.8
기타 ²⁾	8.9	32.7	53.5	5.0	100.0(100)	1731.8
거주형태						
자가	12.9	34.0	51.5	1.6	100.0(814)	1428.0
전세	25.5	33.1	41.4	0.0	100.0(157)	1018.7
월세	29.4	38.8	31.9	0.0	100.0(160)	935.9
무상	49.7	31.7	17.4	1.2	100.0(167)	750.0
경제활동						
취업중	17.4	40.5	41.7	0.3	100.0(333)	1058.0
미취업	22.5	31.9	44.0	1.5	100.0(968)	1289.8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5.8	29.5	63.7	1.1	100.0(468)	1514.5
수급	30.4	36.6	31.7	1.3	100.0(820)	1066.3

주: 1) 본인응답자와 대리응답자 포함한 1300명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4-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 월평균 용돈

(단위: %, 명, 천원)

	월평균 생활비(천원)							계(명)	월평균 용돈 (천원)
	0	1천원~ 1만원	1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체 ¹⁾	6.7	1.2	28.0	25.7	36.3	1.7	0.3	100.0(1300)	91.4
지역									
동부	6.0	0.9	26.4	26.5	38.4	1.3	0.4	100.0(897)	94.0
읍·면부	8.4	2.0	31.7	23.8	31.7	2.5	0.0	100.0(404)	85.7
성									
남자	4.4	0.6	20.0	24.0	46.9	3.3	0.8	100.0(480)	126.0
여자	8.2	1.6	32.7	26.7	30.2	0.6	0.0	100.0(820)	71.1
연령									
65~69세	4.0	0.9	22.8	26.1	43.1	2.3	0.7	100.0(429)	106.6
70~74세	6.0	1.2	28.4	27.2	35.3	1.4	0.5	100.0(416)	92.3
75세 이상	10.1	1.5	32.7	23.9	30.7	1.1	0.0	100.0(456)	76.3
결혼상태									
유배우	5.4	0.8	23.4	25.8	41.8	2.4	0.4	100.0(747)	106.0
무배우	8.5	1.8	34.3	25.5	29.1	0.7	0.2	100.0(553)	71.8
교육수준									
무학	9.2	1.6	36.8	25.3	27.1	0.0	0.0	100.0(435)	58.7
초등학교	7.2	1.5	25.9	27.4	37.5	0.6	0.0	100.0(526)	83.0
중학교	4.0	0.7	18.8	25.5	45.0	6.0	0.0	100.0(149)	125.2
고등학교	1.5	0.0	26.3	24.1	43.1	2.9	2.2	100.0(137)	138.9
대학이상	3.7	0.0	7.4	16.7	59.3	9.3	3.7	100.0(54)	222.6
가구형태									
노인독신	8.5	2.5	37.7	24.3	26.8	0.4	0.0	100.0(284)	59.9
노인부부	6.4	1.0	24.8	24.7	40.7	2.2	0.2	100.0(501)	98.4
자녀동거	4.6	0.5	25.2	28.8	39.0	1.2	0.7	100.0(413)	100.9
기타 ²⁾	12.0	1.0	29.0	22.0	32.0	4.0	0.0	100.0(100)	106.7
거주형태									
자가	4.9	0.7	22.3	27.4	41.8	2.3	0.5	100.0(815)	106.4
전세	9.6	0.6	35.9	21.2	31.4	1.3	0.0	100.0(156)	77.3
월세	11.1	1.9	42.6	21.0	23.5	0.0	0.0	100.0(162)	60.8
무상	9.0	3.6	34.1	26.3	26.9	0.0	0.0	100.0(167)	61.5
경제활동									
취업중	4.5	0.6	24.3	26.4	40.8	2.4	0.9	100.0(333)	109.7
미취업	7.5	1.4	29.3	25.4	34.8	1.4	0.1	100.0(969)	85.1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0	0.0	15.2	27.0	49.7	4.3	0.9	100.0(467)	136.7
수급	8.2	1.8	35.4	5.2	29.1	0.2	0.0	100.0(820)	66.5

주: 1) 본인응답자와 대리응답자 포함한 1300명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4-9〉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지역		성		연령		
		동	읍·면부	남	여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9.2	9.4	8.8	6.8	10.6	8.0	7.5	12.0
와식비	6.0	5.9	6.5	8.3	4.7	4.7	5.1	8.1
교육비	2.0	2.0	2.0	1.9	2.1	1.2	2.7	2.3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7.4	6.5	9.6	6.8	7.8	7.1	7.7	7.4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4.5	23.5	26.7	21.0	26.5	22.4	26.6	24.6
가구집기가사용품	0.6	0.7	0.3	0.4	0.6	0.5	1.0	0.2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4.5	5.0	3.3	0.6	6.7	6.1	4.8	2.5
교양오락비	11.4	12.0	9.8	17.6	7.7	12.5	9.7	12.0
교통비	0.6	0.6	0.8	1.1	0.4	0.5	0.0	1.4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0.2	0.1	0.5	0.2	0.2	0.2	0.0	0.5
경조사비	0.9	0.9	1.0	1.3	0.7	0.9	1.7	0.2
사회공헌	6.1	7.3	3.3	5.5	6.4	8.7	4.3	5.2
저축	7.9	7.4	9.1	96	6.9	8.9	8.0	6.8
부채상환	9.4	10.	8.1	10.0	9.0	12.0	11.8	4.5
기타	9.3	8.8	10.3	8.9	9.6	6.4	9.2	12.4
전체 ¹⁾	100.0 (1281)	100.0 (882)	100.0 (397)	100.0 (471)	100.0 (809)	100.0 (425)	100.0 (414)	100.0 (443)

주: 1) 본인응답자 1300명 가운데 무응답 5명, 비해당 14명 제외.

〈부표 4-4-10〉 노인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결혼상태		가구형태			
		유배우	무배우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²⁾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9.2	7.1	12.1	13.3	7.9	8.0	9.5
와식비	6.0	7.1	4.6	4.6	6.7	6.8	3.2
교육비	2.0	1.6	2.6	0.0	1.2	3.9	4.2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7.4	7.2	7.7	8.8	7.5	5.8	9.5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4.5	22.8	26.7	27.4	24.9	21.7	24.2
가구집기가사용품	0.6	0.5	0.6	0.7	0.8	0.2	0.0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4.5	3.3	6.1	6.3	3.0	5.1	4.2
교양오락비	11.4	15.2	6.3	6.0	14.6	12.4	5.3
교통비	0.6	0.9	0.2	0.4	1.0	0.0	2.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0.2	0.0	0.4	0.7	0.0	0.0	0.0
경조사비	0.9	0.9	0.9	0.0	0.6	1.9	2.1
사회공헌	6.1	6.2	5.9	4.9	6.7	6.1	6.3
저축	7.9	9.2	6.1	7.4	9.3	5.8	10.5
부채상환	9.4	9.5	94	3.3	6.7	14.8	9.5
기타	9.3	84	10.7	13.3	8.9	7.3	9.5
전체 ¹⁾	100.0 (1281)	100.0 (737)	100.0 (544)	100.0 (285)	100.0 (493)	100.0 (411)	100.0 (95)

주: 1) 무응답 5명, 비해당 14명 제외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4-11〉 노인의 교육수준 · 경제활동 · 주거형태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전체	교육수준					경제활동		주거형태			
		무학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취업 중	미취 업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9.2	11.7	10.6	4.7	3.7	0.0	6.4	10.2	7.2	12.1	13.5	12.1
와식비	6.0	6.8	5.0	6.8	5.9	9.3	7.0	5.8	6.3	3.2	6.4	7.3
교육비	2.0	1.6	2.9	2.0	0.7	0.0	2.7	1.8	1.9	1.9	1.9	3.0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7.4	8.2	6.3	6.1	10.4	9.3	8.2	7.1	7.3	7.6	9.0	6.1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24.5	29.1	24.6	19.6	17.8	14.8	20.6	25.8	22.8	33.8	19.9	27.9
가구집기가사용품	0.6	0.7	1.0	0.0	0.0	0.0	0.3	0.6	0.4	2.5	0.0	0.0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4.5	4.7	5.6	2.7	2.2	1.9	3.6	4.7	4.8	2.5	2.6	6.7
교양오락비	11.4	4.4	11.7	18.9	20.0	20.4	12.4	10.9	13.8	11.5	1.9	7.9
교통비	0.6	0.7	0.4	1.4	0.7	0.0	0.6	0.5	0.4	1.3	1.3	0.6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0.2	0.5	0.0	0.0	0.0	1.9	0.9	0.0	0.2	0.0	0.6	0.0
경조사비	0.9	1.4	0.6	0.7	0.0	3.7	1.2	0.9	1.2	0.0	1.3	0.0
사회공헌	6.1	3.5	5.2	8.1	14.8	9.3	4.8	6.4	5.2	7.6	10.9	3.6
저축	7.9	7.5	8.8	5.4	7.4	11.1	10.3	7.0	8.4	3.2	10.3	7.9
부채상환	9.4	8.6	8.5	13.5	8.1	16.7	10.9	9.0	10.4	5.1	13.5	4.8
기타	9.3	10.7	8.8	10.1	8.1	1.9	10.3	9.0	9.6	7.6	7.1	12.1
전체 ¹⁾	100.0 (1281)	100.0 (429)	100.0 (520)	100.0 (148)	100.0 (135)	100.0 (54)	100.0 (330)	100.0 (952)	100.0 (806)	100.0 (157)	100.0 (156)	100.0 (165)

주: 1) 무응답 5명, 비해당 14명 제외.

〈부표 4-4-12〉 노인의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전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12.9
외식비	10.9
교육비	2.4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9.3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15.7
가구집기가사용품	1.0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6.7
교양오락비	12.7
교통비	2.6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0.2
경조사비	3.0
사회공헌	3.1
저축	9.7
부채상환	3.7
기타	6.1
전체 ¹⁾	100.0 (1217)

주: 1) 무응답 69명, 비해당 14명 제외.

〈부표 4-4-13〉 노인의 제특성별 재산상속 실태

(단위: % 명)

	물려줌 ¹⁾	아직 안 물려줌	물려줄 생각 없음 ²⁾	물려줄 재산 없음	물려줄 사람 없음	계
전체	11.9	35.9	8.1	42.4	1.7	100.0(1,300)
지역						
동부	8.1	32.2	9.9	47.6	2.3	100.0(896)
읍·면부	20.4	44.3	4.1	30.7	0.5	100.0(404)
성						
남자	8.4	49.8	12.1	29.2	0.6	100.0(480)
여자	14.0	27.8	5.8	50.1	2.4	100.0(820)
연령						
65~69세	9.3	42.6	9.2	36.7	2.1	100.0(426)
70~74세	10.7	36.7	9.8	39.7	1.1	100.0(415)
75세 이상	15.0	27.8	5.7	49.6	2.0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9.4	45.3	10.3	34.1	0.9	100.0(751)
무배우	15.3	23.2	5.1	53.6	2.8	100.0(549)
교육수준						
무학	13.1	25.9	3.9	54.6	2.5	100.0(434)
초등학교	12.6	41.2	8.6	96.4	1.3	100.0(525)
중학교	11.6	38.4	13.1	37.0	0.0	100.0(151)
고등학교	7.5	40.1	10.2	39.5	2.2	100.0(136)
대학이상	7.5	47.0	17.9	24.3	3.6	100.0(55)
가구형태						
노인독신	12.7	27.7	9.8	45.5	4.3	100.0(284)
노인부부	10.0	45.6	11.5	31.7	1.2	100.0(501)
자녀동거	14.6	31.7	3.7	49.7	0.2	100.0(414)
기타	8.2	28.3	4.4	56.2	2.9	100.0(100)
자녀수						
1명 이하	4.0	22.4	9.1	53.2	11.3	100.0(187)
2명	11.3	37.1	4.9	46.7	0.0	100.0(178)
3명	7.3	39.1	8.5	45.2	0.0	100.0(346)
4명	16.3	37.6	8.7	37.4	0.0	100.0(253)
5명 이상	18.1	38.4	8.3	34.9	0.3	100.0(33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9.0	42.3	18.0	24.8	5.8	100.0(50)
약간 좋다	12.9	40.2	7.6	39.4	0.0	100.0(202)
보통이다	9.0	38.3	10.0	41.5	1.2	100.0(315)
약간 나쁘다	14.2	34.2	6.6	42.0	3.1	100.0(500)
매우 나쁘다	10.0	32.7	7.5	49.8	0.0	100.0(221)
경제활동						
취업중	14.4	50.2	9.3	24.9	1.2	100.0(333)
미취업	11.1	31.2	7.7	48.2	1.9	100.0(964)
거주형태						
자가	11.8	52.2	9.3	25.3	1.5	100.0(815)
전세	5.4	12.7	11.9	66.6	3.3	100.0(157)
월세	4.8	3.9	4.1	84.3	3.0	100.0(161)
무상	25.5	9.3	2.7	62.5	0.0	100.0(167)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0.5	54.2	10.7	23.2	1.5	100.0(467)
수급	12.4	26.0	6.8	53.0	1.9	100.0(820)

주: 1) 전부 또는 일부 물려준 경우임. 5.7%가 전부를 6.3%가 일부를 물려주었음.

2) 나를 위해 이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의 경우로 그 비율은 각각 7.4%와 0.7%임.

〈부표 4-4-14〉 재산상속 내용

(단위: % 명)

항목	
논	56명 (36.1%)
밭	22명 (14.2%)
임야	1명 (0.6%)
건축물	4명 (2.6%)
주택	74명 (47.7%)
각종 분양권 및 이용권	-
현금	26명 (16.8%)
기타	1명 (0.6%)

〈부표 4-4-15〉 노인의 제특성별 상숙예정 시점

(단위: % 명)

	사망 직전에	본인·배우자 사망 후에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생각해 본 적 없음	기타 ¹⁾	계 ²⁾
전체	32.7	41.4	5.9	12.1	7.9	100.0(474)
지역						
동부	32.0	40.0	7.3	12.7	8.1	100.0(292)
읍·면부	33.9	43.6	3.7	11.3	7.6	100.0(182)
성						
남자	35.3	44.7	3.9	10.3	5.8	100.0(240)
여자	30.1	38.0	8.0	14.1	10.0	100.0(234)
연령						
65~69세	33.6	34.2	7.9	14.1	10.1	100.0(185)
70~74세	31.2	48.5	5.4	11.3	3.7	100.0(163)
75세 이상	33.5	42.6	3.6	10.4	9.9	100.0(126)
결혼상태						
유배우	32.0	45.2	4.8	12.5	5.6	100.0(344)
무배우	34.7	31.3	8.8	11.2	14.0	100.0(130)
교육수준						
무학	31.1	46.1	6.2	9.6	7.0	100.0(145)
초등학교	31.3	40.6	6.6	12.3	9.2	100.0(218)
중학교	25.0	39.4	9.2	17.1	9.4	100.0(57)
고등학교	47.5	36.6	2.3	8.7	5.0	100.0(55)
대학이상	37.6	40.9	0.0	17.7	3.9	100.0(29)
가구형태						
노인독신	34.5	37.9	5.6	10.3	11.7	100.0(81)
노인부부	27.1	51.0	3.9	11.4	6.6	100.0(233)
자녀동거	42.4	25.7	8.1	14.3	9.5	100.0(131)
기타	29.3	44.6	12.7	13.3	0.0	100.0(28)
자녀수						
1명 이하	46.6	27.2	5.2	15.2	5.9	100.0(42)
2명	38.0	33.2	12.8	12.8	3.3	100.0(68)
3명	36.0	34.4	5.4	13.4	10.9	100.0(136)
4명	25.4	50.7	6.5	10.4	7.1	100.0(96)
5명 이상	27.7	50.5	2.7	10.8	8.3	100.0(13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40.9	31.6	4.3	12.7	10.5	100.0(21)
약간 좋다	30.4	41.4	9.2	8.8	10.2	100.0(82)
보통이다	29.2	39.3	10.0	17.0	4.5	100.0(122)
약간 나쁘다	33.6	41.7	3.8	9.7	11.3	100.0(176)
매우 나쁘다	36.9	46.7	0.7	13.7	2.0	100.0(73)
경제활동						
취업중	35.2	39.3	5.8	11.9	7.9	100.0(171)
미취업	31.3	42.6	6.0	12.3	7.9	100.0(302)
거주형태						
자가	33.2	42.0	5.7	11.7	7.5	100.0(430)
전세	27.6	27.2	8.9	21.9	14.4	100.0(22)
월세	45.4	39.9	0.0	14.7	0.0	100.0(6)
무상	23.4	43.6	10.9	8.4	13.7	100.0(16))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34.2	36.9	5.0	14.1	10.0	100.0(260)
수급	31.0	46.8	7.0	9.8	5.3	100.0(214)

주: 1) 곧, 자녀결혼후, 건강이 나빠졌을 때, 기타 등을 포함함.

2) 물려줄 생각이 있지만 아직 물려주지 않은 본인응답자 47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4-4-16〉 노인의 사회참여활동¹⁾

(단위: %, 개월)

구분	참여여부		참여빈도(월) 및 평균 참여기간 ¹⁾							평균 참여 기간
	비참여	참여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미만	계(명)	
자원봉사활동단체	98.2	1.8	14.6	-	19.8	6.2	36.2	23.3	100.0(24)	193.6
취미·여가활동단체	96.7	3.3	18.1	23.1	32.6	4.9	16.7	4.6	100.0(43)	100.4
정치사회운동단체	99.0	1.0	9.4	-	9.0	8.1	21.7	51.8	100.0(13)	104.3
사교단체	62.0	38.0	22.2	15.4	2.7	1.4	37.6	20.8	100.0(494)	196.3
종교단체	97.4	2.6	1.5	45.5	20.0	4.8	28.2	-	100.0(34)	203.4
기타	99.0	1.0	16.6	25.1	-	-	24.4	34.0	100.0(13)	225.6

주: 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56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4-17〉 노인의 지역 및 성별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¹⁾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성	
		동	읍면	남자	여자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참여할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4	3.0	0.5	4.2	1.4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41.5	41.1	42.8	39.5	42.5
건강상의 이유로	29.8	28.9	33.0	28.7	30.4
주위에서 만류하기 때문에	0.4	0.2	0.9	0.3	0.4
가정 내에 다른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5.4	5.1	6.2	4.4	5.9
피곤하고 귀찮아서	11.0	11.9	7.9	13.2	9.8
먹고살기 힘들어서	8.0	8.4	7.1	7.7	8.2
기타	1.5	1.4	1.8	2.0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38)	(561)	(178)	(250)	(489)

주: 1)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73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4-18〉 노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¹⁾

(단위: %, 명)

구분	전체	연령			교육수준				
		65~ 69세	70~ 74세	75세 이상	무학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참여할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4	2.7	2.7	1.8	0.6	2.2	6.5	2.4	9.2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41.5	44.5	40.5	39.6	48.5	37.1	41.2	38.2	31.3
건강상의 이유로	29.8	23.1	26.1	39.3	32.2	29.3	17.5	34.0	35.4
주위에서 만류하기 때문에	0.4	0.5	0.3	0.3	-	1.0	-	-	-
가정 내에 다른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5.4	8.8	5.0	2.6	2.7	7.3	6.3	6.6	5.0
피곤하고 귀찮아서	11.0	10.0	11.7	11.1	8.3	11.4	19.1	10.1	12.0
먹고살기 힘들어서	8.0	9.8	11.0	3.8	7.3	9.9	5.8	6.6	7.1
기타	1.5	0.6	2.6	1.3	0.4	1.8	3.7	2.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38)	(238)	(237)	(264)	(263)	(285)	(78)	(84)	(27)

주: 1)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73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표 4-4-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단체 참여율

(단위: %)

특성	자원봉사 활동단체 참여율	취미·여가 활동단체 참여율	정치사회 운동단체 참여율	사교단체 참여율	종교단체 참여율
전체	1.8	3.3	1.0	38.0	2.6
지역					
동부	2.1	3.4	0.7	31.4	3.0
읍·면부	1.2	3.2	1.5	52.7	2.0
성					
남자	2.3	5.2	2.7	43.1	1.7
여자	1.6	2.2	-	35.1	3.2
연령					
65~69세	2.8	4.0	0.7	38.5	2.6
70~74세	1.9	3.6	1.0	39.3	2.4
75세 이상	0.9	2.4	1.3	36.3	3.1
교육수준					
무학	1.6	0.9	-	35.3	2.3
초등학교	1.5	3.1	1.3	40.0	3.4
중학교	1.3	8.1	1.3	42.3	2.7
고등학교	3.6	4.4	2.2	32.1	2.2
대학이상	3.7	9.1	1.9	45.5	-
주관적 건강상태 ³⁾					
매우 좋다	2.0	12.0	-	51.0	2.0
약간 좋다	1.0	6.0	0.5	39.6	3.5
보통이다	3.5	5.4	1.6	42.7	3.2
약간 나쁘다	2.0	1.0	0.8	36.6	3.2
매우 나쁘다	-	0.9	0.5	31.8	0.5
기초노령연금 ⁴⁾					
비수급	3.9	5.6	2.4	48.4	2.6
수급	0.7	2.1	0.2	32.6	2.8

주: 1)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하는 2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4) 대리응답자 12명을 제외함.

〈부표 4-4-20〉 노인의 일반특성·단체종류별 단체 참여기간

(단위: %)

(1) 자원봉사단체

특성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계
전체		25.0	20.8	16.7	37.5	100.0(24)
지역						
동부	-	15.0	20.0	20.0	45.0	100.0(20)
읍·면부	-	75.0	0.0	0.0	25.0	100.0(4)
성						
남자		18.2	36.4	18.2	27.3	100.0(11)
여자		30.8	0.0	15.4	53.8	100.0(13)
연령						
65~69세		27.3	18.2	9.1	45.5	100.0(11)
70~74세		25.0	0.0	12.5	62.5	100.0(8)
75세 이상		25.0	25.0	50.0	0.0	100.0(4)
결혼상태						
유배우		18.8	25.0	25.0	31.3	100.0(16)
무배우		42.9	0.0	0.0	57.1	100.0(7)
교육수준						
무학		42.9	0.0	0.0	57.1	100.0(7)
초등학교		11.1	44.4	11.1	33.3	100.0(9)
중학교		0.0	0.0	50.0	50.0	100.0(2)
고등학교		50.0	0.0	25.0	25.0	100.0(4)
대학이상		0.0	0.0	50.0	50.0	100.0(2)
가구형태						
노인독신		100.0	0.0	0.0	0.0	100.0(2)
노인부부		30.0	30.0	20.0	20.0	100.0(10)
자녀동거		10.0	10.0	10.0	70.0	100.0(10)
기타		0.0	0.0	100.0	0.0	100.0(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0.0	0.0	0.0	100.0	100.0(1)
약간 좋다		0.0	0.0	50.0	50.0	100.0(2)
보통이다		9.1	36.4	9.1	45.5	100.0(11)
약간 나쁘다		50.0	0.0	20.0	30.0	100.0(10)
매우 나쁘다		0.0	0.0	0.0	0.0	0.0
기초노령연금 ⁴⁾						
비수급		15.8	21.1	21.1	42.1	100.0(9)
수급		60.0	0.0	0.0	40.0	100.0(5)
가구소득						
50만원미만		100.0	0.0	0.0	0.0	100.0(3)
50~100만원 미만		33.3	0.0	0.0	66.7	100.0(3)
100~200만원 미만		0.0	75.0	25.0	0.0	100.0(4)
200만원 이상		14.3	14.3	21.4	50.0	100.0(14)

(2) 취미·여가활동단체

특성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계
전체	13.2	39.5	5.3	34.2	7.9	100.0(38)
지역						
동부	13.8	37.9	10.3	27.6	10.3	100.0(29)
읍·면부	16.7	41.7	0.0	41.7	0.0	100.0(12)
성						
남자	12.5	25.0	8.3	41.7	12.5	100.0(24)
여자	11.8	58.8	5.9	23.5	0.0	100.0(17)
연령						
65~69세	12.5	43.8	6.3	31.3	6.3	100.0(16)
70~74세	6.7	33.3	13.3	46.7	0.0	100.0(15)
75세 이상	25.0	41.7	0.0	16.7	16.7	100.0(12)
결혼상태						
유배우	12.5	34.4	9.4	34.4	9.4	100.0(32)
무배우	10.0	50.0	0.0	30.0	10.0	100.0(10)
교육수준						
무학	0.0	75.0	25.0	0.0	0.0	100.0(4)
초등학교	18.8	31.3	6.3	31.3	12.5	100.0(16)
중학교	16.7	41.7	0.0	41.7	0.0	100.0(12)
고등학교	25.0	25.0	0.0	50.0	0.0	100.0(4)
대학이상	0.0	60.0	0.0	20.0	20.0	100.0(5)
가구형태						
노인독신	14.3	71.4	0.0	0.0	14.3	100.0(7)
노인부부	18.2	31.8	13.6	31.8	4.5	100.0(22)
자녀동거	0.0	44.4	0.0	44.4	11.1	100.0(9)
기타	0.0	33.3	0.0	66.7	0.0	100.0(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0.0	0.0	0.0	100.0	0.0	100.0(6)
약간 좋다	16.7	50.0	8.3	25.0	0.0	100.0(12)
보통이다	6.3	37.5	12.5	25.0	18.8	100.0(16)
약간 나쁘다	40.0	60.0	0.0	0.0	0.0	100.0(5)
매우 나쁘다	50.0	50.0	0.0	0.0	0.0	100.0(2)
기초노령연금 ⁴⁾						
비수급	7.7	34.6	11.5	42.3	3.8	100.0(26)
수급	25.0	43.8	0.0	18.8	12.5	100.0(16)
가구소득						
50만원미만	20.0	40.0	20.0	0.0	20.0	100.0(5)
50~100만원 미만	22.2	55.6	11.1	0.0	11.1	100.0(9)
100~200만원 미만	20.0	30.0	0.0	50.0	0.0	100.0(10)
200만원 이상	0.0	35.7	0.0	57.1	7.1	100.0(14)

(3) 정치참여단체

특성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계
전체	8.3	50.0	8.3	33.3	0.0	100.0(12)
지역						
동부	20.0	40.0	0.0	40.0	0.0	100.0(5)
읍·면부	0.0	60.0	20.0	20.0	0.0	100.0(5)
성						
남자	8.3	50.0	8.3	33.3	0.0	100.0(12)
여자	-					
연령						
65~69세	0.0	100.0	0.0	0.0	0.0	100.0(2)
70~74세	0.0	66.7	0.0	33.3	0.0	100.0(3)
75세 이상	20.0	20.0	20.0	40.0	0.0	100.0(5)
결혼상태						
유배우	8.3	50.0	8.3	33.3	0.0	100.0(12)
무배우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16.7	50.0	0.0	33.3	0.0	100.0(6)
중학교	0.0	0.0	0.0	100.0	0.0	100.0(2)
고등학교	0.0	66.7	33.3	0.0	0.0	100.0(3)
대학이상	0.0	100.0	0.0	0.0	0.0	100.0(1)
가구형태						
노인독신						
노인부부	0.0	55.6	11.1	33.3	0.0	100.0(9)
자녀동거	33.3	33.3	0.0	33.3	0.0	100.0(3)
기타	-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약간 좋다	0.0	100.0	0.0	0.0	0.0	100.0(1)
보통이다	20.0	40.0	0.0	40.0	0.0	100.0(5)
약간 나쁘다	0.0	40.0	20.0	40.0	0.0	100.0(5)
매우 나쁘다	0.0	100.0	0.0	0.0	0.0	100.0(1)
기초노령연금 ⁴⁾						
비수급	10.0	60.0	10.0	20.0	0.0	100.0(10)
수급	0.0	0.0	0.0	100.0	0.0	100.0(2)
가구소득						
50만원미만						
50~100만원 미만	0.0	60.0	0.0	40.0	0.0	100.0(5)
100~200만원 미만	0.0	0.0	50.0	50.0	0.0	100.0(2)
200만원 이상	33.3	66.7	0.0	0.0	0.0	100.0(3)

(4) 사교참여단체

특성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계
전체	4.5	16.1	20.8	23.8	34.8	100.0(491)
지역						
동부	5.1	15.3	18.2	22.2	39.3	100.0(275)
읍·면부	2.8	17.5	24.5	25.5	29.7	100.0(212)
성						
남자	2.9	14.4	14.9	23.1	44.7	100.0(208)
여자	5.3	17.4	25.5	24.1	27.7	100.0(282)
연령						
65~69세	4.8	15.2	20.6	15.2	44.2	100.0(165)
70~74세	6.1	18.9	20.7	17.7	36.6	100.0(164)
75세 이상	1.9	14.4	21.3	38.8	23.8	100.0(160)
결혼상태						
유배우	3.3	14.4	15.7	21.3	45.2	100.0(305)
무배우	6.0	19.0	29.3	27.7	17.9	100.0(184)
교육수준						
무학	2.0	23.0	29.7	29.1	16.2	100.0(148)
초등학교	5.7	15.2	21.4	24.8	32.9	100.0(210)
중학교	4.8	9.5	9.5	15.9	60.3	100.0(63)
고등학교	4.5	11.4	15.9	20.5	47.7	100.0(44)
대학이상	0.0	8.0	8.0	4.0	80.0	100.0(25)
가구형태						
노인독신	7.2	18.9	27.0	28.8	18.0	100.0(111)
노인부부	2.9	16.9	16.9	20.8	42.5	100.0(207)
자녀동거	5.1	16.2	24.3	25.0	29.4	100.0(136)
기타	0.0	5.7	11.4	17.1	65.7	100.0(3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5.4	3.8	3.8	15.4	61.5	100.0(26)
약간 좋다	3.8	7.5	30.0	26.3	32.5	100.0(80)
보통이다	3.0	18.5	19.3	20.0	39.3	100.0(135)
약간 나쁘다	4.4	17.8	18.9	25.6	33.3	100.0(180)
매우 나쁘다	4.3	21.4	24.3	27.1	22.9	100.0(70)
기초노령연금 ⁴⁾						
비수급	2.3	11.7	16.2	19.4	50.5	100.0(222)
수급	5.6	19.9	24.8	27.4	22.2	100.0(266)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7.7	19.2	30.8	25.6	16.7	100.0(78)
50~100만원 미만	3.1	21.3	16.3	26.9	32.5	100.0(160)
100~200만원 미만	3.9	11.8	23.6	22.0	38.6	100.0(127)
200만원 이상	4.0	12.1	17.7	20.2	46.0	100.0(124)

〈부표 4-4-21〉 노인의 제특성별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전체	59.0(760)	31.7(408)	4.8(62)	3.5(45)	1.0(13)	100.0(1,288)
지역						
동부	58.5	32.1	5.0	3.3	1.1	100.0(887)
읍·면부	60.3	30.8	4.5	4.0	0.5	100.0(400)
성						
남자	69.5	25.0	3.4	1.3	0.8	100.0(476)
여자	53.0	35.6	5.7	4.7	1.0	100.0(809)
연령						
65~69세	65.3	27.9	3.5	2.1	1.2	100.0(426)
70~74세	57.0	35.3	5.0	2.6	0.0	100.0(416)
75세 이상	55.2	31.8	5.8	5.4	1.8	100.0(446)
결혼상태						
유배우	64.8	29.1	3.9	1.3	0.8	100.0(742)
무배우	51.1	35.2	6.0	6.4	1.3	100.0(546)
교육수준						
무학	50.6	38.0	7.0	4.2	0.2	100.0(429)
초등학교	58.7	31.9	3.8	4.2	1.3	100.0(520)
중학교	66.4	26.0	3.4	2.7	1.4	100.0(146)
고등학교	71.5	24.1	2.9	0.0	1.5	100.0(137)
대학이상	79.6	14.8	3.7	0.0	1.9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54.6	32.0	6.7	5.6	1.1	100.0(284)
노인부부	64.6	28.6	4.4	2.0	0.4	100.0(497)
자녀동거	57.9	33.8	3.4	3.2	1.7	100.0(411)
기타	49.5	36.6	7.5	5.4	1.1	100.0(93)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80.0	16.0	4.0	0.0	0.0	100.0(50)
약간 좋다	62.9	25.7	5.4	4.5	1.5	100.0(202)
보통이다	54.6	34.6	7.0	3.2	0.6	100.0(315)
약간 나쁘다	56.6	33.6	4.2	4.6	1.0	100.0(500)
매우 나쁘다	62.3	32.7	2.7	1.4	0.9	100.0(220)
경제활동						
취업중	71.0	24.8	2.4	1.5	0.3	100.0(331)
미취업	55.0	34.1	5.6	4.2	1.2	100.0(95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64.7	28.1	4.1	2.1	1.1	100.0(467)
수급	55.9	33.8	5.2	4.3	0.9	100.0(820)
가구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55.9	33.8	5.4	4.7	0.3	100.0(299)
50~100만원 미만	57.8	32.4	5.8	3.3	0.8	100.0(398)
100~200만원 미만	60.1	30.6	4.7	3.7	1.0	100.0(301)
200만원 이상	63.0	29.4	3.5	2.4	1.7	100.0(289)

〈부표 4-4-22〉 노인의 제특성별 국가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전체	28.6(369)	48.3(623)	15.9(205)	6.6(85)	0.5(7)	100.0(1,289)
지역						
동부	29.5	47.3	15.8	7.0	0.5	100.0(886)
읍·면부	27.0	50.8	16.3	5.5	0.5	100.0(400)
성						
남자	31.4	45.5	15.1	7.5	0.4	100.0(477)
여자	27.1	50.1	16.4	5.9	0.5	100.0(809)
연령						
65~69세	27.5	47.7	17.6	6.6	0.7	100.0(426)
70~74세	28.7	51.6	11.6	7.5	0.7	100.0(415)
75세 이상	29.9	46.6	18.2	5.6	0.2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31.0	46.3	15.1	7.2	0.4	100.0(741)
무배우	25.5	51.2	16.9	5.9	0.6	100.0(545)
교육수준						
무학	28.3	48.7	15.8	6.5	0.7	100.0(431)
초등학교	24.0	52.3	16.7	6.3	0.6	100.0(520)
중학교	37.4	39.5	17.7	4.8	0.7	100.0(147)
고등학교	31.4	44.5	13.1	10.9	0.0	100.0(137)
대학이상	44.4	40.7	11.1	3.7	0.0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27.7	50.2	16.8	4.6	0.7	100.0(285)
노인부부	29.6	47.1	16.5	6.4	0.4	100.0(497)
자녀동거	27.0	49.6	14.8	8.0	0.5	100.0(411)
기타	34.0	43.6	14.9	7.4	0.0	100.0(9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38.0	30.0	16.0	16.0	0.0	100.0(50)
약간 좋다	28.2	49.5	14.9	6.4	1.0	100.0(202)
보통이다	25.9	48.4	20.6	4.4	0.6	100.0(316)
약간 나쁘다	29.6	47.6	15.4	7.0	0.4	100.0(500)
매우 나쁘다	28.8	53.0	11.4	6.8	0.0	100.0(219)
경제활동						
취업중	29.2	47.0	15.1	7.8	0.9	100.0(332)
미취업	28.5	48.8	16.2	6.2	0.3	100.0(955)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29.8	45.7	15.7	7.7	1.1	100.0(466)
수급	28.0	49.8	16.1	6.0	0.1	100.0(821)
가구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29.3	49.0	14.3	7.3	0.0	100.0(300)
50~100만원 미만	30.7	47.6	15.6	5.5	0.5	100.0(397)
100~200만원 미만	26.6	47.5	19.3	6.3	0.3	100.0(301)
200만원 이상	27.0	49.8	14.5	7.6	1.0	100.0(289)

〈부표 4-4-23〉 노인의 제특성별 자녀의 생활비·용돈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전체	24.9(321)	43.4(559)	18.2(234)	12.0(154)	1.5(19)	100.0(1,287)
지역						
동부	25.9	43.5	18.3	11.0	1.2	100.0(887)
읍·면부	22.4	43.1	18.2	14.2	2.0	100.0(401)
성						
남자	24.9	39.0	19.1	15.1	1.9	100.0(477)
여자	24.9	46.0	17.8	10.1	1.1	100.0(810)
연령						
65~69세	23.0	42.3	17.4	15.0	2.3	100.0(426)
70~74세	23.9	45.1	17.1	13.3	0.7	100.0(415)
75세 이상	27.9	43.1	20.0	7.9	1.1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24.7	40.6	18.1	14.4	2.3	100.0(742)
무배우	25.3	47.3	18.3	8.6	0.4	100.0(545)
교육수준						
무학	0.0	0.0	0.0	0.0	0.0	100.0(0)
초등학교	24.0	45.8	20.9	8.1	1.2	100.0(430)
중학교	27.5	46.0	15.2	10.2	1.2	100.0(520)
고등학교	25.2	37.4	21.1	15.0	1.4	100.0(147)
대학이상	18.4	39.0	19.9	19.9	2.9	100.0(136)
가구형태	24.1	27.8	41.8	31.5	1.9	100.0(54)
노인독신						
노인부부	26.3	46.0	20.7	6.3	0.7	100.0(285)
자녀동거	23.5	41.9	17.9	13.9	2.8	100.0(497)
기타	24.9	44.9	17.3	12.2	0.7	100.0(410)
주관적 건강상태	27.7	38.3	16.0	18.1	0.0	100.0(94)
매우 좋다						
약간 좋다	19.6	29.4	9.8	35.3	5.9	100.0(51)
보통이다	22.8	47.5	14.4	13.9	1.5	100.0(202)
약간 나쁘다	26.0	41.3	20.0	11.7	1.0	100.0(315)
매우 나쁘다	25.3	44.1	19.0	10.4	1.2	100.0(499)
경제활동	25.9	44.5	19.1	8.6	1.8	100.0(220)
취업중						
미취업	22.0	41.3	17.5	17.2	2.1	100.0(332)
기초노령연금	26.0	44.2	18.5	10.2	1.2	100.0(955)
비수급						
수급	25.1	37.8	18.2	16.5	2.4	100.0(466)
가구월평균소득	24.8	46.7	18.2	9.4	1.0	100.0(820)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23.3	42.3	25.0	8.0	1.3	100.0(300)
100~200만원 미만	28.5	46.2	14.6	9.3	1.3	100.0(396)
200만원 이상	22.8	43.4	15.2	16.6	2.0	100.0(302)

〈부표 4-4-24〉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스스로 마련	자녀 마련	국가 차원보장	기타	계
전체	54.6(703)	17.3(223)	27.6(356)	0.5(6)	100.0(1,288)
지역					
동부	55.6	16.7	27.4	0.3	100.0(887)
읍·면부	52.5	19.0	28.0	0.5	100.0(400)
성					
남자	63.9	11.5	24.3	0.2	100.0(477)
여자	49.1	20.7	29.5	0.6	100.0(810)
연령					
65~69세	66.9	12.4	20.7	0.0	100.0(426)
70~74세	50.7	19.0	30.0	0.2	100.0(416)
75세 이상	46.4	20.4	32.1	1.1	100.0(446)
결혼상태					
유배우	61.3	14.0	24.5	0.1	100.0(742)
무배우	45.5	21.8	31.7	0.9	100.0(545)
교육수준					
미취학	0.0	0.0	0.0	0.0	100.0(0)
무학	46.3	22.3	30.7	0.7	100.0(430)
초등학교	53.9	19.5	26.4	0.2	100.0(519)
중학교	57.8	10.9	31.3	0.0	100.0(149)
고등학교	69.1	5.9	24.3	0.7	100.0(136)
대학이상	83.3	3.7	13.0	0.0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42.3	22.5	33.5	1.8	100.0(284)
노인부부	63.6	11.9	24.3	0.2	100.0(497)
자녀동거	52.4	19.5	28.0	0.0	100.0(410)
기타	53.7	21.1	25.3	0.0	100.0(9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64.0	10.0	26.0	0.0	100.0(50)
약간 좋다	55.9	21.8	22.3	0.0	100.0(202)
보통이다	61.3	16.5	22.2	0.0	100.0(315)
약간 나쁘다	50.2	17.0	31.8	1.0	100.0(500)
매우 나쁘다	51.4	17.3	30.9	0.5	100.0(220)
경제활동					
취업중	64.2	12.0	23.5	0.3	100.0(332)
미취업	51.3	19.3	29.0	0.4	100.0(955)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65.5	10.1	23.3	1.1	100.0(467)
수급	48.4	21.5	30.0	0.1	100.0(820)
가구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44.3	18.3	36.0	1.3	100.0(300)
50~100만원 미만	56.7	15.6	27.5	0.3	100.0(397)
100~200만원 미만	59.6	17.9	22.5	0.0	100.0(302)
200만원 이상	57.1	18.7	24.2	0.0	100.0(289)

〈부표 4-4-25〉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단위: % 명)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
전체	3.0(39)	16.1(208)	27.5(354)	40.8(526)	12.5(161)	100.0(1,288)
지역						
동부	2.6	16.3	26.7	41.7	12.8	100.0(885)
읍·면부	3.8	15.8	29.5	39.3	11.8	100.0(400)
성						
남자	1.7	9.9	26.7	43.8	17.9	100.0(475)
여자	3.7	19.8	28.0	39.3	9.3	100.0(810)
연령						
65~69세	2.1	14.3	27.0	42.0	14.6	100.0(426)
70~74세	3.1	15.0	29.2	39.6	13.0	100.0(414)
75세 이상	3.8	18.7	26.5	41.3	9.7	100.0(445)
결혼상태						
유배우	2.0	12.4	26.2	43.1	16.3	100.0(743)
무배우	4.2	21.4	29.1	38.1	7.2	100.0(543)
교육수준						
미취학	0.0	0.0	0.0	0.0	0.0	100.0(0)
무학	2.8	20.3	29.4	39.6	7.9	100.0(429)
초등학교	3.9	17.0	27.6	40.2	11.4	100.0(518)
중학교	2.0	11.6	28.6	43.5	14.3	100.0(147)
고등학교	0.7	10.4	24.4	44.4	20.0	100.0(135)
대학이상	1.9	3.7	16.7	44.4	33.3	100.0(54)
가구형태						
노인독신	5.3	21.5	29.6	35.9	7.7	100.0(284)
노인부부	2.4	12.4	28.7	41.2	15.3	100.0(498)
자녀동거	2.9	16.0	23.5	44.7	12.9	100.0(412)
기타	0.0	20.2	31.9	37.2	10.6	100.0(9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0.0	13.7	23.5	47.1	15.7	100.0(51)
약간 좋다	2.5	18.5	33.5	31.0	14.5	100.0(200)
보통이다	1.6	9.5	31.7	45.4	11.7	100.0(315)
약간 나쁘다	4.0	19.0	25.3	41.3	10.4	100.0(499)
매우 나쁘다	3.6	17.3	21.8	41.8	15.5	100.0(220)
경제활동						
취업중	3.0	11.8	26.3	46.5	12.4	100.0(331)
미취업	2.9	17.6	27.9	39.1	12.5	100.0(954)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1.9	12.0	29.5	39.4	17.2	100.0(465)
수급	3.5	18.4	26.4	41.9	9.8	100.0(819)
가구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5.3	14.0	26.7	43.3	10.7	100.0(300)
50~100만원 미만	3.6	17.3	27.4	40.4	11.4	100.0(394)
100~200만원 미만	0.3	17.9	26.9	42.2	12.6	100.0(301)
200만원 이상	2.4	14.9	29.1	38.1	15.6	100.0(289)

〈부표 4-4-26〉 노인의 제특성별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평균점수		평균점수
지역		가구형태	
동부	32.35	노인독신	30.91
읍·면부	32.04	노인부부	33.07
성		자녀동거	32.17
남자	33.40	기타	32.36
여자	31.58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매우 좋다	39.82
65~69세	33.52	약간 좋다	34.89
70~74세	31.82	보통이다	34.15
75세 이상	32.45	약간 나쁘다	30.73
결혼상태		매우 나쁘다	28.86
유배우	33.21	경제활동	
무배우	30.95	취업중	34.27
교육수준		미취업	31.56
미취학	0.0	기초노령연금	
무학	29.67	비수급	35.39
초등학교	32.89	수급	30.47
중학교	33.19	가구월평균소득	
고등학교	35.05	50만원 미만	29.36
대학이상	37.16	50~100만원 미만	31.57
		100~200만원 미만	33.84
		200만원 이상	34.54
계(평균점수/명)		32.25(1,286)	

5. 기초노령연금수급실태

〈부표 4-5-1〉 기초노령연금 수급시기

(단위: %, 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시기(월)								계
	1	4	7	8	9	10	11	12	
전체 ¹⁾	69.7	0.1	26.8	0.9	0.4	1.0	0.7	0.4	100.0(829)

주: 1) 비해당 471명 제외

〈부표 4-5-2〉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단위: %, 명)

	내가 직접 하였다.	경로연금대상자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었다.	대신 해주었다.	계(명)
전체 ¹⁾	62.9	17.3	19.8	100.0(820)
지역				
동부	62.1	19.8	18.1	100.0(525)
읍·면부	64.2	12.8	23.0	100.0(296)
성				
남자	76.7	10.8	12.4	100.0(249)
여자	56.9	20.0	23.1	100.0(571)
결혼상태				
유배우	70.2	8.8	20.9	100.0(373)
무배우	56.7	24.3	19.0	100.0(448)
연령				
65~69세	71.9	12.6	15.6	100.0(199)
70~74세	71.4	14.3	14.3	100.0(273)
75세 이상	51.0	22.3	26.6	100.0(349)
교육수준				
무학	52.3	24.0	23.7	100.0(371)
초등학교	71.7	11.5	16.9	100.0(314)
중학교	76.7	5.5	17.8	100.0(73)
고등학교	62.7	21.6	15.7	100.0(51)
대학이상	80.0	20.0	0.0	100.0(10)
가구형태				
노인독신	57.1	34.2	8.8	100.0(240)
노인부부	67.8	10.0	22.2	100.0(270)
자녀동거	66.3	5.6	28.2	100.0(252)
기타 ²⁾	49.1	33.3	17.5	100.0(5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68.8	6.3	25.0	100.0(16)
약간 좋다	71.0	11.3	17.7	100.0(124)
보통이다	76.2	10.5	13.3	100.0(181)
약간 나쁘다	57.6	19.2	23.3	100.0(344)
매우 나쁘다	52.2	26.8	21.0	100.0(157)
경제활동				
취업중	80.1	5.5	14.4	100.0(181)
미취업	58.1	20.7	21.3	100.0(639)
거주형태				
자가	68.2	7.5	24.3	100.0(428)
전세	56.7	27.9	15.4	100.0(104)
월세	52.5	41.0	6.5	100.0(139)
무상	61.9	15.6	22.4	100.0(147)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응답자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5-3〉 노인의 제특성별 경로연금 수급여부

(단위: %, 명)

	경로연금 수급여부		계(명)
	아니오	예	
전체 ¹⁾	84.2	15.8	100.0(820)
지역			
동부	81.5	18.5	100.0(524)
읍·면부	88.5	11.5	100.0(296)
성			
남자	89.2	10.8	100.0(249)
여자	81.8	18.2	100.0(570)
결혼상태			
유배우	92.2	7.8	100.0(373)
무배우	77.2	22.8	100.0(447)
연령			
65~69세	90.9	9.1	100.0(198)
70~74세	85.3	14.7	100.0(273)
75세 이상	79.0	21.0	100.0(348)
교육수준			
무학	78.2	21.8	100.0(371)
초등학교	89.5	10.5	100.0(313)
중학교	94.5	5.5	100.0(73)
고등학교	78.4	21.6	100.0(51)
대학이상	81.8	18.2	100.0(11)
가구형태			
노인독신	67.5	32.5	100.0(240)
노인부부	91.1	8.9	100.0(269)
자녀동거	96.0	4.0	100.0(252)
기타 ²⁾	69.0	31.0	100.0(58)
평균자녀수(명)	4.28	2.42	3.9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93.3	6.7	100.0(15)
약간 좋다	88.6	11.4	100.0(123)
보통이다	91.2	8.8	100.0(181)
약간 나쁘다	82.2	17.8	100.0(343)
매우 나쁘다	75.2	24.8	100.0(157)
경제활동			
취업중	95.6	4.4	100.0(180)
미취업	80.8	19.2	100.0(640)
거주형태			
자가	93.5	6.5	100.0(429)
전세	72.1	27.9	100.0(104)
월세	62.3	37.7	100.0(138)
무상	85.1	14.9	100.0(148)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응답자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5-4〉 노인의 제특성별 교통수당 수급여부

(단위: %, 명)

	교통수당 수급여부		계(명)
	아니오	예	
전체 ¹⁾	3.7	96.3	100.0(820)
지역			
동부	3.2	96.8	100.0(524)
읍·면부	4.4	95.6	100.0(295)
성			
남자	4.0	96.0	100.0(249)
여자	3.5	96.5	100.0(571)
결혼상태			
유배우	4.6	95.4	100.0(372)
무배우	2.9	97.1	100.0(447)
연령			
65~69세	14.6	85.4	100.0(198)
70~74세	0.4	99.6	100.0(273)
75세 이상	0.0	100.0	100.0(348)
교육수준			
무학	3.2	96.8	100.0(371)
초등학교	3.8	96.2	100.0(313)
중학교	5.4	94.6	100.0(74)
고등학교	2.0	98.0	100.0(51)
대학이상	9.1	90.9	100.0(11)
가구형태			
노인독신	2.5	97.5	100.0(240)
노인부부	4.5	95.5	100.0(269)
자녀동거	4.4	95.6	100.0(252)
기타 ²⁾	1.8	98.2	100.0(5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0.0	100.0	100.0(16)
약간 좋다	4.1	95.9	100.0(123)
보통이다	3.9	96.1	100.0(181)
약간 나쁘다	2.9	97.1	100.0(343)
매우 나쁘다	4.5	95.5	100.0(156)
경제활동			
취업중	5.0	95.0	100.0(181)
미취업	3.3	96.7	100.0(639)
거주형태			
자가	3.3	96.7	100.0(429)
전세	2.9	97.1	100.0(105)
월세	5.1	94.9	100.0(138)
무상	4.7	95.3	100.0(148)

주: 1)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응답자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가구는 노인과 손자녀 또는 노부모, 또는 친척과 비혈연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4-5-5〉 지역별 교통수당 수급지속여부

(단위: %, 명)

	교통수당 수급지속여부		계(명)
	아니오	예	
전체 ¹⁾	97.2	2.8	100.0(789)
지역			
동부	95.7	4.3	100.0(507)
읍·면부	100.0	0.0	100.0(282)

주: 1) 비해당 31명 제외

〈부표 4-5-6〉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 ²⁾		
		20%미만	20~40%미만	40%이상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4.3	26.0	24.8	19.7
외식비	5.9	7.3	3.2	6.6
교육비	0.1	0.0	0.0	0.0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18.0	18.3	18.3	14.1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14.6	13.7	9.6	18.3
가구집기가사용품	0.2	0.0	0.0	0.5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2.8	5.0	1.4	2.3
교양오락비	5.7	0.0	0.0	0.0
교통비	10.4	0.0	0.0	0.0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4.0	0.9	6.4	4.2
경조사비	2.4	0.9	2.3	3.3
기타	2.2	3.7	0.9	1.9
저축	1.0	0.0	2.3	0.9
부채상환	0.5	0.9	0.0	0.9
손자녀 용돈	6.3	7.8	8.3	3.3
가구전체생활비	1.7	1.8	0.5	2.8
전체 ¹⁾	100.0 (701)	100.0 (219)	100.0 (218)	100.0 (213)

주: 1) 무응답 73명, 비해당 526명 제외

2) 수급실태조사 DB(2008.12.31)와 기초노령연금센터 DB(2008.8.31)의 조사시점 불일치로 인하여 수급여부가 불일치하는 71건을 제외

부록 5. 한국복지패널 개요

〈부표 5-1〉 노인 및 비노인 가구의 경제현황 및 인적 특성

(단위 : 만원, %)

구분*		근로 및 사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등 기타	경상소득	순자산	가구주 평균연령
비노인가구	평균	4,136	509	422	181	4,702	7,863	44.8세
	N	4,062	1,155	1,464	4,179	4,247	4,211	
노인가구	평균	2,093	601	396	399	2,476	9,337	67.4세
	N	1,314	674	2,018	2,037	2,047	1,981	
전체	평균	3,636	543	407	252	3,978	8,335	52.2세
	N	5,376	1,828	3,483	6,216	6,294	6,192	

주: 1) * 가구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노인가구)와 하지 않는 경우(비노인가구)로 구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 원시자료.

부록 6. 사적이전 소득에 관한 다변량 분석결과표

〈부표 6-1〉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소득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변수	사적이전 여부	
	한계효과	부표준오차
수급집단	-0.0480***	0.0180
제도시행	0.0078	0.0204
DiDt	0.0178	0.0244
노인총소득(사적이전 제외)	-0.0104***	0.0036
7대광역시	-0.0253*	0.0134
연령	0.0002**	0.0001
중졸이하	-0.0299	0.0183
고졸이상	-0.0131	0.0231
남성	-0.0016	0.0142
건강상태(좋은)	-0.0137	0.0191
건강상태(나쁨)	-0.0078	0.0150
전부 상속	-0.1022**	0.0524
상속 하지 않음	-0.0514***	0.0149
기타주거형태(자가-전세=0)	0.0358**	0.0143
총자녀수	0.0612***	0.0042
obs.	2,572	
Log of Likelihood	-912.25319	

〈부표 6-2〉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소득계층별 효과비교

모형	Tobit	OLS	총소득 기준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수급집단	-0.2361***	-0.091	-0.168	-0.360*	-0.019
제도시행	0.0969	0.078	0.1	0.006	0.081
DiDt	0.1163	0.046	0.081	0.055	-0.177
노인총소득(사적이전 제외)	-0.1053***	-0.077***	-0.102	-0.011	0.103
7대광역시	0.0203	0.126**	0.078	-0.026	0.270**
연령	0.0009**	0.001	0	0	0.001
중졸이하	-0.3663***	-0.321***	-0.177	-0.413**	-0.422***
고졸이상	-0.0647	-0.035	0.039	0	-0.214
남성	-0.2890***	-0.359***	-0.237**	-0.471***	-0.353***
건강상태(좋은)	-0.1541*	-0.153*	-0.159	0.041	-0.321**
건강상태(나쁨)	-0.1146*	-0.085	-0.298***	0.007	-0.01
전부 상속	-0.3303**	-0.165	-0.063	-0.119	-0.493*
상속 하지 않음	-0.4194***	-0.282***	-0.262**	-0.324***	-0.202*
기타주거형태(자가-전세=0)	0.3870***	0.341***	0.083	0.386***	0.502***
총자녀수	0.2609***	0.088***	0.090***	0.076**	0.063*
상수항		4.545***	4.716***	5.608***	4.066***
obs		2,193	734	725	734

〈부표 6-3〉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사적이전 분위별 효과 비교

모형	사적이전소득 기준 분위회귀					OLS
	QR_10	QR_30	QR_50	QR_70	QR_90	
수급집단	-0.329***	-0.192	-0.062	0	-0.082	-0.091
제도시행	0.034	0.072	0.096	0.112	0.08	0.078
DiDt	0.018	0.037	0.049	0.023	0.063	0.046
노인총소득(사적이전 제외)	-0.043**	-0.051*	-0.089***	-0.109***	-0.087***	-0.077***
7대광역시	-0.033	0.021	0.241**	0.278***	0.114	0.126**
연령	0.001**	0.001*	0.001	0	0	0.001
중졸이하	-0.116	-0.358**	-0.318**	-0.250**	-0.394***	-0.321***
고졸이상	-0.078	-0.089	-0.011	0.081	0.06	-0.035
남성	-0.380***	-0.385***	-0.438***	-0.213***	-0.327***	-0.359***
건강상태(좋은)	-0.054	-0.244*	-0.226*	-0.067	0.023	-0.153*
건강상태(나쁨)	-0.151*	-0.148	-0.11	-0.021	0.003	-0.085
전부 상속	-0.111	0.002	-0.446*	-0.14	-0.144	-0.165
상속 하지 않음	-0.333***	-0.352***	-0.361***	-0.222***	-0.127	-0.282***
기타주거형태(자가-전세=0)	0.324***	0.265**	0.468***	0.493***	0.279***	0.341***
총자녀수	0.072***	0.126***	0.124***	0.073***	0.019	0.088***
상수항	2.711***	3.187***	4.312***	5.291***	6.190***	4.545***
obs	2193					

부록 7.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관한 이중차분 분석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초노령연금DB 행정 전산망 자료와 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부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DB 행정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비율은 52.7%이다(수급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자료 제외). 1단계대상자 중에서는 64%, 2단계대상자 중에서는 37.6%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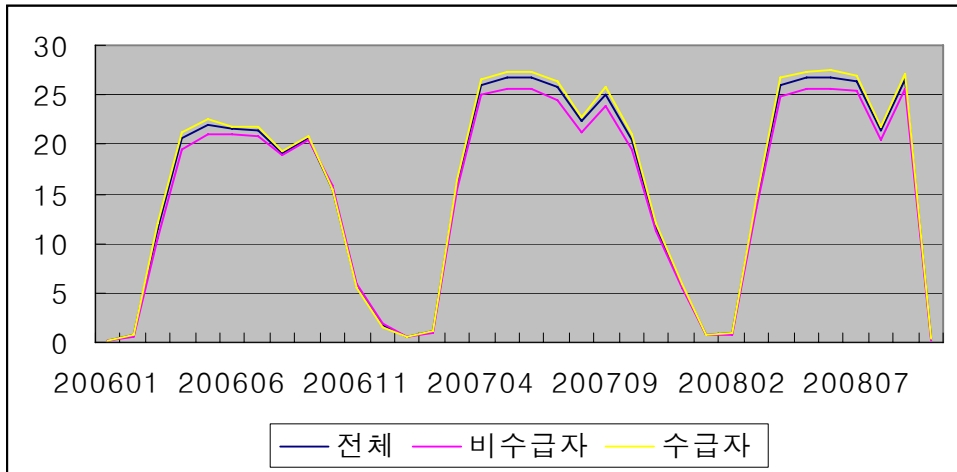
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와 결합한 결과, 전체 자료수는 234,611명에 대한 것이며 이 중에서 수급자는 61.7%로써, 기초노령연금 DB와 비교하면 수급자의 비중이 약 10% 더 많다. 이때, 2차 사업대상자 중에서는 수급자가 51%로써, 행정자료의 37.6%에 비해 수급자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 이처럼 행정자료와 분석에 사용할 표본이 약간 상이함으로써, 이하의 분석결과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분석의 목적이 기초노령연금수급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부표 7-1〉 결합자료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집단구분		미수급자	수급자	전체
모집단	전체	2,227,123 (47.3)	2,483,429 (52.7)	4,710,552 (100.0)
	1단계대상	973,988 (36.0)	1,729,660 (64.0)	2,703,648 (100.0)
	2단계대상	1,253,135 (62.4)	753,769 (37.6)	2,006,904 (100.0)
표본	전체	89,873 (38.3)	144,738 (61.7)	234,611 (100.0)
	1단계대상	37,919 (29.5)	90,489 (70.5)	128,408 (100.0)
	2단계대상	51,954 (48.9)	54,249 (51.1)	106,203 (100.0)

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에는 2006년 1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월임금과 개인의 인적·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일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장의 주제인 근로활동여부와 임금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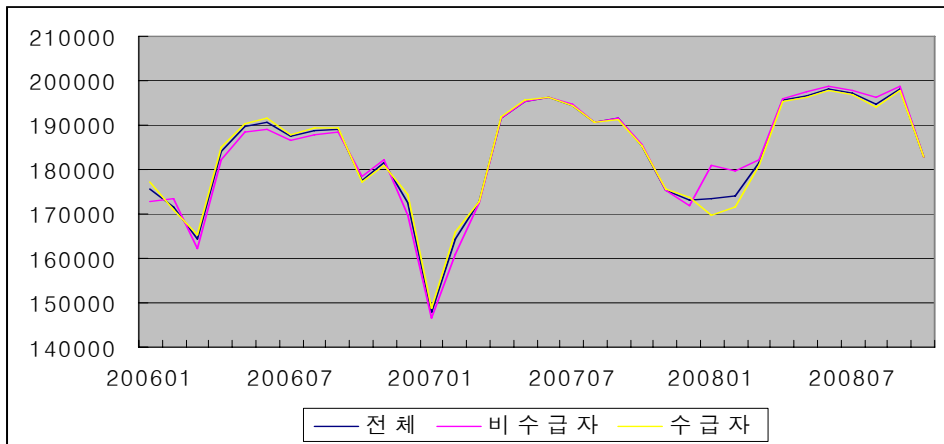
[그림 7-1] 월별 근로활동비율: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그림 7-1]을 보면, 노인인구의 근로활동 비율에 계절적 요인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절기인 10월~2월 사이에는 근로활동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반면, 3월~9월 사이에는 2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때, 2006년에 비해 2007년, 2008년의 근로활동비율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이고, 해당 연도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근로활동 비율을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수급자의 근로활동 비율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가 자산 혹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2] 월별 평균임금: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다음으로 [그림 7-2]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월평균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활동비율과 유사하게, 평균임금 수준 역시 계절적 요인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06-7년 동절기에 비해 2007-8년 동절기의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절기에 근로활동을 하는 노령자들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평균값은 몇몇 관측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평균임금의 차이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6년에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수준이 약간 더 높지만, 2007년에는 유사한 수준이고 2008년에는 비수급자에 비해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이의 변화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을 줄임으로써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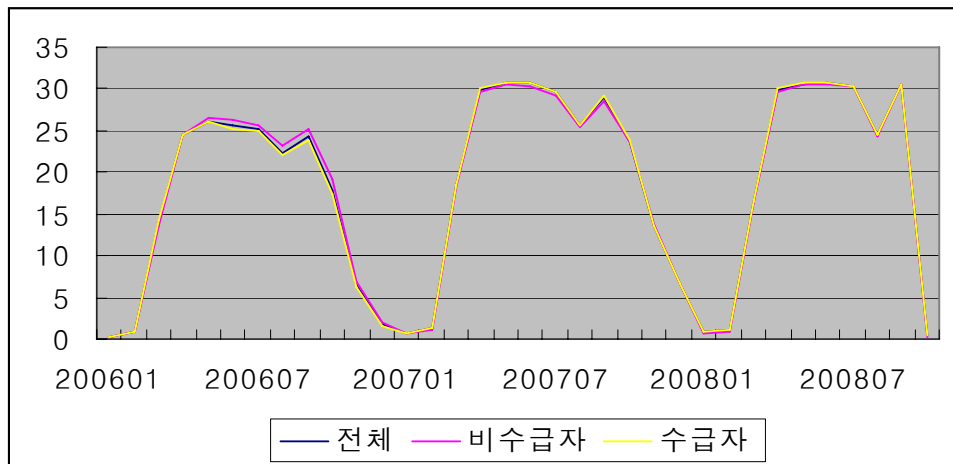
이에 본 절에서는 고령자들의 인적·경제·사회적 특성들을 통제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분석에 포함되는 고령자들의 월평균임금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부분 [그림 7-2]의 t-t1 사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구간에 속하는 고령자들은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로 인해 근로유인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축소시키는 것이 실증분석에서도 그대로 관측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내용과 분석모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실증분석에서는 제도 시행 전인 2007년 9월 자료와 제도 시행 후인 2008년 9월 자료를 pooling하여 분석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령자의 근로활동에서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과 2단계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지금까지 1,2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확대한 바,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는 65세~69세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경우 즉각적인 반응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2008년 9월은 1단계 사업이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인 반면, 2단계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으로써 연령대 별로 서로 다른 반응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은 물론, 사업단계별 대상집단별로 분리한 분석 결과 역시 살펴볼 것이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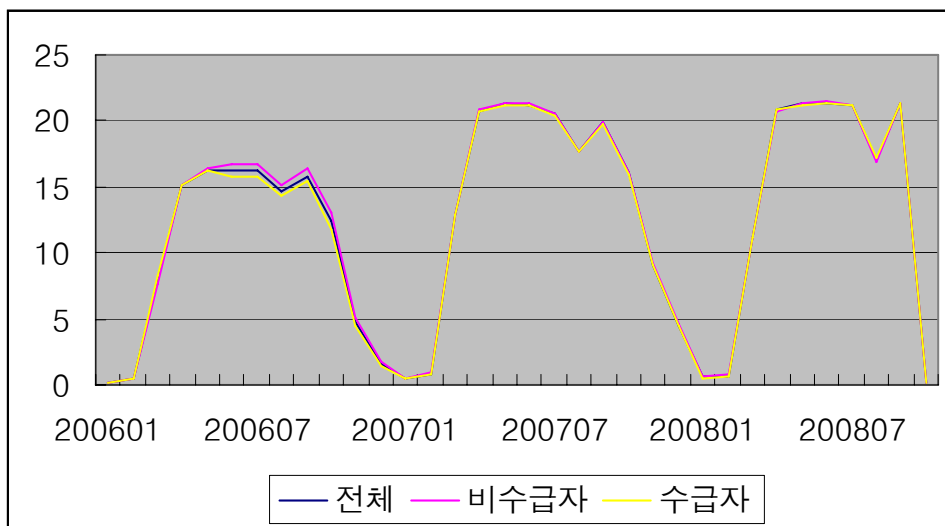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각 사업대상별 근로활동비율과 평균임금수준에 대한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그림 7-3]은 1차 사업대상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활동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3] 1차 사업 대상의 근로활동비율: 70세 이상: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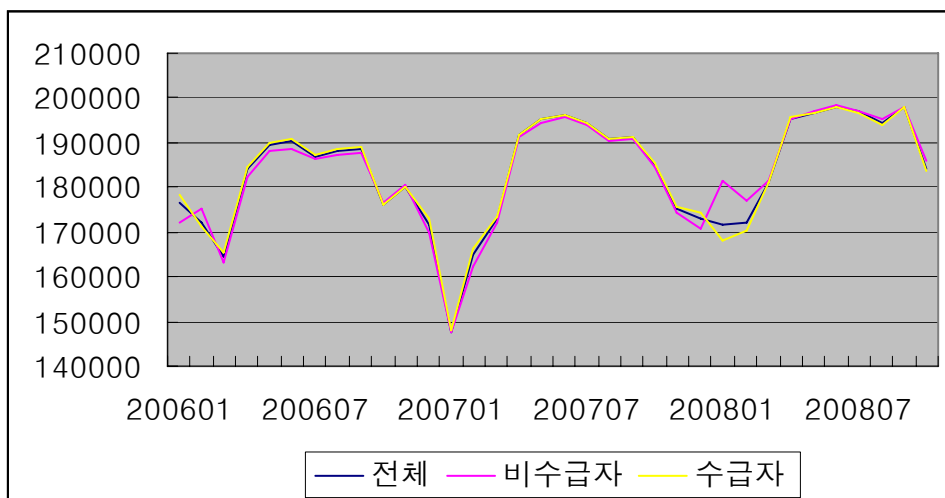


63) 이때, 주의할 것은 월35만원의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시행규칙은 8월에 시행되어 7월부터 소급적용한 점이다. 따라서, 2단계 대상자 중 일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7월에 근로활동을 줄였다가 8월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근로활동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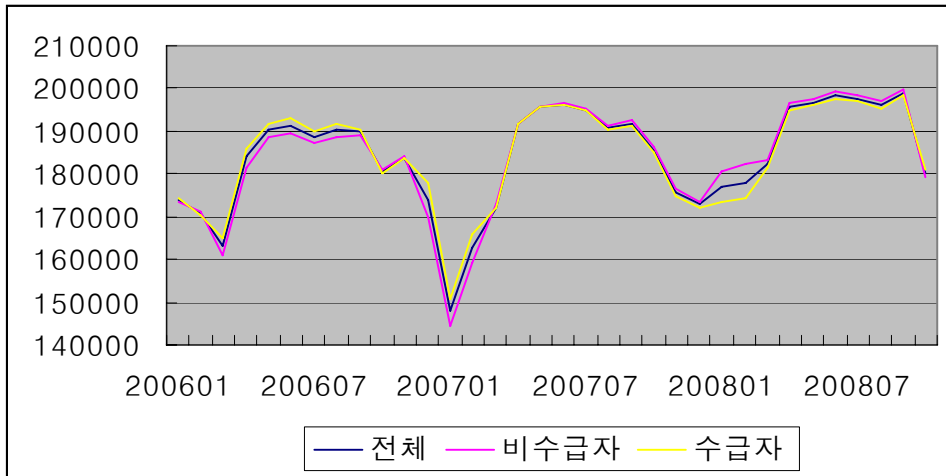
[그림 7-4] 2차 사업 대상의 근로활동비율: 65-69세: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그림 7-5] 1차 사업 대상의 평균임금: 70세 이상: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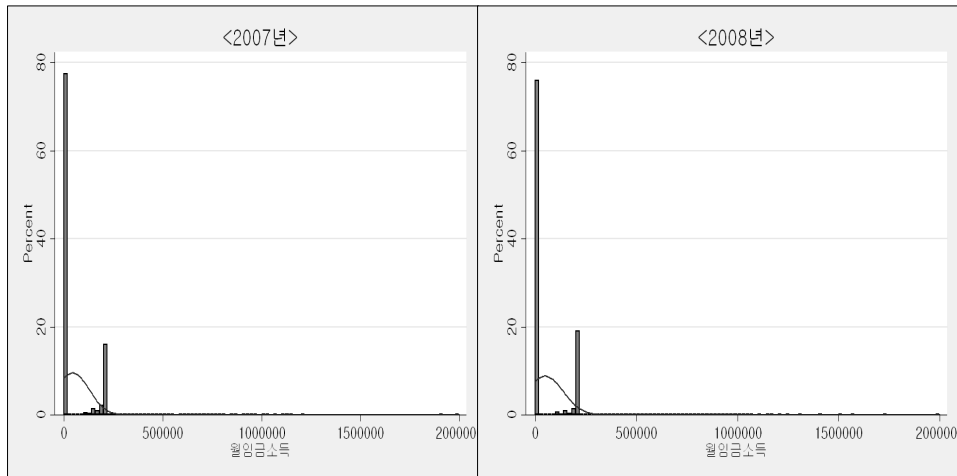


[그림 7-6] 2차 사업 대상의 평균임금: 65~69세: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이때, 그림들에서 보듯이 사용자료의 특성 상 대부분의 관측치가 0(zero) 임금이 며(약 78%), 임금이 0보다 큰 경우에도 20만원에 밀집함으로써,⁶⁴⁾ 0과 20만 원에 서 양측 절단된 분포(censored distribution)를 형성한다.

[그림 7-7] 사용자료의 임금분포



64)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제약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동일한 듯 보인다. 즉, 실제 자료를 보면 2007년 9월에 월20만 원을 받는 고령자의 경우 2008년 9월에도 모두 20만 원을 받고 있다. 이에 다른 노령자의 임금 역시 노령자의 임금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인상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 하에 명목임금이 근로시간에 대해 보다 적절한 대리변수로 간주한다.

〈부표 7-2〉 분석모형의 종속변수와 처리 내용

변수	값	처리방법	기준값/변수
연령	출생년월	만나이로 환산	-
성별	남성, 여성	더미	여성
거주지	행정동	7대 광역시, 기타지역 더미	기타지역
학력	무학(0)~대학원졸(6)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더미	고졸
동거형태	단독, 동거	더미	동거
월생활비용	5단계:10만,30만,50만,100만원	30미만 / 30~50 / 50이상 더미	30~50만원
주거형태	자택,전세,월세,기타	자택과 기타(전월세기타) 더미	기타
건강	양호,보통,건강하지못함	더미	보통
재산소득환산합계액(배우자합산)	2008년 9월 시점.	로그	

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일자리사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집단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1,2차 사업단계별 대상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표 7-3〉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집단 구분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때, 본 분석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변수들인 수급효과(treatment effect, DtDt), 수급집단(Di), 그리고 제도시행(Dt) 변수들의 결과 역시 유사한 편이다. 즉,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은 작은 차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Di). 그리고 제도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장참여율의 변화는 65~69세 사이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소득 혹은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가할 확률이 높지만,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두 집단 간 차이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 다만, 65~69세 사이의 집단의 제도 시행 이후 시기의 노동시장참여확률이 이전 시기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수급여부에 상관없이 수급·비수급 집단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두 집단에 공통적인 다른 요인의 작용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표 7-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일자리참여에 미치는 효과

변수	전체집단		1차 사업대상자		2차 사업대상자	
	MarginEffect	Std. Err.	MarginEffect	Std. Err.	MarginEffect	Std. Err.
수급집단(Di)	0.0211***	0.0027	0.0302***	0.0045	0.0098***	0.0032
제도시행(Dt)	0.0017	0.0028	0.0056	0.0056	-0.0135***	0.0030
DiDt	-0.0013	0.0033	0.0002	0.0061	-0.0009	0.0039
남성	-0.0034**	0.0017	0.0110***	0.0025	-0.0218***	0.0021
연령	0.0097***	0.0002	0.0050***	0.0003	0.0240***	0.0006
7대광역시	0.0176***	0.0016	0.0275***	0.0025	0.0073***	0.0021
무학	-0.0199***	0.0029	-0.0135***	0.0044	-0.0240***	0.0035
초졸	0.0237***	0.0027	0.0313***	0.0041	0.0145***	0.0033
중졸	-0.0135***	0.0030	-0.0101**	0.0048	-0.0151***	0.0036
전문대이상	0.0444***	0.0046	0.0350***	0.0074	0.0531***	0.0057
주택	0.0282***	0.0017	0.0310***	0.0025	0.0253***	0.0022
단독가구	0.0448***	0.0018	0.0475***	0.0026	0.0405***	0.0025
건강(보통이상)	0.0110***	0.0017	0.0113***	0.0025	0.0106***	0.0022
건강(보통미만)	-0.0383***	0.0054	-0.0412***	0.0079	-0.0309***	0.0073
생계비수준(30만원미만)	-0.0617***	0.0017	-0.0701***	0.0025	-0.0504***	0.0023
생계비수준(50만원이상)	0.0228***	0.0018	0.0235***	0.0028	0.0248***	0.0024
재산환산액	0.0015***	0.0005	0.0007	0.0007	0.0000	0.0007
N	263,070		139,842		123,228	
Log of likelihood	-119,946.6		-71,319.4		-48,032.2	

주: 1) *, **, *** 는 각각 10%, 5%, 1% 유의도 수준임.

한편, 분석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의 결과들을 통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확률을 보면, 65세 이상 전체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 그리고 65~69세 사이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 보다 높다.

연령에 따른 참여확률을 보면, 세 모형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 등으로 인한 소득이 축소됨으로써 근로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참여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기회가 지방에 비해 광역시의 경우 더욱 많이 제공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력의 경우에는 일방향적인 결과는 아님. 고졸에 비해 무학과 중졸의 참여확률은 낮고, 초졸과 전문대졸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다. 건강의 경우는 일반적인 예상과 유사한 결과. 즉, 건강이 좋을수록 노동시장참여확률이 높아지며, 생계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참여확률 높아짐.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에 대한 요구가 클수록 참여확률이 높아진다.

요약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는 본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는 수급집단 여부보다는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이면서 시기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요 근로연령대의 결정요인과는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부표 7-4〉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수급집단의 일자리사업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Tobit 분석결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기초노령연금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본 분석의 중심변수인 DiDt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이다. 한편, 수급집단(Di)와 제도시행(Dt) 더미변수가 앞의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즉, Dt의 경우 전체집단과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양의 부호, 65~69세의 경우에는 음의 부호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기초노령 수급집단은 비수급집단에 비해 일자리참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수급여부에 상관없이 고령자 집단의 제도시행 전후의 노인일자리참여실태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증가했다. 이때, 65~69세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보면, 제도시행 이후 시기의 근로활동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DiDt에 대한 추정결과에서 보듯이, 그와 같은 결과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수급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의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부표 7-4〉 기초노령연금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준에 미치는 효과⁶⁵⁾

변수	전체집단		1차 사업대상자		2차 사업대상자	
	MarginEffect	Std. Err.	MarginEffect	Std. Err.	MarginEffect	Std. Err.
수급집단(Di)	6.6893***	0.8895	8.0682***	1.2781	4.0416***	1.3910
제도시행(Dt)	1.8881**	0.9118	2.8638*	1.4795	-4.2991***	1.2725
DiDt	-0.1611	1.0649	0.2591	1.6035	-0.3922	1.6550
남성	-1.0661**	0.5391	2.9521***	0.6648	-9.4339***	0.9468
연령	3.0920***	0.0645	1.3270***	0.0861	10.1893***	0.3117
7대광역시	5.5868***	0.5157	7.2563***	0.6395	3.0025***	0.8751
무학	-6.6561***	0.9551	-3.6698***	1.1883	-10.8517***	1.6309
초졸	7.2728***	0.8506	8.0431***	1.0807	5.7355***	1.4032
중졸	-4.4701***	0.9996	-2.6354**	1.2866	-6.8421***	1.6255
전문대이상	13.0847***	1.3022	8.8105***	1.7887	19.9360***	2.0015
주택	9.0800***	0.5704	8.1722***	0.6826	10.9374***	1.0208
단독가구	13.6067***	0.5657	12.1105***	0.6780	15.9325***	1.0066
건강(보통이상)	3.5543***	0.5486	3.0911***	0.6561	4.4473***	0.9788
건강(보통미만)	-13.2669***	2.0380	-11.6341***	2.3841	-14.3016***	3.7640
생계비수준(30만원미만)	-20.7549***	0.6455	-19.0520***	0.7534	-23.2314***	1.1975
생계비수준(50만원이상)	6.9796***	0.5738	5.9375***	0.7100	10.0728***	0.9833
재산환산액	0.4975***	0.1673	0.2303	0.1975	0.0015	0.3067
N	263,070		139,842		123,228	
Log of likelihood	-169,511.7		-103,083.6		-65,798.2	

주: 1) *, **, *** 는 각각 10%, 5%, 1% 유의도 수준임.

2) left-censored at 0, right-censored at ln(200000)

다른 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앞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남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65~69세 고령자의 경우 연령변화에 따른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거주지역의 경우,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 고용기회는 물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5) 〈부표〉는 우측 절단점을 ln(180000)으로 설정한 모형의 결과로써, 모형의 적합도는 본문의 〈표〉보다 약간 더 우월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조사자료의 특성상 우측 절단점을 ln(200000)으로 설정한 모형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상의 작은 차이를 제외한 주요한 결과는 모두 일치한다고 사료된다.

학력의 경우 역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건강과 생계비수준⁶⁶⁾에 대한 결과는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임금수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환산액이 고령자의 고용과 근로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재산과 소득의 양의 상관관계로부터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근로유인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근로시기 소득흐름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고령이 되어서도 고용기회가 더 많거나 혹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재산환산액이 미치는 영향은 연령집단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에, 위의 추론의 타당성은 유보적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기초노령연금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내·외부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우선,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수준이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낮지 않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35만원(2008년)의 근로소득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재산환산액 정도에 따라 최대 32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수급액인 8만 4천원(2008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재산소득이 전혀 없다는 제한된 경우이지만, 월 67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낮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근로활동을 굳이 포기할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이상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앞의 이론적 부분에서 말했듯이 여가가 정상재라고 한다면 소

66) 일반적으로 생활비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더 많은 근로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만일 현재의 생활비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료의 조사내용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인지, 혹은 현재 소요되는 생활비 수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통해 유추해본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득증가에 따른 근로유인이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할 만한 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액 수준이 근로유인을 축소시키는 소득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절대적인 수준의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해야만 한다면, 일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건강 혹은 사회적 관계 등이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소득효과(→근로유인축소)는 나타나기 힘들다.⁶⁷⁾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이외에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들 역시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67)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상의 예들은 고령자의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의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은 표준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 선호 가정에 따른 볼록(convex)한 무차별곡선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